

연구보고 2015-08

#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이운진 김아름 강일규 손기웅 임준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2015년은 광복 70주년,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한 해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했던 한 해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와 8·15 광복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는 성사되지 않았고, 북한의 지원사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되었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육아지원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지금으로써는 실현불가능해 보이지만, 남북 관계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할 필요는 있다. 또, 제시한 정책방안 중 일부는 이미 과거에 남북이 경험한 바가 있으므로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남북의 영유아들은 미래 한반도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의 성인세대들은 미래 주역들을 어떻게 육성할 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따르면, 전문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북한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교류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며, 평화감수성을 지닌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서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의 성인세대는 반드시 필요한 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면담조사, 그리고 자문회의에 참여한 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유남희**





# 차 례

요약 .....	1
I. 서론 .....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2. 연구내용 .....	15
3. 연구방법 .....	16
4. 연구범위 .....	21
5. 선행연구 .....	22
II. 통일 전 교류협력 국외사례 .....	24
1. 독일 사례 .....	24
2. 중국 - 대만 사례 .....	42
3. 소결 .....	58
III.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정책과 사례 .....	61
1. 관련 법령과 교류협력 사업별 내용 .....	61
2. 5·24 조치 및 드레스덴 선언 .....	71
3.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사례: 북한 영유아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	77
4. 국제기구의 북한 개발협력 사업 사례 .....	99
5. 소결 .....	108
IV.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 분석 .....	111
1. 응답자 특성 .....	111
2.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	112
3.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	121
4.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	133
5. 소결 .....	144
V.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148
1. 응답자 특성 .....	148

2.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의견 .....	149
3. 2005년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	153
4.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2013년 개발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	157
5. 교류협력 거점으로서의 탁아소 설립에 대한 의견 .....	174
6.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 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의견 .....	186
7. 소결 .....	189
VI.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 .....	192
1. 추진방향 .....	192
2. 추진목표 .....	195
3. 시기별에 따른 실행방안 .....	200
참고문헌 .....	204
부록 .....	216
부록 1. 남북관계 법령 목록 .....	217
부록 2. 남북관계 행정규칙 목록 .....	218
부록 3. 남북관계 자치법규 목록 .....	219
부록 4.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 질문지(1차) .....	222
부록 5.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지(2차) .....	225
부록 6. NGO 단체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지(1차) .....	228
부록 7. 전문가 설문조사지 .....	230
부록 8. 일반국민 설문조사지 .....	240
부록 9. 전문가 설문결과표 .....	244

## 표 차례

〈표 I-3-1〉 NGO 대북지원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자 목록 .....	16
〈표 I-3-2〉 NGO 대북지원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내용 .....	16
〈표 I-3-3〉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자 목록 .....	17
〈표 I-3-4〉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내용 .....	18
〈표 I-3-5〉 대국민 조사 설문내용 .....	18
〈표 I-3-6〉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내용 .....	19
〈표 I-3-7〉 설문 조사 개요 .....	20
〈표 II-1-1〉 구 동독지역의 취학전 아동 보육 시설 비율 (베를린 제외) .....	36
〈표 II-1-2〉 구 서독지역의 취학전 아동 보육 시설 비율 (베를린 제외) .....	37
〈표 II-1-3〉 통일 이후 어린이 보육시설 수의 구 동서독지역 구성비 (베를린 제외) ·	39
〈표 II-2-1〉 양안간 현안 추진 조직 형태 현황 .....	43
〈표 III-1-1〉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법령 .....	61
〈표 III-1-2〉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종류 및 내용 .....	69
〈표 III-1-3〉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요약) .....	70
〈표 III-2-1〉 복합농촌단지 추진 방안 .....	73
〈표 III-2-2〉 북한 영유아 지원 관련 주요 법률안 .....	74
〈표 III-3-1〉 정부 및 민간차원의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액 현황(2005-2014) ···	81
〈표 III-3-2〉 인구학적 관점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계획 내용 일부 .....	83
〈표 III-3-3〉 국내 민간단체 영유아 사업 컨소시엄과 사업지역 및 내용 .....	85
〈표 III-3-4〉 5개 시범 민관합동사업 .....	89
〈표 III-3-5〉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	92
〈표 III-4-1〉 북한 지원사업 분야별 담당 협의체 .....	99
〈표 III-4-2〉 유니세프 2014/2015 프로그램 목표 및 결과 .....	101
〈표 III-4-3〉 WFP 모자 영양지원 사업 활동 모금액 현황(2015. 7. 기준) .....	105
〈표 III-4-4〉 분야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required)금액(2015) .....	108
〈표 IV-1-1〉 응답자 특성 .....	111
〈표 IV-2-1〉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 .....	113
〈표 IV-2-2〉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북한에 대한 내용 .....	115

〈표 IV-2- 3〉 생각하는 통일 수준 .....	117
〈표 IV-2- 4〉 통일 후 남북 주민 간 가장 갈등이 심할 것 같은 분야 .....	118
〈표 IV-2- 5〉 유아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 .....	120
〈표 IV-3- 1〉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123
〈표 IV-3-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25
〈표 IV-3- 3〉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127
〈표 IV-3- 4〉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 .....	129
〈표 IV-3- 5〉 5·24조치에 대한 인식 .....	131
〈표 IV-4 1〉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	133
〈표 IV-4 2〉 개성공단 같은 형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필요성 .....	136
〈표 IV-4 3〉 우리 기업/정부가 북한 근로자 자녀 위한 탁아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 .....	138
〈표 IV-4 4〉 탁아소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 거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40
〈표 IV-4 5〉 남북 유아들 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 .....	142
〈표 V-1- 1〉 전문가 응답자 특성 .....	148
〈표 V-2- 1〉 개발협력사업 인지도 .....	149
〈표 V-2- 2〉 개발협력사업 찬반 여부 .....	150
〈표 V-2- 3〉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 .....	152
〈표 V-2- 4〉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	153
〈표 V-3- 1〉 개발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 인지도 .....	154
〈표 V-3- 2〉 개발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 찬반 여부 .....	155
〈표 V-3- 3〉 개발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 사업 찬성 의견 .....	156
〈표 V-4 1〉 육아지원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필요성 .....	157
〈표 V-4 2〉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이유 .....	158
〈표 V-4 3〉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한 소극적인 이유 .....	159
〈표 V-4 4〉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60
〈표 V-4 5〉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한 추진과제들 .....	161
〈표 V-4 6〉 남북 교류협력 시 추진과제별 중요성·실행가능성 순위별 .....	161
〈표 V-4 7〉 남북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행방안 .....	162
〈표 V-4 8〉 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시 실행가능한 주제 .....	165
〈표 V-4 9〉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실행방안 .....	167
〈표 V-4-10〉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 개발·실시를 위한 실행방안 .....	169

〈표 V-4-11〉 남북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낮게 나온 이유 .....	171
〈표 V-4-12〉 남북 유아의 공동 경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의 필요성 정도 .....	173
〈표 V-4-13〉 남북 유아의 공동 경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의 실행가능성 정도 .....	173
〈표 V-4-14〉 기타 추진 가능 과제 제안 .....	174
〈표 V-5- 1〉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 제안 의견에 대한 타당성 .....	175
〈표 V-5- 2〉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 제안이 타당한 이유 .....	176
〈표 V-5- 3〉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 제안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	178
〈표 V-5- 4〉 남북 공동 공업지구 내에 탁아소 공동 설치에 대한 찬반 이유 .....	179
〈표 V-5- 5〉 남북 공동 공업지구 내에 탁아소 공동 설치·운영에 대한 찬성 이유 .....	180
〈표 V-5- 6〉 남북 공동 공업지구 내에 탁아소 공동 설치·운영에 대한 반대 이유 .....	181
〈표 V-5- 7〉 남북 합작 만화 ‘뽀로로’가 성공한 이유 .....	182
〈표 V-5- 8〉 남북 합작 만화 ‘뽀로로’ 성공을 통한 시사점 .....	184
〈표 V-6- 1〉 누리과정에 북한/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 .....	186
〈표 V-6- 2〉 누리과정에 북한/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찬성 이유 .....	187
〈표 V-6- 3〉 누리과정에 북한/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반대 이유 .....	188

## 그림 차례

[그림 II-1-1] 동독(윗선)과 서독(아래선)의 분단 시기 탁아소 등록률 비교(%)	26
[그림 II-1-2] 동독(윗선)과 서독(아래선)의 분단 시기 유치원 등록률 비교(%)	27
[그림 II-1-3]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구 동독(윗선, 동베를린 제외) 및 구서독(아래선, 서베를린구 제외) 내 가능한 탁아소 부지 (%)	38
[그림 II-1-4] 지역별 1세~2세미만 아이들의 탁아소 등록 상황(2014.3.1. 402개소)	40
[그림 II-1-5] 2014년 3월 1일 402개 지역별 3세 이하 아이들의 탁아소 등록 상황	41
[그림 III-1-1] 개성공업지구 법체계도	65
[그림 III-1-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체계	66
[그림 III-3-1]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 지표 2009/2012	77
[그림 III-3-2] 북한 영유아 급성영양장애(wasting) 지역별 비율	78
[그림 III-3-3] 북한 전체 가정, 보건시설, 영유아 시설의 상수도 연결 비율	80
[그림 III-3-4]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현황(2003-2012)	82
[그림 III-3-5] 북한 보육·교육시설의 지원사업	88
[그림 III-3-6] 개성공업지구 1단계 업종별 배치 현황도	92
[그림 III-3-7] 개성공단탁아소 준공 시 내·외부전경 사진	94
[그림 III-3-8] 남북어린이와 일본어린이 그림 전시회	98
[그림 III-4-1] WFP 활동 지역 및 영양비스킷/슈퍼시리얼 공장 위치(2013 기준)	103
[그림 III-4-2] 영양 비스킷과 슈퍼 시리얼	104
[그림 III-4-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정지표(2009-2014)	107
[그림 V-4-1] 남북 유아의 공동 경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의 필요성·실행가능성 비교	173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법, 군사 등 각 분야별로 연구가 수행되어 온. 육아지원분야에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즉각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정책방안'제시가 필요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이윤진·구자연, 2013) 연구에서 남북 교류협력 단계의 육아지원분야의 추진 방향과 10개 추진과제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이윤진·구자연 연구(2013)의 후속연구로써, 지금까지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은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교류협력 단계까지를 고려해서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남북 관계 개선 시, 교육·보육사업 부문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행가능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함.

#### 나. 연구 내용

- 국외 사례로 통일 이전의 독일사례, 중국-대만 사례를 고찰함.
-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육아지원분야 중심으로 고찰함.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정리함.
  - 남북 교류협력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경제협력사업으로 구분됨
-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지원 정책 현황으로 5·24 조치와 드레스덴 선언, 그리

고 국회에 발의된 입안 사례를 고찰함.

- 북한의 개발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류협력 사례를 국내외 민간단체, 정부, 국제기구로 구분하여 고찰함.
  - 2005년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한반도의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대북지원사업으로 국내 민간단체들 간의 컨소시엄 방식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실시된 사례임.
  -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첫 사례로 개성공업지구의 설립 배경, 현황 및 개성 공업지구 내에 설치, 운영 중인 개성탁아소의 현황을 고찰함.
    - 개성공단 근로자 중 약 70%가 여성인 만큼 탁아소 설치하는 처음부터 필수였음. 개성탁아소는 2007년의 임시탁아소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북측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건축하여 2009년에 완공함.
    - 현재 개성탁아소에는 약 600여명의 영아가 이용하고 있으며, 소장 1명, 보육교사 54명 외의 의사, 식당운영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 국제기구와 해외 민간단체의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을 고찰함.
  - 현재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면서, 국제기구와 해외 민간단체에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음.
  - UNICEF, WEP, FAO, UNFPA, WHO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은 긴급구호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프라 구축을 요하는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재외동포에 대해 긍정적이라 함. 재외동포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은 남북 관계가 중단된 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개발협력사업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타당한 근거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파악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함.

####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심층면담조사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담당 NGO 단체의 현장 전문가
- 탁아소 소장, 교양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 대국민 조사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총 800명을 추출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
  - 북한연구 전문가, 북한을 다년간 경험한 민간단체 현장전문가, 교양원·탁아소 소장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등 총 53명이 조사에 참여함. 조사방법은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함.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 중국 연길과 일본 동경을 2015년 8월 31일~9월 4일(5박 6일) 동안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 탁아소와 유치원 운영 현황을 파악함.
  - 중국 연길 소재의 K재단은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단체로서, 북한 내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탁아소와 유치원 5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음. 탁아소와 유치원은 북측의 요구로 취약 지역(농촌 지역)에 설치함. 또한, 연변대학교와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등을 조사함.
  - 일본 동경에 소재한 UNICEF 및 민간단체(JVC, 북한난민구호기금)를 방문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세미나

-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협의 및 설문지 검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연구결과를 소개, 홍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세미나 개최 예정(11월 말)

## 2. 통일 전 교류협력 국외사례

### 가. 독일사례

-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교회부설유치원은 서독과의 교류협력의 중요

한 거점 역할을 함.

- 동독의 소규모 교회부설유치원은 반체제 인사들의 보호막 역할을 했으며 향후 동독의 붕괴란 변혁의 중심이 되었음.
- 정치색을 띠지 않을수록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이 결국, 정치적 분야까지 영향을 미쳐 동독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냄.
- 동독은 북한과 달리, 영유아의 영양부족으로 인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개발협력사업과 같은 공적인 원조 형태를 받은 적도 없음.

## 나. 중국-대만 관계

- 양안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발전 형태
  -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기구가 큰 역할을 담당.
    - 해협 양안 관계협회, 해협교류기금회 등 비공식적 형태로 교류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게 함.
  - 개별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 협력
    - 양안은 푸젠성, 북경시 등 자치단체와 유아교육 관련 인적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학자, 학부모, 교사간의 정기적 교차 방문 및 학술 교류 협력
    - 정례적인 학술 교류 및 상호 방문을 통해 양측의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 3.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정책과 사례

### 가. 관련 법령과 사업별 내용

-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있음.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분류와 내용

- 관련 법령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경제협력사업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나. 주요 정책 및 추진 사례

### □ 5·24 조치 및 드레스덴 선언

- 5.24 조치는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유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드레스덴 선언에서 정부는 “모자 패키지(1,000 days)사업”을 제안하여, 그동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 □ 정부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 정부는 1995년부터 대북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식량차관과 무상지원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정부차원의 지원규모는 정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북한과의 신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 국내 민간단체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협력사업에서 국내 민간단체는 큰 역할을 해왔음.
  - 2004년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면서 민·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2006년에는 6개 민간단체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 개성공단 탁아소

- 개성공단 탁아소는 북측 여성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지원등 인도적 차원과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음.
- 우리 정부는 제2탁아소 설립을 위해 남한 부지를 확보해 두었음.

□ 해외 민간단체

○ 재외동포단체(K재단)

- 재외동포단체의 경우 국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접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한민족이라는 동질감과 함께 의사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어 국내민간단체나 해외단체보다 북한 내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음.
- K재단은 북한 내 탁아소나 유치원을 지원하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감시도구가 아닌 북한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수단으로 활용.

○ 일본 JVC

- 2001년부터 “남북어린이와 일본어린이 그림마당”사업을 진행.
- 본 전시회를 통해 남북한과 일본의 아이들이 그림과 메시지교환으로 “만나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실제 그림교환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도쿄·서울·평양에 상호 방문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다. 국제기구의 북한 개발협력 사업**

□ UN산하의 5개 기구(UNICEF, WFP, FAO, UNFPA, WHO)는 북한 내에 상주하며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해 단순히 인도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예컨대, 유니세프와 WHO는 북한 지역단위 진료소의 현지 의료진들을 교육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WFP는 북한당국과 함께 영양 비스킷, 슈퍼시리얼 공장을 운영하여 후에 북한 스스로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

**4.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 분석**

**가. 응답자 특성**

□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남성

은 54.8%, 여성은 45.3%,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직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에서 499만원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 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 대국민 조사에서 응답자가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통일 수준은, '자유로운 교류협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국가 2체제, 1국가 1체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순으로 조사되었음.
- 20대가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유사하게,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전 연령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남북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경제적 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치적 이념, 사회/문화적 갈등, 언어적 갈등 순으로 나타남.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해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조사한 결과, 반공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이 한민족이며 평화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교육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40.4%였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정도의 유아에게 평화 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유아는 판단하기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음.
  -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하거나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유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음.

#### 다.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10.1%를 차지하고 있었음. 남성의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 20대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20대가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고, 대학생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우리 정부가 북한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총점 4점 기준의 평균 2.85점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고, 학력이 높아 질수록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음.

#### 라.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사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부가 북한 근로자 자녀를 위한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탁아소 설치가 우리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마지막으로 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남.
- 탁아소 설치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또한 높은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음.
  -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인식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탁아소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지각했으며,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지각한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음.

- 남북 유아들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 전래동화 읽기', '남북 유아들의 그림 교환하기'순으로 나타남.

## 5.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의견

- 북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으며(92.5%), 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96.3%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
  - 찬성하는 이유는 남북 간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옴.
- 2005년에 정부가 추진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92.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100.0%로 만장일치로 나옴.
  - 찬성하는 이유는 북한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은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것으로 한반도 미래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점 등임.

### 나.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2013년 개발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은 71.7%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앞서 개발협력사업의 찬성 이유와 거의 유사함.
- 2013년 연구에서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두 측면 모두 높게 나온 과제(남북 민간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하나는 높는데 하나는 낮게 나온 과제(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 개발 실시), 두 측면 모두 낮게 나온 과제(남북 유아들의 상호방문) 추려서 실행방안 또는 이유를 알아봄.
  - 민간단체 중심, 비정치적 분야 중심, 국제사회와의 협업, 상호 존중의 호혜주의 하에 추진이 기본 골자임.

- 교류협력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제는 유아 관련된 사업들임. 유아들의 상호 방문, 공동의 평화통일 개발·실시, 공동 수업계획안 개발 과제는 남북 교류협력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그 전에는 남북 유아의 공동된 경험을 갖기 위한 공동의 전래동화 읽기, 공동의 동요부르기, 그림교환하기 등을 실시해 볼 수 있음.
- 남북 합작만화인 '뽀로로'는 유아 대상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임. 남북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화, 동화책, 동요, 놀이 등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 보급할 것을 제안함.

#### 다. 교류협력 거점으로서의 탁아소 설립에 대한 의견

- 탁아소를 통해 북한 영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의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교류하면서 접촉 국면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찬성함.
-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되어 있지만 개성공단과 그 안의 개성탁아소만은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험의 확대, 이 안에서의 탁아소 설치·운영은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높은 사업이라 하겠음.

#### 라.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 평화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의견

- 81.2%의 전문가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함. 그러나 다른 질문에 비해 반대하는 응답이 18.9% 높게 나옴. 유아 대상의 북한/통일 교육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 6세 정도의 유아라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음.

### 6.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

#### 가. 추진방향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실천이다



- 헌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함.
- 통일 논의보다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우선 실천한다
  - 대국민 조사에서도 통일수준으로 '자유로운 왕래 수준'을 가장 많이 꼽음.
- 지속가능한 북한 영유아 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남북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쪽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경제협력 지구 내의 탁아소를 설치해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 평화통일교육은 유아기부터 실시한다
  - 대국민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모두 평화감수성을 길러내는 통일교육이 유아기(만 4~5세)부터 필요하다고 나옴.

**나. 추진목표**

- 한반도 미래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거점: 경협 내 탁아소 설치
-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변화하는 북한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
- 국제사회의 협력: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
-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 도출: 남남 갈등 해소
- 북한 영유아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제정

**다. 시기별 실행방안**

- 남북 관계 정도에 따른 육아지원분야의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제시함.
  - 남북 관계 고착기, 남북 관계 초기·중기·장기 별로 실행방안을 제시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과 함께,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함께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남북 간 신뢰를 쌓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http://blog.unikorea.go.kr/4475>, 검색일: 2015년 1월).

상기 인용글은 2014년 8월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1) 발족하면서 발언한 내용으로, 검색되어 있는 대북 관계의 개선 의지와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간 상호 인정, 남북 간 대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민간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통해 형성해 나가겠다는 우리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비전을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으로 정하고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통일부, 2015: 강영식, 2015: 37).2)

그러나 현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을 평화통일의 제1원칙으로 표방했지만, "2014년은 대북 인도적 사업의 역사에서 '최악의 해'로, 대북 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이며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되었던 MB정부 말기인 2012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강영식, 2015: 38)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

- 
- 1) 통준위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의 4개 분과에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합쳐서 약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에게 3년간 필수영양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북한 모자패키지 1,000day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 2) 북한도 신년사를 통해 "조국해방 일흔 뚝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며 남측과의 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은 물론 최고위급회담도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강영식, 2015: 37).

통령이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단체들을 통한 대북 지원사업과 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이다.

현정부는 실천가능한 '작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통일'은 민간교류의 비정치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대북 지원사업의 역사상 최악의 해로 평가받는 2014년에도 사회문화교류 관련해서는 방북을 28회(강영식, 2014: 42)했다는 것이 비정치적 분야의 민간교류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지점임을 보여준다. 이는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과정(process)으로써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남북 교류협력단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통독의 사례를 통해서도 통일 이후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통일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심리적·정서적 통합이라 할 수 있는 내적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박영정 외, 2012: 29; 양민석·송태수, 2010: 7)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 단계부터 남북 주민들 간의 접촉 국면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교류협력 단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한은 지난 20여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접촉을 시작했으며,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일시적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낙후된 병원이나 탁아소를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개발지원까지 발전하면서 남북 간의 접촉 횟수와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교류협력단계 내에서 시기별로 세분화하면 초기에는 대북 지원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한편, 1998년에 바닥이었던 북한의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추락을 멈추고 제한적이지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등(이석기, 2015: 17-27)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1990년대 인도적 지원을 했던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이전과 다르게 개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다름 아닌, 교류협력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북 지원사업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법, 군사 등 각 분야별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sup>3)</sup> 육아 지원분야에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즉각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정책

3) 일례로 2012년 통일정책연구협의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 구성)에서 수행한 공동연구 주제가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으로 각 분야별 통일(북한)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하였다.

방안 제시가 필요한데, 관련해서 육아정책연구소의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이윤진·구자연, 2013)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 '3단계 통일방안'을 전제로 육아지원분야에서 각 단계별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도출된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단계의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육아지원분야의 '작은 통일'방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2013년 동 연구에서 남북 교류협력 단계의 육아지원분야의 추진방향과 10개 추진과제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결과, 추진방향으로 “先성인세대, 後유아세대”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협력 시작” “先행사성, 後정례화”를 도출하였으며,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으로도 “조건없는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실시” “북한이 필요로 하고 사용가능한 물품지원” “긴급구호사업에서 북한의 자립역량 강화사업으로 확대” “지원사업과 모니터링사업은 분리 실시”의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10개 추진과제<sup>4)</sup> 중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이고 실행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중심의 비정치적 분야 우선의 ‘작은 통일’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후속연구로써 심화, 발전시킬 만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인 올해는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올해는 남북한 분단 70년이 되는 맞아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대비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윤진·구자연 연구(2013)의 후속연구로써, 지금까지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은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교류협력 단계까지를 고려해서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sup>5)</sup>, 남북 관계 개선 시, 교육·보육사업 부문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행가능한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 
- 4) ①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②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③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④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⑤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⑥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⑦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작업 ⑧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⑨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⑩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 5) 통일부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에 의료지원 확대와 더불어 탁아소 확충 계획을 발표함(통일부, 2015).

## 2. 연구내용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사례로서 통일 이전의 독일의 교류협력 사업과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사업을 육아지원분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독일과 중국-대만 사례의 고찰은 분석 차이가 있다. 독일은 통일이 된 지 20년이 지났고,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이에 비해 중국-대만은 현재 교류협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용이 풍부하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 관련된 정책과 근거 법령을 분석하고,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 지원 정책 현황으로 5·24 조치와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입안 사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주제에 맞게 교류협력사업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개발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류협력 사례를 국내외 민간단체, 정부, 국제기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일반 국민과 북한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육아지원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북한 전문가 대상으로는 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 2005년에 실시했던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별협력 사업의 인지 및 이러한 방향으로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2013년 연구에서 도출한 추진과제들에 대한 실행방안, 남북 경제협력 지구 내의 탁아소 설치의 필요성 및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의 탁아소가 기능 가능한 지 등을 알아보았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 시 추진방향, 추진목표, 실행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실행방안에서는 남북 관계 정도에 따라 육아지원분야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시기별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국내외의 정부 및 민간 발행 자료, 선행연구 등을 수집, 분석한다.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관련 법령,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등의 자료 및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NGO 단체에서 발행한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도 수집, 정리, 분석하였다.

#### 나. 심층면담조사

##### 1)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담당 NGO 단체의 현장 전문가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기구와의 협력 정도, 지속가능한 추진전략 등 모색하기 위하여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NGO 주요 단체(2005년에 개발협력사업 컨소시엄의 대표단체이거나 참여했던 단체 중심으로)의 현장 전문가 5명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다.

〈표 1-3-1〉 NGO 대북지원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자 목록

차수 (일자)	연구참여자(단체)	연령	주요 어린이 지원사업	비고
1차 (4. 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40대	영양식, 급식, 물품지원	개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30대	어린이 병원, 의약품 지원	차이는 있으나
	· 어린이어깨동무	30대	유치원·애육원 개보수, 교육용품 생산공장 설립	북한 수신회
2차 (7. 9)	굿네이버스	40대	우유, 영양식, 탁아소·육아원 시설보수, 교육용품	이상 방문

〈표 1-3-2〉 NGO 대북지원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내용

차수	주요 내용	비고
1차	대북지원사업 실시 배경, 지원사업 규모, 지원사업 종류 민간단체들 간의 업무분담과 협업, 추진 시 문제점 당시 북한의 육아지원기관(어린이병원 포함) 시설 현황,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법령에 대한 의견 등	기본인적사항 질문

(표 I-3-2 계속)

차수	주요 내용	비고
2차	개발협력사업 추진 배경, 지원사업 규모, 지원사업 종류 현재 대북 지원사업 추진 정도(국제기구, 해외동포를 통한 지원 등), 드레스덴(모자 1000일 사업) 사업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과 과제, 국제 NGO 단체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 국제 NGO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 육아지원분야의 점진적, 단계별 교육협력 사업 발굴,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인도적지원 사업, 사회문화사업, 경제협력사업별)	전 단계 면담 결과에서 보완 해야 할 내용 추가

## 2) 보육원, 교양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대상의 심층면담 조사의 목적은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과 실천가능한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입국시기,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급한 다양한 배경의 유치원의 교양원 출신과 보육원(탁아소장)을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피면담자로 선정하였다. 남한 체류기간이 1개월인 사례가 그러한 경우이다.

총 5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를 계획하였다. 1회 면담으로는 북한의 탁아소, 유치원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이 나오기란 한계가 있으므로 라포(rapport)를 형성한 뒤 보다 진솔한 내용을 얻고자 2회를 실시하였고, 2차 면담에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였다.

〈표 I-3-3〉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자 목록

차수(일자)	연령	북한학력	남한체류기간	교양원 경력
2차(5. 19/7. 24)	30대	교원대학	9년	2000년~2005년
2차(6. 3/7. 10)	30대	교원대학	1개월	1996년~2006년 (소학교 교원 포함)
2차(6. 3/7. 3)	40대	사범대	6년	1994년~1997년
1차(7. 7)	50대	전문학교 통계과	6년	2004년 ~ 2008년 (탁아소 소장)
1차(8. 17)	40대	교원대학	3년	1996년~2003년

주: 1회 실시한 사례는 추후 실시 예정임.



〈표 1-3-4〉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내용

차수	주요 내용	비고
1차	-기본인적사항(성별, 연령, 탈북·입국년도, 남한체류기간, 북한의 최종학력, 해당직업(교양원, 보육원) 경력, 현재 직업, 월평균소득) -북한 근무 유치원(탁아소) 소재지, 교직원수, 시설·설비 현황, 교재교구 종류와 상태, 놀이시설 종류와 상태, 등 -당시 가르쳤던 교육·보육과정, 최근 변화된 교육·보육과정, 교사양성과정, -육아지원분야의 남북한 차이점, 남한의 장점, 북한의 장점, 최근 북한의 육아정책변화 등	관련 자료들을 (교육, 과정, 교원양성과목) 함께 제시
2차	-드레스덴(모자 1000일 사업) 사업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과 과제 -육아지원분야의 점진적, 단계별 교육협력 사업 발굴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 (인도적지원사업, 사회문화사업, 경제협력사업별)	전 단계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 추가 질문

## 다. 설문조사

### 1) 대국민 조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별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총 800명을 비례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모집단 틀은 조사 기획 시점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8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유선 전화번호와 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이중표집 임의번호 추출(Dual Frame RDD-Random Digit Dialing)방법을 활용한 컴퓨터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 〈표 1-3-5〉와 같다.

〈표 1-3-5〉 대국민 조사 설문내용

구분	항목
일반적 특성	-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월 가구소득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수준에 대한 의견, 학교에서 배운 북한에 대한 교육, 유아대상 통일교육에 대한 생각, 통일 후 가장 우려되는 분야

〈표 I-3-5〉 계속

구분	항목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의 필요성, 평화통일에 도움 정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지속적 지원(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 5·24 조치에 대한 의견
남북 교류협력 사업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필요성, 경협 내 탁아소 설치에 대한 의견, 경협 내 탁아소의 남북 교류협력 거점의 가능성, 남북 유아 대상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2) 전문가 의견 조사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북한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5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탁아소와 유치원 종사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도 본 조사에 포함하였다. 2013년 조사 대상이었던 전문가 풀(pool)을 이번 조사에서도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2013년도 조사 내용이었던 육아지원분야의 10개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2013년 후속연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이번 질문 내용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서 면밀한 답변 작성이 가능하였다.

단, 2013년 조사에서는 남한과 북한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고학력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전문가와 거의 동수로 표집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남한 전문가만이 참여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탁아소와 유치원 종사자만 포함하였다. 다음 〈표 I-3-6〉은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내용이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질문으로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방식(오픈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3-6〉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내용

구분	항목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소속기관, 전공, 북한방문경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개발협력사업	- 개발협력사업의 인지도 및 찬반 여부, 찬반 이유(서술식)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인지도 및 찬성 여부, 찬반 이유(서술식)

〈표 I-3-6〉 계속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필요한 또는 필요하지 않은 이유(서술식)</li> <li>- 2013년 10개 육아지원분야 추진과제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서술식)</li> <li>- 남북 유아 대상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li> </ul>
경제개발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협 지구 내에 탁아소 설치의 타당성, 타당한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서술식)</li> <li>- 경협 지구 내에 남북 공동 탁아소 설치·운영의 찬반 여부, 찬반 이유(서술식)</li> <li>- 남북 합작 만화 '뽀로로' 성공 이유(서술식) 및 시사점(서술식)</li> </ul>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에 북한/통일 교육과정 확대 편성·운영에 대한 찬반 여부, 찬반 이유(서술식)</li> <li>- 평화통일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방안(서술식)</li> <li>-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방안(서술식)</li> </ul>

〈표 I-3-7〉 설문 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 조사	일반국민 조사
표본 규모	최대 50표본	800표본
표본 오차	-	±3.46%p
표본 추출	2013년 조사 대상자 중 남한 전문가(총 100명)	비례할당 표본추출
조사 방법	Email 발송에 의한 온라인 조사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
조사 지역	-	전국(세종시 제외16개 시도)
조사 기간	9. 30 ~ 10. 3	9. 22 ~ 10. 6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 + 서술식	구조화된 질문지

## 라.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국제기구나 재외동포는 상황이 다르다. 현정부에서 민간 및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국제기관을 통한 지원은 MB정부 때보다 증가하였으며(강영식, 2015: 39), 재외동포의 대북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전문자 자문회의 결과). 북한의 육아지원 관련 자료는 다른 분야보다 축적된 데이터도 적고,

수집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상황 및 육아지원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북한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재외동포와 국제기구 관계자 면담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대북지원단체가 소재한 중국 연길과 북한 평양에 사무소가 있는 일본 Unicef가 소재한 동경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5박 6일)이었다.

중국 연길에서는 연길과학기술대학교와 연변대학교에도 방문하여 최초 남북 합작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운영, 평양과학기술대학 내의 어린이집 설치(9월 개원 중), 북한의 최근 경제, 사회적 변화 등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일본 동경에서는 북한 지원 민간단체인 JVC(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와 북한난민구호기금(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기관에도 방문하여 북한 지원 현황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북한난민구호기금 단체에서는 북한 교양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도 면담하였다.

#### 마. 전문가 자문회의

북한 및 통일 연구 전문가 중 보건·의료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방안 등의 자문을 얻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4.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의 육아지원분야는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sup>6)</sup> 그러나 기존에 교육·보육 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문헌연구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서 분석한다.

6) 그동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통일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에서의 육아지원분야는 교육·보육에 초점을 두었다.

## 5. 선행연구

유아교육·보육 학계에서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이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두고 수행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들이 주를 차지하며<sup>7)</sup>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양성과 재교육 정책을 모색한 최민수·이원영·최완영 연구(2009)도 “과정(process)”이 아닌 통일 이후를 전제로 수행한 연구이다. “과정(process)”으로써의 남북 통합연구는 호혜주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의 이질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고, 남북 교류를 통해 이질성은 공동의 문제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과정(process)으로써” 남북 통합연구의 공통된 기조다.

유아교육·교육 분야에서 통일이 되는 “과정(process)”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수행한 연구는 이윤진·구자연 연구(2013) 정도이다. 이 연구는 북한 연구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북한 경험)로 구성된 남한 전문가 44명과 고학력 출신 및 탁아소·유치원 교사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38명 총 81명을 대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각 단계별 육아지원분야의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탐색한 연구로서, 남북 공통된 육아정책은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경향이 컸지만 이질적인 정책은 유의미하게 갈리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남북한 교류협력단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해 주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대북 영유아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 전문가보다 남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긴급구호지원보다는 북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지원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학교교육 분야(윤중혁·이찬희·이석희·신효숙·박영은, 2007; 한만길·강구섭·박재윤·양승실·조정아, 2012)나 사회·문화 분야(박영정·오양열·이우영, 2012) 보건의료 분야(이세정이세정·손희두·이상영, 2011) 등 유관 분야에서는 통일보다는 “과정으로써”의 통합<sup>8)</sup>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수행되었다.<sup>9)</sup>

한편, 연구논문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NGO 단체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북한 영유아의 건강·영양 실태,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현황이 상세히 담겨있다(남북어린이 어깨동무, 2005; 어린이어깨동무 2010, 201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2). 신영

7) 북한의 교육·보육을 고찰한 선행연구 정리, 분석은 2012년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의 pp.10~17을 참조바람.

8) 과정으로써의 통일을 중시하는 연구에서 통일보다는 ‘통합’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함.

9) 이들 선행연구는 2013년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의 pp.20~23을 참조바람.

전(2012)과 이기범(2005)은 그간의 NGO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평가를 다뤘다.

신영전(2012)은 북한 모자보건프로그램에서의 국제기구(WHO, UNICEF)와 한국정부, 한국 NOG 단체의 추진 협력 현황을 정리하면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에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평양지역 중심에서 평양 외 지역으로 사업 확대 유도, 단발성 사업 중심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 개별단체 간 연계와 경험공유,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남북 교류협력에서 NGO 단체의 성과와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기범(2005)은 대북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NGO 단체들의 10년 동안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과 상황 개선, 개발협력사업에서의 NGO 단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NGO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 정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기제한(self-limitation)과 자기성찰, '불쌍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보편적인 가치 마련, 의제설정능력개발, 정부로부터 부터의 자율성과 자생력 신장, 대북지원이 '퍼주기'라는 식의 남남갈등 논쟁에서 NGO 단체가 통일담론의 조정자 역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 II. 통일 전 교류협력 국외사례<sup>10)</sup>

이 장에서는 독일의 통일 전 교류협력 사례와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사례를 육아지원분야 중심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독일 사례

본고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동서독의 유치원 체제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동독 유치원 체제에 대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하게 된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를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서독의 유치원 체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동서독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협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후 유치원 및 탁아소 체제에 대한 평화적인 혁명과 독일통일, 특히 서로 다른 유치원 체제에 대한 평가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도 포함하였다. 끝으로 독일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 나. 통일 이전 동독의 탁아소 및 유치원 체제

독일의 유치원은 제국 시대(1871-1918)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과 제3제국 시기(1933-1945)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동독에서 새롭게 출현하게 된 사회주의 국가는 유치원 교육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이후에는 탁아소 교육도 크게 강조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경제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를 가능한 한 끌어올려야 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성 평등과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생산 요소를 이용하고 미시적으로는 공식적 완전고용이라는 경제적·사회적 목적과 함께 중앙집중계획경제

10) 국외사례는 원외 연구진이 집필함.

라는 체제 아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유아기 교육 기관에 관한 초창기 원칙은 “소련 군사 행정부”(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1946)가 규정하였다. 이때는 전쟁 직후 혼란의 시기였으며, 피난민들이 유입되고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교육시스템이 나치화되었던 것을 해산시키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했던 때였다. 점차적으로 독일의 교육기관들이 동독에서 새로 지어졌으며, 독일인민교육부(Deutsche Verwaltung für Volksbildung)는 고아원과 유치원, 학교체제 전체를 인수받게 되었다. 독일인민교육부는 세세한 규제까지도 지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독일인민교육부 정령 1946 a-c」에 따른 고아원 직원들의 재교육, 유치원 기관 재교육, 유치원직원 훈련 등이었다.

새로운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유아기 교육은 일부 1945년 이전의 사회주의자들이 제정한 사회 및 교육정책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 정책의 요지는 통합학교과정의 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의 학교시스템을 ‘김나지움(gymnasium)’이라 지정하고, 대학준비 과정의 학교를 ‘레알슐레(realschule)’, 실용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크슐레(volksschule)’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사회주의노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나 이념교육의 거부와 같은 요구들은 전체주의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폐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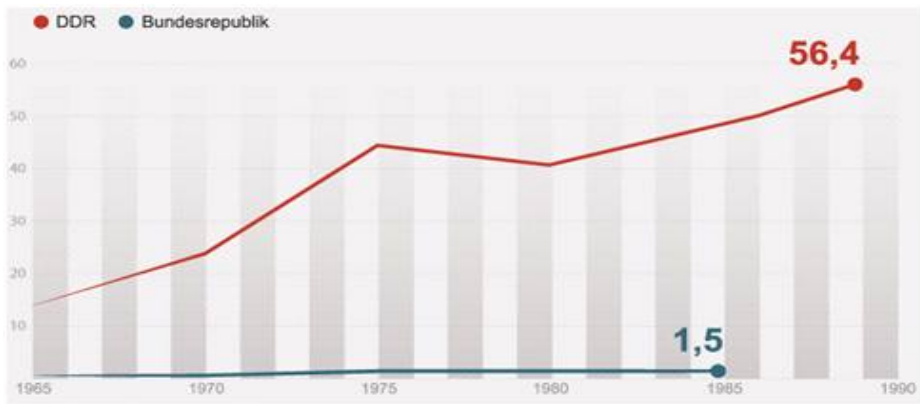
1980년대에 들어서 유치원과 탁아소 아이들의 교육은 국가표준형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국가의 교육규범에 완전히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도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 없이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맑스-레닌주의의 ‘노동’이라는 가치에 따라 여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육원 시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동시에 보육원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동독여성의 사회참여율은 87%로 세계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서 동독의 어린이들은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주의 인격”이 잘 갖추어져야 했다. 이것이 통합교육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또한 유치원은 부모님의 집에서 갖추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개인의 독립성을 갖추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 준비를 하는 취학 전 아동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유치원은 지방당국, 공기업, 시골지역의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되었지만, 교회



에서 운영하던 곳들도 존속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낮 시간 동안에 돌보는 형태였지만, 일주일 내내 돌보는 곳도 있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간별 유치원 및 고아원도 있었다. 유치원과 탁아소 등록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높은 국가의 보조금과 함께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면서 나중에는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게 되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혹은 일을 하고 있거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1순위 대상자였다. 전체사회주의 교육 시스템의 일부인 유치원이 인민교육부(Ministerium für Volksbildung)에 속해 있었던 반면, 탁아소는 보건부(Ministerium für das Gesundheitswesen)에 속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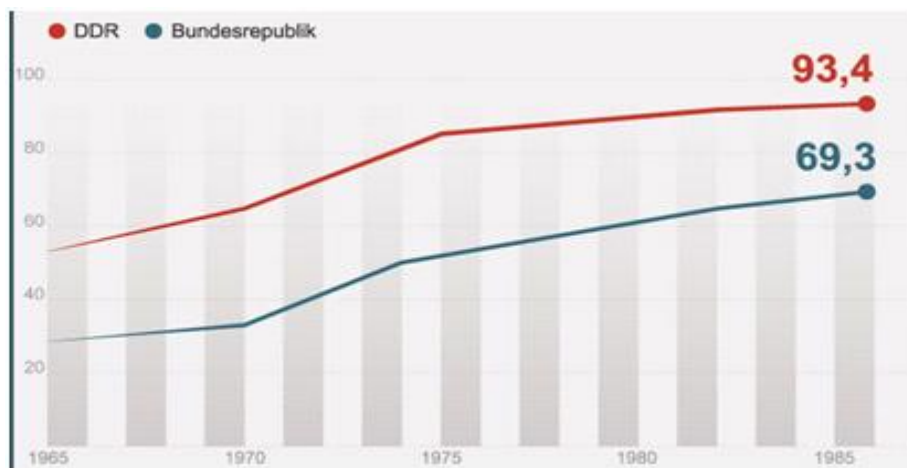


[그림 II-1-1] 동독(윗선)과 서독(아래선)의 분단 시기 탁아소 등록률 비교(%)

출처: ZDF-Check. Die DDR war der Bundesrepublik bei Kinderbetreuung und Gleichberechtigung voraus - Stimmt teilweise. <http://zdfcheck.zdf.de/faktencheck/kinderbetreuung/>, based on original data by Bildungsbericht 2006(검색일: 2015.08.17.)

[그림 II-1-1]은 동독과 서독의 탁아소 등록률을 비교한 것이다. 동독의 경우 1988년 0~3세까지의 어린이인구 중 56.4%가 탁아소에 등록되었다. 서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유아들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동독탁아소는 해당구역(Bezirk)과 자치구(Kreis)의 의사들이 지휘·감독하였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탁아소에 방문해 아이들의 보건 상태를 확인하였다. 주로 여성인 탁아소 원장은 의사에게 보고를 하고 모든 아이들의 발육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탁아소 원장은 정치적인 이념 교육

에서부터 탁아소의 프로그램 및 부모의 정기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보건 당국은 작은 세부사항까지도 규제하였고, 통합된 교육지침서를 발행하였다. 탁아소에 있는 아동들은 그들이 당면한 환경에 친숙해지고 질서와 규칙에 익숙해져야 했다. 특히 정부는 아이들에게 사고력과 언어구사력뿐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기를 것도 권장했다. 질병과 장애에 대해 어린 나이 때부터 인지하는 것도 프로그램 중 일부였다.



[그림 II-1-2] 동독(윗선)과 서독(아래선)의 분단 시기 유치원 등록률 비교(%)

출처: ZDF-Check. Die DDR war der Bundesrepublik bei Kinderbetreuung und Gleichberechtigung voraus - Stimmt teilweise. <http://zdfcheck.zdf.de/faktencheck/kinderbetreuung/>, based on original data by Bildungsbericht 2006 (검색일: 2015.08.17.)

[그림 II-1-2]는 동독과 서독의 유치원 등록률을 비교한 것이다. 동독의 경우 1986년도에 3세에서 6세까지 유치원 등록 비율은 대략 93.4%였다. 반면 서독의 경우 69.3%였다. 통합 사회주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 단계였기 때문에 인민교육부 관할 하에 두었으며, 이곳에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부모들은 유치원 비용에 극히 제한적인 비용을 부담할 뿐이었다. 1982년도에 식비가 55페니히(0.55 동독마르크화)로 지정되었으며, 동독의 저임금을 고려해 볼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의 비용이었다. 1965년도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어린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기 개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5세부터 음악학교에 등록하도록 장려한 것이다. 1981년도에는 59,165명의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하였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동독 사회주의사회의 삶에 유아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은 전체주의 사회에 잘 맞도록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가치에 잘 부합해야 했다.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을 받지만 유치원에서부터 다음 학년 교과과정을 미리 배운다거나 읽기, 쓰기를 배우지는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에 한 주 동안 열리는 오전 반 특별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에서 이념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체제선전문구, 노골적인 '사회주의 교육', 그리고 국가인민군(Nationale Volksarmee) 및 동독군부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또 체제선전 브로셔 및 탱크와 같은 군사장난감을 갖추고 있었다. 노동자들과 군인들을 방문하는 것도 유치원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1957년부터 유치원생들을 위한 특별 신문인 「Bummiheft」는 국가인민군과 노동자전위대(Kampfgruppen)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지를 얻게 하기 위한 특수한 임무가 있었다. 이 신문에는 군가와 영웅들의 이야기, 서방의 사악한 침략국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통일 이후에도 동독의 유치원 부모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이념 교육은 매우 독립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이 기울게 되었다. 확고한 사회주의자 부모들이 여전히 존재했을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는 전쟁 장난감이나 체제 선전 브로셔를 어느 방 한 구석에 쌓아두곤 하였다. 유치원 시스템에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국가가 주입하고자 하는 이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 다. 통일 이전 서독의 탁아소 및 유치원 체제

서독에서는 아테나워 시대에서부터 가족부(Ministry for Families)를 설립하는 것이 개인의 영역이었던, 또한 교회에서 주로 운영하였던 유치원 시설에 대한 침범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3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동독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유치원은 교회에서 운영되었다.

서독은 1960년대부터 교육 개혁(몬테소리 혹은 월도프 교육학)을 더욱 중요시 하였고 새로운 유치원들을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1968년 이후에는 보육원 시설이 부족해지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가능성이 적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분단 시기의 마지막까지 0~3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 통일이 이루어진 후까지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원칙이 남아있었다. 유치원은 반나절 동안만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아침 8시 내지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2시나 1시까지 운영되었다.

서독 유치원 기관은 꽤나 그 형태가 다양하였다. 대부분은 교회에 속한 기관이었지만, 공립유치원도 있었으며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고 (Kindertagesstätten), 적십자 혹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관,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맞는 교육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른 대안으로는 '오페어(Au pair)' 혹은 '돌보미 엄마'(daycare mothers)와 같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곳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개인 아파트나 집에서 교육을 하는 형태였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에는 공립탁아소와 공립유치원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의 선택이, 특히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이민자 가정의 경우에 그들이 내리는 교육부분에서의 결정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라. 통일 이전 동서독 탁아소 및 유치원 간 협력과 갈등

분단 시기 동안 동독과 서독의 유치원교육에서의 협력은 거의 불가능했다. 동독과 서독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념이 확연히 대비되는 현상은 협력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동독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구의 교육학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엄격히 통제되긴 하였어도 동서독 간의 과학 분야에서의 교류는 가능하였다.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동독에 새로운 교육적 사고가 제한적으로나마 유입 될 수 있었다. 서독에서는 1968년 이후 맑시즘 지식인 다수가 반짝 활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동독에서 발전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진정한 사회주의'(real socialism)는 그리 관심을 끌지 못했다. 동독 유치원은 서독의 롤 모델이기보다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독의 이념이 확고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

다. 유치원의 이념 교육의 역할에 대해 국가가 극도로 강조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아래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977년 11월 17일과 18일,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구역에서 취학전 교육에 대한 두 번째 중앙회의가 열렸다. 마고 호네커는 동독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부인이자 인민교육부 장관이었다. 그녀는 폐회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적들은 동독의 취학전 교육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맹렬히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비난이 이번 회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동독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미 유치원에서 정치교육을 받았고, 아이들을 부모들로부터 떼어놓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가치 덕목에 따라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식적인 부르주아적인 가치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사회주의 가치 덕목은 여러분의 조국을 사랑하는 교육이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노동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잘 살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을 위한 교육이자 진리를 사랑하는 교육입니다. 진정으로 인류를 생각하는 교육입니다.”<sup>11)</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쪽의 협력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협력이 소규모로나마 서독의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동독에는 1989년까지 275개의 개신교 유치원과 142개의 가톨릭 유치원이 있었다. 전체 유치원 수 가운데 대략 2.9% 정도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국가의 교육 이념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의 통제에 복속하지도 않았다. 이들 유치원들은 운영이 용인되었으나, 새로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소련군사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었다. 1953년까지 동독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들 기독교 유치원들의 재등록 요구를 하며, 가능한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폐쇄하려 하였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기관들은 살아남게 되었다. 비록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국가나 학부모, 동독교회에서로부터 그 어떤 보조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서독교회로부터의 적지 않은 도움으로 시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서독 협력의 한계는 매우 분명하였다. 동독교회는 서독의 교회 자금과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신축 프로그램’(construction programme)이라

11) Margot Honecker, “Schlusswort des Ministers für Volksbildung,” in: Neue Erziehung im Kindergarten, no. 1(1978) 참조.

는 것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새로운 유치원도 건축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는 동독지방을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로 건설하면서도 교회 부설유치원을 짓지 않았다. 하지만 동서독 교회들 간의 협력에서 서독교회는 동독유치원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상대방과 만날 수 있는 교류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유입시킬 수 있었다. 서독의 가톨릭지역인 아히스펠트(Eichsfeld)와 접경하고 있는 동독의 작은 지역에는 서독 가톨릭교회의 지원으로 가톨릭 유치원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는데, 이는 동독의 대부분이 신교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곳의 교회는 사회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치의 국가사회주의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동독 및 서독의 유치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적절한 장소, 연료, 위생용품, 좋은 선생님 등 모두가 부족했다. 전쟁 직후 국가는 분단되었고, 기독교 교파들은 나치 정권에 의해 강제 수용된 모든 유치원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동서독을 점령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미·영·불·소 전승 4국의 정치행정당국들은 소련점령지역 아래 있었던 기독교 유치원들이 소련당국에 의해 후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이라는 구호 아래 지원·협력하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련이 점령한 구역은 교회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재빨리 시설을 복구하고 유치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련점령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비극을 달래고 국가의 붕괴를 마주하게 된 교회들을 도와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교회들은 자신들을 점령지역의 경계를 넘는 종교적인 단일체라 생각하고, 분단이라는 여건속에서나마 그들의 새로운 자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자유로운 위치에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 교구 공동체, 개신교 및 가톨릭 지원 기관, 유치원 대표들의 총회 모임과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1949년 동독이 탄생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동독 공산당(SED)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다.<sup>12)</sup> 1945년과 1949년에 사회단체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독교와 유관한 유치원들(confessional kindergartens)이 중국에는

12) <http://www.diakonie.de/diakonie-in-der-sowjetischen-besatzungszone-und-der-ddr-9220.html>> 참조

사라지게 될 위험이 처했다. 하지만 기독교와 유관한 유치원들은 1949년 교회들과 확고한 관계형성을 통해서, 그리고 “재독 소련 군사 행정당국”(Soviet Military Administration in Germany)의 「정령 225」(order number 225)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을 통해서건, 교회와 유관한 협회를 통해서건 간에 어린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복음주의 루터교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는 그들의 시설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1945년 8월 12일 이후에는 규정 4에 따라 교회들이 1949년 10월 7일 이후 동독이 되는 소련점령지역에서 워크숍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치원 인력이 갑자기 부족하게 되었다. 다행히 경제적 사업 활동, 부모들에 의한 높은 유치원 원비 보조, 관할 구역 교회사무소(District Church Office)와 지역 교회사무소들(Regional Church Offices)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러한 시설을 이후에도 보존할 수 있었다. 또한 서독의 많은 지역 교회들로부터 기부가 있었고,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 in Germany: EKD)에서도 기부를 하였다. 동독기독교구의 국내 선교를 위한 지역 교회사무소의 Vogel 목사는 1951년 5월 7일자 편지에서 1947년에 설립된 루터교 세계연맹(the Lutheran World Federation)이 재정적으로 원조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썼다. 루터교 세계 연맹은 서독의 신교교회 연합인 EKD가 소련점령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한 동쪽 중앙관리사무소(the central office east)를 통해 소련 관할 구역 내 교회 시설들을 지원하였다.

동독에 있는 가톨릭 유치원은 독일 가톨릭 교회단체인 “보니파티우스베르크(Bonifatiuswerk)”를 통해 독일의 대교구(godfather dioceses)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장소를 불문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가톨릭 교인들을 오늘날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밖에도 주교 연맹 “Not in der Welt”와 수녀회 본원(Mother Houses)에서 지원을 받았다.

1946년 7월 1일부터 유치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 보육 시설들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다만 “국가사회주의 인민의 복지”(National Socialist People’s Welfare)라는 가치 아래 나치 독재체제 아래에서 국가 소유로 된 유치원들을 원래의 유치원 협회나 소유주들에게 돌려주지는 않았으며, 유치원들은 한 마을 안에서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건 간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도록 하였다.<sup>13)</sup>

교회와 관련한 시설물들의 수는 1952년 9월 동독이 포고문 18번을 발표한 때의 숫자 수준으로 정체되었다. 동독의 총 417개의 교회기관 중 신교는 275개, 구교는 142개였다. 이 수치는 동독 내 모든 유치원 수의 2.9%에 달하는 것이었다. 동독의 가톨릭 기관들의 숫자는 동독의 역사 40년 동안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전쟁 직후 소련 관할 구역이 존재했던 시기에는 142개 유치원 중 111개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 유치원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폐쇄되었던 곳이었다. 1945년과 1952년 사이 34개의 유치원이 추가로 문을 열게 되었고, 1952년도에 총 145개의 가톨릭 유치원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도에 공립유치원이 13,150개 존재했던 반면, 가톨릭 유치원의 수는 142개였다. 동독이 출현하면서 142개의 가톨릭 유치원은 주로 수녀들이 운영하였으며, 단지 11개의 유치원만이 평신자(day childcare workers)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87년까지 해가 거듭할수록 변하게 되어 수녀들이 운영하는 곳은 34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108개가 되었다.<sup>14)</sup>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톨릭 유치원들은 에르푸르트/마이닝겐(Erfurt/Meiningen)법원 지구에 속해 있었다. 이 법원 지구에 속한 아히스펠트(Eichsfeld) 지역에서는 동독 시기 동안에도 교회의 생태계가 널리 보전되어 있었다. 국가에서 무료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마을에서는 거의 가톨릭 유치원들만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이들 가톨릭 유치원들은 원래의 모습대로 지켜나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립유치원과 가톨릭 유치원간에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이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되도록 멀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종교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톨릭 유치원들은 존속될 수 있었다.<sup>15)</sup>

대부분 가톨릭과 신교의 유치원들에 입학하기 위한 대기자 명단이 길었는데, 이들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부모들도 교회가 설립한 유치원에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했다.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 양측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공립유치원에서 공공연히 다루는

13) U. Hartmann/Ch. Rahne, "Zur Situation der konfessionellen Kindergärten in der DDR," in: M. Müller-Rieger ed., Wenn Mutti früh zur Arbeit geht... Zur Geschichte des Kindergartens in der DDR (Berlin: Argon, 1997), pp. 90-91 참조.

14) <http://ktkshop.carinet.de/86673.html> 참조.

15) U. Hartmann/Ch. Rahne, "Zur Situation der konfessionellen Kindergärten in der DDR," p. 90.



군사 주제에 자신의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신교와 구교에서 설립한 기관들은 국가의 교육에 묶여있지 않았고, 교육학적 원칙이 담겨있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국가가 원하는 교육과 양육의 목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 “동독 신교 지도자 회의”(Konferenz der Evangelischen Kirchenleitung in der DDR)가 1979년에 작성한 문서인 “신교 유치원들의 과업과 목적”(Aufgaben und Ziele in evangelischen Kindergärten)은 신교-루터교 취학 전 학교(Protestant Lutheran Preschool)의 과업과 목적을 명시하였다. 그 결과 신교 유치원들은 스스로 어린이의 학교 입학 준비에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기독교 교구 기관의 일부로서 기독교적인 삶과 기독교를 선언하는 장소로서 신교 유치원에 다니는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 및 부모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라 아이들은 신도들의 지도 아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신자들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신교 유치원이 제공한 특별한 기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유된 삶”(shared life)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안에서 교회의 임무(mission)가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요구와도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기독교 유치원들에 고용된 보육 교사들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교회들은 국가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세미나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기관들을 동독당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신교-루터교 교회의 훈련 장소는 발 라우직(Bad Lausick)에서부터 동베를린, 아이제나흐(Eisenach),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볼미르슈테트(Wolmirstedt)까지 총 5곳이었다. 이 훈련 장소에서 여성 집사들도 훈련을 받았으며,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이, 부모,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동베를린 근처 미헨도르프(Michendorf)와 에어푸르트(Erfurt), 하일리겐슈타트(Heiligenstadt)에서 세 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보육원 시설과 종교적인 교육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대학 졸업생을 준비시키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교육생들에게 교회의 훈련을 받으면 앞으로 국가기관에

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러한 일들은 몇몇 기독교와 관련한 보육교사 훈련생들에게 문제가 되었다. 이들이 결혼을 하고 살게 된 장소에 기독교와 관련한 유치원이나 다른 교회 시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훈련생들에게 그들의 보수가 교회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인지시켰고, 이는 보수가 공립 교사 임금의 거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sup>16)</sup>

교회 유치원의 사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소한 소규모지역이나 이들이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란 틀 내에서 행해진 자체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훗날 기독교인이 아닌 동독체제를 비판하는 이른바 반체제 인사들이 교회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변화를 꿈꾸고 힘을 모으려는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 고자 하는 사람, 북한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 누구에게나 북한에서도 이러한 공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한편 동독과 서독 교회 간의 재정 이전, 대부분 서독교회에서의 동독교회로의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 자금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C형 교회 사업」이라고 하는 가톨릭교회의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자금 이동은 1966년과 1989년 사이 대략 6억 3천 만 서독DM에 달했다. 이 서독의 자금 중 3억 6천만 동독 마르크화와 2억 7천만 서독DM화는 서독교회 → 동독정부 → 동독 교회로 송금이 이전되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새로운 시설 건설 건이나 기술 분야, 특히 병원 내 의료기기 제공을 위한 곳에 자금이 쓰였다. 동독정부는 그 과정에서 환율차이나 이자 등의 방법으로 매년 대략 1억 5천만 서독DM에 달하는 차액을 발생시켰고, 이 자금은 동독 국가보안기구인 이른바 ‘슈타지’(Stasi) 혹은 동독의 지도자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의 활동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

나아가 동독의 슈타지는 교회부서(the Stasi Church Department HA XX/4)를 운영하면서 서독교회의 대표들과 독자적으로 사업, 즉 공작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82년도에 서독의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Caritas)의

16) U. Hartmann/Ch. Rahne, "Zur Situation der konfessionellen Kindergärten in der DDR," p. 98.

17) 독일 분단 시기의 교회와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Bernd Schaefer, Staat und katholische Kirche in der DDR (Weimar: Boehlau, 1998), 특히 pp. 324~330 참조.

서베를린 담당자에게 동독의 외환법에 어긋난다는 혐의를 걸어 자금을 갈취한 사례가 그것이다.

### 마. 통일 기간 및 통일 이후 유치원 체제의 통합과정

아이러니 하게도 동서독 두 사회의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항상 중요한 구분이었음이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두 국가 간 차이점들이 광범위하게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동독의 유치원체제라는 유산이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결과 비록 통일 이후 동독의 유치원체제를 초기에 서독의 체제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나, 동독유치원의 수를 줄이고 유치원의 조직을 공적 기관이나 지방당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좀 더 사적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되었어도 동독 유치원체제는 어느 정도 존속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인력의 국가적 활용 차원에서 유치원과 탁아소의 필요성은 독일 전반적으로 인식되어졌으며,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독일정부는 “유치원 자리에 대한 권리”(right to a kindergarten place)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구 서독지역에서도 유치원과 탁아소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그 결과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OECD 국가에서의 유치원 및 탁아소의 수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구 동독에서는 <표 II-1-1>에서와 같이 통일 이후 유치원과 탁아소가 합쳐진 통합 시설(Kombi-Einrichtung)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I-1-1> 구 동독지역의 취학전 아동 보육 시설 비율 (베를린 제외)

단위: %

년도	유치원	탁아소	통합시설 Kombi-Einrichtung	방과 후 보육 Kinderort
1991	41.4	22.7	20.8	15.1
1994	20	2.4	61.4	16.2
1998	6.6	1.1	75	17.3
2002	5.2	1.1	79.4	14.3
2006	12.7	0.8	73.2	13.3
2007	11.8	0.7	73.3	13.7
2008	10.7	0.7	74.3	14.3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KITAS und Kindererziehung in Ost und West.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n-einheit/47313/kinderbetreuung?p=all> (검색일: 2015.08.17)

1989년 동독이 붕괴한 이후 유치원과 유치원정책의 발전을 비록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방 이후 첫 해 즉 1990년 초에는 특히 동독에서 이른바 재고 정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변혁기의 상황 속에서 서독의 유치원들도 체제를 정비해야 했고, 서독의 유치원에서도 위생시설의 부족과 같은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유치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학적인 접근(예를 들어 자유로운 놀이 시간, 창조성에 더욱 집중하는 교육 등)이 이루어진데 대해 동독의 유치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동독 유치원 구조에 수용하고자 하였다.

〈표 II-1-2〉 구 서독지역의 취학전 아동 보육 시설 비율 (베를린 제외)

단위: %

년도	유치원	탁아소	통합시설 Kombi-Einrichtung	방과 후 보육 Kinderort
1991	82.5	2.6	5.3	9.6
1994	81.9	1.7	11.5	4.9
1998	79	1.6	14.1	5.3
2002	74	1.9	18.6	5.5
2006	63.1	1.4	30.7	4.8
2007	61.9	1.9	31.2	5
2008	59.9	2.3	32.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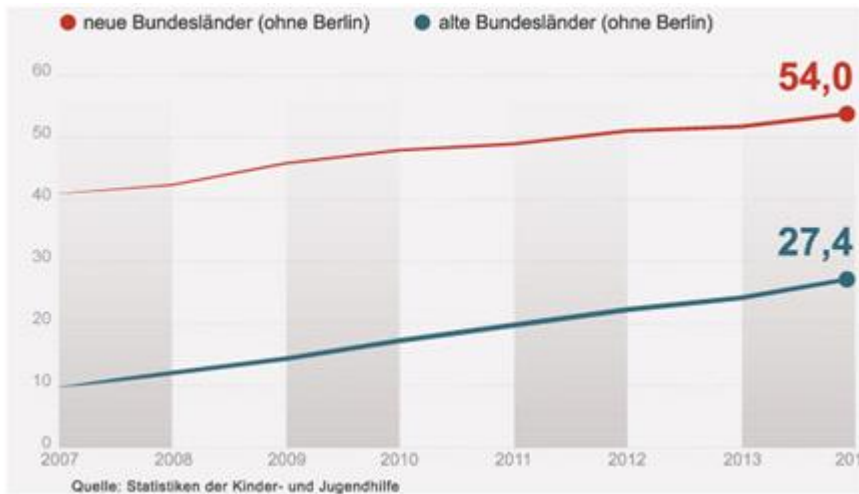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KITAS und Kindererziehung in Ost und West.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n-einheit/47313/kinderbetreuung?p=all> (검색일: 2015.08.17)

두 번째 단계인 1990년 중·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에는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간의 갈등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엄청난 통일비용 등 통일 이후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되어 많은 유치원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새로운 유치원 체제에 대한 논쟁의 열기가 시작되었다.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던 동독여성들은 유치원과 탁아소가 문을 닫자 더 큰 짐을 느끼게 되었다. 인구통계학 전문가들은 구 동독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두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구 동독지역의 많은 정치가들은 구 동독 유치원체제에 대한 비판을 곧 구 동독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고, 구 동독의 역사에

대한 정통성을 대대적으로 해체시키는 작업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생각은 구 동독체제의 독재적인 유아교육으로 인해 동독에서 성장한 성인들도 극단주의자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인식으로까지 퍼져서, 이로 인해 구 동독지역에서 우익 극단주의 폭력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까지 인식되게 되었다. 동독의 탁아소에서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제한적인 보모인력으로 많은 아이들의 수를 감당하기 위해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조차 화장실을 갈 때 같은 시간에 같이 가도록 하였던 것도 이것이 바로 집단적 단체 결성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졌다.<sup>18)</sup>

마지막 단계로 1990년대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2000년대에 구 서독지역에서는 유치원과 탁아소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인구통계학, 이주, 통합정책 등 서로 다른 이론적 정당화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주도하는 조기교육을 실시한 구 동독정책의 뒤늦은 승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1-3]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구 동독(윗선, 동베를린 제외) 및 구 서독(아래선, 서베를린구 제외) 내 가능한 탁아소 부지 (%)

출처: ZDF-Check. DieDDRwarderBundesrepublikbeiKinderbetreuungundGleichberechtigungvoraus-Stimmteilweise. <http://zdfcheck.zdf.de/faktencheck/kinderbetreuung/>, based on original data by statistics of child and youth social services (검색일: 2015.08.17.)

18) Christian Pfeiffer, Fremdenfeindliche Gewalt im Osten - Folge der autoritären DDR-Erziehung? (1999) 및 Dieter E. Zimmer, "Ein Kind ist schwer zu verderben," in: Die Zeit, No. 29( 1995) 참조.

시간이 지나면서 구 동서독지역의 유치원체제 간에 융합을 하려는 경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림 II-1-3]의 그래프와 지도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양 지역 간에는 중요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 탁아소 시설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등록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비록 통일이 되었지만 구 동서독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탁아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양쪽 경계선을 두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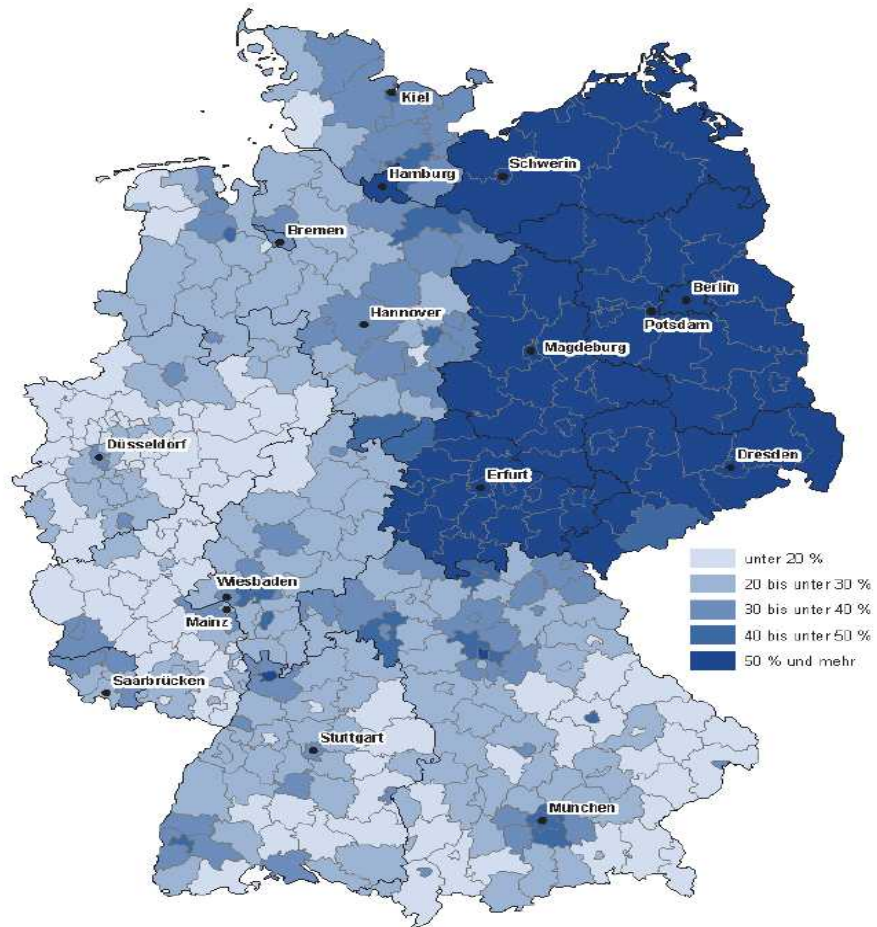
구 서독지역에서는 3세 이하 어린이들 중 27.4%가 탁아소에 등록한 반면, 구 동독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52%에 달하였다.

〈표 II-1-3〉 통일 이후 어린이 보육시설 수의 구 동서독지역 구성비 (베를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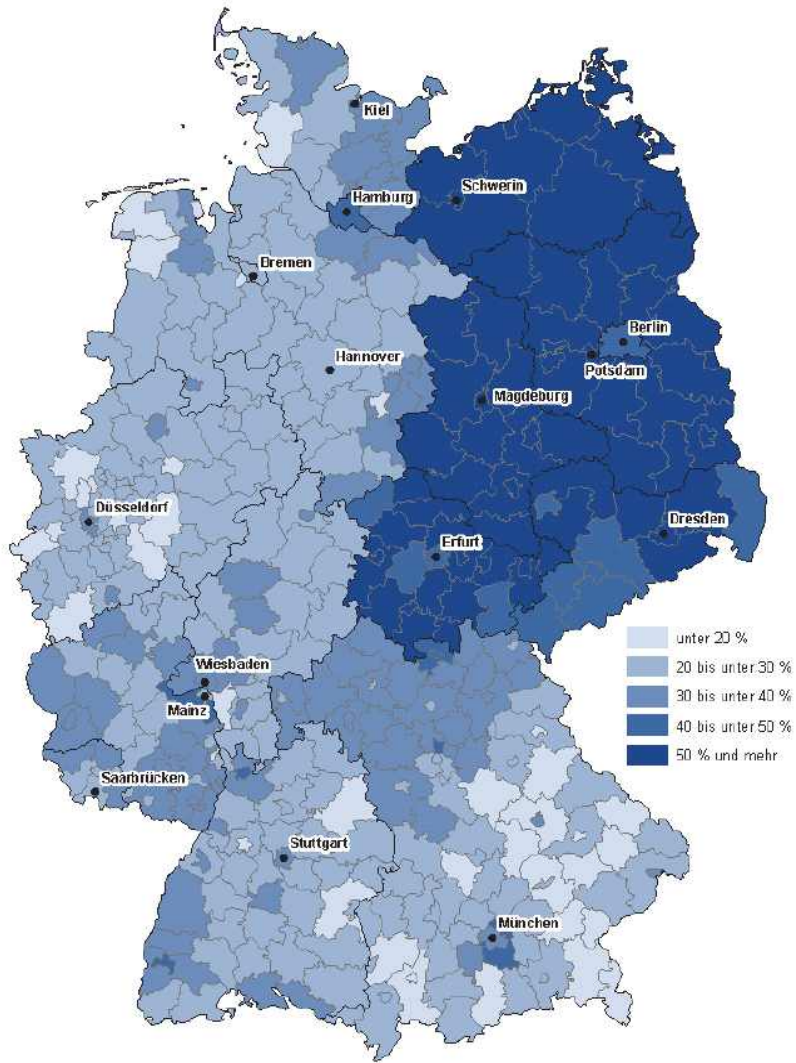
단위: %

년도	동독지역	서독지역
1991	4.4	67.3
1994	16.2	66.1
1998	29.5	65.6
2002	39.5	64.3
2006	47.7	65.8
2007	49.7	66.5
2008	51.9	67.5

출처: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n-einheit/47313/kinderbetreuung?p=all> (검색일: 2015.08.22)



[그림 II-1-4] 지역별 1세~2세미만 아이들의 탁아소 등록 상황(2014.3.1. 402개소)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 Kindertagesbetreuung regional - Ein Vergleich aller 402 Kreise in Deutschland (2014), p. 13.



[그림 II-1-5] 2014년 3월 1일 402개 지역별 3세 이하 아이들의 탁아소 등록 상황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 Kindertagesbetreuung regional - Ein Vergleich aller 402 Kreise in Deutschland (2014), p. 11.



## 2. 중국-대만 사례

### 가. 양안간 교류 협력 정책의 근거 법령 등<sup>19)</sup>

중국 대륙과 대만, 소위 양안간 교류 협력은 양안의 각 관련 단체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대만의 당국자 간 공식적인 협상을 통한 구속력 있는 양안 관계법이나 협정체결은 없으며, 각각 양안의 입장에서 각기 제정한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교류 협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반관반민 형태의 기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호 상대방의 법령 및 제도를 가능 범위 내에서 인정·승인하여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1) 양안간 주요 현안 추진 기구

중국과 대만은 분단 이후 적대 관계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들어서 상호 교류가 증대되고, 양안간 관련 업무나 통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상호 교류 및 통일 관련 조직을 확대·강화하였다. 그 추진조직을 살펴보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대만 공작 영도소조(領導小組), 국무원 대만관공실이 있다. 한편 대만은 총통부 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양안간 교류와 협력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정부간 공식적인 접촉과 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안 관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여 공식적인 정부간 교류보다 소의 반관반민 형태의 조직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

1990년 대만이 행정원 대륙위원회 산하에 해협교류기금회를 설립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접촉·협상기구로 같은 해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산하에 해협 양안 관계협회를 설립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정부 조직으로 중국 국무원 대만관공실과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있고, 비정부 조직으로 중국 해협 양안 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

19) 본 내용은 강일규 외(2014)의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의 내용을 인용 및 재인용하여 재구성하였음.

회가 있다(신중호, 2011: 3; 신중호, 2010: 100; 문흥호, 2008: 319). 이들 추진조직의 형성 배경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II-2-1> 양안간 현안 추진 조직 형태 현황

조직 형태	중국	대만
정부조직	국무원 대만판공실 (國務院台灣辦公室)	행정원 대륙위원회 (行政院大陸委員會)
비정부조직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 가)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sup>20)</sup>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國務院台灣事務辦公室)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中共中央台灣工作辦公室)은 대만과 관련된 업무나 연구를 하는 중국 국무원 직속의 사무 조직이다.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양국론을 제창하기 전에는 해협양안교류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를 통해서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와도 교섭을 실시했었다.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988년 9월 9일 제21회 상무회의에 의해 설립된 국무원 산하 기관이자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로 1991년 3월 국무원 기관 개혁결정에 의해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의 총 2개 부서가 중국 공산당 중앙직속기관으로 편입되었다.

대만판공실은 중앙과 국무원이 제정한 방침 또는 정책에 따라 국무원 산하 기관과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정부의 경제,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 대만과 관련된 사무를 관리·지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각 부서, 각 지역의 중앙, 국무원 제정 방침과 정책에 대한 집행 여부와 집행 진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대만과 관련된 사무를 필요로 하는 관련 정책, 규정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만판공실의 주요업무로는 첫째, 대만 업무 방침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작성을 하며 당 중앙, 국무원의 대만 업무 방침 및 정책을 철저히 실행한다. 둘째, 국무원 산하 각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만 업무를 조직, 지도, 관리, 조절하며 각 지역, 각 부서의 당중앙,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방침 및 정책 실행 여부를 검사한다. 셋째, 대만 현황과 양안 관계 발전 방향을 연구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만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 연구한다. 넷째, 국무원의 배치에 관해 대만 당국 및 관련 권한을 가진 사회단체와 회담

20)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中國國務院台灣辦公室) 사이트 <http://www.gwytb.gov.cn/index.asp>. (2014. 7. 20. 인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및 협약체결과 관련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양안간 3통(우편왕래, 노선운영, 상업왕래) 관련 사무를 관리하며 대만을 상대로 하는 선진, 교육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무역 업무를 조절·관리하며, 양안간 금융, 문화, 학술, 체육, 과학기술, 위생 등 각종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양안 인원의 왕래, 상호연구, 상호 교류 등의 업무와 국제회의에서 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일곱째, 국무원이 배정한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나)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sup>21)</sup>

양안간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1987년 11월 대만당국이 대만인의 중국 대륙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부터 양안 민간 교류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1988년 8월 대만 ‘행정원’은 업무별 조 편성 방식의 ‘행정원 대륙 업무 보고회’를 설립하여 각 주관기관의 중국 대륙 사무처리를 조절하였다. 1990년 4월, “행정원”은 “행정원 대륙위원회조직조례(초안)”을 특별조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1991년 1월, 입법원 삼독(三讀)통과로 1월 28일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行政院大陸委員會)는 대만 행정원에 속해 있는 정부 기구로서 중국·홍콩·마카오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본부는 타이베이(台北)에 있다. 주로 중국 정책의 연구, 중국 정보의 수집과 분석, 양안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처리, 홍콩·마카오 관련 업무 처리 등을 담당 하고 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전자매체에서 원 부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만 당국의 유일한 중앙정부 부처였다. 다른 부처는 통상적으로 기구성격을 대표하는 단어인 ‘내정부’(內政部)마저도 ‘내정부서’(內政部門)로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대륙위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받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2월 3일 ‘행정원’ 조직법이 수정되었고, 2013년 ‘행정원’은 기능업무와 조직의 체계를 잡고 명장(蒙藏) 위원회는 몽골 대륙위원외, 시장(西藏)사무소로의 한 단계 낮은 조직으로 형성되었고, 새로운 조직법 실시에 따라 ‘대륙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다) 해협 양안 관계협회<sup>22)</sup>

21)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行政院大陸委員會) 사이트 <http://www.mac.gov.tw>(2015. 7. 20. 인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해협 양안 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이하 해협회)는 1991년 12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의 교섭상대로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해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며, 해협 양안의 왕래를 촉진하고, 양안 관계를 발전시켜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와의 연락과 협력강화를 통해 관련부서들 간의 각종 왕래와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해결을 통해 양안간의 정상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해협회의 핵심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대만의 민간단체 및 인사와의 연락과 상호협력을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발전시켜 양안간의 직접적인 3통과 쌍방향 교류를 촉진시키고,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권한을 부여받아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관련 단체와 관련 업무의 처리 수행. 둘째, 대만 해협 밀수, 해상 강도문제와 관련하여 해협교류기금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논. 셋째, 해협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만 관련 업무 위임단체 또는 담당자와 대만 해협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업분쟁 및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상대 지역에 진입한 주민 및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상 진행. 넷째, 대만의 각종 단체,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투자, 무역, 기타 교류활동과 관련된 정책, 법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만 관련 문화, 학술, 체육, 과학기술 관련 교류 등에 대한 대만 관련 부서와 지방단체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이다.

#### 라) 해협교류기금회<sup>23)</sup>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이하 해기회)는 정부간 접촉이 없고, 정부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안 교류협력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민간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준정부기구이다.

1991년 3월 정부 및 각 부문의 민간 인사들이 공동으로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를 정식 설립하였으며, 꾸전푸(辜振甫) 선생을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1991년 12월 본토에서 또한 유사한 성격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를 설립하여 해기회의 협상창구가 되도록 했으며,

22)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사이트 <http://www.arats.com.cn/flgf/falv/index.htm>. (2015. 7. 20.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3)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사이트 <http://www.sef.org.tw>. (2015. 7. 20.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왕다오한(王道涵) 선생을 초대 회장으로 임명했다. 약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양안관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해기회는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의 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의 제4조 「행정원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구에서 대만 인민 및 본토 인민 간 왕래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행정원대륙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양안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사안의 논의, 협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해기회는 대만과 본토 간의 인적 왕래와 관련되는 일을 협조·처리하고, 양안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장징에도 대만정부를 대신하여 본토 해협회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 차원의 양안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하고, 협상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해기회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문화교육처, 경제무역처, 법률처, 종합처, 비서처, 인사실, 회계실을 설치하고 중부·남부 서비스처를 설립하였다. 이 외에 해외 및 본토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 2) 관련 법·제도<sup>24)</sup>

### 가) 헌법

양안 관계에 관한 중국 헌법의 규정은 중국의 양안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헌법은 서문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양안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의 하나인 이른바 ‘하나의 중국’<sup>25)</sup>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에서는 “국가가 필요로 할 때에는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국의 또 하나의 양안 관계에 관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일국양제’<sup>26)</sup>를 위한 법적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안 관

24) 본 내용은 강일규 외(2014)의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의 내용을 인용 및 재인용하여 재구성하였음.

25) 이는 양안 모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양안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진당을 비롯한 대만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타이두(대만의 독립)”을 강하게 부정하고 경계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원칙임. (台灣問題與中國的統一白皮書, 1993).

계에 관하여 중국의 헌법은 양안 관계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라는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한기중, 2013: 5-6).

#### 나) 법률

중국의 양안 관련 법체계에서 법률에 속하는 것으로는 「항공법」, 「세관법」,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반분열국가법」 등을 들 수 있다.<sup>27)</sup>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나누어 간략히 살펴본다.

「중화인민공화국민간항공법」(中華人民共和國民間航空法, 이하 항공법)은 1995년 10월 30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법은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항공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법률 관계에 대한 보충을 통해 민간항공운수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둘째, 민간항공 활동이 국제적인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의 실제적 수요에 따라 현존 국제항공 규약의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중국의 민간항공 관련 법제도로 하여금 국제관행과 근접하도록 하며 셋째, 항공운수 기기의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 위험요소가 많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관리 규범을 강화하였고, 민간항공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모두 16장 223조로 구성되었고 총칙과 부칙 외에 민간항공기의 국적 및 운행관리 등의 일반적인 항공운행을 위한 사항들과 외국 민간항공기에 관한 특별규정과 섭외관계에 있어서의 근거법 등에 관한 규정 및 벌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한기중, 2013: 6-7).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세관법)은 1978년 기초 작업을 시작하여 1987년 1월 2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세관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및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보장을 도모하였다(한기중, 2013: 8).

26) 이는 1979년 덩샤오핑이 양안 관계의 개선을 제창한 것으로 '한 나라에 두 가지 제도를 받아 들인다는 뜻임.

27)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사이트 <http://www.arats.com.cn/flgf/falv/index.htm>(검색일: 2015.7.20.)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대만동포투자보호법」(台湾同胞投資保護法)은 대만 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해협 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1994년 3월 5일 제8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모두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대만인 투자자를 구별한 법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만인의 대륙투자를 적극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을 독립된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양안 통일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양안 관계에 있어서 경제문제와 정치문제는 철저히 분리된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이법에서도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中國人大網, 2015. 7. 18. 인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은 2005년 3월 1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당시 대만에서 대만의 독립을 표방하는 민진당의 집권으로 중국의 양안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인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양안 관계에 대한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결연하게 재확인하였다(한기중, 2013: 9).

#### 다) 양안간 교류·협력 합의서

양안간의 교류·협력 합의서는 대부분 해협회와 해기회의 반관반민 형태의 기관 간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두 기관의 5차례 회담을 통해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안간 교류·협력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해협회와 해기회는 홍콩에서 진행한 양안 회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의 표현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구두 성명의 방식을 통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92공식’(九二共識)이다. ‘92공식’ 이후, 1993년 4월 왕꾸(汪辜)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1998년 10월에는 상해에서 제2차 왕꾸회담이 진행되었다. 본 회의에서 양안이 계속하여 정치적인 대화를 진행하는데에 대한 합의와 왕다오한(王道涵)의 대만방문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의 「양국론」 제창으로 양안 관계는 경직되기 시작했다(문홍호, 2008: 319).

하지만 2008년 5월 29일 해협회는 해기회에 서한을 보내 해기회 사장 지양네이쿤(江丙坤), 부사장 겸 비서실장 까오콩롄(高孔廉)을 초청하였고, 그해 해기회 간부의 북경방문을 통해 양안간 주말 전세기 운영, 중국주민의 대만 여행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건의하였다. 2008월 6월, 해협회와 해기회는 중국 북경에서

협상을 가졌고, 본 회의에서는 9년간 중단되었던 상호왕래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하였다.

2010년 6월 29일, 해기회와 해협회는 충칭(重慶)에서 「해협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는 양안간 교류·협력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 나. 교류협력 사례

### 1) 양안간 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sup>28)</sup> 사례

양안관계에서 유아교육 분야는 2000년 이후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중 중국-민타이의 특수한 오연관계(五緣關係, 지리적·혈연적·문화적·상업적·법률적 밀접함) 때문에 타이완의 타 지역보다 앞서 교류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 6월 타이완 무두오학회(木鐸學社)의 초청으로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 부원장 정지엔칭(鄭建成)은 유아교육방문단 일행 6명과 타이완을 방문했다. 대만 측에서는 타이완 사범 대학, 교육대학 등 5개의 대학교, 4개 유아교육기관과 6개의 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방문단을 수행하였다. 본 방문행사는 타이완 유아교육 교사 양성과 유치원 교육현황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좌담회와 견학 및 교육자료 열람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중국-타이완 양측은 우호적인 교류과정 속에서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시행 전략과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민타이 유아교사 교육, 유아교육분야의 활발한 교류, 해협 서안경제구 유아교사교육 및 유아교육개혁 시범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

양안 유아교육계 전문가 160여명은 양안 학교경영 관리, 양안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학, 양안 유치원교사 전문성 함양 및 교사교육, 양안아동문학과 아동조기 독해 지도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민타이(閩台) 양측 유치원장 간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학, 개혁 발전 등에 관한 공동 연구로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타이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양안 모두 유아교육을 중시하고 유치원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향후 교육자원을 공유할 뿐 아니라 유아교육 사업의 공동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8) 孙劲贞 편집, “闽台学前教育交流合作展现广阔发展空间”, 海峡瞭望(2014. 12. 15).



2014년 11월 14일 푸젠성 교육청 주관으로 푸젠에서 열린 제1회 해협 양안 유아교육 토론회에서 '양안 유아교육의 개혁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양안 유아교육의 핵심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양안 유아교육의 발전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수한 교육자원과 관리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학술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본 행사에서는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 부속 유치원과 타이완 아이미얼 유아교육기관(台灣愛彌兒幼教機構), 쉰저우 평저구 실험 유치원(泉州丰澤區實驗幼兒園)과 타이완 타오위안현 더위 유치원(台灣桃園縣德育幼稚園), 푸안시 실험 유치원(福安市實驗幼兒園)과 타이베이시 창칭 유치원(台北市長青幼兒園)이 상호 우호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렇게 민타이(閩台)의 유아교육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푸젠성 아동발전 직업학원도 끊임없이 양안 유아교육교류협력의 새로운 행보에 나서고 있다. 2010년 4월 타이완 동산 방송국(台灣東森電視台), 아이미얼 유아교육기관(愛彌兒幼教機構)의 요청으로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 유아교육과 및 유치원 대표, 교사 등 8명은 1주일간 타이완을 방문했다. 본 방문 행사를 통해 방문단은 타이완 유아교육의 관리체계, 교육운영 철학, 교사임용, 교육과정, 가정교육, 조기 독해 지도 등에 대해 알고, 타이완 측 유아교육계 인사들은 유아교육 발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방문단은 타이완 동산 방송국 유아교육 사업부, 아이미얼 유아교육기관 및 칭츠 문화교육기관(春池文教機構) 대표와 민타이 유아교육교류의 구체적인 항목 및 협력 계획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2010년 9·8 중국 국제 투자무역 상담회(投洽會)에서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과 타이완 무두오학회가 정식으로 양안 유아교육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측은 양안 유아교사 양성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11월 『현 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유아교육발전 관련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했다. 푸젠성 정부는 『유아교육 발전 속도 향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3년 이내에 469개의 공립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공립 유치원 발전 계획을 실시하였다.

한편 타이완 무두오학회 이사장 천한치양(陳漢強)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1회 해협 양안 유아교육 학술 토론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밝히고, 본 행사가 양안의 유치원 운영과 관리, 교육과정 및 교학,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 양안 아동문학과 조기 독해 지도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안 교류 협력 차원에서 유아교사 양성 협력·교류에 대한 5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도 체결되었다. 향후 양안 유아교육 학술 토론회를 2년마다 개최될 예정으로 제3회 토론회는 타이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양안 유아교육이 발전이 진일보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0년 12월 13일 오후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 창산(蒼山) 캠퍼스에서 양안 유아교육교류·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2년에 한 번 해협 양안 유아교육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간다. 또한 양안 유아교육개혁과 발전의 최신 정책, 연구 및 교학 성과 교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양안의 학교운영 합작과 교류학생을 점차 늘리고, 교류 학교의 범위도 확대해간다. 양안의 학점 인정, 교육 프로그램 연계, 교육 및 훈련 허가, 전문 학사 및 학사 연계 훈련 교육 협력 등을 확대한다. 양안 유아교사 양성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교사를 양성한다 등의 내용이다.

또한 아동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온 푸젠 유아교육 아동발전 직업학원에서 양안 유아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어서 제1회 해협 양안 유아교육 학술 토론회에서 협약한 3개의 '손에 손잡고(手拉手)' 프로그램을 실현함으로써 양안 민간 유아교육 교류의 일반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민타이(閩台) 지역 유아교육 분야의 우호적인 교류가 계속되어 오면서 합작의 기회도 늘어가고 있다. 2011년 6월 15일 오후에는 '제2회 해협 양안 유아교육 학술 토론회 협약식'이 푸저우 시후호텔(福州西湖賓館)에서 열렸다. 푸젠성 교육청 리우핑(劉平) 부청장, 타이완 무두오학회 천한치양(陳漢強) 이사장, 중국 유아교육연구회 이사장, 난징 사범대학 위용평(虞永平) 교수, 화동사범대학 리지메이(李季湄) 교수, 시난 대학(西南大學) 리우원옌(劉云艷) 교수, 타이완 신주교육대학(新竹教育大學) 저우슈후이(周淑慧) 교수, 타이완 동산 방송국(東森電視台) 유아교육 사업총괄부 차오밍지(曹明驥) 영업부장,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 린위(林雨) 서기 등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양안의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5건의 MOU를 체결하였는데, 그 중 민타이 지역에 해당하는 MOU는 모두 4건이었다. 푸젠성 유아교사 양성센터와 타이완 무두오학회는 양안 유아교육교류 합작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양안 유치원 대표 원장 고급 연수반과 연합해 유치원 관리 및 교육과정구축 연구를 시작하고, 양안의 유치원 견학·교류활동, 자매결연 등을 추진했다.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과 타이베이 교육대학 교육경영 및 관리학과는 교사 파견

및 협력 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으로 파견·교류활동을 계획하여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 함양 사례들을 공유하고, 과제 연구 공동 개발과 학술교류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 외에도 푸젠성 직속기관의 유치원과 타이완 타오위안현 사립 웨이니얼 유치원 (桃園縣私立維妮幼兒園), 평탄 실험 유치원 (平潭實驗幼兒園) 과 타이완 타오위안 다첸 유치원 (桃園大全幼兒園)은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다.

MOU 체결 이후 각 기관들은 상호 우호관계를 맺고, 교사들의 학술교류와 공동 연구도 보다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교류, 정기적인 교육 및 교학 관련 자료 공유, 교학 및 관리자 등 견학 활동, 교육교학 연구 현황 소개, 관심 분야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기 협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양안 유아교육 학술토론회를 통해 양안 유아교육사업 연계 범위가 교육연구, 교사양성, 출판 협약과 자매 유치원 결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지방정부(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사례<sup>29)</sup> 1

양안은 교육교류에 있어서 활발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기초교육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교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푸젠성(福建省)과 샤먼시(廈門市) 지방정부는 양안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2000년대 들어서 해당 사업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2006년 4월 샤먼시교육위원회(廈門市委教育工委)와 교육국(教育局)은 공동으로 『차이완(China+Taiwan)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고, 샤먼시 소재의 학교들이 기초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차이완 교육교류·협력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9가지 사항을 선포했다. 17대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 푸젠성 위원회에서는 두 시범지구 (과학 발전 시범지구, 차이완 교류 시범지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푸젠성이 차이완 교류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된 후에 샤먼시는 푸젠성의 대외교류 창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차이완 교류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중국과 대만의 양안 지방정부는 교류의 시범지구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차이완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선례가

29) 본 내용은 楊建華·康咏香·黃麗麗(2011)의 “改革開放以來厦臺基礎教育交流回顧與前瞻”(集美大學學報, 제12권 제1기, pp. 65-72)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될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8월 샤먼시 천허친(陳鶴琴) 교육사상 연구회 대표단 5명은 타이완 타이베이에 방문하여 유아교육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했다. 2007년 10월에는 샤먼시 교육학회, 타이완 중화 화샤 문화교류협회(台灣中華華夏文化交流協會)가 주관하고 샤먼시 천허친 교육사상 연구회와 샤먼시 교육학회의 유아교육 전문 위원회가 주최하는 해협 양안 유아교육 학술 포럼이 열렸다. 본 포럼에는 타이완 출신 21명, 홍콩 출신 14명,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저지양(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푸젠(福建) 등 각지의 전문가와 학자, 연구원 등 200여명과 개최 도시 교사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흘에 걸친 본 행사에서는 양안 유아교육 연구 협력과 양안 교육이론과 실천연구의 최신 성과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 이색적 교육 프로그램 소개, 주제 토론 및 고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차이완 교육사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기초교육 분야의 전문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이완의 교육 사업에 대한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토론하는 장을 열었다.

한편 상호 방문도 추진하였는데, 개혁개방 이후 샤먼시와 타이완의 교육계에서는 줄곧 양안의 교육교류·협작을 중시해왔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샤먼시 260개의 단체에서 1604명이 타이완에 파견 또는 방문했으며(샤먼대학은 제외) 그 중 기초교육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8월에는 스밍구(思明區) 아동센터를 주축으로 구성된 푸젠성 아동 예술단원 44명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같은 달에 타이베이시 예술문화협회의 초청을 받아 샤먼시 아동음악무용방문단 27명이 방문공연을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95년 한 해에만 교육교류를 목적으로 800여명의 대만학생이 푸젠성을 방문했고, 학술회의를 위해 타이완을 방문한 인원은 35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전국 유·초·중학교 교사 장려 기금회(全國中小幼教師獎勵基金會)와 푸젠성 연합은 샤먼시에서 5일 동안 23명의 타이완 교사들이 참석한 교사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1996년 샤먼시 교육기금회는 타이완을 방문하고 타이완의 문화교육기금 조직과 교육개혁의 발전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했다.

21세기 들어서는 2001년 11월 샤먼시 최초로 샤먼시 교육학회의 70여명이 나흘간 진먼(金門)을 방문하였다. 방문 4일 동안 진먼 교육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진먼현 교사들과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했다. 2004년 5월에는 진먼현 음악협회의 초대를 받아 샤먼(廈門), 장저우(漳州), 취안저우(泉州) 세 지역 청

소년 센터 96명의 교사와 학생이 교류 차 진먼에 방문하였고, 제4회 ‘민난풍, 해협정 (民南風·海峽情)’ 아동문화예술교류활동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 3) 북경시와 대만의 교류 사례<sup>30)</sup> 2

중국은 2010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타이완 상무 문화 교육협회의 초청으로 타이완 민주자치동맹 베이징시 위원회 (台盟北京市委) 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北京市教委) 가 공동으로 조직한 베이징시 유아교육 교류방문단 일행 19명이 타이완을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보면, 중국 베이징 방문단 일행은 타이완의 유치원을 견학하고, 타이완 유아교육기관과 교육이념 및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좌담회를 갖는 등 베이징-타이완 우호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구체적인 교류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문단 일행은 타이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타이완 유엔지 대학 (元智大學) 교사 양성센터, 구몬문화교육기구, 구몬 성장 유치원, 즈치양 유치원 (自強幼稚園), 타오웬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桃園國民小學附設幼稚園), 라이라이 탁아소 (來來托儿所), 타이중현 호우리 향립 타이핑 연합 탁아소 (台中縣后里鄉立太平聯合托儿所), 가오슝 우지아취구 자치 유치원 (高雄五甲社區自治幼兒園) 등 여러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원내 견학, 유아공연, 타이완 교육 담당자 좌담회 등을 통해 타이완의 교사양성, 유치원 주요현황, 교육 프로그램, 교학방법, 유아 발달, 지역 거주민 또는 학부모의 직업 등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타이완 관계자는 중국 유아교육 사업 발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방문단은 타이완 원내 문화시설, 예절교육, 원장의 교육 가치관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한다.

방문단은 5월 18일 오전 유엔지 대학 (元智大學) 교사양성센터의 시에딩왕 (謝登旺) 주임과 해당 지역 유아교육기관 책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유엔지 대학 (元智大學) 교사양성센터 운영 특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 현황 등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했다. 이어서 베이징-타이완은 유아교육분야의 각종 문제를 공유하면서 상호 이해<sup>31)</sup>하는 시간을 갖었다.

30) 본 내용은 期刊 “北京觀察”(2010년 9월 8일)에서 발췌 정리함.

31) 특히 방문단은 이날 활동을 통해 타이완 유아교육을 이해하면서 몇 가지 특성이 있음을 공유하였다. 첫째, 타이완 유아교육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둘째, 최근 타이완의 출산율 저하로 공·사립 유치원의 진학률은 50%에 미치는 추세이다. 여러 계층의 만족을 위해 유아교육

방문단은 이어서 관광과 일반 주민과 교류하면서 분단의 세월을 좁히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남북한이 바로 필요로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4) 학술 교류 협력 사례 1

제1회 중국·대만 유아교육 세미나가 2014년 11월 14일 중국 푸저우 (福州) 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행사에는 중국과 대만의 대학 및 유아교육 연구기관 전문가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젠성 (福建省) 부성장 왕메이시앙 (王美香) 이 축사를 하고, 대만의 유명인사 홍시우주 (洪秀柱) 여사와 목탁 (木鐸) 학회 이사장 천한치양 (陳漢強) 선생이 초청받았다.

왕메이시앙 (王美香) 은 축사에서 “유아교육은 소질교육을 위한 기초단계로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인재 양성, 사회 발전의 잠재력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최근 푸젠성 (福建省) 은 해협서안 경제구 건설을 통해 양안의 교류를 확대하고 교육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유아교육 발전 현황을 이해하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양안의 유아교육 교류 및 협업을 위한 계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본 행사는 푸젠성 (福建省) 교육청이 주최하고 푸젠 아동발전 직업학원이 주관하였으며, ‘양국의 유아교육 개혁 및 발전’을 주제로 두 지역의 유아교육 문제와 발전 현황, 우수 유아교육 자원 및 관리 사례들을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민타이 (閩台) 자매 유치원과 MOU체결을 통해 교사 양성교육, 유치원 경영, 아동도서 출판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업하고, 양국 유아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이 날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왕메이시앙 (王美香) 부성장은 홍시우주 (洪秀柱) 일행을 만났다.

#### 5) 학술 교류 협력 사례 2

2013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타이베이 (台北) 시에서 이틀간 제3회 중국·

---

기관의 다양화 현상이 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설립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타이완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안전문제를 중시해 안전보장 조치를 내리고 정기적인 소방안전 훈련교육, 응급 대피 및 구급용품 시연 하는 등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문단은 양안 유아교육분야의 교류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이완의 0~6세 아동교육, 서비스 및 관리 등 경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만 유아교육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푸젠 (福建) 유아사범 전문대학, 대만 재단법인 유아 교육 기금회, 타이베이 (台北) 교육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양국의 유아교육 전문 인사 90여명이 참석하였다.

10월 13일 오전 타이베이 (台北) 교육대학교에서는 쉬수이더 (許水得) 국민당 비서장, 리준웨이 (李俊玮) 푸젠성 교육청 기초 교육처 부처장, 천한치양 (陳漢強) 대만 재단법인 유아 교육 기금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정지엔청 (鄭建成) 푸젠 유아사범 전문대학 부총장의 주재하에 개막식이 열렸고, 천화 (陳華) 푸젠 유아사범 전문대학 총장의 축사와 증루이진 (曾瑞貞) 타이베이 교육대학교 부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또한 쉬수이더 (許水得), 리준웨이 (李俊玮), 천한치양 (陳漢強) 선생이 발표자로 나섰다.

개막식 이후에는 '유아 교사 양성과 전문성 함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시작됐다. 이 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만 타이중(台中) 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천수친 (陳淑琴) 부교수, 난징 (南京) 사범대학교 유아교육과 구룡팡 (顧榮芳) 학과장, 홍콩대학교 리후이 (李輝) 박사의 학술 보고 및 발표가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에 이어 '유아교육 교사 양성 교육과정 실시 및 교육자원 발굴', '실습 훈련 체계 구축', '직무·전문성 함양'의 세 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양국의 유아 교사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연구 사례나 실무 경험을 통해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10월 14일 오후에는 폐막식이 거행되었다. 타이베이 교육대학교 홍푸차이 (洪福財) 교수, 쓰촨(四川) 사범대학교 옌차오윈(鄺超云) 교수, 아시아 대학교 루메이구이 (盧美貴)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각자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베이징 사범대학 평시아오시아 (馮曉霞) 교수는 폐막식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책 하에 유아교육 사업은 기회와 도전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막사를 맡은 푸젠 유아사범 전문대학 천화 (陳華) 총장은 향후 양국의 유아교육 전문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유아와 국민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본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라. 시사점

이상 중국 양안간 유아교육 관련 교류 협력은 전반적인 양안간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최근 들어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건성 등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교류가 많고, 대북과 북경과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양안 당국의 교류 협력 발전과 경험 및 사례는 우리 남북한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기구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적대관계에 있는 정부간 관계는 공식적인 정부간 관계보다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비공식적 형태로 교류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는 민간이 주도하고 점차 반관반민 형태로 바뀌면서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당국간 협정 등 공식적인 교류 협력 관련 협정 등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러한 형태의 기구 설립을 통해서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안의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을 들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양안은 복건성 등 자치단체와 유아교육 관련 인적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접경 자치도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점이 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은 정서적으로 교류 협력에 대한 상호 인식이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접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유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점차 이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학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유아교육 분야의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양안의 경우 정례적인 학술 교류 및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방문 등은 양측의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우선 유아교육과 관련한 학자와 교사 및 학부모 등이 정례적으로 상호 교차 방문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육아 분야의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대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유아교육 기관간 교류를 정례화 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관련 인적 교류에 이어 기관간 상호 교차 방문하여 점차 상호 신뢰감 확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 지역의 유아교육 관련 시설이나 기자재 및 소모품 등 물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 협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 양안의 경우 중국의 국무원, 그리고 대만의 행정원 등 중앙급 정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통일부와 관련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3. 소결

이상으로 육아지원분야에 있어서 통일 전 독일의 동서독간의 교류협력과 대만-중국 양안간의 교류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독일의 경우, 많은 정치적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상황이 독일의 것과 직접 비교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남한에서 탁아소와 조기교육 분야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엄마들이 3세까지의 조기교육을 직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유치원들은 대개의 경우 개인 소유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기르는 것을 선택하고, 교육의 틀에 넣으려는 것을 싫어한다.

둘째, 북한의 공식적인 여성의 사회 참여율은 구식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성들을 노동으로 해방시켜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장마당과 같은 사경제 부문에서 일하게 되었다.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고아원으로 간다. 국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념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체제를 최대한 확보·지속하고자 한다.

셋째,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구 북한지역의 유치원은 탈이념화 되어야 하고 규모도 조정되어 줄어야 하며, 교육원칙 및 시설적 측면에서 현대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구 남한지역에서는 여성이 출산 이후 즉시 일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의 수가 팽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소한 현재의 독일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독과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점도 존재할 것이다.

첫째, 동독에서는 아이들의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위기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유치원 분야에서 인도주의적인 요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서독의 대동독 원조는 주로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지원, 동독에 가족이 있는 서독사람들에 의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원이 대부분이었지 공적인 원조 형태가 아니었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지원이 정치색을 띠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남한의 대북 지원, 특히 북한 유치원에 대한 영양식품 지원은 매우 유용한 접근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어린이들이 유아기 때 영양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이란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 독재체제 내에서 교회가 운영한 유치원의 사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비록 소규모로나마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보호아래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독의 붕괴란 변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남북한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설을 북한 내에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원이 정치색을 띠지 않을수록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과정에서 정부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치색을 띠지 않아야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 지원의 성과는 결국 정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즉 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며, 이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 중국 양안간 유아교육 관련 교류 협력은 전반적인 양안간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최근 들어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건성 등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교류가 많고, 대북과 북경과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양안 당국의 교류 협력 발전과 경험 및 사례는 우리 남북한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기구가 큰 기여를 하

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적대관계에 있는 정부간 관계는 공식적인 정부간 관계보다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비공식적 형태로 교류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는 민간이 주도하고 점차 반관반민 형태로 바뀌면서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당국간 협정 등 공식적인 교류 협력 관련 협정 등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러한 형태의 기구 설립을 통해서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안의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을 들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양안은 복건성 등 자치단체와 유아교육 관련 인적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접경 자치도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점이 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은 정서적으로 교류 협력에 대한 상호 인식이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접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유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점차 이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학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유아교육 분야의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양안의 경우 정례적인 학술 교류 및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방문 등은 양측의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우선 유아교육과 관련한 학자와 교사 및 학부모 등이 정례적으로 상호 교차 방문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육아 분야의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대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유아교육 기관간 교류를 정례화 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관련 인적 교류에 이어 기관간 상호 교차 방문하여 점차 상호 신뢰감 확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 지역의 유아교육 관련 시설이나 기자재 및 소모품 등 물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 협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 양안의 경우 중국의 국무원, 그리고 대만의 행정원 등 중앙급 정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통일부와 관련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Ⅲ.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정책과 사례

이 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된 근거 법령 및 대북 지원정책을 고찰하고, 법령에 근거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 중, 본 연구와 부합되는 육아지원분야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개발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및 남북 경제 협업의 상징적인 사례인 개성공업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개성공단 탁아소의 설치 배경, 운영 현황 등을 경제 교류협력사업의 사례로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제 기구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북한 지원 사업을 고찰하였다.

#### 1. 관련 법령과 교류협력 사업별 내용

##### 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남북교류협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지원분야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타 분야의 교류협력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법제에 따라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이 있다. 그 밖에도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겨레 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등이 있다.

〈표 Ⅲ-1-1〉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법령

번호	법령명	제정 시기	법령종류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8.1.	법률
3	남북협력기금법	1990.8.1.	법률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007.5.25.	법률

〈표 III-1-1〉 계속

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07.4.27.	법률
6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7.7.9.	통일부고시
7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05.12.13.	통일부고시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9.9.11.	통일부매뉴얼
9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05.12.13.	통일부고시
10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3.1.1.	통일부고시
11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통일부고시
12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09.9.21.	통일부고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5. 10. 19. 인출)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80년대 중·후반 구소련과 동구권 붕괴 상황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7·7선언”<sup>32)</sup>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7·7선언은 ① 남북 상호교류와 자유왕래, ②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③ 남북교역 및 문호개방, ④ 남북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우방국의 대북한 교역 불(不)반대, ⑤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조, ⑥ 북방외교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정치권 및 우리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와 교류협력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법률 제정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남북교류협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다(통일부, 2009: 4-5).

동 법은 남북교류협력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남북한주민접촉, 남북한 방문, 물품반출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등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9조 및 제13조),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32) 1988. 7. 7. 정부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화해와 협력 구조로 바꾸어 가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하였다.

신고해야 한다(제9조의2). 남북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17조 제1항).

## 2)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역시 7·7선언을 배경으로 제정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제3조)와 기금의 재원(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제7조)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금은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②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③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④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⑥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⑦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⑧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제8조).

##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은 2005년 남북관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헌법」 제4조)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제2조). 이에 따라 동법에서는 남북관계발전과 남북회담 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 남북합의서 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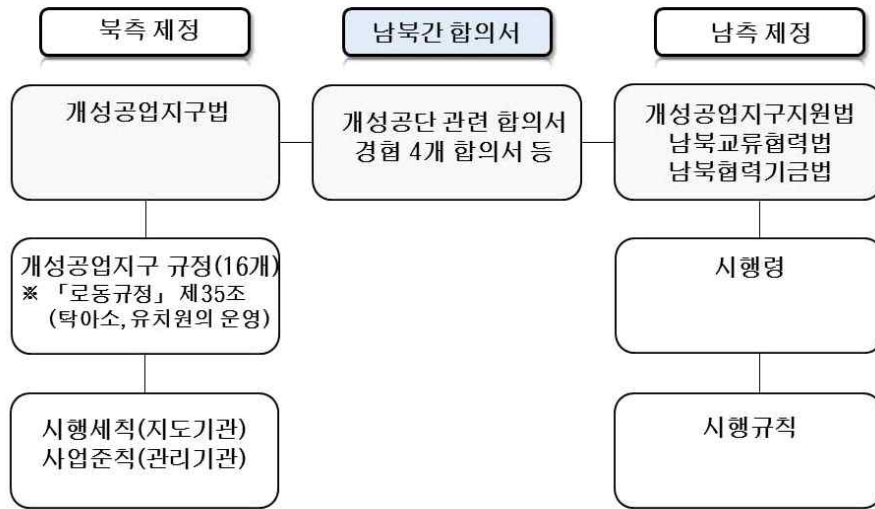
####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법체계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남북간 합의서, 남측 법규, 북측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등이 체결되었으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와 같이 남북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의서 역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2002년 11월 20일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노동규정” 등 하위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 규정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사업준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2007년 8월 26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어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그에 따른 하위규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외에도 공업지구에서의 사업추진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2015: 3-4).



자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2005, p. 4.

[그림 III-1-1] 개성공업지구 법체계도

나) 주요 내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3조).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해야 하며(제5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개성공업지구 전반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제19조).

한편, 남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는 여성노동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서는 임신 6개월이 지난 여성종업원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제34조), 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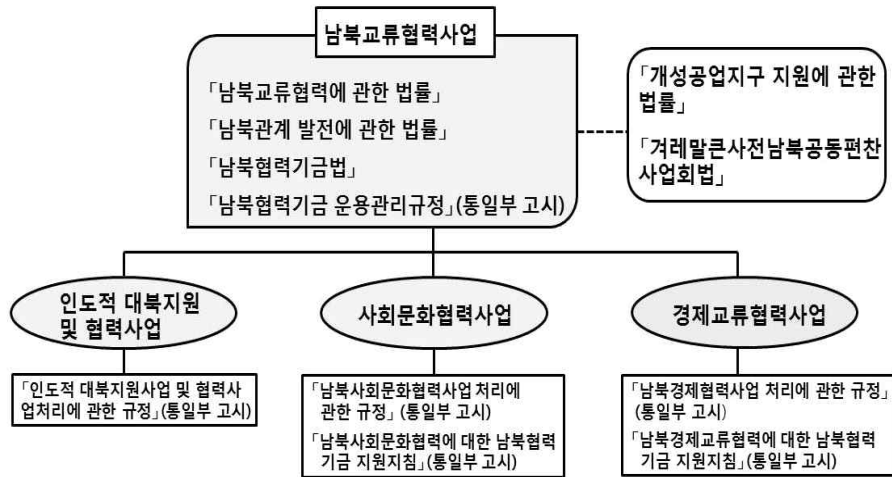


성공업지구에는 1개의 탁아소가 운영되고 있다.

### 5) 기타 주요 하위법령

이외에도 위 각 법령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통일부 지침 및 고시들이 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 고시)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학술·체육분야 등 각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그 집행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크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경제적협력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구체적 내용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의 승인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과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과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5. 10. 19. 인출)

[그림 III-1-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체계

## 나. 교류협력 사업별 주요 내용

### 1)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란 일정기간 지속되는 인도적 성격의 “개발지원성 사업” 등 북한과의 공동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간단체의 일방적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협력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점차 다양화되고 중장기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이나 사회문화협력사업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통일부, 2009: 56).

대북지원 사업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①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②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③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④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⑤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이처럼 대북지원 사업은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과 같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대북지원 사업은 분배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행하고 있으며, 북한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sup>33)</sup>하여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은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국내 민간단체의 자체재원을 통해 영양식·의약품·농자재 등 54억원 상당의 지원물자를 반출하였고,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온실·낙농·진료소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의료시설 개선 및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식 지원 등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141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통일부 사이트 알림마당, 남북교류협력 인도적지원).

33) 2015. 10. 19. 기준으로 104개 민간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33> (2015. 10. 19. 인출)

## 2) 사회문화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①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②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③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④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 개최에 관한 사항, ⑤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남북한 유아교육·보육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교류나 남북 유아들의 교류협력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역사학자학술교류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이 대표적인 사회문화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 3) 경제협력사업

“경제분야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①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를 하거나, ②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③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④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표 III-1-2〉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일정기간 지속되는 인도적 성격의 “개발지원성 사업” 등 북한과의 공동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조사, 공동제작, 공동개발 등을 실시하는 행위
경제협력사업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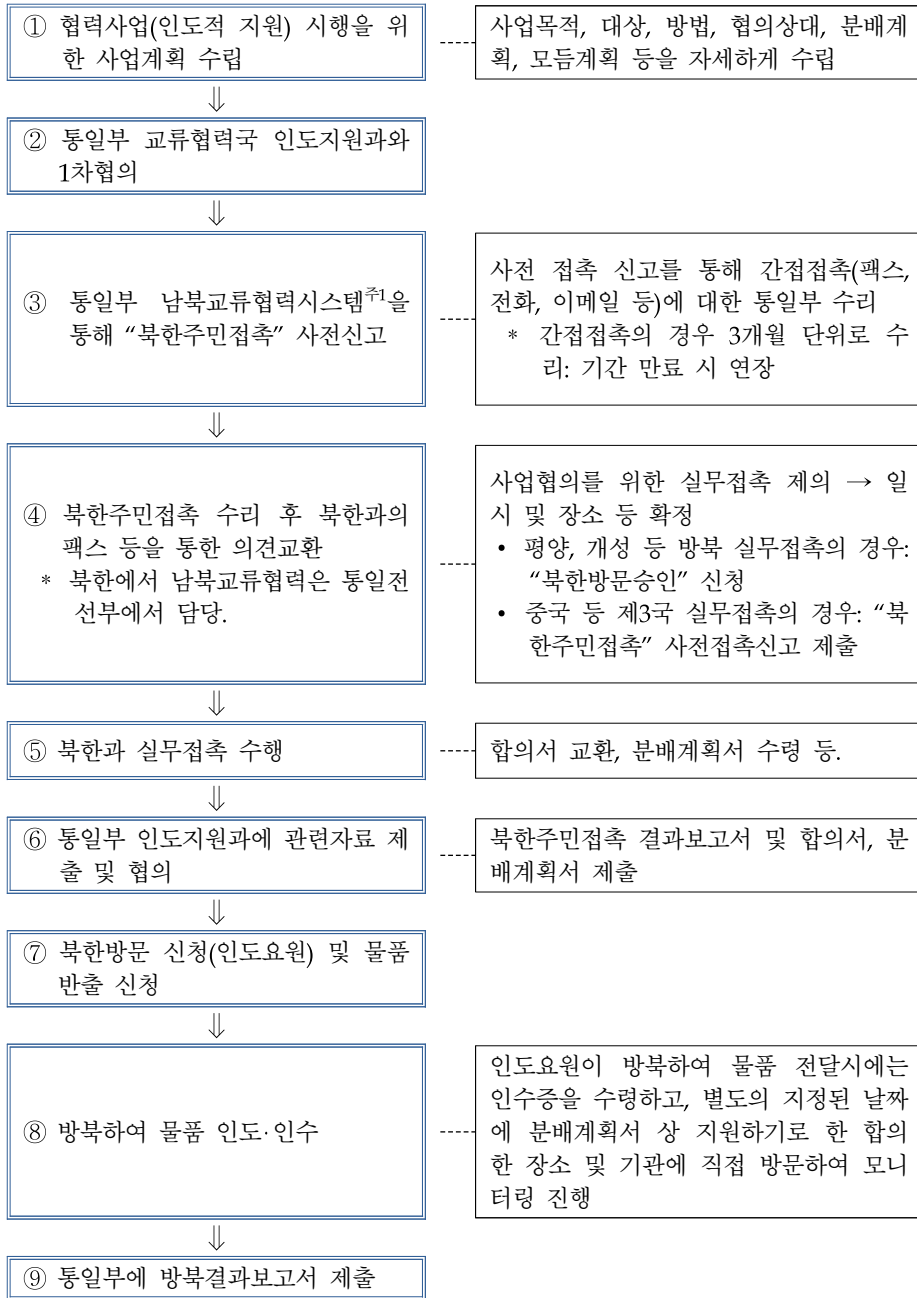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9, p. 55-56.

#### 4) 교류협력 사업의 절차

교류협력 사업제도는 남한과 북한이 특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물자 반입·반출, 인원의 남북왕래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주민 접촉 및 남북한 왕래와 같은 방문제도나 반출·반입 승인제와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각 법령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절차는 <표 III-1-3>과 같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종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먼저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자만이 협력사업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이중적 감독체제를 취하였으나,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사전적·예비적 심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사업 승인만으로도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 1. 30.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미리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졌다(송인호, 2012: 216-217). 협력사업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대북지원용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고 세관에 신고한 후 반출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승인시 부가한 조건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통일부, 2009: 60). 한편, 통상 협력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신청도 하게 되는데, 통일부 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에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

〈표 III-1-3〉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요약)



주1: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s://www.tongtong.go.kr>  
 자료: 박지용, 남북문화교류사업 추진 절차와 대북 협상 과정, 2015, pp. 2-7 참조.

한편, 2003년 이후 통일부는 대북 정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책상 지방자치단체를 독자적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는 없었으며,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송인호, 2012: 217).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반적으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없어 통일부의 입장 변화 여부는 확실치 않다.

## 2. 5·24 조치 및 드레스덴 선언

### 가.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중단: 5·24 조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5.24 조치 이후 거의 중단되었다. 5.24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공식 명칭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다. 비록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북한에 대해 보복 또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의 형식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5.24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이재호, 2013: 57).

5.24 조치는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④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⑤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유지와 더불어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이재호, 2013: 57-58).

### 나.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하 “드레스덴 구상“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드레스덴 구상은 크게 3대 대북정책을 표명하고 있는데, ① 인도적 지원, ② 민생 인프라 구축, ③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다. 즉,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남북한의 호혜적 교류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이다(통일연구원, 2014: 9).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교류협력이 일회성 또는 이벤트식이 아닌 남북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임을 전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시 독일 측 인사들은 독일 통일은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정책에 입각한 일관된 대동독 교류협력의 추진과 동독 주민의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한 바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변화를 외부로부터 강제하기보다는 북한이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14: 12).

이는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통일 대박’ 언급과 2014년 2월 25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통일연구원, 2014: 1-2).

### 1) 인도적 지원

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드레스덴 구상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모자 패키지(1,000 days)사업”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모자 패키지(1,000 days)사업은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기구가 그동안 북한 지역에서 벌여온 영양조사 및 구호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산모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도 국내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마을 단위로 영양·보건의료·생활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통일부, 2015a: 5).

## 2) 민생 인프라 구축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민생 인프라는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는 데서 시작된다(통일연구원, 2014: 20).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해 온 INGO와 국내 NGO와 연계하여 의약품과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생증진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하여 당국 차원의 복합농촌협력지구 협의 및 착수 노력과 민간 차원의 농축산 물자 제공 및 기술지원이 추진되고 있다(통일부, 2015a: 5).

〈표 III-2-1〉 복합농촌단지 추진 방안

- 
- 
- 농업생산 및 생산성 증대만이 아니라 농촌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 함께 추진
  - 단순 물자 지원이 아니라 남한 및 국제사회 관계자들이 북측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인력 및 기술교류사업이 되도록 추진
  - 대상지역에서 여러 분야 사업을 서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개발·협력 실시
    - 보건의료: 지역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 의약품 공급 및 장비 지원, 예방의학 및 진료체계 개선 사업
  - 북측 협동농장과 남측 단체·기관 및 국제기구·INGO 등 다양한 사업주체 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
    - 북측 조직과 남한·국제사회 조직 간 실질적인 공동 추진체계를 확립
    - 남북 간 정치적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내 민간단체와 유엔 기구·INGO를 활용하는 간접적 협력을 추진
    - 유엔 기구와 INGO 및 국내 민간단체는 이미 농업 및 보건의료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들 중 유력한 단체들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 보다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추진
    - 남북관계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당국 간 협력채널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우리정부·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협력조직을 구축하고 사업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
-



〈표 III-2-1〉 계속

-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은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경직되게 연계하지 않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에는 소규모 간접지원 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규모 확대
- 사업 대상 지역은 북한의 저소득 지역 및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부근의 선정이 바람직
  - 북한 정권보다 주민의 이익을 앞세우며,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적용
  - 평양 주변 지역 대신, 식량사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방 농촌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 확대를 유도
  -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북측의 개방정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 농업개발구(북청, 어랑)와 개성공단, 신의주, 나진·선봉 등을 주요 후보지역으로 검토

자료: 통일연구원,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 과 '행복한 통일', 2014, pp. 24-25.

**다.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입안사례**

한편, 제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표 I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영유아 지원 및 동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위에서 살펴본 5·24 조치 및 드레스덴 선언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표 III-2-2〉 북한 영유아 지원 관련 주요 법률안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진행상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1902660	2012. 11. 19.	소관위심사 (계류중)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906922	2013. 9. 17.	소관위심사 (계류중)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907503	2013. 11. 4.	소관위심사 (계류중)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1915362	2015. 5. 29.	소관위심사 (계류중)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2015. 10. 19. 인출)

우선,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2660호)'은 5·24조치 이후인 2012년 11월 발의된 것인데,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행하더라도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은 북한 영유아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인류 보편적인 사안으로 보고, 미래 통일 이후 한반도의 인적자원의 불균형 및 통일 장애요소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 법안은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하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된 법안 중 유일하게 북한의 6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제안된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후의 법안들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발의된 것인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제6922호)’은 2013년 9월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특례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 역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를 거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물품 또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도적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군사적 상황과의 연계 배제, 국제적 인도기준 준수,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 등 8 가지 원칙을 규정하여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동 법안은 정부가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과제와 관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하여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할 것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3년 11월에 발의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7503호)’ 역시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거로 하여 마련된 것이다. 동 법안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높은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적절한 영양분과 의약품의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존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신부는 우리의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임신부 및 영유아 지원”이란 북한 임신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류,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대상과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발의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제 15362호)’은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부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노력,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관련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왕래의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북한 영유아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의 영유아와 임신부 등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염병 예방이나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영유아가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안은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 심사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등 남한과 북한을 대등한 관점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과 차이를 두고 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교류는 거의 중단되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률 마련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남북한 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영유아와 임신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입법적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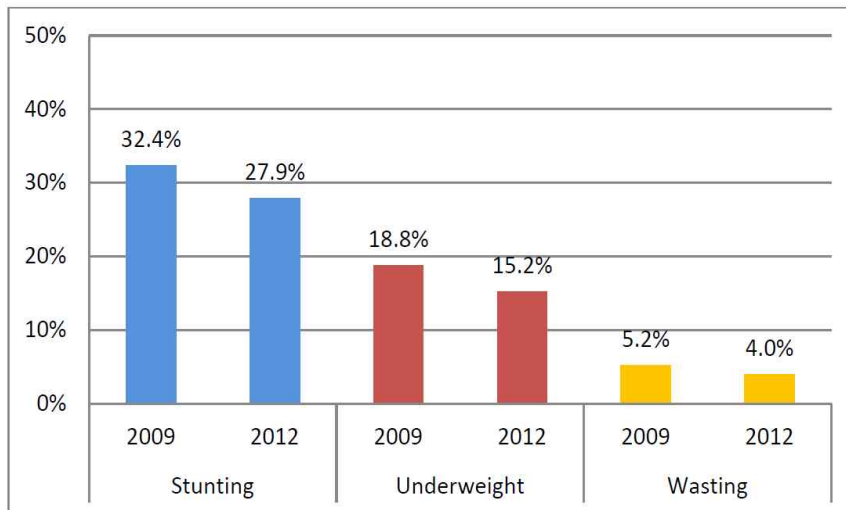
### 3.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사례: 북한 영유아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사례를 고찰하기에 앞서 북한 영유아들의 영양 및 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그 밖에 1995년부터 우리 정부가 실시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그 동안 중점을 두었던 분야와 주요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 북한 영유아 실태와 대북지원 현황

##### 1) 북한 영유아 영양 및 보건 실태

북한 중앙통계국(CBS)은 2009년과 2012년 UNICEF, WFP, WHO 등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함께 전국적으로 영양 및 건강 상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사 외에도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각 UN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기별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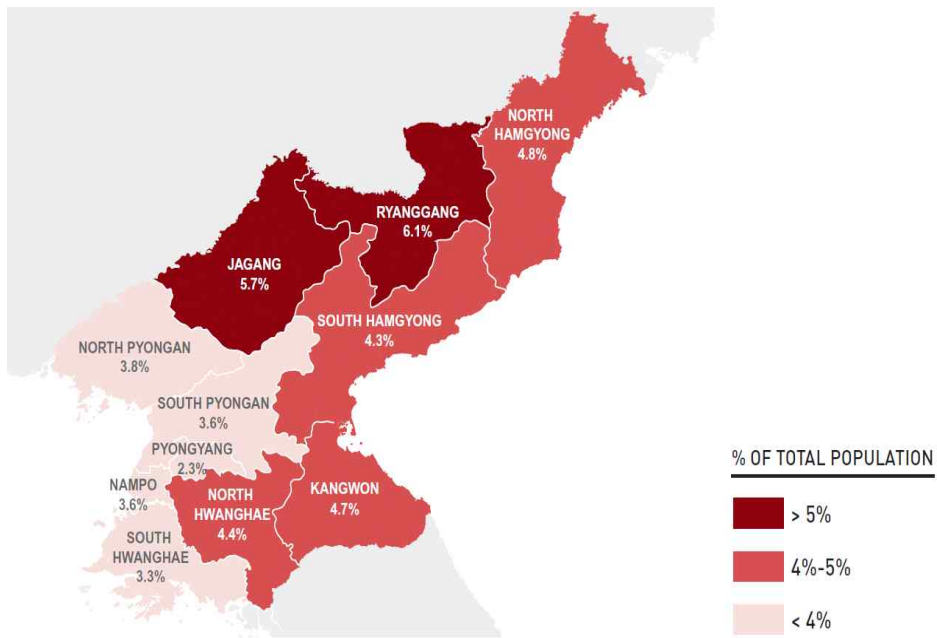


주: 0-59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출처: WFP, DPR Korea: Performance Assessment Of WFP's 'Nutrition Support To Women And Children' Programme, 2013, p. 29.

[그림 III-3-1]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 지표 2009/2012

[그림 III-3-1]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3분의 1은 발육부진 상태에 놓여있으며, 만성영양실조(stunting)로 인해 정상적인 키와 몸무게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5세 이하 아동의 4%는 급성영양장애(wasting)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밖에도 전체 5세 이하의 약 28.7%가 빈혈(anemia)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만성영양실조의 비율은 2004년 전체 5세 이하 아동의 37%에서 2009년 32.4%, 2012년 27.9%로 감소하였으며, 급성영양장애의 비율 역시 2004년 7%에서 2009년 5.2%, 2012년 4.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농업과 식량안보, 기초의약품, 영양,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상태 개선 등 영양실조 대처를 위해 북한정부와 UN기구, 그 밖의 다양한 단체와 국가들이 협력해서 노력한 결과로 보고 있다(CBS, 2013: 8-9; UN, 2015: 8).



주: 0-59 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5% 이상은 심각(poor)한 수준으로 봄  
출처: UN, DPR Korea 2015,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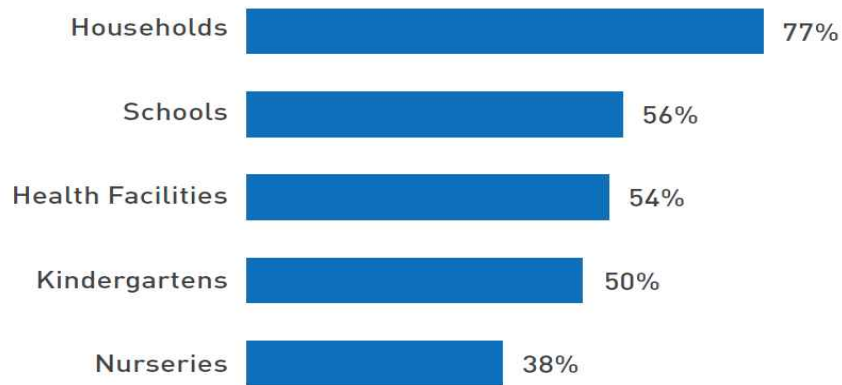
[그림 III-3-2] 북한 영유아 급성영양장애(wasting) 지역별 비율

한편, [그림 I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영유아들(생후 0 - 59개월)의 영양상태는 북한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 2012년에 실시한 전국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59개월 이하 영유아 중 만성영양실조(stunting)에 걸린 비율은 양강도가 39.6%, 자강도가 33.3%, 함경남도가 32.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평양의 경우 19.6%에 불과했다. 급성영양장애(wasting) 비율 역시 양강도 6.1%, 자강도 5.7% 순으로 높았고, 함경북도 4.8%, 함경남도 4.3% 순이었다.

최근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각 보고서들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부터 북한의 강수량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2015년 1월-6월 사이의 평균강수량은 예년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심각한 가뭄으로 이어져 북한 내 취약계층(영유아, 산모 및 임산부, 노인 등)의 식량 안정과 영양상태 및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깨끗한 물과 청결한 위생환경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유아 질병예방을 위해 깨끗한 식수와 위생환경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낡은 상수도 시설을 대체할 자원의 부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3-2014년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북한정부에서 실시한 물 환경 평가조사(Water Assessment Survey)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약 20%는 상수도 시설 미비로 인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조사 보고서는 보건 시설과 영유아 시설에서의 상수도 연결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탁아소, 유치원 등에서의 연결이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Households)의 77%는 상수도 연결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학교는 56%, 보건시설은 54%, 유치원은 2분의 1 수준이며, 특히 탁아소(Nurseries)의 경우 38% 정도만 상수도 연결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III-3-3] 참조).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열악한 위생환경은 설사와 폐렴과 같은 질병의 발생률을 높여 아동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므로 매우 위험하다. 평균적으로 매년 10,500명의 5세 이하 아동이 설사와 폐렴에 대한 늦거나 불충분한 치료 등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UN, 2015: 12).



주: 2013-2014년 북한 도시관리국에서 실시한 물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학교, 보건 시설, 유치원, 탁아소별 각 분야에서 파이프가 연결된 전체비율을 나타냄.  
출처: UN, DPR Korea 2015, p. 12.

[그림 III-3-3] 북한 전체 가정, 보건시설, 영유아 시설의 상수도 연결 비율

## 2) 정부 및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을 계기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2014년간 대북 지원 총액은 3조 2,571억 원이며, 식량차관을 제외한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은 2조 3,843억 원(22억 2,522만불)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2014b: 136-137).

이하의 <표 III-3-1> 및 [그림 III-3-5]은 정부 및 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한 금액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식량차관은 유상지원이다. 민간차원의 지원액은 통일부를 통한 지원물품 반출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해외단체 등을 통한 개인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민간차원은 수송비 및 부대경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III-3-1>를 보면, 정부차원의 지원은 2007년도까지 매년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다가, 정권이 바뀐 2008년도부터 감소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정권이 바뀐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차원의 지원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표 III-3-1〉 정부 및 민간차원의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액 현황(2005-2014)

단위: 억원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정부 차원	무상 지원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식량 차관	1,787	0	1,505	0	0	0	0	0	0	0
민간차원 (무상)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총액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3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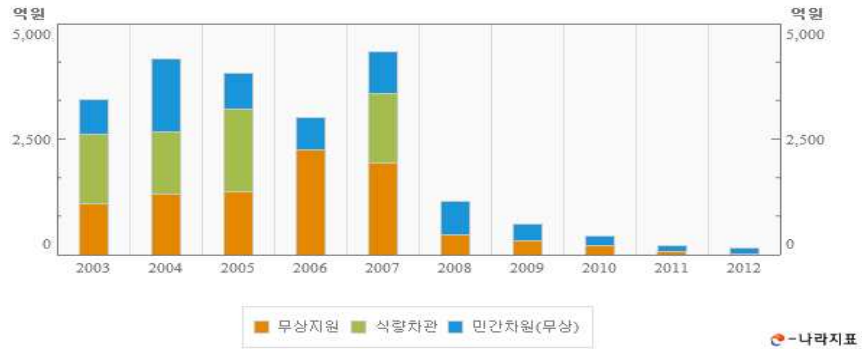
주: 무상지원과 식량차관은 기금집행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이며, 민간차원은 반출금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임.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2015. 10. 19. 인출)

다음의 [그림 III-3-4]를 보면 좀 더 한눈에 알 수 있는데, 2008년 시점에 전년도 막대그래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식량차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차원만큼은 아니지만 이 역시 소폭으로 작아지고 있다.



대북지원 현황



주: 무상지원과 식량차관은 기금집행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이며, 민간차원은 반출금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임.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2015. 10. 19. 인출)

[그림 III-3-4]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현황(2003-2012)

시기별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도까지는 비료, 옥수수 및 식량지원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UNICEF, WHO, WFP 등을 경유하여 지원하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주로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도부터는 5·24 조치로 인하여 직접지원은 물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고, 다만, UNICEF, WHO, WFP, IVI 등을 경유한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원액은 크게 줄었어도, 영유아 지원과 의약품, 보건 및 영양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통일부, 2014b: 136-137 표 참조). 이처럼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지지만, 정권에 따라 지원액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북한과의 신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역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주로 분유나 의류, 농자재 등과 같은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정부를 통한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국내 민간단체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란 연구주제에 맞춰 개발지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사례를 고찰하였다. 긴급구호적으로 일회성 성격의 남한의 원조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서 북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개발지원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 1) 컨소시움 방식

북한 지원사업에서 ‘영유아 지원사업’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2005년이다. 2005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국가 장기 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 자원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통일부 중심의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기획, 추진되었다.

이 계획안에는 북한의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미래 인구 정책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북한의 영유아 지원 사업은 인도주의적 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그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다(신영전, 2012: 10-11).

〈표 III-3-2〉 인구학적 관점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계획 내용 일부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 - 분유지원 - 단백질 공급 - 영양소 공급  * 신장 및 체중 증대 - 급성(영양실조), 만성(발육부진) 장애율 개선	영유아 사망률 감소 및 질 병예방, 치료 - 어린이용 백신 - 기초의약품 공급 - 의료보건의환경개선  * 전염성질환 방지	모자보건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복구 - 어린이 건강검진 - 산모관리 - 지역별 ‘모자건강센터’운영지원  * 모성사망을 개선

자료: 신영전(2012). 북한 모자보건프로그램에서 WHO, UNICEF, 한국정부, 한국 NGOs의 협력 경험. 2012 대북지원 국제회의 자료집, p.11

사업 추진 방법은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과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은 다음에 후술하고, 먼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방식은 2006년에 120억원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6개의 민간단체들을 컨소시엄을<sup>34)</sup>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협력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지대했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90년과 1998년 2월 사이에 민간단체의 인도적 건수는 1,038건에 달하고, 정부 건수는 전무하다. 1998년 3월부터 2002년까지 민간단체의 지원건수는 1,687건이고, 정부는 1,669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1995년 6월부터 2004년도 7월까지 민간단체와 정부의 지원규모는 각각 7,270억원(6억 7,829만불)과 4,538억원(3억 7,452만불)이다. 남한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정부차원의 지원규모와 비교하면, 미국(6억 5천여만불)을 제외하고, EU(3억 4천여만불)와 중국·일본(2억 5천여만불)을 능가한다. 1998년 이전까지 대북지원은 오로지 민간단체에 의해 사회적 과제로 설정되었고 주도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규모에서도 인정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남북어린이어깨동무, 2005: 336).

민간단체는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축적된 협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가 되었다. 많은 민간단체들 중에서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 어린이재단(당시 한국복지재단), 한국JTS,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넷네셔널 등 6개 민간단체가 대표 단체가 되어 컨소시엄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표 III-3-4> 참조).

34)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남한은 NGO 단체들이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역할을 했다면, 북한은 협상 창구를 최소화하였다. 즉, 남북 협상은 비대칭적 대응구조 속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대남협상정책은 조선노동당의 해당부서에서 진행되고, 협상에 나서는 대남협상 기구와 간부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통일전선부에서 해외동포, 남한 내 민간단체들과 교류를 담당하는데 하위 조직으로 정책과(조선아시아태평양평양위원회, 아태), 회담과(조선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교류과(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해외동포과(해외동포원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 민간단체의 북측 협상파트너는 주로 (북)민화협이다. 남한에는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대북협력민간체협의회(북민협)이 있다.

〈표 III-3-3〉 국내 민간단체 영유아 사업 컨소시엄과 사업지역 및 내용

대표단체	참여단체	지역 및 내용	사업계획안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회 봉사부 평화3000 한겨레 통일문화 재단	남포시 어린이 병원 지원 및 영양지원 사업	<p>※ 1,2차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병동 신축(지상3층 / 총면적 1,921.86㎡ 규모 / 112 병상)</li> <li>○ 입원병동 의료 비품 지원</li> <li>○ 외래병동 개보수</li> <li>○ 외래병동 내 수술장 설치</li> <li>○ 외래병동 내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li> <li>○ 필수약품 공급</li> <li>○ 병원 운영결과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서식 개발</li> </ul> <p>※ 3차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및 필수약품 공급</li> <li>○ 외래병동 의료장비 지원 (예산 운용 시기에 따라 2차년도 사업으로 종료 가능)</li> <li>○ &lt;남포 소아병원&gt; 운영 현황에 대한 남북 의료진 간담회 개최</li> <li>○ &lt;남포 소아병원&gt;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서식 확보</li> </ul> <p>※ 영양지원 사업 별도 운영</p>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화위 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의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남포산원 지원 및 영양지원 사업	<p>※ 1차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병동 신축(지상3층/총면적 1,901㎡ 규모)</li> <li>○ 외래병동 내 수술장 및 분만실 설치</li> <li>○ 필수 의료장비 및 각종 기자재 지원(1차년도 분)</li> <li>○ 필수약품 공급</li> </ul> <p>※ 2, 3차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 시설보강, 입원병동 개보수 완료, 교육사업</li> </ul> <p>※ 산모(임산부)에 대한 영양개선사업은 별도로 추진함</p>
어린이 재단 (당시 한국복지재단)	국제기아대책기구 나눔인터네셔널 등대복지회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대안군 인민병원 및 영양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북한 영유아, 산모의 전반적인 영양 및 보건환경 개선</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군병원개보수: 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지원 등</li> <li>② 영양개선사업: 영양식 지원 및 영양생산시설 지원 등</li> <li>③ 질병관리사업: 의약품 및 의약품 지원 등</li> <li>④ 건강관리사업: 각종 검진 장비 및 의료장비 지원 등</li> </ul> </li> </ul>

〈표 III-3-3〉 계속

대표단체	참여단체	지역 및 내용	사업계획안
어린이재단 (당시 한국복지재단)	국제기아대책기구 나눔인터내셔널 등대복지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대안군 인민병원 및 영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물자 지원 후 기술자문단 및 대표단 수시 방북</li> <li>○ 교육 및 교류활동: 적합한 물자 지원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북을 통한 기술 이전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북측 사정에 맞는 사업진행을 위해 남북기술자문단의 교류활동을 추진</li> </ul>
한국JTS	평화의숲	회령지역 영유아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센터 건축 시작</li> <li>○ 각 지역 기초자료 받기</li> <li>○ 영양개선사업 진행(현장 방문 가능한 지역중심)</li> <li>○ 질병관리(기초의약품 지원)</li> <li>○ 건강관리(센터건립 전 리진료소에 기초의료기기를 지원함)</li> </ul> </li> <li>※ 2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센터 완성</li> <li>○ 영양개선사업</li> <li>○ 질병관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리진료소 지원 등)</li> <li>○ 건강관리지원(센터 완성 후 기자재 구비)</li> </ul> </li> <li>※ 3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센터 운영</li> <li>○ 영양개선 사업</li> <li>○ 질병관리</li> </ul> </li> </ul>
월드비전	유진벨재단/YMCA 전국연맹	장소 미정	- 감자사업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옥수수재단	남포시 인근 어린이 영양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영양생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콩기름 15,000t / 대두박 74,200t 생산 규모 공장 건설</li> <li>○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남측의 설비지원</li> <li>○ 어린이영양생산설비 지원 및 설치</li> <li>○ 대두박을 이용한 공과자(연간1,000t 생산) 설비 지원 및 설치</li> </ul> </li> <li>※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영양생산 시설 건설관련 기술 지원</li> </ul> </li> </ul>

〈표 III-3-3〉 계속

대표단체	참여단체	지역 및 내용	사업계획안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옥수수 재단	남포시 인근 어린이 영양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동 및 관리동 건설에 남측의 선진건축기술 전수</li> <li>○ 설비운영기술 전수</li> <li>- 북한 최초의 침출식 공정을 갖춘 공장으로서 기계 설비 조작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전수</li> <li>- 기계설비 관리 및 생산된 제품의 보관방법 교육</li> </ul>

자료: 신영전(2012), 북한 모자보건프로그램에서 WHO, UNICEF, 한국정부, 한국 NGOs의 협력 경험, 2012 대북지원 국제회의 자료집, pp.12-13.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사업은 전례없이 대규모의 중장기 지원사업이라는 점과 6개의 컨소시엄 구성과 선정의 절차 등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1) 평양 이외의 지역을 개방할 것 2) 사업의 투명성, 성과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북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북측은 영유아 지원사업이란 이름 하에 6개 지역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으며, 영유아 기금 전체를 가지고 1개의 쿵기름 공장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1차년도 영유아 지원사업은 1)남포시 어린이병원 지원, 2)남포영양 지원사업, 3)남포시 인근 어린이영양지원시설 설립, 4)대안군병원 및 영유아지원 사업, 5)회령시 영유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다(신영전, 2012: 12).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발사업은 북한의 낙후된 어린이병원, 어린이영양지원 시설 등의 병원과 공장과 같은 시설·설비를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강, 보건, 의료분야와 함께 영양, 교육 등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아원 시설인 애육원과 육아원 및 탁아소와 유치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자료: 남북 어린이어깨동무(2005), 남과 북이 함께 설립한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p.414

[그림 III-3-5] 북한 보육·교육시설의 지원사업

## 2) 민·관 협업 방식<sup>35)</sup>

1990년대 민간단체 주도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평양개최를 계기로 대북 지원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민·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대북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가 발족되었다(통일부, 2007: 142). 대북지원사업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의를 지닌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기존의 대북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2005년 민관합동사업을 통해 대북지원의 기획·집행·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논의하였다.

2004년도 북한의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자립·자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되었다(통일부, 2007: 142).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보건의료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분야 및 장기적 복구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협조 하에 3개 이상 단체가 참여하는 5개 시범 민관 합동사업을 발굴·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40여 억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통일부, 2005: 181). 5개 시범 민관 협동사업에서 모자보건·복지시범

35) 이 부분은 이윤진(2012),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추진방안'(「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함.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5개 시범 민관합동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건설(황북 봉산군)
축산사료자급 시범사업	-북한주민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백질 공급원인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공장 시설개선, 사료생산 자재 및 기술지원
보건의료 인프라개선 시범사업	-구역병원, 지방병원, 종합병원 등 보건의료체계 단계별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고 의료기술과 의료 장비 수리·관리 기술지원
<b>모자보건·복지 시범사업</b>	<b>-출산과정 및 5세 이하 어린이 성장과정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한 영양사업(공우유, 영양빵 지원), 의료·위생·교육사업 추진</b>
농업, 보건, 용수 개발시범사업	-북한 지하수 개발을 통해 깨끗한 식수원을 개발하고 의료시설 및 협동농장 등에 필요한 보건·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지원

자료: 이윤진(2012).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추진방안. 남북 교류협력 분야  
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p. 203.

#### 나. 교육·보육 학계

남북 사이의 학술교류는 언어, 역사 등의 한국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중국지역 동포학자와 단체들의 대북 교류경험을 활용하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남북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 등의 학술교류는 남북 합의서에 의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전영선, 2015: 14). 비정치 분야는 정치적 영향을 덜 받고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동을 주제로 영유아 분야의 남북 공동 학술회의는 2002년의 중국 연길에서 개최한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이 유일하다. 남한의 한국아동학회, 북한의 조선과학자협회, 중국의 연변대학민족연구원(공동주최로(한국학술진흥재단·문화관광부 후원) 2002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중국 연길시의 신교호텔에서 개최, 당시 북한에서 총 4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정철 국장이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교육업적” 김형직사범대학의 리명호 교수의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보육정책과 실태’와 김



혜란 교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유치원교육' 평양산원의 주임인 안월순 교수의 '평양산원에서 지난 보육'의 논문을 발표하였다(조선사회과학자협회·한국아동학회·연변대학민족연구원, 2002). 북한의 출산에서부터 탁아소, 유치원에 이르는 육아지원정책의 추진배경, 연혁, 전개과정,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북한의 정치사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그 내용도 대동소이한 아쉬움은 있으나,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 산원의 운영실태를 알 수 있는 성과도 있었다. 남북의 교육·보육 학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남북의 육아정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이윤진·구자연, 2013: 45).

## 다. 정부차원: 개성탁아소

### 1) 개성공단 설립 배경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은 남북경협<sup>36)</sup>이라고도 한다. 남북 경제교류의 협력은 1988년 북한과 경제 교류를 허용하는 '7·7선언'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보편적으로 경제교류의 형태는 수출입과 투자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남북 간 경제협력은 남북 간에 발생하는 물자의 교역에 대하여 수출입이라 하지 않고 반입과 반출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 서로가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를 나누어 쓰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과 민족 간의 내부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간의 수출입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이강복, 2014: 263).

남북이 경협사업을 하게 된 경제적,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합의한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 때문이다. 과거 구소련을 중심으로 북한 역시 사회주의 국가들 간 협력체제를 유지해왔으나, 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급격히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가 상쇄되고, 70년대 들어 시작된 경제침체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려 했지만, 북한

36) 남북경제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 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단순 인적교류 및 교역은 제외) (통일부 홈페이지 인용, 2015. 06. 03. 인출).

의 투자여건(산업 간접자본인 인프라 부족)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의 투자유치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주변여건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을 남북경협이라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이규석, 2011: 19).

또한 정치적 배경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우호적인 분위기로 쇄신하면서 주변 정서적 여건이 형성되었으며, 햇볕정책을 기조로 한 대북지원정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사업 수행에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강복, 2014: 282).

실제적인 남북교역현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 사업으로 인한 경제협력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현대와 북한이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합의한 사업으로, 개성직할시 일대에 800만평 규모의 공단과 1,200만평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한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창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다(통일부, 2009 3). 개성공단 사업은 실제 2002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에서 개성공단건설사업을 연내 착공기로 남북이 합의했으며, 북한은 그해 11월 남측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하여 공간 기반시설을 사업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이규석, 2011: 21). 이후 2003년 6월에 개성 현지 1단계지구에서 착공식이 열렸으며, 2003년 8월 투자보장 등 4개의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sup>37)</sup>

이후 2004년 6월, 15개 업체가 시범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12월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리빙아트가 제조한 주방용품이 생산되어 2015년 3월 현재 124개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는 54,060명이고 누적생산액은 280,610만 달러인 남북한 경협 사업이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15. 6. 8 인출).

## 2) 개성공단 현황

개성공단은 개성시와 판문군 일대에 위치한 지역이며,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37) 개성공단지구법. 4대 경제협력합의서 남북기금법 제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참조.

4대 합의서 주요내용: ①남북한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②남북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③남북한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④남북한 사이의 청산결재에 관한 합의서.

포함하여 총 2000만평을 3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평 중 800만평은 공단지역, 1200만평은 생활, 상업, 관광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를 통해 남북 경험의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를 통해 세계적 수출기지로 육성하며, 3단계 완료와 동시에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단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4단계에 해당하는 별도의 계획도 만들었으며, 이 별도 계획안에는 개성 시 13.2km<sup>2</sup>, 확장구역 23.1km<sup>2</sup>(공단 6.6km<sup>2</sup>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아래와 같다.

〈표 III-3-5〉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 (공단: 3.3km <sup>2</sup> )	2단계 (공단: 5km <sup>2</sup> , 배후도시: 3.3km <sup>2</sup> )	3단계 (공단: 11.6km <sup>2</sup> , 배후도시: 6.6km <sup>2</sup> )
봉제·신발·가방 등 노동집약 업종 중심 공단	기계·전기·전자 등 기술집약적 공단	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분야의 복합공업단지
중소기업 우선 분양 중소기업 활로 개척	산업구조 조정, 수도권 연계개발	해외유명기업 및 대기업 유치
남북경협 기반 구축	세계적 수출기지 육성	동북아 거점 개발

자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www.kidmac.com, 2015. 6. 10 인출)

공단지역 800만평 중 현재 630만평이 입주희망 신청 면적으로 업종별로는 중소기업, 신발, 섬유/의류, 전자부품, 기계공단, IT전용단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1단계 개발 지역에 대한 업종별 배치도는 아래와 같다.



자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www.kidmac.com, 2015. 6. 10 인출)

[그림 III-3-6] 개성공업지구 1단계 업종별 배치 현황도

### 3) 개성공단 탁아소

개성공단 탁아소(제1탁아소)는 2010년 9월 1일 건립되었다. 제1탁아소 설립 이전에 개성공단에 기업체가 입주하기 시작한 2007년 무렵에 임시탁아소를 운영하였다. 설립 목적은 북측 여성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지원등 인도적 차원과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고 통일부에서 명시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2015. 6. 8 인출). 개성공단의 근로자 중 약 70%가 여성인 만큼 탁아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였고, 이에 남북은 지난 2006년부터 협의를 거쳐 북측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남북협력기금 9억원을 들여 건축하기로 협의하였다. 2009년 9월 24일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그 해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위치는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약 290평, 지상 2층으로 건립되었고, 종전 임시탁아소 등에서 보육중인 북한 근로자 자녀 200여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통일부 홈페이지, 2015. 6. 8 인출).

개성공단탁아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소유권을 갖되 북측에 무상 임대되며, 운영인력공급 등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북측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 1인당 월 20달러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5. 6. 8 인출). 개성공단탁아소는 연면적 953.66㎡(보육실 면적 430.47㎡)의 규모이며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 기계실, 세탁실, 의무실이 있으며 소장 1명, 보육교사 54명 외의 의사, 식당운영원이 근무하고 있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부자료<sup>38)</sup>, 2015).

---

38) 이 자료는 제목이 없어서 참고문헌에 넣지 못함.



개성탁아소 외부 전경



개성탁아소 내부(놀이실)



개성탁아소 내부(보육실)



개성탁아소 내부(식당/급식실)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2015. 6. 2 인출)

[그림 III-3-7] 개성공단탁아소 준공 시 내·외부전경 사진

2015년 현재, 1일 3회(10시, 12시, 15시), 탁아소에 맡겨진 아동들을 어머니가 수유하기 위해 버스가 8대 운영되고 있으며(애기 어머니차), 우리 정부는 제2탁아소 설립을 위해 남한 부지를 확보해 두었다고 한다(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개성공단탁아소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받는 곳이기도 한데, 2011년부터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과 남한의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물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탁아소에 기증한 물품으로는 천기저귀, 보행기, 딸랑이와 같은 영아용 물품 지원에서부터 건조기, 세제 등의 가사용품까지 다양하다. 또한, 탁아소와 버스정류장까지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여 우천 시 우산을 쓰지 않고 통행할 수 있게 시설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부자료, 2015)

## 라. 해외민간단체<sup>39)</sup>

39) 본 내용은 중국 연길 및 일본 동경 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1) 재외동포단체

재외동포단체의 경우 국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비교적 북한 접근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동질감과 함께 의사소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와 해외 일반 민간단체에 비해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한 예로 주로 재미교포로 구성된 K재단의 경우, 현재 북한 내에서 탁아소·유치원을 운영(지원)하면서 부수적인 여러 사업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발 기증 사업인데, 세계 각지로부터 모금을 통해 매년 북한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1,000켤레를, 2012년에는 16,500켤레, 2013년에는 12,011켤레, 2014년에는 8,240켤레의 겨울 부츠를 매년 어린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재단 설립 당시에는 소규모 인력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2015년 현재는 협력단체만 5개국 25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재단은 미국과 한국, 홍콩,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대부분 개인 모금을 통해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및 탁아소 지원의 경우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교직원에게 별도의 쌀과 콩기름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수는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장선생님, 선생님, 취사부, 경리 등 보통 15명 정도이다. 유치원에는 흑판, 지우개 등은 기본적으로 북한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외에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취사도구, 이불, 서랍장 등 필요한 물품들을 재단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전력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기 등이 같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제품은 세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유치원 및 탁아소에는 식량보다는 겨울 난방에 필요한 연탄, 나무 등의 땃감 연료가 더 시급하지만, 실제 모금을 진행해 보면 식품 위주로 지원이 되는 편이다.

한편, K재단 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목적은 지원물품을 제대로 잘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북한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모니터링을 북한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면 북한보다 어려운 국가도 많기 때문에 북한을

반드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할 상대방이기 때문에 꾸준한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는 K재단과 같은 재외동포단체를 활용하여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일본 JVC: 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일본 국제자원봉사센터(國際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JVC)는 1980년 인도차이나 난민의 구호를 계기로 발족하여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라크, 북한 등의 9개국과 일본의 지진 피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협력 NGO이다. JVC는 구호지역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만 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http://www.ngo-jvc.net/jp/challenge/>, 2015. 10. 1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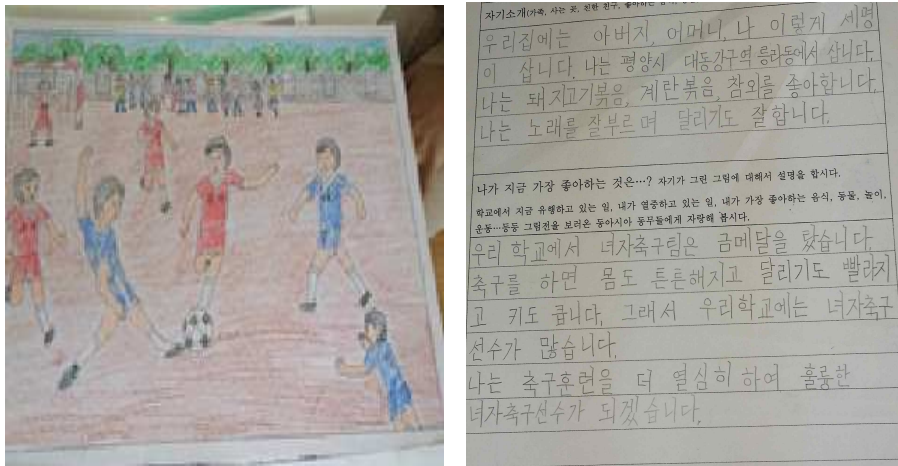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지원은 1995년 북한에서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 지원을 한 것을 계기로 시작하였다. 이후 다른 NGO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 캠페인(KOREA子どもキャンペーン)”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였다. “북한 어린이 캠페인”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일본과 북한 간의 우호 및 친목을 도모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에 시민으로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한 아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육아원이나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에 식량, 영양 비스킷 등을 지원하였으며,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의약품, 휴대용 정수기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http://www.ngo-jvc.net/jp/projects/korea/emergency-relief.html>, 2015. 10. 19. 인출). 그러나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 사업 외에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그림교환 전시회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함께 북일관계도 납치문제와 핵문제로 인해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도 많지만, 현지에서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일본에 전하는 동시에 일본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쌍방의 소통을 좋게 하고, 국가와 정치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축을 목표로 교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JVC 성명자료, 2015. 7. 24).

그림교류행사는 2001년부터 한국과 재일교포, 일본 아이들이 다 함께 시작하였다. 북한 어린이 캠페인사업을 통해 북한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일

본에서는 알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북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림을 일본에 가져가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오늘날의 “남북어린이와 일본어린이 그림마당(南北코리아と日本のともだち展)”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JVC는 본 전시회를 통해 서로 만나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 그림과 메시지교환을 통해 “만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실제 그림교환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도쿄·서울·평양에 상호 방문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0년간 1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왕래하였으며, 한국 파트너인 어린이어깨동무 단체를 통해 한국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일본 아이들이 참여하고, 평양의 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그림전시회와 교류행사에 재일교포 아이들이 동행하였다. 2014년에는 중국연길(조선족), 평양, 남한, 재일교포, 일본아이들의 그림을 동시에 전시하였다. 2015년에는 재일교포를 포함한 일본 아이들의 그림은 평양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시하였으며, 올해 전시회는 일본에서 2015년 11월에 오사카에서, 2016년 2월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VC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는 정말 작은 규모의 민간교류에 불과하지만, 실제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교류사업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주: 상단에 있는 두 그림은 평양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2015년 여름 일본 시민단체를 통해 일본 학생들과 교환한 그림임.  
 출처: JVC 내부자료(출장을 통해 수집); <http://homepage2.nifty.com/2002/friends/2015bosyu.html>(검색일: 2015. 10. 19)

[그림 III-3-8] 남북어린이와 일본어린이 그림 전시회

#### 4. 국제기구의 북한 개발협력 사업 사례

UN 산하의 많은 국제기구 중 UNICEF, WFP, FAO, UNFPA, WHO 등의 5개 기구(Agencies)는 북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영양, 보건, 식수 및 위생관리, 농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점들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UN에서는 <표 III-4-1>과 같이 북한에 대한 주요 분야를 7개로 선정하고, 부문별로 담당기구를 정하여, 북한지원에 관심 있는 국제파트너 및 단체들은 지정된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컨대, 보건(Health) 사업의 경우 WHO, UNICEF, UNFPA와 같은 UN 기구뿐만 아니라 PU-AMI(프랑스 국제시민단체)<sup>40)</sup>,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국제NGO단체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sup>41)</sup>, 국제적십자위원회(ICRC)<sup>42)</sup> 등 다양한 단체가 북한의 의료시스템 및 보건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 및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WHO, UNICEF와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원중복을 피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http://kp.one.un.org/theme-groups/health/>, 2015. 10. 19. 인출).

<표 III-4-1> 북한 지원사업 분야별 담당 협의체

지원사업 분야	협의 담당기구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Climat Change, Energy and Environment)	UNDP
교육(Education)	UNICEF
식량안보 및 농업(Food Security & Agriculture)	WFP, FAO
보건사업(Health)	WHO, UNICEF
모니터링&평가(Monitoring & Evaluation)	UNICEF
영양지원(Nutrition)	UNICEF, WFP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Water, Sanitation, & Hygiene: WASH)	UNICEF

자료: <http://kp.one.un.org/theme-groups/> 2015. 10. 19 인출)

40) Première Urgence - Aide Médicale Internationale

4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42)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가. UNICEF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니세프)은 1985년부터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계획과 홍보를 통해 보건, 영양, 위생, 교육 등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어린이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http://www.unicef.org/dprk/activities.html>, 2015. 10. 19. 인출).

1996년부터 평양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9~10개의 시·도(Provinces), 190개 군·리 지역(counties)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분야는 보건(Health) - 모자(Child and Maternal) 건강, 영양(Nutrition), 식수와 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교육, 어린이 보호(Advocacy for Child Rights) 등이다. 특히 2011-2015 국가 프로그램(country programme)의 전반적인 목표는 북한정부의 자립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에 특별한 지원을 통해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UNICEF, 2013: 1).

영양사업은 영유아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Pregnant and lactating women: PLW) 등에게 필수 미량영양소와 비타민을 공급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영양을 지원하는 것은 저체중아 예방을 위해서이며, 수유부에게 영양을 지원하는 것은 빠른 산후회복을 돕고 난소암과 자궁암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항체와 효소를 생성시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설사 등의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므로 영양 개선에 효과적이므로 유니세프는 산모와 아기의 영양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매년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영양실조 치료 센터를 조성하여 영양실조의 단계에 맞는 치료용 음식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급성영양실조 어린이들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의료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특히 리 단위의 진료소는 상주하는 의사들의 수준도 낮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니세프는 이러한 리 진료소를 예방접종과 필요한 영양식품을 처방해주는 지역 단위의 보건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 백신과 1회용 주사기 등을 공급하여 종합면역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영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설사와 같은 질병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니세프는 진료소에서 영유아에게 영양실조치료식 및 보충식을 처방하고 공급하는 것을 지원한다.

한편, 깨끗한 물의 부족과 청결하지 못한 위생 상태는 북한 영유아들의 생존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 영유아 사망의 2대 원인은 설사와 폐렴인데, 오염된 물은 아이들에게 설사병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과 기생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은 상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연결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많아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깨끗한 물을 마을에 공급하도록 지원 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특히, 설사와 같은 질병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동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 중심적인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및 학교에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http://www.unicef.org/dprk/>, 2015. 10. 19. 인출).

〈표 III-4-2〉 유니세프 2014/2015 프로그램 목표 및 결과

유니세프 지원 사업 내용	2014 목표	결과 (2014. 10 기준)	2015 목표	결과 (2015 1-6월기준)
영양 분야				단위: 명(名)
CMAM <sup>주1</sup> 입원치료 대상 SAM <sup>주2</sup> 5세 이하 아동	13,000	16,000	-	-
미량영양소 공급 받은 6-23개월 영아	500,000	156,000	-	-
철-엽산 공급 받은 19세-29세 여성	2,000,000	1,600,000	-	-
미량영양소를 공급 받은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PLW)	700,000	296,000	-	-
미량영양소 공급 받은 사람(6-24개 월 영아, PLW, 가임기 여성 등)	-	-	4,900,000	1,000,000
급성영양실조로 인해 치료를 받은 0-59개월 아동	-	-	25,000	8,000
보건 분야				
일반적 백신으로 커버가 되는 EPI <sup>주3</sup> 대상 12개월 이하 영아	353,200	346,194	362,156	362,000 <sup>주4</sup>
구충제를 받은 5세 이하 아동 (EPI 대상 포함)	1,413,000	1,641,860	1,427,000	1,600,000

〈표 III-4-2〉 계속

유니세프 지원 사업 내용	2014 목표	결과 (2014. 10 기준)	2015 목표	결과 (2015 1-6월기준)
보건 분야				
비타민 A를 공급받은 5세 이하 아동	1,590,000	1,657,670	1,605,000	1,657,670
EPI에 따라 백신으로 면역력을 갖게 된 임산부	-	-	365,000	362,000 <sup>주4</sup>
식수 및 위생(WASH) 분야				
시설 개·보수를 통해 개인위생, 식수 등에 사용가능한 충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된 외진 곳에 거주하는 인구(어린이와 여성 포함)	209,000	254,000	200,000	14,300
설사병과 같이 깨끗한 물과 위생 환경(WASH)에 영향을 받는 어린이 질병과 그에 따른 예방방법 관한 정보를 얻게 된 인구(어린이와 여성 포함)	1,000,000	약 900,000	2,000,000	900,000
정수 처리되고 안전하게 보관된 식수를 공급받게 된 인구	-	-	1,000,000	-
교육				
학교 인프라의 재건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 아동(취학 전 아동 포함)	5,000	최소 4,112	5,000	-
인지발달에 좋은 유아용 도구들(materials)을 제공받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 취학 전 아동	20,000	-	20,000	3,300

주1: Community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지역단위 급성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

주2: Severe Acute Malnutrition, 중증 급성영양실조

주3: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예방접종확대계획

주4: 2015년 결과 수치는 예방접종한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의 수를 합한 숫자임.

자료: Unicef,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DPRK), 2015. 1, pp.2-3; Unicef,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DPRK), 2015. 9, p.2.

## 나. WFP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1995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sup>43)</sup> 2008년까지는 쌀, 밀가루와 같은 곡물을 지원하였으나 장기구호 및 복구사업(The 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 PRRO)의 일환으로서 2013년 7월부터는 “모자 영양지원 사업(Nutrition Support to Children and Women)”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어린이들과 임산부, 수유모 등에게 꼭 필요한 성분으로 만든 비스킷과 슈퍼시리얼(Super Cereal)을 공급하는 것이다(<https://www.wfp.org/countries/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 2015. 10. 19. 인출). 이 제품들은 WFP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임산부와 수유부,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아이들 및 고아원, 학교, 유치원 및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급하여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WFP, 2015: 1). 슈퍼시리얼과 영양 비스킷(nutritious biscuits)은 WFP가 지원하는 북한 내의 14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북한정부는 운영비용(running cost)과 공장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WFP는 식품 원재료와 포장재, 그 밖에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http://kp.one.un.org/country-team/wfp/>, 2015. 10. 19. 인출).



출처: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Democratic%20Peoples%20Republic%20of%20Korea%20Newly%20Proposed%20PRRO%20Operational%20Coverage%20012%202013\\_0.pdf](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Democratic%20Peoples%20Republic%20of%20Korea%20Newly%20Proposed%20PRRO%20Operational%20Coverage%20012%202013_0.pdf) (2015. 10. 19. 인출)

[그림 III-4-1] WFP 활동 지역 및 영양비스킷/슈퍼시리얼 공장 위치(2013 기준)

43) 지원은 주로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90% 비중), 그 외에 임산부와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10% 비중)으로 하고 있다. Darlene Tymo, Nutrition Support to Children and Women in DPRK, 2015. 9. 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포럼 발표내용.



[그림 III-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당시에는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강북도, 평강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 등 9개 시·도 82개 군·리에서 활동했으며, 2015년 9월 현재는 양강도의 일부 지방을 포함하여 5개 지역 범위를 넓혀 87개 군·리에서 활동 중이다. WFP는 북한 내에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다만, 자강도는 북한에서 여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다(Darlene Tymo, 2015: 5).

한편, 슈퍼시리얼은 주로 육아원, 보육원 같은 고아원과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되고 있다. 슈퍼시리얼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유부나 임산부에게도 매일 제공하고 있다. 통상 연령에 따라 하루에 100~150g을 제공한다.

영양 비스킷은 밀가루, 기름, 설탕과 풍부한 비타민, 미량영양소가 함께 혼합되어 만들어진다. 이러한 비스킷은 필수비타민과 철, 요오드와 같은 미량 영양소가 성장발육에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급되며,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오전/오후 간식(하루에 4개 - 총 60g)으로 제공되고 있다. 매년 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간식을 받고 있다. 비스킷 공장은 청진, 혜산에 위치하고 있다. WFP는 정기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잘 배달되고 있는지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WFP, 2012: 4-9).



자료: WFP, Addressing Undernutrition in the DPRK, 2012, pp.4-5; <http://kp.one.un.org/country-team/wfp/> (2015. 10. 19. 인출)

[그림 III-4-2] 영양 비스킷과 슈퍼 시리얼

WFP는 공급하고 있는 식량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북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필요한 곳에 언제라도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모니터링을 위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북한정부에 알려야 했으나 현재는 방북 신청을 하면 북한에서 신청을 즉각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함흥, 원산, 천진에 지역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며,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팔뚝이나 몸무게를 측정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WFP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5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여 북한측의 통역 없이 직접 대화하여 영양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한편, WFP는 모니터링 방문이 가능하지 않는 곳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노 액세스, 노 푸드(No Access, No Food)”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강도나 북서부 산악지대의 경우 아동의 영양결핍문제가 심각한 곳이지만 방문이 불가능하여 지원하지 않고 있다(WFP, 2013: 1).

〈표 III-4-3〉 WFP 모자 영양지원 사업 활동 모금액 현황(2015. 7. 기준)

사업명	Nutrition support for Children and Women in DPRK	
대상(계획) 인원	1,787,400명	
총 요구액	167,830,081 달러(USD)	
총 모금액	79,994,153 달러(USD)	
요구액 대비 총 기금 비율(%)	48%	
주요 5대 기부자(Top 5 Donors)	스위스	13,430,486 (8%) <sup>주2)</sup>
	UN CERF <sup>주1)</sup>	9,533,544 (5.68%)
	대한민국	8,500,000 (5.06%)
	러시아	7,000,000 (4.17%)
	호주	5,080,022 (3.03%)

주1: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주2: 퍼센티지는 총 요구액 대비 기부액 비율임.

자료: WFP, DPR korea Brief, 2015. 7, p.1; WFP, RESOURCE SITUATION, 2015. 10. 1, p.1.

#### 다.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는 1997년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및 영양 안보(food and nutritional security)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로 곡물, 콩, 야채, 과일, 가축, 생선 등의 수확량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UN, 2015: 18). 한편,



FAO와 북한정부는 농업과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 농업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CPF(Country Programming Framework)라 한다. 이 안은 2012년부터 2016까지 5년간의 기간을 잡고 마련되었으며, 우선순위는 ① 북한주민들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 ② 천연자원 관리 개선, ③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④ 기후변화 대처, ⑤ 농업연구와 행정업무를 위한 기구 역량 강화이다(FAO, 2015a: 1).

FAO는 지난 30년간 북한 8~11개 도, 214개 지역에 약 8천억 달러(USD)를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로 식량격차(food gap)는 2008년 17만 톤에서 2015년 8만9천백 톤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 506만 톤에 그쳤던 북한의 식량 생산은 2014년 59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FAO, 2015a: 1).

## 라. UNFPA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은 1985년 이후 북한에 국가인구조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1994년 북한의 자체인구조택 총조사 당시 일부 기술적 지원을 하였으며, 2008년에는 북한정부와 함께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경제/사회/인구/보건 등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도 170만 달러를 들여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중 130만 달러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통일부, 2015c: 3).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사망률)과 출산율과 같은 인구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것들이며,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건강지원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주로 사망률이 높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후 출혈과 산모의 고혈압을 관리하는 필수약품 및 출산 시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http://www.unfpa.org/transparency-portal/unfpa-dem-rep-korea>, 2015. 10. 19. 인출).

UNFP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출산역량 강화(Popul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출산건강(reproductive health), 양성평등(Gender Equality) 등의 목표를 가지고 총 97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UNFPA, 2013: 1).

## 마. 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는 1972년부터 북한의 공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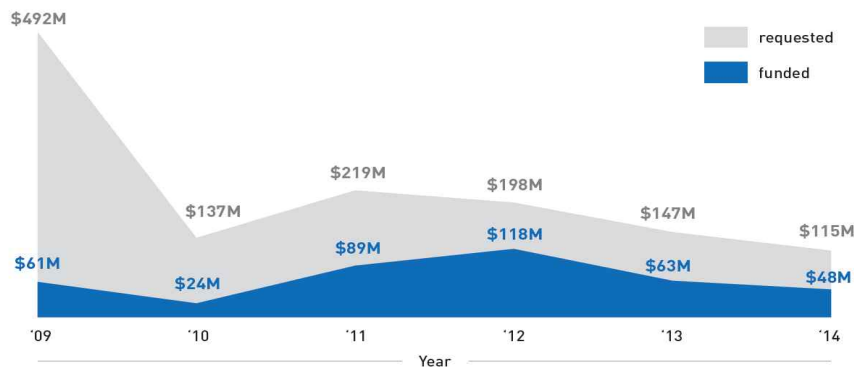
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14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북한 내 사무소는 1997년 설치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 보급과 물리적 인프라 확충, 모니터링과 평가방식의 개선 등에 전반적인 목적을 두었다(<http://kp.one.un.org/country-team/who/>, 2015. 10. 19. 인출).

최근에는 북한의 의료인력 교육과 필수약품 공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질병 감소, 성장발달, 영양균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UN, 2015: 18). 우리 정부 역시 WHO의 북한 산모 및 영유아 대상 의료시설 개선과 의약품 지원, 의료인력 교육훈련, 기술지원, 교재발간 등의 사업에 약 6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통일부, 2014a: 1).

## 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재정 현황

UN은 지난 10년 간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데 실패하고 있다. 10년 동안 모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04년 3억달러의 기금을 모았던 것이 2014년에는 5천만 달러에 불과하고 있다. 결국, UN기구들은 많은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2014년 WFP는 자금부족으로 초등학교 50만명을 포함한 110만명에게 지원하던 식량 지원 규모를 줄여야만 했으며, 유니세프 역시 임산부와 수유모, 가임기여성을 포함하여 생후 6~23개월 모든 영아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기에는 자금사정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UN, 2015: 14).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 KOREA (2009-2014)



출처: UN, DPR Korea 2015, p. 14.

[그림 III-4-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정지표(2009-2014)

2015년 UN계획을 살펴보면, 식량과 영양 지원에 8천7백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건·건강(Health) 분야에 1천7백만 달러, 식수 및 환경위생(WASH) 분야에 5백만 달러, 교육분야에 백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각 기구와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III-4-4>와 같다.

<표 III-4-4> 분야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required)금액(2015)

	UNICEF	UNPFA	WHO	WFP	FAO	합계
식량/영양	8,500,000	-	-	69,395,000	10,000,000	87,895,000
보건	3,500,000	1,500,000	12,000,000	-	-	17,000,000
식수 및 위생환경	5,000,000	-	-	-	-	5,000,000
교육	1,000,000	-	-	-	-	1,000,000
합계	18,000,000	1,500,000	12,000,000	69,395,000	10,000,000	110,895,000

자료: UN, DPR Korea 2015, p. 17.

다만, 2015년 4월 기준으로 모금된 기금은 WFP가 약 1350억 달러, 유니세프가 약 80억 달러, WHO가 약 430만 달러, FAO가 30억 달러를 모집하여 전체 1,900억 달러 정도가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위 표에서 제시한 전체 요구액 대비 17%에 불과한 수준이다(UN, 2015: 19).

## 5. 소결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1990년에서 2007년까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정치적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북이 법적 구속력 하에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분야만큼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 필요하다. 예컨대, 입법을 시도하다 좌절되었던 '남북 사회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통일부보다는 문화관광부로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전영선, 2015: 23)는 의견은 본 연구에서 참조할 만하다.

둘째,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실시했던 일회성의 긴급구호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는 다른 목적과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이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5년부터 계획, 실시했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교류협력 사업은 인도적 성격보다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크므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해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다.

셋째,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에서 교육·보육 부문은 미비했다. 아직 덜 성숙한 유아들의 상호교류를 우려할 수도 있으므로 당장에 추진하기 보다는 성인세대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후,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개성공단탁아소의 사례를 통해 향후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이 기업단위 내에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이 함께 공급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제2 탁아소의 부지를 우리 정부가 확보해 두었는데(전문가 면담결과) 제2의 탁아소 설립 시에는 남북이 함께 설계를 고안하는 등 협업해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커리큘럼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남북이 협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설·설비, 교구 등의 하드웨어 부분은 협의가능하다고 본다. 향후 개성공단 내 유치원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탁아소와 유치원에 연필, 종이, 크레파스와 같은 학용품 지원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 등의 개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유니세프와 WFP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해 단순히 인도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즉, 각 기구가 주도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과 협의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예컨대, 유니세프는 식수 및 환경개선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정화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도시개발부와 협력하여 함께 배수로 공사를 함은 물론, 각 지역 진료소를 통해 위생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수질성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학용품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친근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sup>44)</sup>하여,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니세프와 WHO는 북한 지역 단위 진료소의 현지 의료진들을 교육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FP의 경우에도 북한당국과 함께 영양 비스킷, 슈퍼시리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장을 설치해주고 기술을 전해주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밖에도 유엔인구기금에서 행하는 전국주택가구총조사나 유니세프, WHO 등이 실시하는 영양실태조사의 경우도 각 기구들은 북한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UN 산하에는 많은 인도적 지원 기구가 있지만, 해당 국가에 여러 기구가 한 번에 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협의체 담당기구를 정하여 중복사업을 피하고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5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시, 민간단체로 대북 지원사업을 할 때도 지역간, 사업간 등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진이 방문한 재외 동포 및 해외 민간단체의 경우, 북한에 대한 단순 인도적 지원보다는 “교류”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탁아소, 유치원 등을 통한 어린이와의 교류는, 어릴수록 서로에 대한 경계도 적고, 금방 통한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할 때 유치원, 탁아소가 거점이 되는 협력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4) 동경 유니세프 사무소 크리스 히라바야시 대표에 따르면, 친아동적(child friendly)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에 일자형 강의식 방식이 아닌, 책상을 조별(그룹) 형태로 하고,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좀 더 편안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IV.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 분석

### 1. 응답자 특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설문에 응한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54.8%, 여성은 45.3%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가 전체 27.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가 21.6%, 40대가 19.4%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지역이 25.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산/울산/경남이 전체 16.8%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제주 거주 비율은 전체 6.1%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대학 재학 포함)인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인 경우도 전체 4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 4.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직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각각 31.5%, 30.6%로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주부인 응답자가 17.9%, 무직/퇴직/기타인 경우가 13.1%였으며 응답자가 학생인 비율인 전체 6.9%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300만원~499만원인 경우가 전체 28.3%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4.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전체 17.3%였으며, 200만원에서 299만원인 경우는 13.3%로 조사되었다.

〈표 IV-1-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배경변인	계(수)	배경변인	계(수)
전체	100.0(800)	전체	100.0(800)
성별		학력	
남	54.8(438)	고졸이하	41.5(332)
여	45.3(362)	대졸(대재포함) <sup>45)</sup>	52.6(421)
		대학원 이상	4.8(38)
		모름/무응답	1.1(9)
연령대		직업	
20대	15.3(122)	생산직	31.5(252)
30대	16.3(130)	사무직	30.6(245)
40대	19.4(155)	주부	17.9(143)

〈표 IV-1-1〉 계속

배경변인	계(수)	배경변인	계(수)
연령대		직업	
50대	21.6(173)	학생	6.9(55)
60대 이상	27.5(220)	무직/퇴직/기타	13.1(105)
권역		월평균 가구소득	
서울	17.9(143)	200만원미만	17.3(138)
인천/경기	25.8(206)	200만원-299만원	13.3(106)
대전/충청	11.6(93)	300만원-499만원	28.3(226)
광주/전라	10.8(86)	500만원이상	24.5(196)
대구/경북	11.1(89)	모름/무응답	16.8(134)
부산/울산/경남	16.8(134)		
강원/제주	6.1(49)		

## 2.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평소 북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 3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국제 사회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 33.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또한 전체 26.3%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의했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북한은 국제 사회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 40.3%로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존재했는데, 특징적으로 20대의 젊은 연령의 경우 북한을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 43.4%로 가장 많았다.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대라고 인식하는 경우 또한 응답자의 전 연령 중 20대의 응답률이 18.0%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존재했다. 특징적으로, 북한이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고졸이하, 대졸,

45) 대졸 항목에는 대학재학생 44명이 포함된 수치임.

대학원 이상의 응답이 각각 25.6%, 27.3%, 21.1%로 유사했으나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대학원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서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특징적으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사무직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경우 전체 45.5%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북한을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소득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3.9%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IV-2-1〉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같은 민족으로 필요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임	국제사회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임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임	모름/ 무응답	계 (수)	$\chi^2$ (df)
전체	35.9	33.4	26.3	4.5	100.0(800)	
성별						
남	39.0	27.6	30.1	3.2	100.0(438)	21.52(3)***
여	32.0	40.3	21.5	6.1	100.0(362)	
연령대						
20대	18.0	36.9	43.4	1.6	100.0(122)	53.70(12)***
30대	35.4	27.7	28.5	8.5	100.0(130)	
40대	38.7	32.9	23.9	4.5	100.0(155)	
50대	49.7	31.8	14.5	4.0	100.0(173)	
60대 이상	33.2	36.4	26.4	4.1	100.0(220)	
학력						
고졸이하	33.1	36.4	25.6	4.8	100.0(332)	18.00(09)*
대졸(대재포함)	36.3	32.1	27.3	4.3	100.0(421)	
대학원 이상	57.9	21.1	21.1	0.0	100.0(38)	
모름/무응답	22.2	33.3	22.2	22.2	100.0(9)	
직업						
생산직	36.5	32.1	27.8	3.6	100.0(252)	34.62(12)**
사무직	44.9	30.6	20.4	4.1	100.0(245)	
주부	30.1	37.1	23.8	9.1	100.0(143)	
학생	20.0	32.7	45.5	1.8	100.0(55)	
무직/퇴직/기타	29.5	38.1	29.5	2.9	100.0(105)	



〈표 IV-2-1〉 계속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8.3	37.0	26.8	8.0	100.0(138)	20.25(12)
200만원-299만원	34.0	33.0	29.2	3.8	100.0(106)	
300만원-499만원	38.9	34.1	22.1	4.9	100.0(226)	
500만원이상	43.9	27.6	26.0	2.6	100.0(196)	
모름/무응답	28.4	37.3	30.6	3.7	100.0(134)	

이어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해 배운 내용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우리와 적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 50.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며 평화통일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교육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랐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4%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평일 통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50대 응답자의 76.9%, 40대 응답자의 64.5%, 60대 이상 응답자의 62.7%가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학력에 따른 차이 또한 존재했는데,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인 경우 각 57.9%, 57.5%로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사했으며, 대졸인 경우의 44.2%가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평화 통일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대졸인 경우가 49.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직업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현재 직업이 학생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5.5%가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는 다른 응답자의 응답비율보다 매우 낮은 수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북한에 대한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45.4%가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은 국제 사회 동반자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48.3%,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47.6%가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반공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원하는 통일 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했는데, 특징적으로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51.9%,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42.7%가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표 IV-2-2〉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북한에 대한 내용

단위: %(명)

	반공 교육	평화통일 교육	배운적 없다	기타	계(수)	$\chi^2$ (df)
전체	50.5	40.4	8.9	0.3	100.0(800)	
성별						
남	58.4	33.6	8.0	0.0	100.0(438)	26.51(3)***
여	40.9	48.6	9.9	0.6	100.0(362)	
연령대						
20대	5.7	82.8	11.5	0.0	100.0(122)	243.9(12)***
30대	20.0	69.2	10.8	0.0	100.0(130)	
40대	64.5	30.3	4.5	0.6	100.0(155)	
50대	76.9	17.9	4.6	0.6	100.0(173)	
60대 이상	62.7	24.5	12.7	0.0	100.0(220)	
학력						
고졸이하	57.5	30.7	11.7	0.0	100.0(332)	34.49(9)***
대졸(대재포함)	44.2	49.2	6.2	0.5	100.0(421)	
대학원 이상	57.9	31.6	10.5	0.0	100.0(38)	
모름/무응답	55.6	22.2	22.2	0.0	100.0(9)	
직업						
생산직	62.7	30.6	6.3	0.4	100.0(252)	99.79(12)***
사무직	45.7	49.4	4.9	0.0	100.0(245)	
주부	46.9	35.0	17.5	0.7	100.0(143)	
학생	5.5	85.5	9.1	0.0	100.0(55)	
무직/퇴직/기타	61.0	26.7	12.4	0.0	100.0(1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53.6	29.7	16.7	0.0	100.0(138)	44.8(12)***
200만원-299만원	43.4	45.3	11.3	0.0	100.0(106)	
300만원-499만원	55.3	39.4	4.9	0.4	100.0(226)	
500만원이상	57.7	37.8	4.1	0.5	100.0(196)	
모름/무응답	34.3	53.0	12.7	0.0	100.0(134)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56.4	37.6	5.9	0.0	100.0(287)	20.71(9)*
교류협력 대상	48.3	42.7	8.2	0.7	100.0(267)	
적대적 대상	47.6	41.0	11.4	0.0	100.0(210)	
모름/무응답	36.1	41.7	22.2	0.0	100.0(36)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47.9	41.0	10.6	0.5	100.0(188)	17.39(9)*
1국가2체제	53.3	40.6	6.1	0.0	100.0(229)	
자유로운 교류협력	51.9	40.6	7.1	0.3	100.0(308)	
통일원치않음	42.7	37.3	20.0	0.0	100.0(75)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통일 수준에 대하여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협력 수준,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된 상태인 '1국가 1체제', 하나의 국가이지만 남북이 다른 체제로 평화로운 공존상태가 되는 '1국가 2체제', 마지막으로 '통일을 원치 않음'의 4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전체 응답자의 38.5%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협력 수준을 이상적인 통일 수준으로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전체 28.6%의 응답자가 하나의 국가지만 남북이 다른 체제로 평화 공존상태가 되는 1국가 2체제를 이상적인 통일 수준으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된 1국가 1체제의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3.5%였으며,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한 비율 또한 9.4%로 존재했다.

이러한 북한과의 통일 수준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연령과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의 경우가 42.3%로 전 연령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32.8%로 가장 낮았다.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1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30대가 13.8%로 높게 나타났다.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5.8%, 6.9%, 6.8%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의 46.4%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수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어서 200만원~299만원인 경우의 응답이 40.6%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된 비율은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6%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31.0%로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가 된 1국가 1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통일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북한을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20.0%의 가장 높은 비율로 북한과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3〉 생각하는 통일 수준

단위: %(명)

	자유로운 교류협력 수준	하나의 국가지만 남북이 다른 체제인 평화공존 상태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된 상태	통일을 원치 않음 (현재상태)	계 (수)	$\chi^2$ (df)
전체	38.5	28.6	23.5	9.4	100.0(800)	
성별						
남	36.3	28.3	26.7	8.7	100.0(438)	6(3)
여	41.2	29.0	19.6	10.2	100.0(362)	
연령대						
20대	32.8	31.1	18.9	17.2	100.0(122)	21.67(12)*
30대	36.9	25.4	23.8	13.8	100.0(130)	
40대	38.7	32.9	22.6	5.8	100.0(155)	
50대	38.7	29.5	24.9	6.9	100.0(173)	
60대 이상	42.3	25.5	25.5	6.8	100.0(220)	
학력						
고졸이하	40.7	26.5	25.0	7.8	100.0(332)	13.73(9)
대졸(대재포함)	37.5	29.9	22.3	10.2	100.0(421)	
대학원 이상	28.9	39.5	23.7	7.9	100.0(38)	
모름/무응답	44.4	0.0	22.2	33.3	100.0(9)	
직업						
생산직	38.1	29.0	23.4	9.5	100.0(252)	7(12)
사무직	39.2	29.4	23.3	8.2	100.0(245)	
주부	42.0	25.2	24.5	8.4	100.0(143)	
학생	32.7	36.4	16.4	14.5	100.0(55)	
무직/퇴직/기타	36.2	26.7	26.7	10.5	100.0(1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6.4	18.8	26.8	8.0	100.0(138)	22(12)*
200만원-299만원	40.6	31.1	19.8	8.5	100.0(106)	
300만원-499만원	34.1	33.6	21.2	11.1	100.0(226)	
500만원 이상	37.2	32.1	25.0	5.6	100.0(196)	
모름/무응답	38.1	23.1	24.6	14.2	100.0(134)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32.4	33.8	31.0	2.8	100.0(287)	79.16(9)***
교류협력 대상	45.7	28.8	19.9	5.6	100.0(267)	
적대적 대상	38.6	22.4	19.0	20.0	100.0(210)	
모름/무응답	33.3	22.2	16.7	27.8	100.0(36)	

남북통일이 된 이후 남한과 북한 주민 간의 가장 갈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하여 소득차로 인한 '경제적 갈등',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 문법/표준어 등의 '언어적 갈등' 및 대중문화, 교육 시스템 등의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할 것 같다는 응답이 34.6%, 사회/문화적 갈등이 15.5%로 높게 나타났다. 언어적 갈등이 가장 심할 것 같다는 응답 또한 전체 2.5%로 조사되었다.

예상되는 남북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특징적으로 남성의 47.7%가 북한과의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여성의 45.6% 또한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20대의 42.6%가 북한과의 정치적인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할 것 같다고 답하였으며 이후 연령인 30대의 50.0%, 40대의 52.3%, 50대의 49.7%, 60대 이상의 44.1%는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력에 상관없이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직업, 월평균 가구 소득,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 수준에 따른 남북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경우, 54.0%의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적 갈등을 가장 갈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38.7%가 경제적 갈등, 37.3%가 정치적 이념 갈등을 가장 갈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선택했다.

〈표 IV-2-4〉 통일 후 남북 주민 간 가장 갈등이 심할 것 같은 분야

단위: %(명)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 갈등	사회· 문화적 갈등	언어적 갈등	기타	계(수)	$\chi^2$ (df)
전체	46.8	34.6	15.5	2.5	0.6	100.0(800)	
성별							
남	47.7	34.9	14.6	2.3	0.5	100.0(438)	1.33(4)
여	45.6	34.3	16.6	2.8	0.8	100.0(362)	

〈표 IV-2-4〉 계속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 갈등	사회· 문화적 갈등	언어적 갈등	기타	계(수)	$\chi^2$ (df)
<b>연령대</b>							
20대	36.9	42.6	18.9	1.6	0.0	100.0(122)	25.95(16)
30대	50.0	33.8	13.1	3.1	0.0	100.0(130)	
40대	52.3	31.6	14.8	0.0	1.3	100.0(155)	
50대	49.7	28.9	16.2	5.2	0.0	100.0(173)	
60대 이상	44.1	37.3	15.0	2.3	1.4	100.0(220)	
<b>학력</b>							
고졸이하	46.1	35.5	15.1	2.4	0.9	100.0(332)	8.34(12)
대졸(대재포함)	46.6	34.4	15.9	2.9	0.2	100.0(421)	
대학원 이상	50.0	28.9	18.4	0.0	2.6	100.0(38)	
모름/무응답	66.7	33.3	0.0	0.0	0.0	100.0(9)	
<b>직업</b>							
생산직	48.0	33.3	14.7	3.6	0.4	100.0(252)	16.68(16)
사무직	49.4	32.2	17.1	0.8	0.4	100.0(245)	
주부	50.3	33.6	11.9	2.8	1.4	100.0(143)	
학생	30.9	45.5	20.0	3.6	0.0	100.0(55)	
무직/퇴직/기타	41.0	39.0	16.2	2.9	1.0	100.0(105)	
<b>월평균 가구 소득</b>							
200만원미만	44.9	31.2	18.1	3.6	2.2	100.0(138)	20.55(16)
200만원-299만원	44.3	38.7	15.1	1.9	0.0	100.0(106)	
300만원-499만원	50.0	35.0	12.8	1.8	0.4	100.0(226)	
500만원이상	51.5	30.1	16.3	1.5	0.5	100.0(196)	
모름/무응답	38.1	41.0	16.4	4.5	0.0	100.0(134)	
<b>북한에 대한 인식</b>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54.0	29.3	15.0	1.0	0.7	100.0(287)	17.54(12)
교류협력 대상	41.6	38.2	16.5	2.6	1.1	100.0(267)	
적대적 대상	44.3	37.1	14.3	4.3	0.0	100.0(210)	
모름/무응답	41.7	36.1	19.4	2.8	0.0	100.0(36)	
<b>통일 수준</b>							
1국가1체제	48.4	33.0	16.0	1.6	1.1	100.0(188)	18.03(12)
1국가2체제	50.7	32.3	15.3	0.4	1.3	100.0(229)	
자유로운 교류협력	44.8	36.7	14.3	4.2	0.0	100.0(308)	
통일원치않음	38.7	37.3	20.0	4.0	0.0	100.0(75)	

이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정도의 유아에게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며, 평화통일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식의 평화 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가 어떠한 의견을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59.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가므로,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는 판단하기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유아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또한 16.9%로 조사되었다.

유아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응답자 특성 중 연령과 직업,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랐다. 우선 전 연령대로 기준으로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50.5%로 더 젊은 연령에 비해 응답 정도가 낮았다. 반면,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가므로 적극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이 33.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높았다. 직업을 기준으로, 사무직 응답자의 64.5%가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생산직의 26.2%가 어렸을 때 교육은 평생 가므로,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북한은 국제 사회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64.8%의 비율로 유아에게 적극적인 교육보다는 자연스러운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 수준을 기준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표 IV-2-5〉 유아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단위: %(명)
	①	②	③	④	계(수)	$\chi^2$ (df)
전체	59.3	23.4	16.9	0.5	100.0(800)	
성별						
남	55.7	25.6	18.5	0.2	100.0(438)	6.98(3)
여	63.5	20.7	14.9	0.8	100.0(362)	
연령대						
20대	60.7	4.9	34.4	0.0	100.0(122)	67.06(12)***
30대	66.9	15.4	16.9	0.8	100.0(130)	
40대	61.9	25.2	12.3	0.6	100.0(155)	

〈표 IV-2-5〉 계속

	①	②	③	④	계(수)	$\chi^2$ (df)
50대	61.3	27.7	10.4	0.6	100.0(173)	
60대 이상	50.5	33.6	15.5	0.5	100.0(220)	
학력						
고졸이하	59.0	23.8	16.6	0.6	100.0(332)	
대졸(대재포함)	60.6	21.9	17.1	0.5	100.0(421)	5.19(9)
대학원 이상	52.6	31.6	15.8	0.0	100.0(38)	
모름/무응답	33.3	44.4	22.2	0.0	100.0(9)	
직업						
생산직	56.7	26.2	16.3	0.8	100.0(252)	
사무직	64.5	20.4	14.7	0.4	100.0(245)	30.25(12)**
주부	63.6	21.0	15.4	0.0	100.0(143)	
학생	60.0	7.3	32.7	0.0	100.0(55)	
무직/퇴직/기타	46.7	35.2	17.1	1.0	100.0(1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50.7	25.4	22.5	1.4	100.0(138)	
200만원-299만원	62.3	22.6	14.2	0.9	100.0(106)	12.57(12)
300만원-499만원	61.9	23.0	14.6	0.4	100.0(226)	
500만원이상	60.7	24.5	14.8	0.0	100.0(196)	
모름/무응답	59.0	20.9	20.1	0.0	100.0(134)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57.1	33.4	8.7	0.7	100.0(287)	
교류협력 대상	64.8	19.9	15.0	0.4	100.0(267)	63.14(9)***
적대적 대상	54.3	15.2	30.5	0.0	100.0(210)	
모름/무응답	63.9	16.7	16.7	2.8	100.0(36)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56.9	30.9	11.2	1.1	100.0(188)	
1국가2체제	59.0	26.6	14.0	0.4	100.0(229)	47.05(9)***
자유로운 교류협력	62.3	20.5	16.9	0.3	100.0(308)	
통일원치않음	53.3	6.7	40.0	0.0	100.0(75)	

주 ①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가므로,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유아가 판단하기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④ 모름/무응답

### 3.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전체 52.9%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19.9%로 이어서 높게 나타났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1%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7.1%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성의 경우 평균 2.80으로 여성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인도적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한 비율 또한 남성의 경우 21.2%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비율 또한 남성이 11.9%로 여성인 8.0%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했는데, 특히 20대의 경우 평균 2.47점으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인 비율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특히 20대가 대북 지원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 또한 4.1%로 가장 낮았다.

학력을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원 이상이 42.1%, 대졸 19.0%, 고졸 이하 1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원 이상의 평균 또한 3.26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직업과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있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무직 직업군의 경우 23.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생산직 직업군이 19.0%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주부와 학생의 경우 각 8.4%와 5.5%로 낮게 응답하였다. 또한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상이 평균 2.94점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 수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다르게 인식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 평균 3.14, 2.83점으로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된 상태인 1국가 1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통일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평균이 2.87점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점)	F(df)
전체	10.1	19.9	52.9	17.1	100.0(800)	2.77	
성별							
남	11.9	17.8	49.1	21.2	100.0(438)	2.80	0.96(1)***
여	8.0	22.4	57.5	12.2	100.0(362)	2.74	
연령대							
20대	12.3	32.8	50.8	4.1	100.0(122)	2.47	6.93(4)***
30대	11.5	17.7	52.3	18.5	100.0(130)	2.78	
40대	5.8	13.5	58.7	21.9	100.0(155)	2.97	
50대	9.2	17.3	50.9	22.5	100.0(173)	2.87	
60대 이상	11.8	20.5	51.8	15.9	100.0(220)	2.72	
학력							
고졸이하	11.1	23.2	53.6	12.0	100.0(332)	2.67	6.6(3)***
대졸(대재포함)	9.5	18.8	52.7	19.0	100.0(421)	2.81	
대학원 이상	5.3	5.3	47.4	42.1	100.0(38)	3.26	
모름/무응답	22.2	11.1	55.6	11.1	100.0(9)	2.56	
직업							
생산직	10.3	23.8	46.8	19.0	100.0(252)	2.75	3.59(4)**
사무직	8.2	14.7	53.5	23.7	100.0(245)	2.93	
주부	10.5	21.7	59.4	8.4	100.0(143)	2.66	
학생	14.5	18.2	61.8	5.5	100.0(55)	2.58	
무직/퇴직/기타	11.4	21.0	52.4	15.2	100.0(105)	2.7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13.0	22.5	51.4	13.0	100.0(138)	2.64	3.87(4)**
200만원-299만원	8.5	31.1	43.4	17.0	100.0(106)	2.69	
300만원-499만원	10.6	15.5	56.6	17.3	100.0(226)	2.81	
500만원이상	8.2	14.8	51.5	25.5	100.0(196)	2.94	
모름/무응답	10.4	23.1	57.5	9.0	100.0(134)	2.65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4.2	7.7	58.5	29.6	100.0(287)	3.14	55.67(3)***
교류협력 대상	4.9	22.5	57.3	15.4	100.0(267)	2.83	
적대적 대상	24.3	31.0	40.0	4.8	100.0(210)	2.25	
모름/무응답	13.9	33.3	50.0	2.8	100.0(36)	2.42	

〈표 IV-3-1〉 계속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점)	F(df)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10.6	17.0	46.8	25.5	100.0(188)	2.87	
1국가2체제	7.4	20.5	54.1	17.9	100.0(229)	2.83	13.84(3)***
자유로운교류협력	7.5	18.5	59.7	14.3	100.0(308)	2.81	
통일원치않음	28.0	30.7	36.0	5.3	100.0(75)	2.19	

위와 같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높게 나타났다.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14.9%였으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3.3%로 가장 낮았다.

평화통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 등의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50대가 평균 2.76점으로 인도적 사업이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20대의 경우 평균 2.31점으로 도움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평화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또한 20대의 응답자가 3.3%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가 평균 2.45, 대졸이 2.65, 대학원 이상이 2.89점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도적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직업을 기준으로, 사무직 직업군의 평균이 2.74점으로 인도적 사업의 도움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평균 2.42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 또한 사무직 직업군이 18.4%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일 때의 평균이 2.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도적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평균 2.95점으로 도움 정도를 가장 크게 인식하였으며,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평균 2.01점으로 도움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했다.

이상적인 통일 수준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가 평균 1.96점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했으며,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에 비해 평균 2.90점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인식했다.

〈표 IV-3-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거의 도움 되지 않음	대체 로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 (수)	평균 (점)	<i>F(df)</i>
전체	14.9	25.6	46.3	13.3	100.0(800)	2.58	
성별							
남	17.8	20.5	45.4	16.2	100.0(438)	2.60	0.56(1)
여	11.3	31.8	47.2	9.7	100.0(362)	2.55	
연령대							
20대	19.7	32.8	44.3	3.3	100.0(122)	2.31	5.94(4)***
30대	17.7	25.4	44.6	12.3	100.0(130)	2.52	
40대	9.0	25.2	51.0	14.8	100.0(155)	2.72	
50대	11.6	20.8	47.4	20.2	100.0(173)	2.76	
60대 이상	17.3	25.9	44.1	12.7	100.0(220)	2.52	
학력							
고졸이하	17.5	30.1	42.8	9.6	100.0(332)	2.45	5.06(3)**
대졸(대재포함)	13.3	23.0	48.7	15.0	100.0(421)	2.65	
대학원 이상	10.5	13.2	52.6	23.7	100.0(38)	2.89	
모름/무응답	11.1	33.3	33.3	22.2	100.0(9)	2.67	
직업							
생산직	18.3	24.6	42.9	14.3	100.0(252)	2.53	3.04(4)*
사무직	11.0	22.4	48.2	18.4	100.0(245)	2.74	
주부	10.5	37.8	44.1	7.7	100.0(143)	2.49	
학생	20.0	23.6	50.9	5.5	100.0(55)	2.42	
무직/퇴직/기타	19.0	20.0	50.5	10.5	100.0(105)	2.52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19.6	26.8	44.2	9.4	100.0(138)	2.43	3.83(4)**
200만원-299만원	17.9	31.1	37.7	13.2	100.0(106)	2.46	
300만원-499만원	13.3	19.9	53.1	13.7	100.0(226)	2.67	
500만원이상	11.2	24.0	46.4	18.4	100.0(196)	2.72	
모름/무응답	15.7	32.1	43.3	9.0	100.0(134)	2.46	

〈표 IV-3-2〉 계속

	전혀 도움 되지 않음	거의 도움 되지 않음	대체 로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 (수)	평균 (점)	<i>F(df)</i>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5.9	16.0	54.7	23.3	100.0(287)	2.95	61.08(3)***
교류협력 대상	8.6	27.0	51.3	13.1	100.0(267)	2.69	
적대적 대상	33.3	33.8	31.4	1.4	100.0(210)	2.01	
모름/무응답	25.0	44.4	27.8	2.8	100.0(36)	2.08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16.5	25.5	38.3	19.7	100.0(188)	2.61	14.63(3)***
1국가2체제	11.4	21.4	51.1	16.2	100.0(229)	2.72	
자유로운 교류협력	10.7	27.9	51.6	9.7	100.0(308)	2.60	
통일원치않음	38.7	29.3	29.3	2.7	100.0(75)	1.96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5.9	17.1	58.4	18.6	100.0(560)	2.90	329.2(1)***
필요하지 않음	35.8	45.4	17.9	0.8	100.0(240)	1.8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에 이어,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점 4점을 기준으로 평균 2.89점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북한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건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 또한 57.8%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19.3%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4%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영유아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연령과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40대가 평균 2.97로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20대가 평균 2.70점으로 영유아 대상의 인도적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대의 경우 13.1%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 특성에 따라서는 학력을 기준으로 대학생 이상인 경우가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직업군을 기준으로 사무직 직업군의 경우 23.3%로 영유아 대상의 영양/보건 인도적 지원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했는데, 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경우가 평균 3.0점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

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 수준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필요성 지각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미했다. 특히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평균 3.13점으로 영유아 대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평균 2.58점으로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1국가 1체제가 이상적인 통일 수준이라고 생각한 응답자의 경우 평균 3.04점으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평균 3.09점으로 영유아 대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 또한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표 IV-3-3>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 (수)	평균 (점)	<i>F(df)</i>
전체	7.4	15.6	57.8	19.3	100.0(800)	2.89	
성별							
남	10.3	13.0	55.3	21.5	100.0(438)	2.88	0.15(1)
여	3.9	18.8	60.8	16.6	100.0(362)	2.90	
연령대							
20대	10.7	22.1	54.1	13.1	100.0(122)	2.70	2.6(4)*
30대	7.7	16.9	52.3	23.1	100.0(130)	2.91	
40대	7.1	11.6	58.1	23.2	100.0(155)	2.97	
50대	8.1	17.3	54.9	19.7	100.0(173)	2.86	
60대 이상	5.0	12.7	65.0	17.3	100.0(220)	2.95	
학력							
고졸이하	7.5	15.7	61.1	15.7	100.0(332)	2.85	1.14(3)
대졸(대재포함)	7.4	15.9	55.1	21.6	100.0(421)	2.91	
대학원 이상	5.3	10.5	57.9	26.3	100.0(38)	3.05	
모름/무응답	11.1	22.2	55.6	11.1	100.0(9)	2.67	
직업							
생산직	9.5	15.5	56.7	18.3	100.0(252)	2.84	0.87(4)
사무직	5.3	16.3	55.1	23.3	100.0(245)	2.96	
주부	4.9	16.8	64.3	14.0	100.0(143)	2.87	
학생	10.9	14.5	54.5	20.0	100.0(55)	2.84	
무직/퇴직/기타	8.6	13.3	59.0	19.0	100.0(105)	2.89	

<표 IV-3-3> 계속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 (수)	평균 (점)	F(t#)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2	14.5	67.4	15.9	100.0(138)	2.97	3.87(4)**
200만원-299만원	5.7	15.1	55.7	23.6	100.0(106)	2.97	
300만원-499만원	12.4	14.6	53.1	19.9	100.0(226)	2.81	
500만원이상	5.1	12.8	59.2	23.0	100.0(196)	3.00	
모름/무응답	9.0	23.1	55.2	12.7	100.0(134)	2.72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2.8	10.8	57.1	29.3	100.0(287)	3.13	21.45(3)***
교류협력 대상	4.5	16.9	63.3	15.4	100.0(267)	2.90	
적대적 대상	16.7	20.0	52.4	11.0	100.0(210)	2.58	
모름/무응답	11.1	19.4	52.8	16.7	100.0(36)	2.75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6.4	11.2	54.8	27.7	100.0(188)	3.04	15.94(3)***
1국가2체제	7.4	17.5	56.3	18.8	100.0(229)	2.86	
자유로운 교류협력	4.2	14.3	63.6	17.9	100.0(308)	2.95	
통일원치않음	22.7	26.7	45.3	5.3	100.0(75)	2.33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2.5	9.8	63.6	24.1	100.0(560)	3.09	145.22(1)***
필요하지 않음	18.8	29.2	44.2	7.9	100.0(240)	2.41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한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총점 4점을 기준으로 평균 2.85점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58.0%로 높았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은 25.3%로 이어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0%였다.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40대의 경우 평균 2.92점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반대로 20대의 경우 평균 2.57점으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인 경우의 평균이 2.77, 대졸인 경우가 2.89, 대학원 이상이 3.11점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서,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평균이 3.02점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통일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또한 있었다. 특히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평균 2.45점으로 가장 낮게 지각했으며,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통일 수준으로 통일을 원치 않음을 택한 응답자의 경우 평균 2.36점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도 유의했는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3.10점으로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각한 응답자는 평균 3.07점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 높게 지각했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했다.

〈표 IV-3-4〉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수)	평균 (점)	<i>F(df)</i>
전체	7.0	18.3	25.3	58.0	100.0(800)	2.85	
성별							
남	8.0	14.8	22.8	57.1	100.0(438)	2.89	3.64(1)
여	5.8	22.4	28.2	59.1	100.0(362)	2.79	
연령대							
20대	9.0	35.2	44.3	45.9	100.0(122)	2.57	5.08(4)***
30대	6.9	18.5	25.4	60.0	100.0(130)	2.82	
40대	5.2	14.8	20.0	63.2	100.0(155)	2.92	
50대	6.9	16.8	23.7	54.3	100.0(173)	2.91	
60대 이상	7.3	12.3	19.5	62.7	100.0(220)	2.91	
학력							
고졸이하	9.0	18.7	27.7	59.0	100.0(332)	2.77	3.2(3)*
대졸(대재포함)	5.7	18.1	23.8	58.0	100.0(421)	2.89	
대학원 이상	2.6	18.4	21.1	44.7	100.0(38)	3.11	
모름/무응답	11.1	11.1	22.2	77.8	100.0(9)	2.67	



〈표 IV-3-4〉 계속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수)	평균 (점)	F(df)
직업							
생산직	7.5	20.2	27.8	56.3	100.0(252)	2.81	1.49(4)
사무직	4.9	18.0	22.9	56.3	100.0(245)	2.93	
주부	6.3	17.5	23.8	64.3	100.0(143)	2.82	
학생	9.1	23.6	32.7	56.4	100.0(55)	2.69	
무직/퇴직/기타	10.5	12.4	22.9	58.1	100.0(105)	2.8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7.2	15.2	22.5	64.5	100.0(138)	2.83	5.09(4)***
200만원-299만원	4.7	28.3	33.0	50.9	100.0(106)	2.78	
300만원-499만원	8.8	15.0	23.9	57.5	100.0(226)	2.86	
500만원이상	3.6	14.8	18.4	58.2	100.0(196)	3.02	
모름/무응답	10.4	23.9	34.3	57.5	100.0(134)	2.63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2.1	10.1	12.2	58.9	100.0(287)	3.15	40.81(3)***
교류협력 대상	3.7	19.1	22.8	62.2	100.0(267)	2.88	
적대적 대상	15.7	28.1	43.8	51.9	100.0(210)	2.45	
모름/무응답	19.4	19.4	38.9	55.6	100.0(36)	2.47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7.4	13.8	21.3	54.3	100.0(188)	2.96	11.76(3)***
1국가2체제	5.2	22.3	27.5	54.1	100.0(229)	2.86	
자유로운 교류협력	5.5	14.6	20.1	65.6	100.0(308)	2.89	
통일원치않음	17.3	32.0	49.3	48.0	100.0(75)	2.36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1.3	9.8	11.1	66.8	100.0(560)	3.10	261.6(1)***
필요하지 않음	20.4	37.9	58.3	37.5	100.0(240)	2.25	
북한 영유아 영양보건 지원 필요성							
필요함	1.6	10.4	12.0	67.2	100.0(616)	3.07	315.36(1)***
필요하지 않음	25.0	44.6	69.6	27.2	100.0(184)	2.09	

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는 5·24 조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은 전체 31.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북한 영유아 지원만큼은 5·24 조치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 분야 등 비정치적 영역까지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8.6%였으며, 남북 상호간 폭 넓은 교류협력을 위해 전면적으로 5·24 조치를 해

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5·24 조치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특징적으로, 6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 영유아 지원만큼은 5·24 조치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30.0%, 31.0%로 가장 높았다. 학력을 기준으로,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졸이하인 경우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남북 상호간 폭 넓은 교류협력을 위해 전면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은 대학원 이상의 경우가 31.6%로 가장 높았다. 사회문화 분야 등 비정치적 영역까지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의 경우 40.0%로 가장 응답을 보였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200만원미만인 경우의 37.0%가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 또한 존재했다. 특히,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지각한 응답자의 47.6%가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25.7%가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나,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7.9%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영유아 영양보조 지원 필요성 인식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했는데,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보조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각한 응답자의 47.3%가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표 IV-3-5〉 5·24조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계(수)	$\chi^2$ (df)
전체		31.1	25.8	18.6	15.8	8.8	100.0(800)	
성별	남	32.6	24.4	17.6	17.6	7.8	100.0(438)	5.08(4)
	여	29.3	27.3	19.9	13.5	9.9	100.0(362)	
연령대	20대	35.2	21.3	30.3	8.2	4.9	100.0(122)	43.93(16)***
	30대	24.6	30.0	21.5	15.4	8.5	100.0(130)	
	40대	24.5	31.0	21.3	16.8	6.5	100.0(155)	
	50대	30.6	21.4	17.3	19.7	11.0	100.0(173)	
	60대 이상	37.7	25.5	9.5	16.4	10.9	100.0(220)	

<표 IV-3-5> 계속

	①	②	③	④	⑤	계(수)	$\chi^2$ (df)
학력							
고졸이하	34.6	27.7	10.2	15.7	11.7	100.0(332)	41.21(12)***
대졸(대재포함)	29.2	24.5	25.2	14.3	6.9	100.0(421)	
대학원 이상	26.3	23.7	15.8	31.6	2.6	100.0(38)	
모름/무응답	11.1	22.2	33.3	22.2	11.1	100.0(9)	
직업							
생산직	32.9	25.4	14.7	18.3	8.7	100.0(252)	52.21(16)***
사무직	26.9	29.4	23.3	15.1	5.3	100.0(245)	
주부	32.9	23.1	16.8	10.5	16.8	100.0(143)	
학생	29.1	14.5	40.0	10.9	5.5	100.0(55)	
무직/퇴직/기타	35.2	27.6	8.6	21.0	7.6	100.0(1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37.0	29.7	8.7	14.5	10.1	100.0(138)	37.35(16)**
200만원-299만원	26.4	35.8	14.2	15.1	8.5	100.0(106)	
300만원-499만원	33.6	21.7	19.5	17.3	8.0	100.0(226)	
500만원이상	24.0	27.0	24.0	18.9	6.1	100.0(196)	
모름/무응답	35.1	18.7	23.1	10.4	12.7	100.0(134)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24.4	27.2	21.6	19.2	7.7	100.0(287)	78.89(12)***
교류협력 대상	26.2	29.6	19.9	18.4	6.0	100.0(267)	
적대적 대상	47.6	20.5	13.8	9.0	9.0	100.0(210)	
모름/무응답	25.0	16.7	13.9	8.3	36.1	100.0(36)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29.8	27.7	17.6	16.0	9.0	100.0(188)	6.32(12)
1국가2체제	28.8	25.8	20.5	15.7	9.2	100.0(229)	
자유로운 교류협력	32.5	25.6	18.2	16.6	7.1	100.0(308)	
통일원치않음	36.0	21.3	17.3	12.0	13.3	100.0(75)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25.7	28.2	20.7	17.9	7.5	100.0(560)	34.93(4)***
필요하지 않음	43.8	20.0	13.8	10.8	11.7	100.0(240)	
북한 영유아 영양보건 지원 필요성							
필요함	26.3	29.1	20.0	16.9	7.8	100.0(616)	39.01(4)***
필요하지 않음	47.3	14.7	14.1	12.0	12.0	100.0(184)	

- 주 ①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② 북한 영유아 지원만큼은 5·24 조치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  
 ③ 사회문화 분야 등 비정치적 영역까지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④ 남북 상호간 폭 넓은 교류협력을 위해 전면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⑤ 모름/무응답

#### 4.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성공단 설치 등 인적, 물적 자원들을 교류하는 것과 같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20.9%로 나타나 대체로 응답자가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응답자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했다. 응답자 연령을 기준으로, 20대의 경우 평균 2.66점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으며, 50대가 평균 3.05점으로 교류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대학원 이상이 평균 3.37점으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 직업군이 평균 3.04점,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필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과 통일,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존재했다. 특히,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평균 2.50점, 이상적인 통일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평균 2.40점으로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 북한 영유아 대상의 영양/보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각 평균 3.14, 3.06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1〉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평균 (점)	F(t)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 (수)			
전체	6.0	14.9	20.9	60.3	100.0(800)	2.92		
성별								
남	7.3	12.6	19.9	56.4	100.0(438)	2.97	3.55(1)	
여	4.4	17.7	22.1	64.9	100.0(362)	2.86		

〈표 IV-4-1〉 계속

	전혀 필요 하지않음	필요하지 않은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 (수)	평균 (점)	F(d)*
<b>연령대</b>							
20대	8.2	25.4	33.6	59.0	100.0(122)	2.66	5.81(4)***
30대	8.5	20.8	29.2	46.2	100.0(130)	2.87	
40대	5.2	7.7	12.9	67.7	100.0(155)	3.01	
50대	5.2	9.2	14.5	61.3	100.0(173)	3.05	
60대 이상	4.5	15.0	19.5	63.2	100.0(220)	2.93	
<b>학력</b>							
고졸이하	6.6	16.9	23.5	64.5	100.0(332)	2.82	6.94(3)** *
대졸(대재포함)	5.7	14.3	20.0	58.7	100.0(421)	2.96	
대학원 이상	2.6	7.9	10.5	39.5	100.0(38)	3.37	
모름/무응답	11.1	0.0	11.1	66.7	100.0(9)	3.00	
<b>직업</b>							
생산직	7.5	12.3	19.8	61.1	100.0(252)	2.92	3.05(4)*
사무직	4.1	13.1	17.1	57.6	100.0(245)	3.04	
주부	3.5	23.1	26.6	64.3	100.0(143)	2.79	
학생	9.1	18.2	27.3	56.4	100.0(55)	2.80	
무직/퇴직/기타	8.6	12.4	21.0	61.0	100.0(105)	2.89	
<b>월평균 가구 소득</b>							
200만원미만	5.1	18.8	23.9	63.0	100.0(138)	2.84	3.67(4)**
200만원-299만원	6.6	15.1	21.7	63.2	100.0(106)	2.87	
300만원-499만원	5.3	11.1	16.4	63.7	100.0(226)	2.98	
500만원이상	5.1	14.3	19.4	52.0	100.0(196)	3.04	
모름/무응답	9.0	17.9	26.9	61.2	100.0(134)	2.76	
<b>북한에 대한 인식</b>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1.7	6.6	8.4	62.7	100.0(287)	3.19	43.7(3)***
교류협력 대상	3.0	12.4	15.4	65.2	100.0(267)	3.01	
적대적 대상	15.2	25.7	41.0	52.4	100.0(210)	2.50	
모름/무응답	8.3	36.1	44.4	50.0	100.0(36)	2.53	
<b>통일 수준</b>							
1국가1체제	5.9	10.6	16.5	58.5	100.0(188)	3.03	14.17(3)***
1국가2체제	3.9	15.7	19.7	59.8	100.0(229)	2.97	
자유로운 교류협력	4.5	13.3	17.9	65.3	100.0(308)	2.94	
통일원치않음	18.7	29.3	48.0	45.3	100.0(75)	2.40	
<b>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b>							
필요함	2.0	7.7	9.6	64.8	100.0(560)	3.14	195.11(1)***
필요하지 않음	15.4	31.7	47.1	49.6	100.0(240)	2.41	
<b>북한 영아양육보조지원 필요성</b>							
필요함	2.8	11.4	14.1	62.7	100.0(616)	3.06	109.23(1)***
필요하지 않음	16.8	26.6	43.5	52.2	100.0(184)	2.44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49.9%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은 전체 30.4%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협력사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과 학력 및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평균 2.84점으로 여성보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50대가 평균 2.93점으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0대의 경우 협력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평균 2.54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가 평균 2.68, 대졸이 2.84, 대학원 이상이 3.11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평균 2.99점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과 통일, 북한에 대한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있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평균 2.30점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으며,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평균 3.11점으로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이 1국가 1체제라고 응답한 경우, 평균 2.88점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북한 영유아 대상의 영양/보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각 평균 3.01점, 2.91점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평균 3.02점으로 협력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표 IV-4-2〉 개성공단 같은 형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필요성

단위: %(명)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 (수)	평균 (점)	<i>F(df)</i>
전체	11.1	19.3	30.4	49.9	100.0(800)	2.78	
성별							
남	13.2	14.8	28.1	46.1	100.0(438)	2.84	4.78(1)*
여	8.6	24.6	33.1	54.4	100.0(362)	2.71	
연령대							
20대	16.4	27.0	43.4	42.6	100.0(122)	2.54	4.27(4)**
30대	17.7	13.8	31.5	48.5	100.0(130)	2.71	
40대	8.4	14.8	23.2	56.8	100.0(155)	2.88	
50대	8.7	16.2	24.9	48.6	100.0(173)	2.93	
60대 이상	8.2	23.6	31.8	50.9	100.0(220)	2.77	
학력							
고졸이하	11.4	21.4	32.8	54.8	100.0(332)	2.68	3.73(3)*
대졸(대재포함)	10.7	18.5	29.2	47.3	100.0(421)	2.84	
대학원 이상	13.2	7.9	21.1	34.2	100.0(38)	3.11	
모름/무응답	11.1	22.2	33.3	55.6	100.0(9)	2.67	
직업							
생산직	13.5	15.1	28.6	48.4	100.0(252)	2.81	1.48(4)
사무직	11.8	16.7	28.6	47.3	100.0(245)	2.84	
주부	7.7	31.5	39.2	51.7	100.0(143)	2.62	
학생	7.3	25.5	32.7	49.1	100.0(55)	2.78	
무직/퇴직/기타	10.5	15.2	25.7	57.1	100.0(105)	2.8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9.4	26.1	35.5	53.6	100.0(138)	2.66	6.3(4)***
200만원-299만원	10.4	26.4	36.8	49.1	100.0(106)	2.67	
300만원-499만원	9.3	17.7	27.0	50.9	100.0(226)	2.86	
500만원이상	10.7	11.2	21.9	46.4	100.0(196)	2.99	
모름/무응답	17.2	20.9	38.1	50.0	100.0(134)	2.57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3.1	11.8	15.0	56.1	100.0(287)	3.11	46.95(3)***
교류협력 대상	6.7	18.4	25.1	53.9	100.0(267)	2.89	
적대적 대상	25.7	27.1	52.9	39.0	100.0(210)	2.30	
모름/무응답	22.2	38.9	61.1	33.3	100.0(36)	2.22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11.2	12.8	23.9	53.2	100.0(188)	2.88	7.49(3)***
1국가2체제	9.2	22.7	31.9	46.3	100.0(229)	2.81	
자유로운 교류협력	9.7	18.5	28.2	52.3	100.0(308)	2.81	
통일원치않음	22.7	28.0	50.7	42.7	100.0(75)	2.33	

〈표 IV-4-2〉 계속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임	필요 한 편임	매우 필요 함	계 (수)	평균 (점)	F(df)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5.7	12.9	18.6	56.1	100.0(560)	3.01	145.57(1)***
필요하지 않음	23.8	34.2	57.9	35.4	100.0(240)	2.25	
북한 영유아 영양보건 지원 필요성							
필요함	7.8	16.7	24.5	52.1	100.0(616)	2.91	59.94(1)***
필요하지 않음	22.3	27.7	50.0	42.4	100.0(184)	2.35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							
필요함	4.1	14.5	18.6	56.9	100.0(633)	3.02	288.41(1)***
필요하지 않음	37.7	37.1	74.9	23.4	100.0(167)	1.89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부가 북한 근로자 자녀를 위한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북한 근로자 자녀를 위한 탁아소 설치에 우리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북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4%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북한 근로자의 자녀도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9%였으며, 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탁아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19.6%였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과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북한의 탁아소 설치에 우리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 북한 근로자의 자녀도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인 경우 북한의 탁아소 설치를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5.0%로 가장 높았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탁아소 설치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특히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북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차이도 존재했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 없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40.0%, 북한 영유아 대상의 영양보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41.3%가 우리 기업 또는 정부에서 북한 근로자의 자녀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46.1%가 북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인식했다.

〈표 IV-4-3〉 우리 기업/정부가 북한 근로자 자녀 위한 탁아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chi^2$ (df)
전체	31.8	23.4	20.9	19.6	0.8	3.6	100.0(800)	
성별								
남	31.3	21.7	23.7	18.3	0.9	4.1	100.0(438)	6.95(5)
여	32.3	25.4	17.4	21.3	0.6	3.0	100.0(362)	
연령대								
20대	40.2	28.7	16.4	13.9	0.0	0.8	100.0(122)	33.88(20)*
30대	30.0	29.2	20.8	17.7	0.0	2.3	100.0(130)	
40대	34.8	14.2	25.2	20.0	1.3	4.5	100.0(155)	
50대	29.5	20.2	23.1	22.5	1.7	2.9	100.0(173)	
60대 이상	27.7	25.9	18.6	21.4	0.5	5.9	100.0(220)	
학력								
고졸이하	31.9	25.9	17.5	18.7	0.9	5.1	100.0(332)	26.41(15)*
대졸(대재포함)	32.1	22.1	21.6	21.1	0.7	2.4	100.0(421)	
대학원 이상	34.2	15.8	39.5	5.3	0.0	5.3	100.0(38)	
모름/무응답	0.0	22.2	33.3	44.4	0.0	0.0	100.0(9)	
직업								
생산직	27.0	21.4	30.6	16.3	0.8	4.0	100.0(252)	52.37(20)***
사무직	35.5	22.4	17.6	20.8	1.6	2.0	100.0(245)	
주부	26.6	27.3	15.4	26.6	0.0	4.2	100.0(143)	
학생	47.3	29.1	18.2	5.5	0.0	0.0	100.0(55)	
무직/퇴직/기타	33.3	21.9	14.3	22.9	0.0	7.6	100.0(1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3.2	31.2	18.8	20.3	0.7	5.8	100.0(138)	31.75(20)*
200만원-299만원	41.5	18.9	18.9	16.0	1.9	2.8	100.0(106)	
300만원-499만원	32.7	21.2	19.5	22.6	0.4	3.5	100.0(226)	
500만원이상	29.6	19.9	25.0	23.0	1.0	1.5	100.0(196)	
모름/무응답	34.3	27.6	20.9	11.9	0.0	5.2	100.0(134)	

〈표 IV-4-3〉 계속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chi^2$ (df)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34.5	16.0	27.9	18.1	0.7	2.8	100.0(287)	62.57(15)***
교류협력 대상	34.5	18.7	21.7	20.6	0.7	3.7	100.0(267)	
적대적 대상	28.1	36.7	12.4	19.0	0.5	3.3	100.0(210)	
모름/무응답	11.1	38.9	8.3	27.8	2.8	11.1	100.0(36)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27.1	22.3	21.8	23.4	0.5	4.8	100.0(188)	32.46(15)**
1국가2체제	37.1	21.4	21.0	16.6	0.9	3.1	100.0(229)	
자유로운 교류협력	31.2	20.1	22.7	21.1	1.0	3.9	100.0(308)	
통일원치않음	29.3	45.3	10.7	13.3	0.0	1.3	100.0(75)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32.5	16.3	25.7	21.6	0.4	3.6	100.0(560)	69.41(5)***
필요하지 않음	30.0	40.0	9.6	15.0	1.7	3.8	100.0(240)	
북한 영유아 양육보전 지원 필요성								
필요함	32.8	18.0	23.7	21.4	0.6	3.4	100.0(616)	49.17(5)***
필요하지 않음	28.3	41.3	11.4	13.6	1.1	4.3	100.0(184)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								
필요함	33.6	17.4	23.5	20.9	0.9	3.6	100.0(633)	64.33(5)***
필요하지 않음	24.6	46.1	10.8	15.0	0.0	3.6	100.0(167)	

주①우리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 ②북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③북한 근로자의 자녀도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있다  
 ④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⑤기타  
 ⑥모름/무응답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탁아소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44.1%로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또한 31.4%로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된 경우는 13.3%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1.3%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 특성 중,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50대가 평균 2.65점으로 탁아소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인식하였으며, 이어서 40대가 평균 2.61점으로 높게 인식했다. 반면, 20대는 평균 2.3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을 기준으로, 고졸이하가 평균 2.42, 대졸의 경우 2.60, 대학원 이상이 2.84점 순으로 탁아소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했는데, 특히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평균 2.82점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탁아소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지각했으며, 반대로 북한이 우리와 휴전 중인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지각한 경우의 평균은 2.1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적인 통일 수준이 1국가 1체제라고 생각하거나, 1국가 2체제라고 지각하는 경우 각 평균 2.63점, 2.62점으로 탁아소가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각하거나, 북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각한 응답자의 경우 평균 2.76점, 2.69점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각한 응답자에 비해 탁아소가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했으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각한 경우 평균 2.71점으로 인적, 물적 교류 거점에 탁아소가 기여하는 정도를 더 높이 평가했다.

〈표 IV-4-4〉 탁아소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 거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명)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점)	F(df)
전체	13.3	31.4	44.1	11.3	100.0(800)	2.53	
성별							
남	16.0	28.1	41.8	14.2	100.0(438)	2.54	0.07(1)
여	9.9	35.4	47.0	7.7	100.0(362)	2.52	
연령대							
20대	15.6	41.0	35.2	8.2	100.0(122)	2.36	2.62(4)*
30대	15.4	32.3	42.3	10.0	100.0(130)	2.47	
40대	8.4	33.5	46.5	11.6	100.0(155)	2.61	
50대	15.6	19.7	48.6	16.2	100.0(173)	2.65	
60대 이상	12.3	33.2	45.0	9.5	100.0(220)	2.52	
학력							
고졸이하	15.4	34.3	43.4	6.9	100.0(332)	2.42	4.99(3)**
대졸(대제포함)	12.1	29.2	44.9	13.8	100.0(421)	2.60	
대학원 이상	7.9	23.7	44.7	23.7	100.0(38)	2.84	
모름/무응답	11.1	55.6	33.3	0.0	100.0(9)	2.22	

〈표 IV-44〉 계속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점)	F(df)
<b>직업</b>							
생산직	16.7	27.4	42.9	13.1	100.0(252)	2.52	1.17(4)
사무직	10.6	29.4	46.9	13.1	100.0(245)	2.62	
주부	11.2	39.2	43.4	6.3	100.0(143)	2.45	
학생	12.7	41.8	29.1	16.4	100.0(55)	2.49	
무직/퇴직/기타	14.3	29.5	49.5	6.7	100.0(105)	2.49	
<b>월평균 가구 소득</b>							
200만원미만	12.3	36.2	45.7	5.8	100.0(138)	2.45	1.97(4)
200만원-299만원	9.4	30.2	50.9	9.4	100.0(106)	2.60	
300만원-499만원	13.7	32.7	42.5	11.1	100.0(226)	2.51	
500만원이상	12.8	27.0	42.3	17.9	100.0(196)	2.65	
모름/무응답	17.2	31.3	42.5	9.0	100.0(134)	2.43	
<b>북한에 대한 인식</b>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5.6	25.1	51.6	17.8	100.0(287)	2.82	29.38(3)***
교류협력 대상	9.0	34.8	45.3	10.9	100.0(267)	2.58	
적대적 대상	27.1	35.7	32.9	4.3	100.0(210)	2.14	
모름/무응답	25.0	30.6	41.7	2.8	100.0(36)	2.22	
<b>통일 수준</b>							
1국가1체제	12.8	27.7	43.6	16.0	100.0(188)	2.63	17.85(3)***
1국가2체제	11.8	27.9	46.7	13.5	100.0(229)	2.62	
자유로운 교류협력	10.1	31.2	50.0	8.8	100.0(308)	2.57	
통일원치않음	32.0	52.0	13.3	2.7	100.0(75)	1.87	
<b>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b>							
필요함	7.0	26.1	51.4	15.5	100.0(560)	2.76	146.48(1)***
필요하지 않음	27.9	43.8	27.1	1.3	100.0(240)	2.02	
<b>북한 영아 영양개선 지원 필요성</b>							
필요함	8.3	28.4	48.9	14.4	100.0(616)	2.69	106.28(1)***
필요하지 않음	29.9	41.3	28.3	0.5	100.0(184)	1.99	
<b>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b>							
필요함	7.0	29.1	50.1	13.9	100.0(633)	2.71	149.9(1)***
필요하지 않음	37.1	40.1	21.6	1.2	100.0(167)	1.87	

이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유아들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일지 질문한 결과,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가' 전체 응답의 3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가 25.6%로 높이 나타났다.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 전래동

화 읽기(예: 흥부와 놀부)는 23.9%, '남북 유아들의 그림 교환하기'는 13.0%였다.

전 연령대에 걸쳐 남북 유아들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를 가장 높은 비율로 택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 또한 유의하였다. 특징적으로, 40대를 제외한 연령의 경우 동요 제작하여 부르기에 이어 '공동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를 높게 선택하였으며, 반대로 40대의 경우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전래동화 읽기'를 25.8%로 높게 선택하였다.

북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보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도 존재했다. 기본적으로, 북한 지원 필요성의 인식에 관계없이, 남북 유아들 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했으나, 특징적으로 북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은 이어서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를 26.9%로 높게 선택했다. 반면, 영양/보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 다음으로, 남북 공통의 전래동화 읽기를 26.1%로 높게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를 각 37.8%, 3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하여 부르기 다음으로, 남북 유아 공동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를 26.3%로 높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5〉 남북 유아들 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

							단위: %(명)
		①	②	③	④	계(수)	$\chi^2$ (df)
전체		37.5	25.6	23.9	13.0	100.0(800)	
성별	남	37.2	26.7	23.1	13.0	100.0(438)	0.74(3)
	여	37.8	24.3	24.9	13.0	100.0(362)	
연령대	20대	44.3	22.1	18.0	15.6	100.0(122)	24.26(12)*
	30대	35.4	26.9	19.2	18.5	100.0(130)	
	40대	44.5	20.6	25.8	9.0	100.0(155)	
	50대	35.3	24.9	24.3	15.6	100.0(173)	
	60대 이상	31.8	30.9	28.2	9.1	100.0(220)	

〈표 IV-45〉 계속

	①	②	③	④	계(수)	$\chi^2$ (df)
학력						
고졸이하	32.5	28.6	27.4	11.4	100.0(332)	14.27(9)
대졸(대재포함)	41.1	22.6	21.6	14.7	100.0(421)	
대학원 이상	42.1	31.6	15.8	10.5	100.0(38)	
모름/무응답	33.3	33.3	33.3	0.0	100.0(9)	
직업						
생산직	32.1	29.8	26.6	11.5	100.0(252)	17.44(12)
사무직	41.6	21.6	20.8	15.9	100.0(245)	
주부	32.9	27.3	26.6	13.3	100.0(143)	
학생	47.3	23.6	14.5	14.5	100.0(55)	
무직/퇴직/기타	41.9	23.8	25.7	8.6	100.0(1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35.5	31.9	22.5	10.1	100.0(138)	9.26(12)
200만원-299만원	34.0	25.5	28.3	12.3	100.0(106)	
300만원-499만원	36.7	24.8	25.7	12.8	100.0(226)	
500만원이상	37.8	26.0	20.9	15.3	100.0(196)	
모름/무응답	43.3	20.1	23.1	13.4	100.0(134)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40.8	25.8	21.3	12.2	100.0(287)	4.61(9)
교류협력 대상	35.2	26.2	26.6	12.0	100.0(267)	
적대적 대상	36.2	25.2	23.3	15.2	100.0(210)	
모름/무응답	36.1	22.2	27.8	13.9	100.0(36)	
통일 수준						
1국가1체제	39.4	24.5	22.3	13.8	100.0(188)	7.74(9)
1국가2체제	35.4	28.4	24.9	11.4	100.0(229)	
자유로운 교류협력	38.0	25.6	24.7	11.7	100.0(308)	
통일원치않음	37.3	20.0	21.3	21.3	100.0(75)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37.9	26.3	24.5	11.4	100.0(560)	4.17(3)
필요하지 않음	36.7	24.2	22.5	16.7	100.0(240)	
북한 영유아 양양보건 지원 필요성						
필요함	38.6	26.9	23.2	11.2	100.0(616)	9.91(3)*
필요하지 않음	33.7	21.2	26.1	19.0	100.0(184)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성						
필요함	37.8	25.4	25.6	11.2	100.0(633)	11.26(3)*
필요하지 않음	36.5	26.3	17.4	19.8	100.0(167)	

주 ①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

②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

③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 전래동화 읽기(예: 흥부와 놀부)

④ 남북 유아들의 그림 교환하기

## 5. 소결

본 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조사에 응한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과, 응답자가 북한 및 통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성별, 학력, 연령, 월평균 가구 소득 등의 응답자 특성과, 북한과 통일, 대북지원 사업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개인의 사견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으며, 본 장의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남성이 54.8%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가 전체 27.5%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인천/경기 지역이 25.8%로 가장 많았고, 강원/제주 거주 비율은 전체 6.1%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대학 재학 포함)인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직업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각 31.5%와 30.6%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499만원인 경우가 전체 28.3%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4.5%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평소 북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 35.9%로 가장 많았다. 국제사회 동반자로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전체 33.4%였으며, 26.3%는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답했다. 특히 남성은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상당수는 북한을 국제 사회 동반자로 인식했다. 또한, 20대가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필요 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대학원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57.9%로 가장 높았으며, 화이트칼라가 44.9%, 가구 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경우가 43.9%로 가장 높았다. 연령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학생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가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통일 수준은, '자유로운 교류협력'이 38.5%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1국가 2체제, 1국가 1체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또한 9.4%로 조사되었다. 20대가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유사하게,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1국가 1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통일 수준이라고 답했다.

셋째, 남북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경제적 갈등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치적 이념, 사회/문화적 갈등, 언어적 갈등 순으로 높았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해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조사한 결과, 반공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이 한민족이며 평화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교육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40.4%였다. 특히, 반공교육을 받은 비율은 남성이 더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20대의 젊은 연령의 경우, 평화통일 교육을 받은 비율이 82.8%로 가장 높았으나, 반공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도 5.7%있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반공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배운 북한에 대한 내용과 본인이 지니게 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밀접한 관련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정도의 유아에게 평화 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가므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는 판단하기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또한 16.9%였다. 또한,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라고 인식하거나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유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10.1%있었다. 남성의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 20대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대학원 이상, 화이트칼라 직업군,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다. 또한, 북한을 같은 민족이나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1국가 1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통일 수준이라 생각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인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평화통일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46.3%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14.9%였다.

여섯째,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0대가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고, 대학생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거나, 1국가 1체제가 이상적인 통일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는지 질문한 결과, 총점 4점 기준의 평균 2.85점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20대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곱째,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사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부가 북한 근로자 자녀를 위한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지니는지 질문한 결과, 탁아소 설치가 우리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9%, 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6%였다.

이러한 탁아소 설치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44.1%로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또한 31.4%로 높았다. 특히,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인식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탁아소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지각했으며,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지각한 경우는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남북 유아들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 전래동화 읽기,'는 23.9%, '남북 유아들의 그림 교환하기'순으로 높았다.

## V.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육아지원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과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 및 개발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 경제개발협력 사업으로 크게 범주화하여 육아지원분야의 해당 사업에서 기존 추진했던 사업의 인지 여부, 실행가능성, 실행방안 등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에서는 2013년 연구조사 결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알아보았다.

###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53사례이다. 주로 각계의 북한 연구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북한의 영유아 지원 사업을 담당한 현장 전문가와 북한의 유치원 또는 탁아소 근무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자도 응답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64.2%) 여성보다(35.8%)보다 많으며, 소속기관은 대학이 32.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30.2% 순으로 많았다. 전공별로는 정치외교학과 북한학이 동일하게 1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학과 유아교육이 13.2%로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하고는 약 60%에 가까운 32명이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표 V-1-1〉 전문가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
전체		53	100.0
성별	남성	34	64.2
	여성	19	35.8
연령대	30대	4	7.5
	40대	18	34.0
	50대	24	45.3
	60대 이상	7	13.2

〈표 V-1-1〉 계속

		사례수(명)	%
소속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16	30.2
	대학(교)	17	32.1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연구소	7	13.2
	기타	13	24.5
전공	정치(외교)학	10	18.9
	사회학	1	1.9
	교육학	7	13.2
	유아교육	7	13.2
	아동학	2	3.8
	북한학	10	18.9
	행정학	3	5.7
	경제/경영학	7	13.2
	기타	6	11.3
북한방문경험	없음	15	28.3
	있음	32	60.4
	비해당(북한이탈주민)	6	11.3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2.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의견

### 가. 인지도

개발협력사업이란 일회성, 긴급성의 물품지원사업과 달리 북한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인도적 성격의 사업으로, 북한에 영양식 공장 설치, 병원현대화 지원, 제약공장 설치 등이 주요 사례라 하겠다.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와 같은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49.1%는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43.4%는 '대략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중이 92.5%에 달하였으며, '전혀 몰랐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하였다.

〈표 V-2-1〉 개발협력사업 인지도

				단위: %(명)
	잘 알고 있었다	대략 알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	계
전체	49.1	43.4	7.5	100.0

〈표 V-2-1〉 계속

	잘 알고 있었다	대략 알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	계
전공				
정치(외교)학	70.0	30.0	.0	100.0(10)
사회학	100.0	.0	.0	100.0( 1)
교육학	42.9	57.1	.0	100.0( 7)
유아교육	14.3	85.7	.0	100.0( 7)
아동학	50.0	.0	50.0	100.0( 2)
북한학	60.0	40.0	.0	100.0(10)
행정학	33.3	66.7	.0	100.0( 3)
경제/경영학	28.6	28.6	42.9	100.0( 7)
기타	66.7	33.3	.0	100.0( 6)
북한방문경험				
없음	26.7	66.7	6.7	100.0(15)
있음	68.8	25.0	6.3	100.0(32)
비해당(북한이탈주민)	.0	83.3	16.7	100.0( 6)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나. 찬반의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62.3%였고,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4%였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으며,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한 사례도 없었다.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3.58점(4점 만점)이다.

전공별로는 교육학과 유아교육 전공자들 중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100%(4.00점)와 85.7%(3.86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서 찬성의견이 더 많았으며, 북한이탈주민은 16.7%(3.33점)가 반대한다고 응답해서 모든 응답자 집단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V-2-2〉 개발협력사업 찬반 여부

	적극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계	평균
전체	62.3	34.0	3.8	100.0	3.58

단위: %(명), 점

〈표 V-2-2〉 계속

	적극 찬성	찬성 하는 편	반대 하는 편	계	평균
정치(외교)학	50.0	40.0	10.0	100.0(10)	3.40
사회학	0.0	100.0	0.0	100.0( 1)	3.00
교육학	100.0	0.0	0.0	100.0( 7)	4.00
유아교육	85.7	14.3	0.0	100.0( 7)	3.86
아동학	50.0	50.0	0.0	100.0( 2)	3.50
북한학	50.0	40.0	10.0	100.0(10)	3.40
행정학	33.3	66.7	0.0	100.0( 3)	3.33
경제/경영학	57.1	42.9	0.0	100.0( 7)	3.57
기타	66.7	33.3	0.0	100.0( 6)	3.67
북한방문 경험					
없음	60.0	33.3	6.7	100.0(15)	3.53
있음	65.6	34.4	0.0	100.0(32)	3.66
비해당(북한이탈주민)	50.0	33.3	16.7	100.0( 6)	3.33
개발협력사업인지도					
알고 있음	63.3	32.7	4.1	100.0(49)	3.59
전혀 모름	50.0	50.0	0.0	100.0 ( 4)	3.5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은 남북한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며, 그 밖에도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일회성 지원과 같은 단발성의 일시적 지원은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의 물적 토대 구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도적 지원사업이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라면 개발협력 사업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발협력 사업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북한의 개발협력사업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남북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공동 운영이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한된 조건 하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하며, 교류협력이 계속되면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상호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면서 평화통일을 이끌어 내는데 토대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지속적인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다 보면, 이는 통일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찬성하는 논리이다.

〈표 V-2-3〉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

의견
남북 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b>상호이익 창출가능</b> , 남북 간 소득격차해소를 통한 <b>통일비용 절감가능</b>
당장 그 효과를 측정할 방도는 없지만 물자와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b>북한주민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b>
통일을 전후하여 <b>상호이해</b> 와 교류협력을 통한 <b>신뢰강화</b> 를 위해
북한의 열악한 보육시설과 영아들의 신체적 발달, 심리적 안정,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므로 지금 체제 분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b>북한 영아들의 심각한 신체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래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되는 북한 영아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b>
비유를 하자면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은 물고기를 잡아서 준다면 개발협력 사업은 <b>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b> 이라 생각함
장기적으로 북한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b>남북한 격차를 줄여 남북 사회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b>
향후 미래통일한국을 구축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며, 남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임.
단기적 지원사업은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통일의 물적 토대 구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b>단순지원은 자존감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지만 개발 지원은 자존감을 높이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임</b>
1. 남북한 주민(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북한주민의 친한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 2. 통일을 대비한 교류협력사업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올 수 있는 방법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b>우리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b>
<b>남북격차를 줄이기 위하여</b>
남북이 서로를 알아 가는 제도적 요소로 남북통합의 주요축이 될 수 있다고 봄
<b>일회적인 지원의 원조 피로도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필요</b>
통일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는데 북한이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더라도 남북개발 협력을 통하여 개발을 유도한다면 간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됨

〈표 V-2-3〉 계속

의견
민주주의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적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방적인 개발지원이 아닌 공동운영과 같이 우리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함
개발협력사업은 남북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2개였는데, 개발협력 사업은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할 뿐이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견해와 북한을 개발하는 것이 남한의 이익으로 순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국력을 강화시켜 남한에 대한 위협과 압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보다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개발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V-2-4〉 개별협력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전문가 의견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만 당할 뿐, 그들의 대남전략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임
북한을 개발하는 것이 곧 남한의 이익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님. 북의 개발이 북한의 국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남한에 대한 위협과 압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개발협력보다는 시베리아가스관 부설과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개발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3. 2005년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 가. 인지도

2005년 정부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국가 장기 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자원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이라 해서 북한의 어린이 건강·의료를 위한 병원 지원사업, 영양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의 개발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개발협력 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대략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5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1.5%로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92.5%에 달하였다. 아동학, 북한학, 경제/경영학 전문가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일부 나왔으며 북한 경험이 없거나(93.3%) 북한이탈주민도 모른다는(16.7%)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표 V-3-1〉 개발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명)

	잘 알고 있음	대략 알고 있음	전혀 모름	계
전체	41.5	50.9	7.5	100.0(53)
전공				
정치(외교)학	40.0	60.0	0.0	100.0(10)
사회학	100.0	0.0	0.0	100.0( 1)
교육학	57.1	42.9	0.0	100.0( 7)
유아교육	14.3	85.7	0.0	100.0( 7)
아동학	50.0	0.0	50.0	100.0( 2)
북한학	50.0	0.0	50.0	100.0(10)
행정학	33.3	66.7	0.0	100.0( 3)
경제/경영학	14.3	57.1	28.6	100.0( 7)
기타	66.7	16.7	16.7	100.0( 6)
북한방문경험				
없음	26.7	66.7	93.3	100.0(15)
있음	56.3	37.5	6.3	100.0(32)
비해당(북한이탈주민)	0.0	83.3	16.7	100.0( 6)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나. 찬반의견

북한 영유아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00%였으며, 반대하는 응답은 한 사례도 없었다. 찬성하는 응답에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69.8%였고,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30.2%로 적극적 찬성이 2배 이상 많이 나왔다. 앞서 질문한 개발협력사업에 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개발협력사업은 3.58점이었다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3.7점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영유아라면 더 우호적이고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별로는 사회학, 교육학, 행정학은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적극적 찬성), 경제/경영학은 3.1점으로 가장 낮았다. 북한 방문경험 여부에 따른 응답은 점수가 비슷했다.

〈표 V-3-2〉 개발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 찬반 여부

단위: %(명), 점

	적극 찬성	찬성하는 편	계	평균
전체	69.8	30.2	100.0(53)	3.7
전공				
정치(외교)학	70.0	30.0	100.0(10)	3.7
사회학	100.0	.0	100.0( 1)	4.0
교육학	100.0	.0	100.0( 7)	4.0
유아교육	85.7	14.3	100.0( 7)	3.9
아동학	50.0	50.0	100.0( 2)	3.5
북한학	70.0	30.0	100.0(10)	3.7
행정학	100.0	.0	100.0( 3)	4.0
경제/경영학	14.3	85.7	100.0( 7)	3.1
기타	66.7	33.3	100.0( 6)	3.7
북한방문경험				
없음	60.0	40.0	100.0(15)	3.6
있음	75.0	25.0	100.0(32)	3.8
비해당(북한이탈주민)	66.7	33.3	100.0( 6)	3.7
영유아지원사업인지도				
알고 있음	75.5	24.5	100.0(49)	3.8
전혀 모름	.0	100.0	100.0( 4)	3.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은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 미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외에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 인권사항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견해도 많았다. 다른 최빈국은 지원하면서 같은 민족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북한 영유아의 건강·영양을 챙기는 것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미래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기’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영유아기는 적기에 맞춰 적절한 영양,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북한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북한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관계 등을 떠나 인류의 보

편타당한 기본인권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유아 지원사업 역시, 한반도의 안정화, 남북 관계의 신뢰구축, 통일 비용 감소 등에 기여하며 북한의 영유아도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인적자원으로 키우는 것은 필요하다는 면에서 찬성한다는 논리이다.

다만, 의료지원 형태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인지 영유아에 국한하거나 영유아만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으며, 그 밖에 기본적으로는 영유아지원 사업에 찬성하지만, 남한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본래 취지가 잘못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표 V-3-3〉 개별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 사업 찬성 의견

전문가 의견
어떤 경우에도 영유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b>기본인권의 수호</b>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일이기 때문에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는데 북한을 배제할 이유 없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대비하기 위해
통일 후 북한지역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
한반도 안정화, 남북관계 신뢰구축, 통일 등 정치 및 사회적으로 볼 때 미래의 이득이 된다고 봄
대한민국의 영유아보육법은 정말 영유아의 중심으로 잘 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영아들이 정권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b>영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재능을 키워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는데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봄</b>
북한 역시 저출산 사회이므로, 통일한국 대비 공동대처 필요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심신이 건강한 통일한국인, 저출산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강점이 있음
<b>영유아기 지원은 시기의 중요성이 있는 사업임.</b> 많은 연구에서도 보이듯이 영유아기 적기에 맞춰 영양,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몇 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됨. 그리고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 의료 공급이 되지 않은 피해는 성장 후 신체, 지능저하의 문제로도 이어져 통합시대 남북인력격차에까지 이를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 인도지원의 필요성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지원의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국가장기발전전략과 관련 통일국가시대를 대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영유아는 통일 한국의 중요구성원이므로 북한 영유아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은 대단히 중요
통일 이후 남북한유아교육 및 보육의 형평성과 화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미래 한국인 양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b>이념에 관계없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찬성</b>

〈표 V-3-3〉 계속

영유아지원은 개발협력의 범주라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봄. 따라서 찬성.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협력으로 보는 것은 영유아지원의 본질을 다소 왜곡하는 것으로 느껴짐.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민을 돕는 것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찬성하지만 **우리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그것은 개발지원사업의 본래 취지가 잘못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의료지원의 형태로 **북한주민전체에 대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봄**. 영유아에 국한하거나 영유아만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4.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2013년 개발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 가. 필요성과 이유

앞에서는 그동안 실시해 온 북한의 인도적 대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봤다면, 여기서는 영유아에 초점을 두고 질문한 결과이다. 먼저, 육아지원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1.7%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25.4%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전공별로는 경제/경영학이 평균 3.2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아동학이 3.50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보다 없는 전문가가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표 V-4-1〉 육아지원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필요성

단위: %(명), 점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계	평균
전체	71.7	26.4	1.9	100.0(53)	3.70
전공					
정치(외교)학	80.0	20.0	0.0	100.0(10)	3.80
사회학	100.0	0.0	0.0	100.0( 1)	4.00
교육학	85.7	14.3	0.0	100.0( 7)	3.86
유아교육	85.7	14.3	0.0	100.0( 7)	3.86

〈표 V-4-1〉 계속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계	평균
아동학	50.0	50.0	0.0	100.0( 2)	3.50
북한학	70.0	30.0	0.0	100.0(10)	3.70
행정학	100.0	0.0	0.0	100.0( 3)	4.00
경제/경영학	28.6	71.4	0.0	100.0( 7)	3.29
기타	66.7	16.7	16.5	100.0( 6)	3.50
북한방문경험					
없음	80.0	20.0	0.0	100.0(16)	3.80
있음	68.8	28.1	3.1	100.0(32)	3.66
비해당(탈북민)	66.7	33.3	0.0	100.0( 6)	3.67

주: 점수가 높을수록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아서 이를 다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적극적인 이유)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소극적인 이유)로 구분하였다. 먼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이유로는 인도적 지원, 영유아 사업의 중요성, 실현가능성, 동질성 회복,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형성을 위해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영유아들은 미래 통일 한국의 주역이고 한반도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교류협력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찬성한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비정치적 영역이란 점에서 남북이 대치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으므로(개성공단지구 사례처럼) 이를 담보하는 체도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통일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V-4-2〉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이유

내용
남과 북의 아이들이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상호이해증진과 통일준비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
<b>비군사적 비정치적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신뢰조성에 적절한 협력 의제</b>
통일 전 및 북한지역 체제전환 시기 등 혼란기에 북한 지역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이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과 유지

〈표 V-4-2〉 계속

내용
남북이 대치상황이라도 문화교류를 통한 화해와 공동연구는 상호이해와 공동의 노력으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b>군사적인 합의와 노력보다는 쉬운 통일의 길</b> 이라 생각됨.
현재 남북한은 분단 70년을 넘으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이질감이 심화되어 가는데, <b>아동기부터 교류를 통해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b> 하므로
남북이 함께 공동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영유아의 심신 안정 및 건강 관리를 통해 남북한 영유아사업교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음.
<b>사회문화적 동질성</b> 은 민족국가의 기본 전제이며 이러한 것에 대한 남북한의 이질성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서도 어차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b>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 찬성</b> 한다.
매우 필요하며, <b>실현가능성이 높다는데 장점</b> 이 있음.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b>사회문화적 격차 해소</b> 는 통일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임.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사업진행이 필요함.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 및 보육의 일원화를 위해
남북한에는 다 영유아가 있고, 양쪽 다 나름대로의 고유한 성공과 실패와 교훈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여 서로의 영유아보육실천에 적용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통일세대인 영유아들을 통한 교류 협력으로 남북 간의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면 함. 또한 북한의 봉쇄정책으로 세계적으로 보는 시야를 넓혀줘야 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소극적인 이유로 분류한 전문가 의견들이다. 적극적인 이유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내용 상 큰 차이는 없다.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유로는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은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감소할 수 있으며, 북한 사회내의 자본주의 확산으로 북한 주민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으므로 교류협력을 통해 더 빨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기 이전인 유아기부터 친구로 교류하는 경험은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표 V-4-3〉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한 소극적인 이유

내용
교류를 통한 남북 간 이해 증대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민족 통합을 위해서
<b>통일비용 감소</b> 를 위해서

<표 V-4-3> 계속

내용
육아관련 사업은 남북협력 사업 중 비교적 정치성이 낮기 때문에 초기 사업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영유아 관련 협력은 북측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b>북한에서도 한류열풍이 불면서 영화 드라마 음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경을 가지고 개방이 안 된 개혁적인 개인 삶을 꾸려가고 있음.</b>
한국이 이와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호응과 협조가 없다면 한국의 지원은 무의미해지기 때문.
통합, 교류는 머리로 이해하고 움직이기 보다는 <b>몸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b>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입견, 편견 등이 형성되기 전에 친구로서 만남의 과정을 갖는 것이 교류의 근본정신을 살릴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대상별 교류의 필요성, 시기 등에 남북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해당 분야의 남북한 격차를 통일 이전에 좁히고 통일 미래 세대를 위한.
민족의 동질성 확보
통일의 대상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대북지원을 하면 누군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의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의 이유를 보면, 교류협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응답한 결과이다. 통일 준비 과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표 V-4-4>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내용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당장의 실현가능성이 적어보여서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나. 추진 가능한 과제의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

다음 <표 V-4-5>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방안」(이윤진·구자연, 2013) 연구에서 제시한 총 10개의 추진과제이다.

〈표 V-4-5〉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한 추진과제들

①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⑥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②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⑦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작업
③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⑧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④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⑨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⑤ 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⑩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그리고 다음 〈표 V-4-6〉은 상기 10개 추진과제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알아본 결과이다.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4점 척도로 묻는 방식이었다.

〈표 V-4-6〉 남북 교류협력 시 추진과제별 중요성·실행가능성 순위별

중요성	순위	실행가능성
남북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1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	2	남북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3	어린이날 공동행사 개최
교육·보육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4	원장·교사 상호방문
원장·교사 상호방문	5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6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어린이 공동 행사 개최	7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
육아박람회 공동 개최	8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유아들의 상호방문	9	남북 공동수업계획안 개발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10	유아들의 상호방문

자료: 이윤진·구자연(2013).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육아정책연구소)조사 결과임.

본 연구에서는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서 2013년 연구결과에서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높게 나온 과제, 중요성은 낮지만 실행가능성은 높게 나온 과제, 중요성은 높지만 실행가능성이 낮게 나온 과제로 구분해서 각각을 대표하는 1개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낮게 나온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이유를 파악해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남북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실행방안

2013년 조사결과에서 중요성 1순위, 실행가능성 2순위로 나온 ‘남북 민·관 단



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의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경우는 제3국 기관(예: 일본 JVC)과 연대하여 간접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는 방식을 취하여 교류를 중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중국도 남북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과 함께 영유아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남북 간 직접 접촉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유사 단체들 간의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하고 '신뢰성 높은' 민간단체와 정부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가칭: 남북 유아 교육·보육협의회, 남북한 영유아 교류 협력 위원회 등). 이 때 협의체의 성격은 선민후관(정부는 적정 기준에 따른 자금지원에 주력)이어야 하며 공식채널 외의 비공식 채널 가동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북한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민간단체, 예컨대, 남북한 적십자사, 남한의 북민협과 북한의 민화협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6·15공동행사 추진위원회와 같이 기존 협의체의 구성방법과 운영방법을 참조하는 것도 실천가능한 방안이라 하겠다. 협의체 구성은 영유아 지원사업단체 및 보육기관·유치원 종사자, 정부부처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포함하며 남북의 민관대표 양측 동수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체제 속에서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유초연계 등 세부 실무분과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상의 서술한 내용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 간의 믿음과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표 V-4-7〉 남북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행방안

전문가 의견
<p><b>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건과 방법을 사전에 규정하고 추진하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교류협력 방식을 참고로 하되, 유연하게 조직과 방법, 절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b></p>
<p>남북관계에 있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 간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당국 간 신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교류협력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정례화 되었을 때 육아 관련 단체의 교류도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남북 당국간 신뢰가 조성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다양한 수준의 접촉 시도를 해야 하겠다. 우선은 제 3국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북쪽 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p>

〈표 V-47〉 계속

전문가 의견

대한민국의 정체성 범위 안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협의체를 만들게 될 것임. 민간중심으로하되 정부(관)은 후방 지원하는 구조로 해야 할 것임. 북한과 공식, 비공식 사전 접촉을 해야 실제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임.

**어린이집과 탁아소를 운영하는 교사, 원장 등 책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제안과 실무 협의를 어린이에게 급식 및 의료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상호교류의 정례화-지자체 혹은 관련 단체간 자매결연체 결과 상호교차방문- 상호 협의체 구성(남한은 반관반민 형태의 **가칭 남북한 영유아 교류 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단편적인 행사와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국민의 여론과 합일체가 되어 토론회와 실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남북적십자가 중심이 되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의체 구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이전에 남북협력행사를 진행해 왔던 방식, 예를 들면 **6.15공동행사 추진위원회 구성방법과 절차를 참고하는 방법**

남북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방법과 절차는 단계적으로 장기성을 띄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믿음과 투명성의 원칙하에 상호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협의체를 구성하는 행사보다 **사람과 사람이 상호 방문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하지 협의체부터 구성한다면 자리 싸움이나 이념 싸움이 일어날 것임으로 먼저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임.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NGO,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가능**

남북의 민간단체는 영유아 지원사업단체 및 보육기관·유치원 종사자, 정부부처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협의체 구성은 위의 **민관대표양측동수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체제 속에서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유초연계 등 세부실무분과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청됨.**

민관의 범위는 연령과 직업을 유목화하여 다양한 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연령층을 고려하되, 민관이 통합체계를 갖추고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임.** 구성절차는 민관이 동등한 주관체제를 형성하여 틀을 잡고, 일원화 방향으로 국가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볼 때 남북 민관상호교류까지는 무리일 듯하고 중국의 어린이 교육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중간에 두고 **남, 북, 중국의 어린이 보육정책, 어린이 관련하여 3국이 모두 자신들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제 3국 학술회의 정도를 일단 시작하고, 학술회의를 계기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공동과제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됨**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 등 관련 단체와 **간접접촉 또는 제 3국에서의 직접접촉을 통한 만남을 통해 영유아 교육 관련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접점을 찾고, 그 이후에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표 V-47〉 계속

전문가 의견
남북 유사기관 간 <b>양해각서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먼저 추진하고</b> 장기적인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b>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적절한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에 집중</b>
1.기본적으로 관은 후방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서 <b>민관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민간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함</b> 2.민간중심으로 할 때는 관련분야의 학계와 실무종사자 대북지원민간단체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되 <b>10여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b> 생각됨 3.북측도 이와 동등하게 구성하여 관계당사자들의 구성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공동세미나를 다양한 분야별로 실시하여 영유아지원의 효과적인 분야와 방법을 설정하여 실행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민관의 범위: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구조로서 관은 실무책임자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 즉, <b>남북 민간기관 간에 안정적인 교류를, 정부차원에서는 법규의 준수 등 실무적 관리 및 자문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적합함. 따라서 관은 과장급 정도가 적당. 민간기관은 단체장이 참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민간주도로 함으로써 정치적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b>
1. 남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event: 현재 남한 내 통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Snowballing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소수 단체가 이끌어 가는 것은 전국민의 통일적 의지 형성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함. 2.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b>세계 다른 나라들의 협의체 구성에 편입: 한국의 통일은 단순히 국내의 문제가 아님.. 이것은 동북아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관련이 있는 아젠다임.</b>
남북공통의 주제를 선정하여 공동의 연구 진행 학자, 교원 등이 참여하는 남북유아교육보육협의회 설치
우선 순위가 높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많다. 한가지만 부연한다면 남한에는 민간단체가 있지만 <b>북한에는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b> 통전부의 단일문 앞에 마치 여러 개의 민간대화창구가 존재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북한에서 진정한 민간단체가 나올 때 까지 민간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하지만 남북한의 육아기관들은 단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서로 상호왕래를 자주 하여 경험을 교환하고 유대를 긴밀히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다.
남북간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북 양측의 파트너가 만나서 구성절차와 방법을 협의(남측의 대표적인 파트너는 북민협/ 북측은 민경련이나 민화협)
우선적으로 북측의 유아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교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등)들의 TF팀 구성이 되어야 하며, 현재 북의 유아교육을 명확히 확인하고 북측 전문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중요도는 높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사업이라고 판단한다.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기간에도 그러한 성격의 협의체가 구성된 사례는 없다. <b>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우리 측에서 구성 목표에 대한 합의가 확실해야 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b> 또한 개발협력 등 구체성이 있으면서 북측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주도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음.
사회문화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수립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2) '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실행방안

'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는 2013년 조사 결과에서 중요성은 낮지만(4순위) 실행가능성(1순위)은 가장 높게 나온 추진과제였다. 전문가 대상으로 남북이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를 하게 되는 경우 학술세미나 주제를 2개 이상 작성하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했는데, 교류협력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통합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남북 현재 제도나 실태가 적절한 것이다. 즉, 육아지원분야에서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를 상호 인지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맞는 주제로는 남북한 육아지원 관련 제도나 정책의 비교, 영유아의 놀이문화, 남북한 영유아 발달과 교육 사례, 남북한 교육·보육교사 양성제도 등이 적절할 수 있으며 개최 방식은 중국 또는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로는 '교육·보육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 등이 적절하겠다. 또, 남북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학술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유아교육 정보화와 창의성 교육, 아동권리,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남북 영유아 정책 발전방안 등이 그 예라 하겠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학술세미나가 정례화가 되면, 남북 간의 이질적인 영유아 문화(예: 언어)의 격차 줄이기, 남북 영유아의 발달 격차 줄이기 등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후 점차 육아지원분야의 통합을 위한 주제를 교사, 교육과정, 비용, 법령, 운영체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민감한 주제들을 세미나 의제로 선정한다.

〈표 V-4-8〉 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시 실행가능한 주제

전문가 의견
남북 어린이의 <b>이질감을 줄이기</b> 위한 방법 연구, 남북 <b>놀이문화 교류</b> 를 통한 문화적 융합방안 마련
남북한 <b>아동권리</b>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남북한 분야별 여성 전문가 양성 검토 방안
남북한 육아 지원 시스템 비교, 통일후 육아시스템 통합 방향
- 육아 건강과 한반도 미래 - 남북한 육아 연구의 방향과 과제
1.남북 어린이 교육/보육 목표 2.보육교사의 자질 육성 방안
1. 남북아동의 민속놀이 문화 2. 교육, 보육전문가 활동현장에서의 역할 3. 아동기 통일교육방안 교재 연구

〈표 V-48〉 계속

전문가 의견	
1. 남북한 교육보육 통합방안	2. 남한과 북한의 유아교육·보육현황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와 교육정보화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방법	
<b>1) 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 위한 남북한 유아교육 및 보육발전방안 2) 미래 통일한국의 발전기반으로서의 보육, 유아교육의 구축 전략</b>	
정책의 상당 부분이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선은 남북한 영유아에 대한 통계 및 조사를 위한 학술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유아에 대한 교육에 있어 용어 통일 등에 대한 학술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통일 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 부문의 역할과 과제	2. 남북한 영유아 인성 분야 관련 학술대회
<b>-영유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b>	
남북 보육정책과 보육기관 비교연구 유아발달과 보육교육 및 유치원교육 등	
1. 통일시대를 대비한 아동교육의 모델	2.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교육
남북의 보육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교육적 태도 비교 분석, 남북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태도 비교 분석	
1. 교육보육 분야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2. 남북한 교육, 보육제도와 정책 비교 학술대회
북측 무상교육의 이해 및 남측의 교육정책이 현재에 이르는 과정 이해, 통일을 위한 공동 아동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1. 교육, 보육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	2. 아동교육과 ICT의 결합 방안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학술대회" "영유아 인지발달을 위한 산업협력 학술대회"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3)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 실행방안

이 추진과제는 중요성은 2순위로 높지만 실행가능성은 7순위로 매우 낮았다.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의 격차가 큰 추진과제로서 실행방안 모색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 수, 재원아 수, 교원 수 등 일반적인 통계 자료 수집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실사, 곡해된 자료라 하더라도)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북한의 통계자료를 산출뿐 아니라 수집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북한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북한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육아지원분

야와 관련된 항목을 조사에 넣어서 실시하는 것이다. 어떠한 항목을 넣을 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전문가 협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관련 통계 자료 수집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남한의 관련 통계 자료도 제공해서 상대방의 관련 통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의견으로는 최근 북한 학자도 SCI 등재 논문이 필요하므로 연구차원에서 남북, 또는 중국과 공동으로 통계 산출을 제안한 것이다.

〈표 V-4-9〉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실행방안

전문가 의견
이 분야는 참 어려운 부분임.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측면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음. 다만 유엔 FPA에서 북한에서 인구 센서스를 진행하고 통계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부분 우리 정부에서 함), 정부 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도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유엔연구기금을 통한 북한 내 통계 전문가 배출 및 양성 교육
<b>북한의 통계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b> 그들은 이것들을 대외비로 취급한다. 얼마간의 데이터라도 구하려면 국제기구를 통해 하는 수 밖에 없다.
남북한 관련 정보의 교환 사업 공동 통계 작성을 위한 실무자 워크샵
통계자료에 대한 상호교류는 직접 접촉의 범위와 폭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은 높지만 <b>북한이 정보공개할 어디까지 허용하려는지 의지가 중요하다</b>
관련 예산 확보, 남북한 관련 주체(단체 혹은 기구) 선정, 상호 사전 방문 및 협의체 구성
국제기구 통계 조사 및 자료 축적
통계청/교육개발원/육아정책연구원 협력하여 통계 구축
<b>남북의 용어정의, 교·보육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함</b>
교육, 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은 북한의 시스템 상 어떤 노력보다도 공동적으로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b>국제기구를 통한 실태조사(지원사업 병행) 및 분석에 참여하는 방법</b>
우선 북한의 통계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전략을 실천함으로써 교육 및 보육 공동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 이후 매년 남북합동연구팀이 공동으로 통계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널리 보급 활용한다.
북한에 대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공지하여 교육 및 보육 통계자료 수집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치를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최근 북한학자들도 sci등재 등에 관심이 높다고 하니 통계자료를 산출한다할 때 남, 북, 중 공동연구를 통한 학술지 등재라는 접근으로 통계치를 끌어낼 수도 있을 듯함
소규모 조직 단위로 통계자료를 산출토록 하여 전체적인 경향(trend)를 파악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전국단위 조사는 북한정부의 조작 가능성이 많으니까.
<b>북한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함</b>

〈표 V-49〉 계속

전문가 의견
1. 남쪽의 통계는 각종 통계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2 북측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분야를 선정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각종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인 통계자료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됨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인구조사 등에 관련 통계조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천됨
남북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들을 바탕으로 기능적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체계 비교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산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
남북통계산출 TF구성 통계지표의 공동 개발 통계자료 산출 공동자료의 DB화
북한은 통계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또 내놓는다 하여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b>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b>
북측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항 중 하나가 통계의 공개이고 통계조사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분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에 관한 통계는 UNICEF 등 UN 기구를 통하여 영양, 보건, 의료 분야에 제한되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어떤 사항의 통계를 산출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할 것이며, 우리 측 자료도 북측과 공유할 것인가 등 사전 검토가 면밀해야 할 것이다.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4)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 개발·실시’ 실행방안

중요성은 3순위로 높지만 실행가능성은 8순위로 매우 낮게 나온 추진과제이다. 남북한이 통일, 평화교육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통일, 평화의 개념이 탈맥락적인 ‘순수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남북이 수용가능한 개념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 역시 전제 조건은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다.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도 많이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 공통된 통일, 평화교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이견이 없는 독도의 주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상호 간의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남북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내용,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비무장 지대(DMZ)에 ‘평화교류센터’

나 어린이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체험학습하는 방법도 향후 평화통일교육을 논의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과제로는 유아기부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하지 않기, 평화통일이란 용어 대신 민족화합 등의 순화적인 용어로 대체하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관련 항목에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집행하기 등이 제시되었다.

〈표 V-4-10〉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 개발·실시를 위한 실행방안

전문가 의견
남측 기준의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북측이 수용가능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함. <b>북측과 남측의 통일교육 관련 공통부분을 검토</b> 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교육은 이념적 요소가 들어간다. 다른 체제로서 <b>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체제유지 목적의 통일과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기 힘들</b> 것이다.
남북한 통일교육 비교 공동 학술회의 개최 통일대비 평화교육 교재 개발
이 분야는 실행가능성에 두 단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서 어렵다고 판단된다. <b>통일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에 남북한이 동의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것보다는 전 단계로 독도에 대한 주권문제와 같이 남북한의 이견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b> 것이다
남북공동의 통일교육 개발 실시는 <b>현 단계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 모두 낮다고 봄</b> . 통일교육은 일단 우리 아동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한 후 북한 아동에 대한 이해 등으로 확대해가면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구축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내용 및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중국을 통한 남북한 교류확대 및 DMZ에 평화교류센터 설치
우선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평화통일의 시급성, 당위성 교육이 시급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실행해야 함.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b>정치적인 발언이나 체제비호를 줄이고 어린이 심리에 맞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남북의 만화영화나 언어, 음식,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b> .
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개발은 <b>경쟁과 싸움을 격화시킬 수 있음으로 남북이 서로 자국의 현황을 알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b> 듯함. 각자가 자국의 자랑거리를 발표하다 보면 비교 분석 가능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개선 및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임.
<b>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존의 교재, 교구 사용하지 않기</b>
통일이라는 주제가 북한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일 듯. <b>평화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민족의 화합이라는 등 보다 순화된 용어를 통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b> .
현재는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다 <b>안보교육중심의 남측평화통일교육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한다</b> . 성인의 경우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유아의 경우 북한을, 북한 친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첫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b>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시각에 대한 평가부터 할 필요가 있겠다</b> .



〈표 V-4-10〉 계속

전문가 의견
우리는 "한민족 통일"을, 북한은 "김일성 민족 통일"을 추구하고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유아, 아동들에게 그냥 "통일"을 주제로 한 동요나 노래를 만들어 함께 부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음.
1.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남북 의견 차이 극복을 위한 회의, 학술회의 등 개최 2. 평화통일교육안 마련 및 보완
학계의 공동연구가 필요함. 3국을 통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 중국, 북한 연계, 또는 3국가의 대학간 교류 등 방식 다양화)
1. 가장 손쉬운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됨 2. 남북어린이들이 직 간접으로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함으로써 모델이 개발 되면 그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됨 3. 비무장지대에 어린이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어린이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
<b>남북 간 '평화'에 대한 인식과 개념 비교</b>
통일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기 전에는 실행되기 어려울 것임. 통일을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을 것임.
공동의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질감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상호 이해는 공통의 주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도별 지방 문화의 특색의 과거와 현재" 등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보는 방식도 하나의 방안. 여기서 도별 지방문화로 접근하길 원하는 이유는 남북간 공통과 차이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역별 문화의 공통과 차이로 접근함으로써 이분법을 넘어선 한반도 문화 이해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평화통일이란 단어를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 중지되고,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의 의지가 사그러졌을 때 논의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평화통일을 자신들의 전략에 도용한다.
남과 북은 체제와 운영방식이 완전히 다름. 평화, 통일, 교육 자체의 개념도 다를 것임. 남과 북이 공히 합의할 수 있는 개념 도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지극히 정치적 주제로서 남북이 공감하는 평화통일방안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양측 교사들이 어떤 방향의 통일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겠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교재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덜 정치적인 주제, 예를 들면 한민족의 전통, 남북한 지리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집행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예산지출을 의무화함. 국제적 연대를 통한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5) '유아들의 상호방문' 실행방안

이 추진과제는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9순위로 낮게 나온 과제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실행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유아발달 특성상 효과도 없으며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실행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다.

실행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남한과 전혀 다른 사상 및 남한과의 비교를 우려하는 북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성인 간의 교류도 안 되고 있는데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현실성이 매우 낮으며 설사, 추진하더라도 유아들의 안전, 보호 상의 문제로 지극히 회의적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유아상호방문은 어른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성인만의 상호방문 과정과는 달리, 더 번거로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인(교사, 부모)의 교류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유아 상호방문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류협력단계에서도 최종 단계에서나 추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유아기보다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령기 아동이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V-4-11〉 남북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낮게 나온 이유

전문가 의견
유아들의 방문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b>인지능력과 사고판단 능력이 부족한 유아 대상으로 상호방문을 통한 평화통일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b> 이 항목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이 모두 낮게 나온 것도 결국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b>유아들의 상호방문은 북측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할 것</b> 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대체제에 대한 불신, 유아들의 건강 포함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부분도 북한 당국자들이 주민통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다만 <b>소수의 인솔책임자가 정치적 인식이 낮은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당기 교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b> 보인다.
-유아들의 인지수준의 미발달로 인하여 효과미흡- <b>부모들의 교류 협력이 우선</b>
남북 성년간의 상호방문이 어려운 단계에서 <b>보호와 안전이 가장 제일 먼저 요구되는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어려운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b> 라고 봄
유아들의 특성상 상호방문을 통한 상호이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보호자 동반 등의 다양한 요구 충족이 실행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판단
흔히들 머리가 커지면 이해와 교육이 어렵고 <b>북한의 사회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직 덜된 육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적이라</b> 생각됨
유아들의 상호방문 문제도 지금 북한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교육의 특성상 남한의 어린이들이 방문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를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유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면이 있을 것이고 각국의 이념이 다르므로 어린이들의 정신무장해제 같은 부분을 걱정했을 수도 있음. 영유아들을 여행시키려면 반드시 어른이 동행해야 하므로 많은 번거로움이 있음.
유아는 아직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부수 조건이 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성숙하지 못한 심신 조건에서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표 V-411〉 계속

전문가 의견
어릴적 교육이 성인기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과 상호간에 협의점에 도달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현이 된 다 해도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일회성 방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불가능함. 북한이 잘 사는 남한 사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음.
유아들보다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이 적합함.
남북간 교류를 성인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더욱 중요한 것은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염두해 둔 결과일 수도 있음. 유아들의 상호방문 보다는 학령기 아동 간 상호방문이 현실적으로 보임.
가장 어려운 주제라 생각합니다. 교류협력 최종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북을 방문하여 교류한 사례가 있다. 일본 민간단체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방문은 2000년대 초기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고, 교류의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남북 양측의 어른들이 아동의 만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념이나 사상의 차이로 북측 관리자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고 이념과 사상이 남한과 달라서 상호방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다. 남북 유아의 공통 활동 경험에 대한 의견

남북 유아들의 직접적인 접촉은 많은 전문가들이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북 유아들이 공통된 경험을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4개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과제로는 ‘남북 유아의 공통의 동요 부르기’가 3.66점으로 꼽혔으며 가장 낮은 과제는 ‘남북 유아가 공동 식단표로 급간식하기’가 2.57점으로 꼽혔다. 남북 유아 공동 전래동화 읽기는 3.57점, 상호 그림 교환하기는 3.08점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표 V-4-12〉 남북 유아의 공동 경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의 필요성 정도

단위: 점, %(명)

	전혀 필요 하지 않음	거의 필요 하지 않음	다소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계	평균
남북 유아 그림 교환하기	9.4	9.4	46.3	35.9	100.0(53)	3.08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간식하기	24.5	20.8	28.3	26.4	100.0(53)	2.57
남북 유아 공통의 전래동화 읽기	1.9	1.9	34.0	62.3	100.0(53)	3.57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 부르기	1.9	1.9	24.5	96.2	100.0(53)	3.66

주: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들 4개 과제의 실행가능성은 필요성에 비해 낮게 나왔다.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필요성에서 가장 낮았던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간식하기'는 실행가능성에서도 가장 낮게 나왔다. 전래동화 읽기가 실행가능성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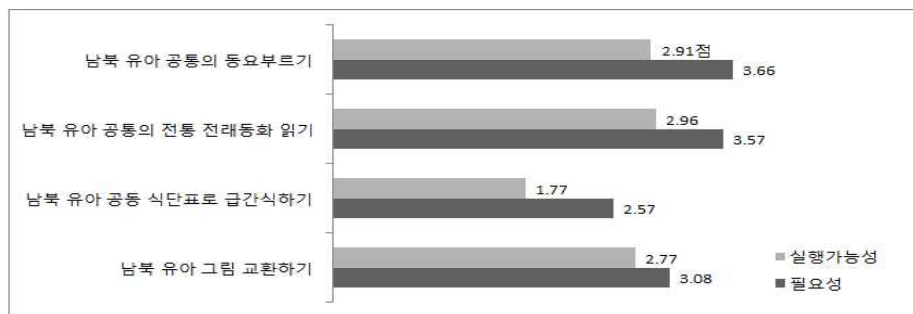
〈표 V-4-13〉 남북 유아의 공동 경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의 실행가능성 정도

단위: 점, %(명)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계	평균
남북 유아 그림 교환하기	13.2	24.5	34.0	28.3	100.0(53)	2.77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간식하기	58.5	18.9	9.4	22.6	100.0(53)	1.77
남북 유아 공통의 전래동화 읽기	5.7	26.4	34.0	34.0	100.0(53)	2.96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 부르기	7.5	26.4	34.0	32.1	100.0(53)	2.91

주: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V-4-1] 남북 유아의 공동 경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의 필요성·실행가능성 비교

남북 유아들이 상호 경험할 수 있는 그 밖의 추진과제로 '유아교육 교재 및 기자재 지원' '상호 실현가능한 경연대회'(예: 노래, 무용 등), '금강산에서 남북 어린이 가을 운동회 또는 미술대회 개최하기' '교재·교구, 기자재 지원' '남북 육아지원기관의 교원 공동연수 및 공동연구' '남북 부모 한마음 대회' 등을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제안하였다.

〈표 V-4-14〉 기타 추진 가능 과제 제안

전문가 의견
<b>유아교육 교재 및 기자재 지원</b>
상호 실현 가능한 <b>경연대회, 글짓기 등</b>
남북한 어린이 장기 노래자랑 대회, 남북교사들 통일 준비 교구 만들기 개최
남북 어린이 음악/미술 및 체육대회 등 <b>예술문화행사 개최</b>
전통 놀이문화 복원(예:명절의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고무줄 놀이 등)
우리나라의 꽃, 우리나라의 명절, 우리나라의 강과 산, 우리나라의 동물, 우리가 먹는 음식 종류 와 같이 생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을 영유아들의 그림이나 글로 받아 서로 전시할 것을 제안
남북 유아교육 및 보육전문가 간의 공동교원연수 및 공동연구 추진
남북공동의 유아역사교육 개발 및 실시
영유아 예체능 관련 교류
유아 통일 노래(동요) 공모, 상대방이 만든 노래의 보급. <b>공동행사는 거의 불가능함</b>
모든 남북교류는 낮은단계의 상호교류부터 시작해야하며, 남북의 차이가 큰경우는 실질적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큼. 10가지 추진과제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b>미술대회와 같이 남북 격차와 무관하게 남북이 부담이 없이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b>
<b>금강산에서 남북어린이 가을 운동회 하기</b>
<b>공동 환경보호 활동</b>
<b>남북 유아 부모 한마음 대회:</b> 모든 유아들의 부모는 유사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육아관련 상호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함. 이는 남북 부모 간 마음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유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남북한 명승지 함께 여행하기
<b>개성공단 내 육아시설 설치 노력</b> 남북한 유아 담당 교사 교환 행사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5. 교류협력 거점으로서의 탁아소 설립에 대한 의견

관련 법률에 의하면,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이란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투

자하여 남북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북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1)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를 하거나 2)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4)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외의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현재 개성공단지구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유일한 사례이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부침 속에서 다른 사업들은 중단되었지만,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이다. 개성공단지구 내에 개성택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택아소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 시, 공단 안에 택아소는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란 점에서 남북 경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공단 지구 내에 필수 부대시설로서 택아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알아보았다.

## 가. 타당성

남북 경제협력사업인 공단 안에 택아소를 설치하고 이를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본 연구진의 제안에 98.7%의 전문가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이 타당한 편이다 의견보다 많이 나와서 적극적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전공별로는 아동학이 2.50점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북한 방문이 있는 경우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북한이탈주민은 2.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표 V-5-1〉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택아소 제안 의견에 대한 타당성

단위: %(명), 점

	매우 타당함	타당한 편임	타당하지 않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	계	평균
전체	62.3	36.4	3.8	7.5	100.0(53)	3.43
전공						
정치(외교)학	70.0	20.0	10.0	10.0	100.0(10)	3.60
사회학	100.0	0.0	0.0	0.0	100.0( 1)	4.00
교육학	85.7	14.3	0.0	0.0	100.0( 7)	3.86

〈표 V-5-1〉 계속

	매우 타당함	타당한 편입	타당 하지않음	전혀 타당 하지않음	계	평균
유아교육	71.4	14.3	0.0	14.3	100.0( 7)	3.43
아동학	50.0	0.0	0.0	50.0	100.0( 2)	2.50
북한학	50.0	40.0	0.0	10.0	100.0(10)	3.30
행정학	66.7	33.3	0.0	0.0	100.0( 3)	3.67
경제/경영학	42.9	28.6	14.3	14.3	100.0( 7)	3.00
기타	50.0	50.0	0.0	0.0	100.0( 6)	3.50
북한방문경험						
없음	60.0	26.7	6.7	6.7	100.0(16)	3.40
있음	68.8	28.1	3.1	0.0	100.0(32)	3.66
비해당(탈북민)	33.3	16.7	0.0	50.0	100.0( 6)	2.33

주: 점수가 높을수록 타당하다는 것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 제안이 타당한 이유로는 북한 여성 근로자에게 필요하고, 탁아소를 통해 의약품, 용품, 식품 등을 공급하게 되면 북한 영유아의 건강·영양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탁아소가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도 많이 나왔다. 요컨대, 남북 경험 내에 탁아소 설치는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생산력 향상뿐 아니라, 남북의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V-5-2〉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 제안이 타당한 이유

의견
(탁아소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약품, 용품 등)이 가능하므로 영유아의 발육상태가 좋음.
현재 공단에서 일하는 북쪽 노동자들 중 여성이 더 많음. 이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탁아소가 필요함.
기혼여성의 공단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북한이 수용할 지는 의문이지만 남북 통합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의의가 있고, <b>경협</b> 의 부대시설로서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있으며, <b>향후 육아 관련 교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b>
탁아소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일부에 해당되고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요하므로
여성 인력 활용에 필수이자 일 가정 양립에 필수

〈표 V-5-2〉 계속

## 의견

근로와 육아의 문제를 해소해준다는 기능적 복지 외에 남한 육아시설과 보호, 양육 방침의 절대적 우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아이 양육을 통한 부모들의 대남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매개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임**

탁아소 설립은 북측 근로자의 노동효율을 향상시켜 남북 양자 간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이념을 떠나 북한 현실을 감안할 때 탁아소 설치를 남한과 동등하게 추진한다면 **주민 인식 변화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봄.**

공단 내 탁아소의 설치는 북측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 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육아문제 해결은 지원해야 하므로

어른들의 근로자 시설과 다르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적게 반영됨. 설치된다 해도 북한에서 체제선동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순조롭게 설치되리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이 성공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영유아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면 자랄 수 있게 필요함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시도

북한의 공단 근로자들의 육아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 그리고 북한 영유아의 건강 관리 및 영양보급 등에 유용하기 때문임.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은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의 공영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이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은 엄마의 건강, 위생상태와 무관하지않음. **개성공단의 경우 여성근로자들의 다른 지역대상에 비해 건강, 위생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원효과의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육시설은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하므로.

북한 근로자의 복지향상, 통일 준비

개성공단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필요함.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탁아 시설이 필요함

남북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개발협력사업이 경제적 이득이 화폐로 나타나는 것만을 한정지을 수 없음

여성근로자들의 근로를 위한 탁아소이므로 경제협력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사료되며 운영에 관련 비용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하게 하여 사내 탁아소처럼 운영케 하면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탁아의 질적인 조건도 향상할 수 있을 것임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 노동생산성이 증가

개성공단 근로자 복지 혜택 부여

개성공단 등은 여성노동자가 많은 만큼 공단내 탁아소는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

**탁아소에서 경험에 대한 작은 시작이 가능하므로**



〈표 V-5-2〉 계속

의견
<p><b>장기적으로 한민족 구성원 양성에 필요하고, 동족의식 계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b>                      북한 개성공단 여성분들이 매우 좋아할 것임. 북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육아시스템, 유아교육을 자연스럽게 북한에 보여줄 수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국민에게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대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경제협력은 물론 사회문화협력에도 유용한 사업임.                      탁아소는 정상적 근무를 위한 필수시설임.                      공단 안에 근로자를 배려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때문에  <b>북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아동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고 실현성도 높은 편</b>  <b>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직장과 숙소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b></p>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북한의 탁아소는 사상교육이 시작되는 기관이란 점에서 남한 기업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안의 탁아소를 교류협력의 거점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탁아소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가 양성교육의 출발이기 때문에 북한 어린이를 남한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북측에서도 북한 각 지에 남북 공동의 탁아소가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V-5-3〉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 제안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의견
<p>지금 남북한 국민들의 이익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도 북한이 태클을 걸고 맘대로 하고 있는데 북한의 탁아소나 유치원은 혁명의 씨앗을 키워내는 거점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인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북한 유아를 남한 단체에서 돌보는 것은 비현실적임                      영유아 교육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의 역할과 공산주의의 핵심 기능인 바, 이를 제3국에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개성공단은 접경지역으로 특이 사례임. 북한 당국이 전국 각지에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남한에 의한 탁아소 운영 및 그 확장에 찬성하지 않을 것임.</p>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나. 남북 공동 탁아소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찬반 이유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북한 내에 공업지구가 늘어나면, 남북이 공동으로 공업지구 안에 탁아소를 설치하여 탁아소 건물 설계부터 운영까지 같이 하는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56.6%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남북 공동 탁아소 설립이란 공업지구 안의 탁아소는 설계와 운영을 남북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全) 과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 방문 경험이 없는 전문가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평균 점수도 3.53점으로 높게 나왔다.

앞서 질문한 탁아소를 앞으로 남북 경제지구 안에 필수 부대시설로 설치 제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식한 전문가 집단에서 실제 공동 설치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한 전문가 집단에서도 남북 공동으로 탁아소 설치, 운영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50% 나왔다.

〈표 V-5-4〉 남북 공동 공업지구 내에 탁아소 공동 설치에 대한 찬반 이유

단위: 점, %(명)

	적극 찬성함	찬성한 편임	반대하는 편임	매우 반대함	계	평균
전체	56.6	6.4	15.1	1.9	100.0(53)	3.38
전공						
정치(외교)학	60.0	20.0	10.0	10.0	100.0(10)	3.30
사회학	100.0	0.0	0.0	0.0	100.0( 1)	4.00
교육학	57.1	28.6	14.3	0.0	100.0( 7)	3.40
유아교육	57.1	14.3	28.6	0.0	100.0( 7)	3.39
아동학	100.0	0.0	0.0	0.0	100.0( 2)	4.00
북한학	60.0	30.0	10.0	0.0	100.0(10)	3.50
행정학	66.7	33.3	0.0	0.0	100.0( 3)	3.67
경제/경영학	26.6	42.9	28.6	0.0	100.0( 7)	3.00
기타	50.0	33.3	16.7	0.0	100.0( 6)	3.33
북한방문경험						
없음	66.7	20.0	13.3	0.0	100.0(16)	3.53
있음	53.1	31.3	12.5	3.1	100.0(32)	3.34
비해당(탈북민)	50.0	16.7	33.3	0.0	100.0( 6)	3.17
탁아소 필수시설 타당성						
타당함	57.4	29.8	13.3	0.0	100.0(47)	3.45
타당하지 않음	50.0	0.0	33.3	16.7	100.0( 6)	2.83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공단 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탁아소를 설치, 운영을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앞서 탁아소 공동 설치의 타당성에 찬성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탁아소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모성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북한 영유아를 지원하다보면, 북한 주민들과 접촉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교류협력의 지점이 확산될 수 있고, 교류협력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남북 통합 육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고 결국, 통일 준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찬성하는 이유로 꼽았다.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당위론적 찬성의견도 나왔다.

〈표 V-5-5〉 남북 공동 공업지구 내에 탁아소 공동 설치·운영에 대한 찬성 이유

전문가 의견
남북 간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b>육아 기법 등을 공유하며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b> 또한, 영양상태 등의 차이로 인해서 통일 이후의 북측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요.
<b>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접촉 기회 증대</b>
<b>향후 통합육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및 경험 축적</b>
북한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개원 및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과 양육의 문제를 첫 단계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 나갈 뿐만 아니라 북한 영유아에 대한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
탁아소 건설의 필요성에는 100% 찬성하며, 특히 운영에 있어 기업측의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측 노동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b>통일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탁아소 공동운영을 하다보면 북한주민들도 호기심과 선진국의 문명을 접하게 되어 동조 속에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된다.</b>
<b>보육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물리적인 환경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남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남북의 통일준비 차원에서의 교육내용 마련도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함</b>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운영과 통합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봄.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동설립 되어야 그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고 봄.

〈표 V-5-5〉 계속

전문가 의견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공동 계획, 설치, 운영을 통해 <b>유아교육 통합의 사례</b> 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크다고 봄.
북한의 유치원 및 보육소 아동들의 영양보급 및 심신안정 등에 기여함으로써 남북한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재정적으로 부족하여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는 북한은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우리 측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됨.
지원을 통한 통합 준비라는 측면에서 <b>개성공단 내 탁아소는 남북 공동 육아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b> 이므로
남북한 보육 부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북이 각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탁아문제의 장단점이 개성공단을 통하여 어떤 해결책들이 도출 될 수도 있기 때문임. 현재 남북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됨
비이념적 영역에서 선진 교육시스템 등 상호 협조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을 시도
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안임.
공업지구 내에 근로자들이 찬성할 것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면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업지구 내에 근로자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서
<b>현실적인 필요성이 높고, 남북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b>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반대 이유는 탁아소의 운영을 남북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단계이므로 북한 내의 탁아소는 북한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공동운영 탁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도 반대하는 이유로 나왔다.

〈표 V-5-6〉 남북 공동 공업지구 내에 탁아소 공동 설치·운영에 대한 반대 이유

전문가 의견
탁아소 설치에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표 V-5-6〉 계속

전문가 의견
통일이 되기 전까지 즉, 공업지구에 설치하면서 설계 지원은 모르지만 운영까지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실현 가능성이 적어서 반대
결국은 운영권의 문제인데, 북측근로자들만이 이용한다고 하면 굳이 공동운영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듯
지금 개성공단 유치원식으로 소유권은 한국이지만 운영권은 북한이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북한의 개방경제가 실시되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한국인 경영인이 들어가는 문제는 어려울 듯
북한의 탁아소는 북한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
운영권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반대
어디까지나 북한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북교류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임.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아직 통일 이전이므로 북한 어린이는 북한이 교육하는 것이 옳은 것임.
우리 측 책임 부담이 과다해 질 것임. 식중독, 상해 등의 사고 등을 고려해야 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다. 육아지원분야의 경제협력사업 사례

어린이들의 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뽀로로’만화는 남북 공동으로 제작한 만화이다. 북한에서 ‘뽀로로’를 실제 방영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탈북자들 이야기 다름), 우리 사회도 ‘뽀로로’가 남북 공동 합작품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지만 ‘뽀로로’가 사회문화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뽀로로 사례의 성공 이유와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뽀로로 만화가 성공했다고 해서, 남북 공동 작업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뛰어난 마케팅의 결합, 정치이념과는 무관한 순수한 동심의 세상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전개한 스토리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표 V-5-7〉 남북 합작 만화 ‘뽀로로’가 성공한 이유

전문가 의견
뽀로로는 남북측의 공동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성공의 요인은 <b>캐릭터와 구성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b> 이라고 보임.
뽀로로 제작에 북쪽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 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남북 공동의 성공적인 합작품이라고 하는 데 대해 우선 의문이 듦. 어떻든 남북이 힘을 합쳐 만든 만화가 인기를 끌었다는 점만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제작에서 북쪽은 단순 작업에 그쳤을 가능성이 큼.

〈표 V-5-7〉 계속

전문가 의견	
<b>아동에게 친근한 캐릭터이기 때문임</b>	위탁가공 업무의 성과가 성공적일뿐, 경제적인 성공은 <b>마케팅이 우수했고</b> 그게 남북합작이었던 때문에 의의가 있게 된 것임.
<b>남북한의 이해가 일치.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북한과 교류사업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남한의 입장 북한의 기술과 남한의 자본을 통한 합작과 상호협력을 통한 수준 높은 아이디어 산출</b>	<b>체제 경쟁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만화 작품에만 집중했기 때문임</b>
<b>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는 감시와 억압 속에서 일상이 되어있기에 성공보다는 북한주민이 원하고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하여 확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공여부는 잘 모르겠음</b>	뽀로로는 제가 일하던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하였음. <b>북한에도 아동영화 "소년장수"가 유명하였는데 애니메이션 기술이 정말 높았음.</b>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음악 북한의 높은 기술이 더해져 성공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음.
<b>정치, 경제 등 이념적인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기 수월하지 않았나 사료됨</b>	뽀로로가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b>정치적인 색채가 없이</b> 캐릭터가 신선하면서 <b>아이들의 동심을 잘 반영하여</b> 나온 작품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b>이념이 없이 아이들의 흥미에 적합했기 때문</b>	경제협력으로 보아야 할 듯. 어떤 다른 함의를 찾으려 하는 것은 무리 아닐지?
<b>남한의 기술력,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와 북한의 기술인력의 결합</b>	<b>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기술을 활용하고, 남한 측이 기획 아이디어와 자본을 투자한 측면에서 성공한 것으로 봄.</b>
<b>지속적인 방영의 효과라고 생각함.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작한 만화일지라도 상영하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b>	성공의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b>절대 남북의 공동 작업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음. 결국 우리의 남다른 마케팅 능력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함.</b>
<b>질문이 모호함. 뽀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콘텐츠가 좋기 때문이고, 남북공동제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은 노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임. 의류, 시계 등과 같은 이유일 뿐임.</b>	북측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하여 제작함으로써 제작비가 절감되었을 것이며 북측 근로자들이 그림을 표현 할 때 우리와 비슷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정서가 녹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
<b>우리문화가 바탕이 되어서</b>	<b>실현 가능한 역할분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됨</b>
<b>캐릭터가 귀엽고 내용이 유아에게 적합하며 도덕적이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했음</b>	북한의 능숙한 애니메이션 기술자들과 남한의 뽀로로 아이템 개발자들과의 환상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을 방영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음. 그러나 남북한이 모두 뽀로로를 통해서 돈을 번 것은 맞으므로 환영할 만한 경제협력사례라고 봄.
<b>남쪽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개발과 북측의 높은 질의 저렴한 노동력의 만남</b>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뽀로로의 사례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남북한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소재들 중에서 정치적, 이념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수요자 대상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한다면 경제적 이익은 창출할 수 있으며 결국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 사례가 일회성을 그쳤고, 자본과 기술력의 결합은 다른 나라들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례이므로 의미부여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뽀로로가 남북 합작품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표 V-5-8〉 남북 합작 만화 ‘뽀로로’ 성공을 통한 시사점

전문가 의견
남북 교류협력은 남측 뿐 아니라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임.
남북간 경험에서 북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음. 남쪽에서는 북의 수준과 상황을 면밀히 타산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해당분야에서 <b>남북한 양쪽 전문가의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로 의미가 있음</b> 제품기획을 잘해서 북한의 인력을 통해 주어진 스펙범위에서 우수한 품질이 나오도록 하는 게 관건임.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병행한다면 효과가 증대될 것임.
<b>남북한이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교류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b>
남북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억지로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사업자체가 성과가 있는 것을 교류협력사업에 적용하는 접근을 취해야 함. <b>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야지</b> 정치적 목적에 경제성을 맞추려해서는 안 됨.
상호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 극대화할 수 있음
<b>뽀로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b> 뽀로로 이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한 것도 아님.
남북 협력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서의 어필이 아닌, <b>실제 시장성을 갖춘 생산품을 만들어낼 필요함</b>
"뽀로로"의 성공적인 작품을 통하여 남북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충분히 우리영유아들의 보육과교육이 함께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손잡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됨.
향후에도 <b>북한이 잘하는 분야에 지속적인 경제적 협력이 필요함</b>
뽀로로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b>남북경협 사업은 철저하게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b> 이뤄져야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b>이념, 정치체제와 무관하거나 영향을 덜 받는 영역부터</b>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해서 점차 그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표 V-5-8〉 계속

전문가 의견
<p>뽀로로는 남북공동합작품이지만 북한사람들은 북한에서 창작한 아동영화로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미디어 교육시스템의 특징으로 남북이 함께 공동작품으로 창작을 하여 도그런 방식으로 출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업에 대한 입장과 목적을 계약서에 올바르게 명시하여 신뢰성을 지키면 좋을 것 같다.</p>
<p><b>이념을 배제한 영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주제를 생각해 낸다면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b></p>
<p>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제작한 문화콘텐츠나 교육용 작품 등은 그 대상자에게 빈번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p>
<p><b>시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함.</b> 단순히 북한의 노동력과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전문가와 한 공동 작업과 같은 경우로 파악해야만 함.</p>
<p>남과 북이 서로 잘하는 분야로 역할을 나눠 공동의 결과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동결과물을 얻기까지 남과 북이 함께 협업하는 실제의 과정 그자체가 의미있다.</p>
<p>남북한 이념과 관계없는 내용을 기반으로 <b>남북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캐릭터나 스토리(전래 동화 등)가 많아야 통일이 된 후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b>고 생각함.</p>
<p><b>특별한 시사점은 없음.</b> 남한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하고, 북한은 노임을 챙길 수 있을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 뿐임. 뽀로로가 영유아용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시사점이 있는 것은 아님.</p>
<p>잘 모르겠음. 남북 공동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어봄.</p>
<p>남북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b>우리 전래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남과 북이 동시에 방영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만 함.</b></p>
<p>필자도 몰랐음. 이 성공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성공적인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홍보하는 게 좋겠음.</p>
<p>남북이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이뤄내려면 일방이 퍼주기만 하거나 북한은 가난하니 대가없이 받아도 된다는 편견은 금물이다. 북한이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상호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말뿐이 아닌, 그리고 무늬가 아닌, 실제적인 경제개발협력을 이뤄내야 한다.</p>
<p><b>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기술 및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이 높다.</b></p>
<p>남북이 공히 외화벌이가 중요함. 뽀로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과 북 어린이들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음.</p>
<p>북은 단순 하청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분업도 의의가 있다.</p>
<p>남북이 공유하는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북한이 장점을 갖고 있는 아동영화 분야의 협력이 가능함.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p>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6.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 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배우는 누리과정에는 북한 내용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 유아기에 어떠한 교육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유아들에게 북한 또는 통일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았다.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찬성하는 편이다 32.1%를 합치면, 8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집계되었다. 눈에 띄는 결과는 유아교육 학계에서 매우 반대하는 의견이 경제/경영학 학계와 더불어 높게 나온 점이다. 그러나 경제/경영학 전문가는 적극 찬성이 한 명도 없었다. 유아교육 학계는 적극 찬성이 57.1%로 높게 나와서, 다른 전문가와 비교해 볼 때,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방문 경험이 없는 전문가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보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V-6-1〉 누리과정에 북한/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점, %(명)

	적극 찬성함	찬성하는 편임	반대하는 편임	매우 반대함	계	평균
전체	49.1	32.1	13.2	5.7	100.0(53)	3.25
전공						
정치(외교)학	60.0	30.0	0.0	10.0	100.0(10)	3.40
사회학	100.0	0.0	0.0	0.0	100.0( 1)	4.00
교육학	57.1	42.9	0.0	0.0	100.0( 7)	3.57
유아교육	57.1	28.6	0.0	14.3	100.0( 7)	3.29
아동학	50.0	50.0	0.0	0.0	100.0( 2)	3.50
북한학	50.0	40.0	10.0	0.0	100.0(10)	3.40
행정학	66.7	0.0	33.3	0.0	100.0( 3)	3.33
경제/경영학	0.0	28.6	57.1	14.3	100.0( 7)	2.14
기타	50.0	33.3	16.7	0.0	100.0( 6)	3.33
북한방문경험						
없음	53.3	33.3	13.3	0.0	100.0(16)	3.40
있음	46.9	34.4	12.5	6.3	100.0(32)	3.22
비해당(탈북민)	50.0	16.7	16.7	16.7	100.0( 6)	3.0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누리과정에 북한/통일 관련 내용을 확대 편성, 운영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

에서는 유아기가 이러한 내용을 배우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통일관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적게 가르친다고 해서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제도권 기관에서 평화통일 관점에서 검증된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평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자라야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평화교육의 내용은 통일 자체보다는 한반도 분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편견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V-6-2〉 누리과정에 북한/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찬성 이유

전문가 의견
북한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어릴 때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음.
결국 통일은 모든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도 일찍 형성되는 것이 필요함.
유아들도 통일에 대해 매체 등을 통해서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아교육은 향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북한에서는 유치원서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고사리같은 손을 들고 통일이라고 대답을 함.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통일을 왜하냐는 반응이어서 안타까움.
어렸을 때부터 통일교육은 시작해야 함.
우리나라 지리교재나 음악교재를 보면 북한사회나 북한식의 전통음악이나 민족개량악기들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가 적게 편성되어 있음. 학생들이 북한의 특별시나 지방 도시등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적게 알고 있으며 북한의 민족개량악기들인 해금이나 옥류금과 같은 악기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과에 담아서 교육과정에 (북한)문화교과로 편성되면 좋을거 같음.
공동선 내지 공동체의식 형성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임
<b>어려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b>
단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함.
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될 경우에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통일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음.
언젠가는 남북이 함께해야 할 것이므로 일찍 배우는 것이 바람직함
누리과정이 미래 투자 사업으로 볼 수 있음

〈표 V-6-2〉 계속

전문가 의견
<p><b>우리의 아이들은 언젠가는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상호 실체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 됨.</b></p> <p>유아기부터 정서적, 인지적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b>크게 증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b></p> <p>어릴 때부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p> <p>북한을 바로 알아야 통일이나 대북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통일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p> <p><b>유아교육기관 관련자, 종사자들의 북한 유아교육을 이해해야 함.</b></p> <p><b>적대감을 최소화.</b> 통일의 기초를 다져야 하기 때문임</p> <p>유아기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북이나 통일에 대해 녹여내는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임. 유아 시기의 인식이 오래가기 때문임.</p> <p>통일이라는 '사건'보다는 삶의 상황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b>5세, 6세 아동에게는 가능하다고 판단됨.</b></p> <p>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을 해야 통일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아이들이 북한의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임.</p> <p>자아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임</p>
<p>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p>

이와는 반대로 유아기는 북한/통일 교육을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라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분단, 통일은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초등학교 이후(고학년 부터)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분별력이 부족한 시기 이므로 어설프게 배운 교육은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북한/통일교육은 유아의 동심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표 V-6-3〉 누리과정에 북한/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반대 이유

전문가 의견
<p>남측이나 북측의 영유아들이 통일이나 남북 간 차이를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됨. <b>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어린이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b> 생각됨</p> <p>통일은 정치, 이념적 요소가 강하다. 유아교육과정에 그걸 넣어야 할 지 의문이다.</p> <p>유아들이 이해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함</p> <p>유아들에게 통일교육은 이해하기 어려울 듯함</p> <p>우리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먼저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류애,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배우는 것이 먼저이다. 북한에 대한 것을 어설프게 가르치는 것은 도리어 통일한국에 해가된다.</p>

〈표 V-6-3〉 계속

전문가 의견
분별력이 아직 부족한 영유아에게 북한에 대한 선입관을 미리 심어줄 이유가 없으며 자칫 획일화된 선입관은 차후에 고등교육을 받게 될 때 잘못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걸 주입하기 시작하면 성장하여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되기 때문임.
유아들에게는 분단, 통일 등이 어려운 개념들임.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동심 형성에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유아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라 필요성이 없다.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 7. 소결

지금까지 53명의 전문가 의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전문가인 만큼 개발협력 사업의 성격을 대부분이(92.5%) 알고 있었으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북한 사회의 역량 제고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을 96.3%가 찬성하였다. 개발협력사업이 북한 사회의 개선과 발전은 남북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비용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였다.

둘째, 2005년부터 정부가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역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사업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찬성하였다. 4점 만점에 3.7점으로 집계되었다. 영유아 지원사업은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반드시 지원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북한의 아이들도 한반도 미래의 아이들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찬성하였다.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한반도 미래의 인적자원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교류협력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71.7%;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포함하면 98.1%) 의견을 피력하였다. 남북의 유아들은 미

래 한반도를 책임져야 하는 후속 세대라는 점에서 성인세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다. 남북 관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은 후속 세대가 평화통일 세대로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기 때문이다.

넷째, 2013년에 제시한 육아지원분야의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추진과제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간단체 중심, 비정치적 분야 중심, 국제사회와의 협업, 상호 존중의 호혜주의 하에 추진이 기본 골자라 하겠다.

교류협력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제는 유아 관련된 과제들이다. 즉, 육아지원기관 유아들의 상호 방문, 공동의 평화통일 개발·실시, 공동 수업계획안 개발 과제는 남북 교류협력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전에는 남북 유아의 공통된 경험을 갖기 위한 공동의 전래동화 읽기, 공통의 동요부르기, 그림교환하기 등을 실시해 볼 수 있다.

한편, 만화 ‘뽀로로’는 남한의 자본과 마케팅,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력이 결합하여 탄생한 남북 협업의 성공적인 사례라 하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회성에 그친 사례이므로 성공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성공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서 정치적, 이념적 요소를 배제했다는 점을 많이 꼽았다. 이는 유아 대상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남북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화, 동화책, 동요, 놀이 등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것으로 제안한다.

다섯째, 향후 남북 경제교류 협력 사업이 확대된다는 전제 하에 경험 지구 안에 탁아소를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안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타당하며, 이를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탁아소를 통해 북한 영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의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교류하면서 접촉 국면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협력사업을 탁아소를 거점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장(場)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되어 있지만 개성공단과 그 안의 개성탁아소만은 계속 운영 중에 있는 사실에서, 앞으로 경험의 확대, 이 안에서의 탁아소 설치·운영은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임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시 공동으로 탁아소를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해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현행 유아들이 배우는 누리과정에서 북한/통일 관련 내용은 적은 비중이다. 북한/통일 관련 내용을 확대 편성, 운영에 대한 의견 역시, 81.2%의 전문가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른 질문에 비해 반대하는 응답이 18.9% 높게 나왔다. 유아 대상의 북한/통일 교육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 6세 정도의 유아라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이라 하겠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이 남북이 상이하다고 하였다. 이는 평화통일이 결코 탈맥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평화통일교육에서는 최소한 북한을 혐오하는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며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평화로 연결할 수 있는 '평화감수성교육'이(김윤선, 2015: 7) 되어야 할 것이다.

## VI.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당위성을 위해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진목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추진목표 하에 육아지원분야에서 실천가능한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추진방향

#### 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천이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 법령들은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의 대국민 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모두, 북한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 영유아에 초점을 맞춘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개발협력사업의 찬성 의견은 더 많이 나왔다. 북한의 주민들, 북한의 영유아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자 동포이므로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돕고 지원하며 상호 교류협력하는 것은 당위적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통일의 방향은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평화통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남북한의 상호 신뢰 회복,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들 간의 자주 만나고 의견교환하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비로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대국민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듯이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

어야만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 나. 통일논의보다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우선 실천한다

따라서 간 길이 너무 먼 통일을 논의하기 보다는 남북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비정치적 안전을 가지고 민간분야에서부터 남북이 교류협력을 시작해 나간다.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한<sup>46)</sup> 내용과 동일하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대국민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수준은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된 상태'(23.5%)보다는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상태'(38.5%)를 더 많이 꼽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는 '5·24 조치'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보다는(31.1%) 북한의 영유아 지원이나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두 의견을 합치면 44.4%)이 더 많았으며 여기에 조건 없이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15.8%)까지 합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통일정책은 지금으로서는 실현가능성도 낮고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일 또는 대북 정책을 전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계에서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육아지원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영유아는 인도적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었으며 실제 가장 많은 지원사업을 했었다. 그 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원 범위를 교육·보육으로 확대해 나가면 남북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남북이 공감하게 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다. 지속가능한 북한 영유아 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교류는 거의 중단되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률 마련을 통해 남북교

46) 본 보고서 서론 맨 앞에 제시한 내용



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남북한 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입법적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라. 남북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대국민 조사에서 통일 후 남북 주민 사이에 가장 갈등이 심할 것 같은 분야로 '경제적 갈등'이 46.8%로 '정치적 이념 갈등' 34.6%보다 더 많이 나왔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1인당 GDP 기준으로 현재 약 2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국외출장 심층면담조사 결과).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인도적 지원 성격보다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가 이전에 비해 호전되고 있으며 '장마당'이란 사경제가 북한 전역에 퍼져 있으므로(국외출장 심층면담조사에서 현재 북한에는 380여개의 장마당이 있다고 함) 앞으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실효성이 크다고 본다. 물론, 북한 영유아의 건강·영양 상태가 남한 영유아에 비해 뒤쳐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해서 그 격차 역시 줄어 나가야 하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보건·의료 중심으로 실시되어 오면서,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교육·보육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회복기 내지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변화된 북한 사회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아지원분야도 북한의 변화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의 탁아소 설치·운영'에 대해 대국민 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타당하며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온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제시하는 추진목표에서 다룰 것이다.

## 마. 평화통일교육은 유아기부터 실시한다

생애이론에서 유아기는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의 경험이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만 4세, 만 5세 유아 대상으로 북한의 이해, 통일교육을 많지는 않지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을 유아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아서 대국민 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알아보았다.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아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대국민 조사에서 '적극적으로'으로 가르치기(23.4%) 보다는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9.3%로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한반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한편으로 분별력이 부족한 유아에게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며 동심에 맞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 전문가들도 일부 있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아기에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각론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유아에게 1970~80년대식의 반공교육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어렸을 때의 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봤을 때, 유아기의 평화감수성을 길러내는 교육은 중요하며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는 평화통일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 추진목표

### 가. 한반도 미래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일시적, 긴급구호적, 시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북한 상황에 적절하지도 않고 지원사업의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2005년도의 한반도 미래 인구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북한 영유아 지원 개발협력사업의 취지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목표가 명확해야 하겠다. 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남북 간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의 목표를 2005년도의 '한반도 미래 인구관리 차원'으로 한다면, 비정치적이면 미래지향적이란 점에서 남북 간, 우리 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 나.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거점: 경협 내 탁아소 설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재, 개성공단지구는 유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교류협력 사업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먹고 사는 일’은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많은 지하자원,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우수한 기술력의 결합은 남북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 육아지원분야의 하나의 작은 사례가 ‘뽀로로’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이 결합된다면, 제2, 제3의 뽀로로는 탄생할 수 있다.

남북 간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탁아소는 자연스럽게 설치된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단 내의 탁아소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개성탁아소와 남북 최초 합작대학교인 평양기술대학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탁아소 설치의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한 시설이다. 부지를 이미 확보한 개성 제2탁아소는 남북이 함께 설계하고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식의 공동 작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충고했듯이 남북이 탁아소를 공동 운영하려면 남북 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 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남북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는 직접 만남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주변국이나 국제기구와 접촉을 우선 실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이 많은 연길에서 “중국과 한국의 육아정책 비교 현황”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협력은 아니지만, 주변국과의 교류는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면, 남북 관계가 개선된 후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수월하게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가 조금씩 해빙되기 시작하면, 남북 양자 만남보다는 이전에 교류를 해왔던 중국, 일본, 국제기구 등과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의 자리를 마련한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다른 제 분야의 교류협력이 일어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실시한다.

## 라. 변화하는 북한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

북한에는 사경제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명,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북한 내의 저변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면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를 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탈북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쉽게 개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남북 공동체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보고 들으며 한국산 제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비한 교류협력 사업을 구상해야 하겠다. 교류협력은 쌍방의 수준이 비슷할수록 지속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개발협력사업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 때 한반도 미래 인적자원인 영유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의 물자들이 지원되고, 북한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남한의 기술력이 제공되면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 국면을 확대해 나가면 자본주의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남한의 사회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권 교육부문은 당장의 교류협력이 쉽지 않겠지만, 남북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비정치적 프로그램(예: 전래동화, 전래동요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 마. 국제사회와의 협력: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

앞서도 언급했지만, 주변국이나 국제사회는 남북 관계의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다. 현재 고착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은 재외동포, 국제기구, 국제 민간단체(일본 JVC)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겠다. 우리 정부가 Unicef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하다.

중국, 일본, 한반도가 상생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가 구축된다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뿐더러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 도출: 남남 갈등 해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국민 의견조사는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은 쉽지 않으며, 남북 경제공동체는 실현하기 어렵다.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겠다. 즉, 합의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목표를 만들어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목표 하에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사. 북한 영유아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마련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은 1995년 북한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주로 영유아들을 위한 분유, 백신, 영양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 2009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은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원단체들이 북한 내 협력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로 기록되었고, 민간 대북지원 규모도 갈수록 줄어들어 2013년과 2014년은 5·24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2012년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강영식, 2015: 51). 앞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격차를 줄여 통일 시에 막대한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5장 제2절 및 제3절 참조). 실제 과거 정부에서 수립한 “북한 영유아 지원 계획(2005)”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한반도 차원의, 미래 통일세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제3장 제3절 나항 참조). 한편, 대국민 조사에서도 70%의 국민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83.3%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제4장 제3절 참조).

이처럼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부재와 더불어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영유아 관련 협력사업과 같이 특수한 목적과 필요성을 갖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칭)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북한의 영유아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이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단순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도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 한민족, 그리고 미래 통일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주민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인적교류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민간단체(재외동포 단체 포함)를 활용하고, 단순한 물적 지원이라던가 북한 내에 상주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기금지원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독 전 동독과 서독이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통해 탁아소나 유치원 지원을 하면서 교류를 한 사례나, 중국-대만 간에 있어 해협양안관계협회 등의 반관반민 조직을 통해 물적·인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와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관을 앞세우기 보다는 민간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제2장 참조).

그 밖에도 정부가 모자보건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개성공단 내의 북한 탁아소·진료소 확충정책을 본 법안에 명시하여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협정을 맺은 지역 내지 탁아소·유치원 등에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통일세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은 물론,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남북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3. 시기별에 따른 실행방안

#### 가. 남북 관계 교착기

현재와 같이 남북 관계가 교착되어 있을 때는 제3국, 국제기구, 재외동포 민간단체, 해외 민간단체 등을 통한 간접 교류를 한다. 남한 정부, 민간단체의 직접 지원과 교류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영양, 건강, 의약품, 학용품 등의 물품지원은 간접적이거나 가능하지만, 인적 교류는 거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되었듯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더라도 사회문화의 비정치적 분야는 지속될 수 있으며 지속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과 함께, 또는 북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UNICEF, WHO 등과 같이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가칭)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북한 측 전문가들 초청하여 같이 토론하면서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들어보고, 이를 계기로 후속 학술대회 주제를 정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 영유아를 위해 직접 지원이 가능한 개성공단탁아소를 거점으로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있는 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등의 안건을 가지고 북측 관계자들과 민간단체, 입주기업이 함께 만남의 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논의를 해 나간다. 즉, 교류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은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되면 훨씬 밀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어린이 그림교환 프로그램은 어린이어깨동무와 일본 민간단체 JVC에서 이미 실시했던 사업인 만큼, 이 시기에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시할 수 있다. 그림교환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편지쓰기, 또는 그림을 설명하기와 같은 글을 함께 교환하면 교류의 친근감을 상승될 것이다.

#### 나. 남북 관계 개선 초기

이 시기에는 남북 간 직접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한다. 교육·보육 분야에서 남북 학술대회 개최는 2002년에도 실시한 바 있다. 이 무렵에는 각계에서 남북 학술대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었는데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단 한 차례만 개

최되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사회문화의 비정치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실시되면, 교육·보육 학계에서는 이전의 노하우를 기초로 남북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시기의 학술대회 주제는 통합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남북 현재 제도나 실태가 적절한 것이다. 즉, 육아지원분야에서 무엇이 얼마나 다른 지를 상호 인지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맞는 주제로는 남북한 육아지원 관련 제도나 정책의 비교, 영유아의 놀이문화, 남북한 영유아 발달과 교육 사례, 남북한 교육·보육교사 양성제도 등이 적절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개최 방식은 초창기에는 중국 또는 일본 등 제3국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 학술대회 개최 주제로는 '교육·보육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 등이 적절하겠다.

이 시기에는 학술대회뿐 아니라 개성공단탁아소에서 남북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개성공단탁아소에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남북의 전문가들이 서울이나 평양 등의 대표적인 어린이집(탁아소), 유치원을 상호 방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민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나간다.

먼저,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담당했던 신뢰도 높은 민간단체, 남북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통일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가칭: 남북 유아 교육·보육협의회 또는 남북한 영유아 교류 협력 위원회 등). 남북의 민관대표 양측 동수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체제 속에서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유초연계 등 세부 실무분과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때 협의체의 성격은 선민후관(정부는 적정 기준에 따른 자금지원에 주력)이어야 하며 공식채널 외의 비공식 채널 가동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협의체 구성 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6·15공동행사 추진위원회와 같이 기존 협의체의 구성방법과 운영방법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점차 협의체는 영유아 지원사업단체 및 보육기관·유치원 종사자, 정부부처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포함시킨다.

또한, 개성탁아소를 거점으로 남북 유아교육·보육 종사자라 할 수 있는 원장, 교사들이 만나서 교류의 물꼬를 튼다. 교류협력 초기에는 보육실 또는 교실의 환경구성, 시설·설비, 안전한 운영 등 덜 민감하면서도 육아를 위해 중요한 주제들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다면, 지원하면서 만남을 지속해 나간다.



우리 정부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여 북한의 영유아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이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 법안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사업의 사항을 포함시키며 정치적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교류협력의 주체로 통일부보다는 보건복지부(인도적 지원사업)와 교육부(교육·보육 교류협력사업)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 다. 남북 관계 개선 중기

남북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교류협력이 지속화되면,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남북 공동 학술대회의 주제로 남북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학술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유아교육 정보화와 창의성 교육, 아동권리,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남북 영유아 정책 발전방안 등이 그 예라 하겠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경험 내의 탁아소를 공동 설치·운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학술대회 개최, 민관협의체 및 남북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논의한다. 개성공단탁아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탁아소는 남북 모두에게 실리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개성탁아소가 소유권은 남측, 운영권은 북측에 있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향후 육아지원분야의 통합을 미리 실험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하겠다.

탁아소를 공동 설치·운영하면서 남북 유아가 공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남북 전문가 TF팀 구성, 공동주제 선정을 위한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 흥부와 놀부, 효녀심청 등의 전래동화는 남북 유아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비정치적 내용의 동화이다. 이와 같은 전래동화를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용어를 통일해서 기술하고, 내용을 감수하고, 삽화를 그려서 남북한 육아지원기관에 보급하고 배운다면, 남북 유아의 직접적인 교류는 아닐 지라도 교육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남북 유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나 만화주제곡을 공동 개발한다. 만화 뽀로로의 주제곡은 참조할 만한 사례이다.

## 라. 남북 관계 개선 장기

남북 교류협력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궤도에 오르게 되면, 한반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남북 유아들을 어떻게 육성할 지를 논의한다. 제도권 교육은 이념적 요소를 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논의는 남북 관계가 충분히 숙성된 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시기의 학술대회 주제는 남북 간의 이질적인 영유아 문화(예: 언어)의 격차 줄이기, 남북 영유아의 발달 격차 줄이기 등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후 점차 육아지원분야의 통합을 위한 주제를 교사, 교육과정, 비용, 법령, 운영체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민감한 주제들을 세미나 의제로 선정한다.

한편, 남북 육아지원분야의 통계자료를 공통으로 산출한다. 영유아 인구수, 어린이집(탁아소), 유치원, 재원아수, 교원수 등의 기초 통계를 함께 산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정확하고 필요한 정책수립은 정확한 기초 통계를 근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조사에서 공동 통계 산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남북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오랫동안 실시해 온 남북 유아 그림교환 프로그램, 남북 유아들이 동일하게 부르는 노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전래동화나 만화 등의 경험 축적은 남북 유아들이 성장한 후에 청소년 또는 성인이 되어 만나더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유아기에 상호 방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성인 세대가 교류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유아들이라고 해서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 다리를 안전하게 잘 건널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평화감수성을 길러내는 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식(2015). 민간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국회한반도평화포럼·시민평화포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코리아연구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한반도평화포럼.
- 강영식(2015). 대북 의료지원 사업 경험에 근거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안 및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 강일규·김영훈·백승주·안병민·윤철경·이운진·한부영(2012).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협의회.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2015).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 국회의교통일위원회,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5. 7.
- 국회의교통일위원회,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4.
- 국회의교통일위원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11.
- 국회의교통일위원회,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11.
- 김성욱(2009).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관한 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II), 80-115.
- 김윤선(2015). 평화교육, 어떻게 할까. 어깨동무 가을 통권 109호. 어린이어깨동무. 6-7.
- 남북어린이어깨동무(2005). 남과 북이 함께 설립한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 박복순·박선영·황의정·김명아(2014).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 박영정·오양열·이우영(2012).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지용(2015). 남북문화교류사업 추진 절차와 대북 협상 과정, 남북문화교류 담당자 통일문화아카데미 자료집, 1-11.
- 송인호(201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Vol.665), 185-230.
- 신영전(2012). 북한 모자보건프로그램에서 WHO, UNICEF, 한국정부, 한국 NGOs의 협력 경험.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 양민석·송태수(2010). 독일 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4), 3-34.
- 양옥승(2014).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3(4), 259-280.
- 어린이어깨동무(2010).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백서어린이병원.
- 어린이어깨동무(2011). (사)어린이어깨동무 2011 연차보고서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2012). 2012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
- 임강택·권태진(2014).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통일연구원.
- 윤종혁·이찬희·이석희·신효숙·박영은(2007).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오덕렬(2012). 청소년분야 남북교류 현황 및 추진 방향.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협의회, 158-181.
- 이강복(2014).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72, 263-284
- 이규석(2011).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1), 3-22.
- 이금순·권태진·김수암·이종무·황나미(2005). 대북지원 10년 백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한지원민관정책협의회.
- 이기범(2005). 대북협력 활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남과북이 함께 설립한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남북어린이어깨동무, 330-359.
- 이소희·곽영숙·정유숙·이소영·김봉석·손석한·정운선·양재원·방수영·황준원·홍

- 민하·이연정·반건호(2014). 북한의 보육 정책 및 현황,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5(1), 1-5.
- 이석기(2015). 북한 경제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국회한반도평화포럼·시민평화포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코리아연구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한반도평화포럼.
- 이세정·손희두·이상영(2011).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법제통합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이윤진(2012).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추진방안.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협의회, 183-229.
- 이윤진·구자연(2013).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서문희·김선화·박영자(2011).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호(2013),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나라경제* 15(3), pp.55-75.
- 이종무·강동완·김동진·황재성(201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2001-2011). 경기도.
- 이정희(2007). 경제특구로서 개성공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선(2015). 남북 문화교류사업 성패요인 분석. 2015 남북문화교류 담당자 통일문화아카데미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25.
- 제성호(1993).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 법제의 평가, *북한* 257(93.5), 48-57.
- 조선사회과학자협회·한국아동학회·연변대학민족연구원(2002).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토론회 논문집.
- 최민수·이원영·최완영(2009).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과 재교육 제도 및 정책방안 연구. 재단법인 청삼아동문제연구소.
- 통일부(20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 통일부(2015). 통일업무 추진계획.
- 통일부(2015).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 통일연구원(2009). 북한개요.
- 통일연구원(2014).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한만길·강구섭·권성아·박재윤·양승실·조정아(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황나미(2007). 북한 보건의료체계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추진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7. 10.

[인터넷 사이트]

계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 [www.kidmac.com](http://www.kidmac.com)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http://blog.unikorea.go.kr/447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II . 국외사례 부분 참고문헌]

Albers, Timm (2009). Kollektive Früherziehung und individuelle Bildungsbegleitung, Entwicklungsperspektiven für ein gesamtdeutsches Krippensystem, in: UniMagazin no. 3, pp. 26-28.

Amft, Jennifer (2013). Ein Land, eine Sprache, zwei Wege?: Der Mutterspracherwerb im Kindesalter. Ein Vergleich der DDR und der heutigen BRD.

Bangel, Christian (2006). Kohlenzüge malen und Fähnchen schwingen, in: Die Zeit, 28.7.2006, in the Internet: <http://www.zeit.de/online/2006/31/kindergarten-ddr-beispiel>. (accessed 10.7.2015).

Baske, Siegfried (1991). Pädagogik und Bildungswesen in der ehemaligen DDR, in: Roth, Leo (ed.): Pädagogik: Handbuch für Studium und Praxis, München, pp.563-571.

Binder, Marion (1995): Soziostrukturell differenzierte Inanspruchnahme außerhäusiger Betreuung von Kindern im Vorschulalter. Eine empirische Analyse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te

- Bundesländer) für das Jahr 1993 (Sociostructurally differentiated use of outside care of children of pre-school age :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ld Bundesländer) in 1993), Zeitschrift fuer Familienforschung, Vol. 7, no. 2, pp. 89-119.
- Blank-Mathieu, Margarete (1998). Alte Bundesländer - neue Bundesländer, in: Handbuch für ErzieherInnen, 23. Lieferung, Landsberg/ Lech: mvg-verlag.
- Büchel, Felix - C. Katharina Spieß (2002). Form der Kinderbetreuung und Arbeitsmarktverhalten von Müttern in West- und Ostdeutschland, Stuttgart: Kohlhammer.
- Büchel, Felix und C. Katharina Spieß (2002):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Müttererwerbstätigkeit - Neue Ergebnisse zu einem bekannten Zusammenhang, in: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Vol. 71, no. 1, pp. 95-113.
- Conrad, Gabriele (1982). Kind und Erzieher in der BRD und in der DDR.
- Dannebeck, Clemens - Sabrina Keiser (1992). Lebensbedingungen und Betreuungsmöglichkeiten von Kindern Ost- und Westdeutschlands,in: Glatzer, Wolfgang / Noll, Heinz-Herbert (eds):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Ungleichheit und Angleichung, Frankfurt a. M. / New York.
- Der Spiegel (2015). Betreuung im Westen: Recht auf Kitaplatz lässt Quote steigen, in: Der Spiegel, 20.2.2015, Internet file: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u-3-betreuung-recht-auf-kitaplatz-laesst-quote-steigen-a-1019490.html>. (accessed 10.7.2015).
- Deutsche Bundesregierung (2009). Kleinkindererziehung in der DDR und heute, DE Magazin, 5.10.2009, Internet file: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Magazine/MagazinSozialesFamilieBildung/080/s-d-kleinkindererziehung-in-der-ddr-und-heute.html> (accessed 10.7.2015).
- Deutsche Verwaltung für Volksbildung (1946a): Richtlinien für die Umerziehung und Nacherziehung des Personals in Kinderheimen. 16.

März 1946.

Deutsche Verwaltung für Volksbildung (1946b): Richtlinien für Kindergärten.  
1. Juli 1946.

Deutsche Verwaltung für Volksbildung (1946c): Neuordnung der Ausbildung  
der Kindergärtnerinnen.

Deutscher Bundestag (1991): Situation der Kindergärten, Krippen und Hor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undestagsdrucksache 12/661, 1991.

Deutscher Bundestag (1994): Bericht über die Situation der Kinder und  
Jugendlichen und die Entwicklung der Jugendhil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Neunter Jugendbericht - , Bundestagsdrucksache  
13/70.

Die Welt (2014). Der Westen holt beim Ausbau von Kita-Plätzen auf.  
16.7.2014, (accessed 10.7.2015).

Gebauer, Ronald (2010), Kitas und Kindererziehung in Ost und West,  
30.3.2010,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Internet file: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n-einheit/47313/kinderbetreuung?p=all>. (accessed 10.7.2015).

Gille, Martina (2008). Jugend in Ost und West seit der Wiedervereinigung:  
Ergebnisse aus dem replikativen Längsschnitt des DJI-Jugendsurvey  
(German Edition).

Günther, Franziska (2006). Sozialistischer Nachwuchs, in: Die Zeit, Vol. 31,  
28.7.2006, in the Internet:  
<http://www.zeit.de/online/2006/31/kindergarten-konzepte-ddr>.  
(accessed 10.7.2015).

Hank, K., Tillmann, K., Wagner, Gert G. (2001). Außerhäusliche  
Kinderbetreuung in Ostdeutschland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Ein Vergleich mit Westdeutschland in den Jahren  
1990 - 1999. MPIDR WORKING PAPER WP 2001 - 003. Rostock:  
MPIDR/

Hartmann, U./ Rahner, Ch. (1997). Zur Situation der konfessionellen



- Kindergärten in der DDR, in: Müller-Rieger, M. (ed): "Wenn Mutti früh zur Arbeit geht...". Zur Geschichte des Kindergartens in der DDR, Berlin: Argon.
- Hauptabteilung Lehrerbildung beim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ed.) (1983). Die Lehrerbildung in der DDR. Eine Sammlung der wichtigsten Dokumente und gesetzlichen Bestimmungen für die Ausbildung der Lehrer, Erzieher und Kindergärtnerinnen. Berlin: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 Hildebrandt, Regine (1994). Die Einrichtungen des Gesundheits- und Sozialwesens in der DDR u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no. 3/1994, pp.15-26.
- Hille, Barbara (1988): Kinder in der DDR - Betreuung und Erziehung in der frühen Kindheit und im Vorschulalter, in. Deutschland-Archiv - Zeitschrift für Fragen der DDR und der Deutschlandpolitik, Vol. 21, pp.513-526.
- Hoffmann, Hilmar (1997), Zwischen Kontinuität und Diskontinuität. Zur Geschichte der Kindergartenpädagogik in der DDR. In: Monika Müller-Rieger (ed.), "Wenn Mutti früh zur Arbeit geht ...". Zur Geschichte des Kindergartens in der DDR. Berlin: Argon, S. 19-40.
- Honecker, Margot (1978). Schlusswort des Ministers für Volksbildung, in: Neue Erziehung im Kindergarten 1978, no. 1.
- Israel, Agathe (2008). Krippen-Kinder in der DDR: Frühe Kindheitserfahrungen und ihre Folgen für die Persönlichkeitsentwicklung und Gesundheit.
- Kistler, Ernst et al. (1993). Es droht eine Abwärts-Spirale - Kindereinricht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Arbeit und Sozialpolitik, Vol. 40, no.3-4, pp. 49-54.
- Krecker, Margot (1971). Quellen zur Geschichte der Vorschulerziehung. Berlin: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 Krecker, Margot (1986). Die Vorschulerziehung in der DDR. In: Barow-Bernstorff, Edith u.a. (ed):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 Vorschulerziehung. 7.ed. Berlin: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pp. 420-485
- Laewen, Hans-Joachim (1997). Auf dem Weg zu einer neuen Erziehung jenseits der Grenzen DDR-BRD. In: Monika Müller-Rieger (Hrsg.), "Wenn Mutti früh zur Arbeit geht ...". Zur Geschichte des Kindergartens in der DDR. Argon, Berlin, pp. 117-128.
- Liegle, Ludwig (1988). Erziehung zur Anpassung. Das Beispiel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DR), in: Neue Sammlung, Vol. 28, pp. 35-48.
- Lost, Christine (1990). Viereinhalb Jahrzehnte Kindergarten in der DDR - was nun?, in: Pädagogik und Schulalltag, Vol. 45, no. 12, pp. 937-944.
- Maiwald, Annett (2006). Die Kindergärtnerinnenausbildung der DDR. Zur berufssoziologischen Rekonstruktion einer Berufspersönlichkeit, in: die hochschule, no. 2/ 2006, pp. 157-178.
-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d.) (1985): Studienplan für die Ausbildung von Kindergärtnerinnen an Pädagogischen Fachschulen für Kindergärtnerinnen der DDR. Berlin.
-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d.) (1953): Jungen und Mädchen, werdet Lehrer und Erzieher unserer deutschen demokratischen Schule. Teilabschnitt: Die Ausbildung der Kindergärtnerinnen an den Pädagogischen Schulen. Berlin: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d.) (1963). Lehrprogramme der Pädagogischen Schulen für Kindergärtnerin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d.) (1968). Konzeption zur Neugestaltung der Ausbildung von Kindergärtnerinnen. Berlin: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d.) (1973). Studienplan für die Ausbildung der Kindergärtnerinnen.

- Berlin, 1973.
- Misselwitz, Irene (2009). Krippenerziehung in der DDR - Kindheitserfahrung und eigene Elternschaft, Verlag: Psychosozial-Verlag
- Mittelbach, Hans (1994): Familienpolitik und Lage der Famili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Zerche, Jürgen (ed.): Vom sozialistischen Versorgungsstaat zum Sozialstaat Bundesrepublik. Ausbau oder Abbau der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Regensburg, pp.55-95.
- Müller-Rieger, Monika (1997), Es kann doch nicht alles falsch gewesen sein - oder? In: Dies. (Hrsg.), "Wenn Mutti früh zur Arbeit geht ...". Zur Geschichte des Kindergartens in der DDR. Argon, Berlin, pp. 11-18.
- Nentwig-Gesemann, Iris (1999). Krippenerziehung in der DDR : Alltagspraxis und Orientierungen von Erzieherinnen im Wandel, Opladen : Leske + Budrich.
- OECD (2004). Die Politik der frühkindlichen Betreuung,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aris.
- Ott, Notburga, Heidrun Radtke, Wera Thiel - Gert Wagner (1990). Kindererziehung und Erwerbsarbeit - marktwirtschaftliche Möglichkeiten einer erziehungsfreundlichen Erwerbsarbeit in Deutschland, in: Wirtschaftswissenschaft/ DDR, Vol. 38, no. 9, pp. 1242-1261.
- Pfeiffer, Christian (1999). Fremdenfeindliche Gewalt im Osten - Folge der autoritären DDR-Erziehung?, Internet file: (accessed 10.7.2015).
- Praecker, Margret (1983). Der Kindergarten im Bildungssystem der DDR, in: Sozialpädagogische Blätter, Vol. 34, pp.138-142.
- Rabe-Kleberg, Ursula (1994). Erzieherinnen, ein qualifizierter Frauenberuf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ohne Zukunft? In: Arbeitsmarktforschung für Sachsen-Anhalt. Neue Ergebnisse in 1994.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und Gesundheit des Landes Sachsen-Anhalt (ed). Magdeburg. pp. 63-71.

- Reyer, Jürgen (2006),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s Kindergartens und der Grundschule. Klinkhardt, Bad Heilbrunn.
- Reyer, Jürgen/ Heidrun Kleine (1997), Die Kinderkrippe in Deutschland. Sozialgeschichte einer umstrittenen Einrichtung. Lambertus, Freiburg im Breisgau.
- Sasse, Ada (2004). Ohne Herkunft keine Zukunft - Das ‚Programm für die Bildungs- und Erziehungsarbeit im Kindergarten‘ (1985) in der gegenwärtigen Diskussion um Grundsätze der Bildungsarbeit in Kindertagesstätten. In: Diskowski, Detlef/Hammes-Di Bernardo, Eva (Hrsg.): Lernkulturen und Bildungsstandards. Kindergarten und Schule zwischen Vielfalt und Verbindlichkeit. Baltmannsweiler, pp. 116-129.
- Schaefer, Bernd (1998). Staat und katholische Kirche in der DDR, Weimar: Boehlau.
- Schiele, Eckart (1982). Wehrerziehung im Kindergarten. Zur Problematik der Schaffung eines eigenständigen Nationalgefühls, in: Pädagogik und Schule in Ost und West, Vol. 31, 1982, no. 2, pp.27-35.
- Schmidt, Franz-Hermann (1993). Gedanken zur Horterziehung in der SBZ/DDR. Ansätze für eine Periodisierung, in: Pädagogische Führung. Zeitschrift für Schulleitung und Schulberatung, Vol. 4, 1993, no. 3, pp.132-134.
- Schmidt, Hans-Dieter (1992). Frühe Kindheit in der ehemaligen DDR im Spannungsfeld Familie/Krippe, in: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Vol. 39, pp. 149-155.
- Schmidt, Hans-Dieter (1997), Zwischen Obhut und Förderung, Lenkung und Einengung. Kindbild-Varianten in der DDR-Gesellschaft. In: Monika Müller-Rieger (Hrsg.), "Wenn Mutti früh zur Arbeit geht ...". Zur Geschichte des Kindergartens in der DDR. Argon, Berlin, pp. 41-52.
- Schober, Pia S. - Juliane F. Stahl (2014). Trends in der Kinderbetreuung - sozioökonomische Unterschiede verstärken sich in Ost und West, DIW Wochenbericht no. 40/2014, October 2nd, 2014, pp. 986-994.

- Schulz, Erika (1993). Bevölkerungsrückgang und Infrastruktureinrichtungen im ländlichen Raum Mecklenburg-Vorpommerns, DIW-Diskussionspapier Nr. 84, Berlin.
- Schulz, Erika (1994). Auswirkungen des Bevölkerungsrückgang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f ausgewählte Infrastrukturbereiche, in: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pp. 491-506.
- 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SMAD) (1946): Über die Leitung der Arbeit in Kinderheimen. Befehl Nr. 225
- Töpfer, Gesine - Anja Weinberg (2006). Kinderkrippe und Kindergarten.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ehemaligen DDR.
- Vergleich der politischen Sozialisation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durch staatliche Einrichtungen in der BRD und der DDR mit einem Ausblick auf die Nachwirkungen [Kindle Edition]
- Wagner, Gert - Karsten Hank und Katja Tillmann, Außerhäusige Kinderbetreuung in Ostdeutschland - 1990 und 1994 im Vergleich zu Westdeutschland, Vorstudie für die Hans-Böckler-Stiftung "Finanzierungsmodelle und Verteilungsrechnungen für eine bedarfsgerechte Kinderbetreuung von Vorschul- und Schulkindern", Internet file: .
- Witte, James G. und Gert Wagner (1995): Employment and Fertility Patterns in East Germany, DIW-Diskussionspapier, Berlin.
- Zimmer, Dieter E. (1995). Ein Kind ist schwer zu verderben, in: Die Zeit, No. 29, 15.7.1995.
- 張愛華 (2011) . 「關於兩岸幼兒教育發展的訪談 —— 專訪台灣政治大學幼兒教育研究所簡楚瑛教授」教育導刊 2011年 2月. pp.8-12
- 童憲明 (2007) . 「海峽兩岸幼教法律法規比較」 早期教育 2007年. 第12期. pp.20-21
- 叶平枝 (2013) . 「大陸与台灣幼兒園教師專業標準比較及其啟示」 學前教育研究 2013年. 第7期. pp.29-33
- 楊建華, 康咏香, 黃麗麗 . (2011) 「改革開放以來下台基础教育交流回顧与前瞻」

集美大學學報 2011年. 第12卷. 第1期. pp.65-71

台盟北京市委員會 (2010) . 「鄉情与熱情的相會真心与愛心的交流 ——記“北京市學前教育交流訪問團”赴台盟北京市委員會」 北京觀察 2010. (7) . pp.63-64

張元 (2004) . 「兩岸情幼教心 —— 2004年海峽兩岸幼儿教育學術研討會綜述」 早期教育 2004. (10) . pp.15

張民 (2012) . 「台湾學前教育考察所見、所聞、所思」 天津教育. 2012. (10) . pp.45-46

[웹사이트]

天天學習網. 2009. 首屆海峽兩岸學前教育研討會召開.

<http://www.tiantianxuexi.com/html/74/174/174369/1.htm>

CNKI中國知網. 2013. 海峽兩岸心手牽共圓中華幼兒夢 —— 第三屆海峽兩岸學前教育研討會隆重召開.

<http://mall.cnki.net/magazine/Article/JYTJ201306001.htm>

東南網. 2014. 閩台學前教育交流合作展現廣闊發展空間.

[http://www.fjsen.com/hx/w/2014-12/25/content\\_15454329.htm](http://www.fjsen.com/hx/w/2014-12/25/content_15454329.htm)

## Abstract

# The Study of Sustainable Child Care Support Field for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Lee Yunjin, Kim Ahreum, Kang Ilgae, Son Giwoong, Lim Junbum**

Until now, support projects for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were concentrated on health and medical field. Considering if North and South Korea come to the level where they exchange and cooperate reciprocally, the field should expand its fields to education and child care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discover sustainable projects in education and child care field and various ways to push forward these projects when inter-Korean relation is improved. The study collected data about Germany's education and child care field and cases of China-Taiw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order to collect data and have interviews with the officials, Yian-Ji-Shi of China and Tokyo of Japan were visited. In addition, opinion survey targeting to 53 experts was conducted and 800 people in public completed the survey.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case of Germany and China-Taiw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non-political field are not only sustainable but also have positive effects on political field. Currently, South Korea's support projects toward North Korea are currently ceased while overseas located Korean private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ICEF, WEP, FAO, UNFPA, WHO) still continues their roles. However, their projects were not about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humanitarian perspective or a project of emergency relief but to mainly promote welfare of North Korean people and developmental cooperation projec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was already held in 2005 when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North Korea infant and child support project. The study was able to find out the fact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maint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country and beneficiary country and eventually contributes to promote welfare of the beneficiary country's residents.

The level of unification that most South Korean desired was 'coming and going to North and South freely', and the most concerned issue after the unification was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the other hand, education on Korea's unification starting from early childhood was recognized as desirable. The survey on the general public also found out that 'internal conflict among South Koreans' is an issue that our society has to solve.

Tasks in the field of education child care drawn from the experts opinion survey include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between two Koreas, having conventions regularly, output of common statistical data of the North and South Koreas, North and South Koreas' join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day care center, kindergarten, joi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expanding children' exchanges between two Korea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pecific promotion directions for the overall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1) firstly conduc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fore discussing the unification. 2) preparing the legal foundations to support North Korea's infants and children and to increase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3) proceeding the economic cooperation to reduc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establishing day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for the worker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4) proceeding the exchange cooperate projects depending on the changes that North Korea shows 5) solving the internal conflicts among South Korean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plan for the field of education and child care should reflect the North and South's relation, and the strategy



should be different among the stages; stalemate relation, and initial, middle, long stage of improvement.

For example if North and South Korea's joint convention is held, the level of North and South Korea's rel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convention's main topic. Also during the stalemate stage, supporting the day care center in Gaesong area should be concentrated on supplying the goods, and expands its cooperation field once the relation improves such as opening regular meetings with education and child care experts, director and teachers. For a long-term stage,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workplace nursery(day care center) in the economic cooper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North and the South.

## 부 록

---

부록 1. 남북관계 법령 목록

부록 2. 남북관계 행정규칙 목록

부록 3. 남북관계 자치법규 목록

부록 4.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 질문지(1차)

부록 5.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지(2차)

부록 6. NGO 단체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지(1차)

부록 7.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 8. 일반국민 설문조사지

부록 9.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전체)

## 부록 1. 남북관계 법령 목록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법률	통일부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통일부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통일부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통일부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통일부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통일부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통일부
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통일부
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통일부
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법무부
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1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법무부
13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통일부
14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통일부
15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통일부

## 부록 2. 남북관계 행정규칙 목록

번호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통일부훈령
2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3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4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통일부고시
5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통일부고시
6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통일부훈령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통일부매뉴얼
9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통일부예규
1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통일부예규
1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	통일부훈령
12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통일부고시
13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14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기상청훈령
15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통일부고시
16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통일부고시
17	남북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부간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통일부훈령
18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통일부훈령
19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통일부훈령
20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21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통일부고시
22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통일부고시
23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법무부훈령
24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통일부고시
25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6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기획재정부고시
27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28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통일부훈령
29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통일부고시
30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통일부훈령
31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직무규정	통일부훈령
32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33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통일부고시
34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통일부고시

## 부록 3. 남북관계 자치법규 목록

	법령명	지역명	법령종류
1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강원도	조례
2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규칙
3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	강원도교육청	조례
4	강진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강진군	조례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규칙
7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경상남도	조례
8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규칙
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10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규칙
11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고성군	조례
12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고성군	규칙
13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고양시	조례
14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조례
15	곡성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곡성군	조례
16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조례
17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광산구	조례
18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19	구례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	조례
20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포시	조례
21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나주시	조례
22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	강원도	조례
23	담양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	담양군	조례
24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조례
25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조례
26	목포시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조례
27	무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무안군	조례
28	무안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	무안군	조례
29	보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조례
30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31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부천시	조례
32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규칙
3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34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마포구	조례

36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수원시	조례
37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규칙
38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조례
39	신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조례
40	양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양산시	조례
41	여수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조례
42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연천군	조례
43	영광군남북교류·협력조례	영광군	조례
44	웅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웅진군	조례
45	완도군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	완도군	조례
46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47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북구	조례
48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규칙
49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50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규칙
51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장성군	조례
52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조례
53	장흥군남북교류·협력조례	장흥군	조례
54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장성군	예규
55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화순군	훈령
56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	영광군	예규
57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	담양군	예규
58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	함평군	훈령
59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라남도	조례
60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 규칙	전라남도	규칙
61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62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
63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	훈령
64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주시	조례
65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66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규칙
67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제천시	조례
68	진도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조례
69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철원군	조례
70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71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충청북도	조례
72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파주시	조례
73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규칙

74	함평군 남북교류협력조례	함평군	조례
75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조례
76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조례

## 부록 4.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 질문지(1차)

## 일시 및 장소:

1. 인적 사항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_____ 세	남한체류기간
	탈북년도	_____년 _____월	입국년도	_____년 _____월	_____년
	북한 최종학력	_____학교 _____학과			
	북한 주요 직업/직위		해당 직업 경력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2. 현재 사항	직업		월 평균소득	_____원	

<b>주요 면담 내용</b>
-----------------

1. 북한에서 근무한 유치원(탁아소)의 소재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북한에서 근무한 유치원(탁아소)의 교직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 교사, 직원 등 구성원, 구성원 수, 자격증 유무 등)
3. 북한에서 근무한 유치원(탁아소)의 시설·설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층 건물인지, 교무실, 행정실, 유희장, 급식실, 강당, 실내외 놀이터 등)
4. 북한에서 유치원(탁아소)를 설립할 때 무엇을 가장 중시하나요?  
(예: 안전, 난방, 채광, 면적 비율 등)
5. 북한에서 근무한 유치원(탁아소)의 교육과정을 아래 표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귀하가 가르쳤던 교육과정과의 차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 1〉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

과목명	구분 총시수	낮은반		높은반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	80	20	20	20	20
위대한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	80	20	20	20	20
창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의 어린시절 이야기	40				
우리말	160			60	60
셈세기	160			40	40
노래와 춤	160	80	80	60	60
그리기와 만들기	80			40	40
체육	-	40	40	40	40
놀이	-	80	80	40	40
관찰	-			40	40
계	760	240	240	360	360

자료: 차중환·신범타·양학봉(2009). 이것이 북한 교육이다. 나산출판사. 참고로 내용 추가·수정

- 북한을 대표하는 유치원(탁아소)와 일반적인 유치원(탁아소)의 차이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시설설비,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 급간식 수준 등등).
- 다음 표는 북한의 교양원 양성 교과목입니다. 실제 교원대학에서 귀하가 받은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대학 교양원과(학전과)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표 2〉 북한의 교원대학 교양원과(학전과) 교과목

북한 교원대학 교과목명	
김일성 혁명력사	미술
김일성 로작	체육(체조, 탁구, 배구, 축구, 농구, 수영 등)
현행당정책	김일성 어린시절 교수법
김정일 혁명력사	김정일 어린시절 교수법
김정일 로작	음악 교수법
교육학	우리말 교수법
심리학	셈세기 교수법
외국어(영어)	무용(유치원 노래와 춤동작, 무용표기법)
국문강독(5대 혁명가극분석)	체육무용(예술체조)

---



---

 북한 교원대학 교과목명
 

---

 문화어(우리말 문법)
 

---

 자료: 최민수 외(2009).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과 재교육 제도 및 정책 방안 연구. p. 36.  
 를 참고로 내용 추가·수정

8. 유치원(탁아소)에서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9. 귀하께서는 남한 유치원(탁아소)이 북한에 비해 가장 우수한 점, 반대로 북한 유치원(탁아소)이 남한에 비해 가장 우수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10. 최근 북한의 육아정책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부록 5.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지(2차)

### 주요 면담 내용

1. 지난번에 기업소 유치원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업소유치원 외에 유치원의 종류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유치원 종류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생활수준이나 시설의 규모 등)

2. 탁아소나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귀하가 근무하신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으셨나요?

3. 탁아소와 유치원은 보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어느 구역은 A유치원, 어느 구역은 B 유치원) 그렇지 않다면 보통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유치원이나 탁아시설을 선택하게 되나요? (학부모들의 선택이나 선호도 기준)

4. 예전에 탁아소 시설이 미흡해서 자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셨다고 했는데, 실제 북한에서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유치원 낮은반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부모들이 보내는 추세인가요?

5.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내는 이유가 큰가요 아니면 여성 스스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이유가 큰가요? 유치원과 탁아소는 시설적인 면에서나 교육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

다고 느끼시나요?

6.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교재교구들이 구비되어 있나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7.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실제 어떤 종류의 급간식이 지급되고 있나요? 기억나시는 식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8.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배고픈 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탁아소나 유치원에 지원되어야 할 식품이나 북한 영유아에게 지원되어야 할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9. 탁아소와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 중 가장 시설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남한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0. (어린이)병원은 무상인가요? 이용하셨던 어린이병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11. 이전에 남한에서 북한에 어린이종합식료공장을 건설해서 빵급식 지원사업(단팥빵, 알사탕 등 생산)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경제발전,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1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종류에는 인도적 협력사업, 사회문화 협력사업, 경제 협력사업 등이 있는데, 혹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특구정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경제특구 내에 탁아소, 유치원 설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일정기간 지속되는 인도적 성격의 “개발지원성 사업” 등 북한과의 공동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조사, 공동제작, 공동개발 등을 실시하는 행위
경제협력사업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

## 부록 6. NGO 단체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지(1차)

일시: \_\_\_\_월 \_\_\_\_일 장소: \_\_\_\_\_

인적 사항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_____세
	북한방문횟수	총_____회	최근 북한방문 시기	____년 ____월
	대북지원활동 시 소속단체		해당 단체 근무기간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현 소속단체		해당 단체 근무기간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 현 소속단체와 근무기간은 대북 활동 시 소속단체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b>주요 면담 내용</b>
-----------------

1. 귀하의 단체가 대북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귀하의 단체가 대북 지원활동 시 지원규모, 지원사업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3. 귀하의 단체가 대북 지원활동 시 예산 지원을 어디서 받으셨나요? 어디서 받은 예산이 가장 많았고, 지속적이었나요?
4. 현재 대북지원단체가 약 96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단체가 대북 지원활동 시 실제 활동한 단체 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 중 선정기준을 무엇

이었습니까?

5. 민간단체들 간의 대북 지원 활동의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셨습니까? 역할 분담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6. 귀하 단체의 북한 협상파트너는 어디였습니까? 관련하여 남한에는 (남)민 화협과 북민협이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두 협의체의 차이점과 공통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7. 귀하가 접한 북한의 육아지원기관(어린이병원 포함)의 당시 시설 상태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 귀하의 단체가 탁아소, 유치원의 인도적 및 개발지원지원사업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9.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두 사업의 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남남갈등(북한에 퍼주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10. 현재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7. 전문가 설문조사지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ID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올해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연구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육아 지원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의거하여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실시기관 : 닐슨코리아
- 담당자 :
  담당자 :

I. 선정 질문

문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문2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몇 세 이십니까?  만  세

**만 19세 미만의 경우 조사 중단**

문3 [문2 응답 결과로 자동 프로그래밍. 면접원 진행 화면에는 Hidden 처리] 연령 대

- ① 19-29세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문4 귀하께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어디십니까?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대학(교)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연구소
- ④ 기타( )

문5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치(외교)학
- ② 사회학
- ③ 교육학
- ④ 유아교육학
- ⑤ 아동학
- ⑥ 북한학
- ⑦ 행정학
- ⑧ 경제/경영학
- ⑨ 기타( )



**문6** 귀하께서는 북한 방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회
- ③ 비 해당(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II. 인도적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들어가기 전 별도 화면에 제시하십시오]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2) 사회문화 교류 협력사업, 3)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 연구는 육아지원분야(영유아의 교육보육 중심)에서 상기 3개 사업별로 가능한 교류협력사업 종류와 실천방안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합니다.

## II. 인도적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II. 인도적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제목 바로 밑에 제시하십시오]

'개발협력사업'이란 일회성, 긴급성의 물품지원사업과 달리, 북한과의 공동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인도적 성격의) 사업으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영양식 공장 설치, 병원현대화 지원, 제약공장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문7** 귀하는 조금 전 설명 드린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었다(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 ② 대략 알고 있었다(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긴 들어보았다)
- ③ 전혀 몰랐다(이번 질문지를 통해 처음 알았다)

**문8** 귀하는 개발협력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문9로 이동
- ② 찬성하는 편이다  문9로 이동
- ③ 반대하는 편이다  문10으로 이동
- ④ 적극 반대한다  문10으로 이동

**문9** (찬성 응답자) 찬성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10** (반대 응답자) 반대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11 상단에 제시하십시오]

<남북 개발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

2005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국가 장기 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자원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이라 해서 북한의 어린이 건강·의료 지원을 위한 병원 지원사업(어린이병원 개축 및 신축), 영양지원사업(공장건설), 의료지원사업(모자보건 센터 건축, 의약품 생산 설비 공장 건축)의 개발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11** 귀하는 조금 전 설명 드린 개발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었다(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 ② 대략 알고 있었다(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긴 들어보았다)
- ③ 전혀 몰랐다(이번 질문지를 통해 처음 알았다)

**문12** 귀하는 남북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 문13으로 이동**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문13으로 이동**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문14로 이동**
- ④ 적극 반대한다 **☞ 문14로 이동**

**문13** (찬성 응답자) **찬성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14** (반대 응답자) **반대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 Ⅲ.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Ⅲ.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제목 바로 밑에 제시하십시오]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이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조사, 공동제작, 공동개발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문15** 귀하는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문16으로 이동**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문16으로 이동**
- ③ 별로 필요없다 **☞ 문17로 이동**
- ④ 전혀 필요없다 **☞ 문17로 이동**

**문16** (긍정 응답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17** (부정 응답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18 들어가기 전 별도 페이지에 제시하십시오]

다음은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방안」 조사 결과의 일부입니다.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4점 척도로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총 10개의 추진과제는 <표 1> 과 같습니다.

**<표 1>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한 추진과제들**

- |                       |                          |
|-----------------------|--------------------------|
| ①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 ⑥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
| ②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 ⑦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작업 |
| ③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 ⑧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
| ④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 ⑨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
| ⑤ 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 ⑩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

다음 <표 2> 는 상기 10개 추진과제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알아본 결과입니다.

**<표 2> 남북 교류협력 시 추진과제별 중요성·실행가능성 순위별**

중요성	순위	실행가능성
남북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1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	2	남북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3	어린이날 공동행사 개최
교육·보육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4	원장·교사 상호방문
원장·교사 상호방문	5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6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7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
육아박람회 공동 개최	8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유아들의 상호방문	9	남북 공동수업계획안 개발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10	유아들의 상호방문

**문18** 중요성(1순위)과 실행가능성(2순위)이 모두 높게 나온 ‘남북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귀하께서 생각 하시는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민·관의 범위 또는 협의체의 구성방법, 구성절차 등을 작성해 주십시오)

**문19** 중요성(4순위)은 낮지만 실행가능성(1순위)은 높게 나온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희망하시는 학술세미나 발표 주제를 2개 이상 적어주십시오.

(참고로 2002년에 남북 공동으로 “21세기를 열어갈 아동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20** 중요성(2순위)은 높지만 실행가능성(7순위)이 낮게 나온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21** 중요성(3순위)은 높지만 실행가능성(8순위)이 낮게 나온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22** 중요성(9순위)과 실행가능성(9순위) 모두 낮게 나온 추진과제는 ‘유아들의 상호방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 자체가 평화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적어주십시오.

**문23** ‘유아들의 상호방문’ 추진과제는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낮게 나왔으나, 이에 비해 ‘보육기관의 원장·보육교사의 상호방문’은 중요성(5순위)과 실행가능성(4순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남북의 원장·교사들이 교류협력하면서 남북 유아들의 동질성 회복이나 상호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 제시한 다음 추진과제들의 필요성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남북 유아 그림 교환하기	①	②	③	④
2)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간식하기	①	②	③	④
3)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 전래동화 읽기	①	②	③	④
4)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부르기	①	②	③	④

**문24** 그렇다면 조금 전 응답하신 각 추진과제들의 실행 가능성 정도는 어떠합니까?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남북 유아 그림 교환하기	①	②	③	④
2)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간식하기	①	②	③	④
3)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 전래동화 읽기	①	②	③	④
4)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부르기	①	②	③	④

[프로그램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25 상단에 제시하십시오]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한 10가지 추진과제들

- |                       |                          |
|-----------------------|--------------------------|
| ①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 ⑥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
| ②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 ⑦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작업 |
| ③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 ⑧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
| ④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 ⑨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
| ⑤ 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 ⑩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

**문 25**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10가지 추진과제(상단 표 참고) 외에 육아 지원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가능한 추진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문 26**

귀하께서 보시기에 10가지 남북 교류협력 과제 중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는 순서대로 3개까지만 체크 해주시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0개 추진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교류협력의 어려움 있는 이유
1)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①	①	①	
2)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②	②	②	
3)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③	③	③	
4)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④	④	④	
5) 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⑤	⑤	⑤	
6)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⑥	⑥	⑥	
7)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작업	⑦	⑦	⑦	
8)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⑧	⑧	⑧	
9)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⑨	⑨	⑨	
10)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⑩	⑩	⑩	

**IV. 경제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IV. 경제개발협력사업’ 제목 바로 밑에 제시하십시오]

‘경제협력사업’이란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남북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1)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를 하거나 2)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4)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외의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문 27**

조금 전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귀하는 아래와 같은 탁아소 제안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28 질문문구 아래(보기와 질문문구 사이)에 제시하십시오]

공단 안에 탁아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개발 협력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탁아소는 필요한 시설이므로 경제개발협력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진은 남북 경제개발협력사업의 탁아소를 필수 시설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 참고로 개성공단탁아소 입소대상은 출생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이며 탁아소의 수요는 증가해서 제2탁아소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 ① 매우 타당하다 **☞ 문28로 이동**
- ② 타당한 편이다 **☞ 문28로 이동**
- ③ 타당하지 않은 편이다 **☞ 문29으로 이동**
- ④ 전혀 타당하지 않다 **☞ 문29으로 이동**

**문 28** (긍정 응답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 29** (부정 응답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 30**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내 탁아소의 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30 질문문구 아래(보기와 질문문구 사이)에 제시하십시오]

개성공업지구가 대표적인 남북 경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안에 북한 여성근로자 자녀(영아)를 위해 개성공단탁아소가 운영 중입니다. 개성공단탁아소는 **소유권은 남측이, 운영권은 북측이** 갖고 있습니다. 즉, 탁아소 운영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고 **운영비는 남한 입주 기업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① 매우 타당하다 **☞ 문31로 이동**
- ② 타당한 편이다 **☞ 문31로 이동**
- ③ 타당하지 않은 편이다 **☞ 문32으로 이동**
- ④ 전혀 타당하지 않다 **☞ 문32으로 이동**

**문 31** (긍정 응답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 **응답 후 문34로 이동 (문30 ①, ②(긍정) 응답자는 문32, 33 skip)**

**문32** (부정 응답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 **이어서 문33 제시**

**문33** (부정 응답자) **현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책**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귀하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북한에 공업지구가 늘어나면, **남북이 공동으로** 공업지구 안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34**

(※ 여기서 남북이 공동 설립한다는 의미는 탁아소 건물 설계부터 운영까지 남북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개성탁아소 설계는 현대 아산이 했지만, 운영권은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공업지구 안의 탁아소는 설계와 운영을 남북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全) 과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 |                             |                              |
|-----------------------------|------------------------------|
| ① 적극 찬성한다 ☞ <b>문35으로 이동</b>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b>문35으로 이동</b> |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b>문36로 이동</b> | ④ 반대한다 ☞ <b>문36로 이동</b>      |

**문35** (찬성 응답자) **찬성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36** (반대 응답자) **반대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37 질문과 같은 페이지에, 질문 윗 부분에 제시하십시오]



어린이들의 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뽀로로’는(좌측 사진 참조) 남북 공동으로 제작한 만화입니다. 북한에서 ‘뽀로로’를 실제 방영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탈북자들 이야기가 다름), 우리 사회도 남북 공동 합작품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뽀로로’가 남북 공동의 성공적인 합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 37** 귀하는 ‘뽀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 38** 귀하는 ‘뽀로로’ 사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시사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V.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 유아들이 배우는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교육과정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누리과정에 북한이나 통일 관련 교육과정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39**

- |                             |                             |
|-----------------------------|-----------------------------|
| ① 적극 찬성한다 <b>☞ 문40로 이동</b>  | ② 찬성하는 편이다 <b>☞ 문40로 이동</b> |
| ③ 반대하는 편이다 <b>☞ 문41로 이동</b> | ④ 반대한다 <b>☞ 문41로 이동</b>     |

**문 40** (찬성 응답자) **찬성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 41** (반대 응답자) **반대하시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 42** 귀하는 남북 어린이들을 평화통일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성인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문 43** 귀하는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문 44**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견이 없으신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래머 가이드 : 문45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이 빈 칸으로 남아있어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문45를 제외한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넘어가게 해주세요.]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해드리오니,

이를 위해 원하시는 수령 방법과 이동전화 번호 또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모바일 형태로 수령 ☞ 수령 가능한 모바일 번호

 -  - 

② 우편으로 수령 ☞ 수령 가능한 주소

■ 감사합니다. ■

부록 8. 일반국민 설문조사지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설문조사 (일반국민) ID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올해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육아 지원 분야 관련 교류협력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의거하여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 닐슨코리아
- 담당자 :
- 담당자 :

I. 선정 질문

문1 성별 (문지 않고 응답자의 목소리로 체크)

- ① 남성
- ② 여성

문2 [유선 RDD 전화번호인 경우] 귀하께서 현재 거주중인 지역이 (해당 지역번호 지역 제시) 맞습니까?  
[무선 RDD 전화번호인 경우]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경기도
- ⑨ 강원도
-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 ⑫ 전라북도
- ⑬ 전라남도
- ⑭ 경상북도
- ⑮ 경상남도
- ⑯ 제주특별자치도

문3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몇 세 이십니까? 만   세

만 19세 미만의 경우 조사 중단

문4 [문3 응답 결과로 자동 프로그래밍. 면접원 진행 화면에는 Hidden 처리] 연령 대

- ① 19-29세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II.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문5**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 ① 같은 민족으로 필요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임
- ② 국제 사회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임
- ③ 휴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인 대상임
- ④ (읽지말 것) 잘 모르겠다

**문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된 상태
- ② 하나의 국가지만 남북이 다른 체제인 평화공존 상태
- ③ 자유로운 교류·협력 수준
- ④ 통일을 원치 않음(현재 상태)

**문7** 귀하께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 ①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반공교육 내용으로
- ②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며, 평화통일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 ③ 배운 적 없다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

**문8** 귀하께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정도 유아에게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며, 평화통일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식의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유아가 판단하기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가므로,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읽지말 것) 잘 모르겠다

**문9** 귀하께서는 남북통일이 된 이후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가장 갈등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차로 인한 경제적 갈등
- ② 정치적 이념 갈등
- ③ 문법, 표준어 등의 언어적 갈등
- ④ 대중문화, 교육시스템 등 사회·문화적 갈등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

**III.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문10** 귀하께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 10번 화면 하단에 함께 제시하십시오]**  
 ※ 북한이 어려울 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의료품 등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사업으로 대개 일회성, 긴급구호적 성격을 지닌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매우 필요하다

문11 귀하께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② 거의 도움 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12 귀하께서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보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 12번 화면 하단에 함께 제시하십시오]**  
 ※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모자(母子)패키지 1,000일 사업을 제안했다.  
 모자(母子)패키지 1,000일 사업이란 출산한 산모와 그 자녀가 3세까지 되는 1,000일 동안을 산모와 자녀의 건강과 영양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문13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영유아의 영양·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문14 귀하께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는 5·24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 14번 화면 하단에 함께 제시하십시오]**  
 ※ 참고로 5·24 조치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입니다. 5·24 조치에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은 예외 규정으로 두었으나, 5·24 조치 이후 북한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도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 ① 북한 영유아 지원만큼은 5·24 조치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
- ② 사회문화 분야 등 비정치적 영역까지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③ 남북 상호간 폭 넓은 교류협력을 위해 전면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④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 ⑤ (읽지말 것) 잘 모르겠다

**IV. 남북 교류협력사업**

문15 귀하께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래머 가이드 : 다음 내용을 문 15번 화면 하단에 함께 제시하십시오]**  
 ※ 참고로 남북 교류협력이란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령, 개성공단 설치 등 남북 간 인적, 물적 자원들을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문16 귀하께서는 자본은 남한 기업이 조달하고, 노동력은 북한 근로자가 제공하는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문 17** 현재 개성공단 안에 북한 근로자의 자녀보육을 위한 탁아소, 즉 일종의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어,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북한 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 ② 우리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 ③ 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④ 북한 근로자의 자녀도 우리 기업 또는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있다
- ⑤ 기타 (자세히 : \_\_\_\_\_ )
- ⑥ (읽지말 것) 잘 모르겠다

**문 18** 우리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는 개성공단탁아소 아이들의 기저귀, 장난감,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북 간 인적 교류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귀하께서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탁아소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19** 귀하께서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유아들 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북 유아들의 그림 교환하기
- ② 남북 유아 공동 식단표로 급식 또는 간식하기
- ③ 남북 유아 공통의 전통 전래동화 읽기(예: 흥부와 놀부)
- ④ 남북 유아 공통의 동요를 제작해서 부르기

## V. 응답자 특성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 중졸 이하
- ② 고졸
- ③ 대학 재학
- ④ 대졸
- ⑤ 대학원 이상

**DQ2**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임/어업
- ② 자영업
-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 ④ 생산/기능/노무직
- ⑤ 사무/관리/전문직
- ⑥ 주부
- ⑦ 학생
- ⑧ 무직/퇴직
- ⑨ 기타

**DQ3** 귀 닥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실 경우 가급적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 해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149만원
- ③ 150만원-199만원
- ④ 200만원-249만원
- ⑤ 250만원-299만원
- ⑥ 300만원-399만원
- ⑦ 400만원-499만원
- ⑧ 500만원-699만원
- ⑨ 700만원-999만원
- ⑩ 1,000만원 이상

부록 9.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표 1〉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

의견
남북 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창출가능, 남북 간 소득격차해소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가능
개발협력사업은 북을 알아가는 과정임. 북과 남의 동질성을 더 넓히는 한편 차이점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함
당장 그 효과를 측정할 방도는 없지만 물자와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주민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
통일을 전후하여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강화를 위해
북한의 열악한 보육시설과 영아들의 신체적 발달, 심리적 안정,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므로 지금 체제 분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북한 영아들의 심각한 신체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래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되는 북한 영아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남북교류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발은 통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은 물고기를 잡아서 준다면 개발협력 사업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함
통일은 시간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것이므로 협력 사업을 다양하고 많이 진행함으로써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를 위한 신뢰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북한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남북한 격차를 줄여 남북 사회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통일한국을 구축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며, 남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임.
대북협력사업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 남북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즉 그들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개발협력사업이기 때문임.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결과는 통합을 위한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기도 함
단기적 지원사업은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통일의 물적 토대 구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및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증진을 위해
단순지원은 자존감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지만 개발지원은 자존감을 높이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임
북한주민의 실질적 생활개선과 교류협력의 지속화에 기여하므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료협력 형태임. 일회성 지원이나 교류협력은 효과 역시 일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
인도적인 지원 및 협력은 필요
1. 남북한 주민(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북한주민의 친한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
2. 통일을 대비한 교류협력사업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출 수 있는 방법임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정치적 영역보다는 비정치적영역에서 관보다는 민간차원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
남북 화해와 협력은 인도적인 사업부터 이루어져야 함
인도적인 측면, 교류협력 측면, 장기적으로는 상호이해 제고라는 측면에서 찬성
남과 북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며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 및 상호이해를 위해
지속가능성 때문에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1.북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행복했으면 해서
2.북한과 남한과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있기 때문
민족통합을 위해서
일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
남북 화해협력분위기조성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남북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통일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를 알아 가는 제도적 요소로 남북통합의 주요축이 될 수 있다고 봄
일회적인 지원의 원조피로도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기 필요

통일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는데 북한이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더라도 남북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방을 유도한다면 간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됨
북한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경제생활에 도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적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방적인 개발지원이 아닌 공동운영과 같이 우리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함
통일비용 절감차원에서 찬성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서 계속적 사업으로 전환할 계기가 되길 바램
개발협력사업은 남북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함
지원을 한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에게 다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북한의 누군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류 협력이 북한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

〈표 2〉 개별협력사업 차원의 영유아 지원 사업 찬성 의견

전문가 의견
영유아지원사업은 그동안 개별 민간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던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 확대 강화한 사업임. 또한 국제기구와의 역할 분담에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음. 북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에도 중장기적인 안목이 대단히 필요함
어떤 경우에도 영유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기본인권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통일 대비 차원에서 필요함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는데 북한을 배제할 이유 없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대비하기 위해
통일 후 북한지역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
한반도 안정화, 남북관계 신뢰구축, 통일 등 정치 및 사회적으로 볼 때 미래의 이득이 된다고 봄
탈북민들과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북한의 영유아들은 빈곤과 결핍 속에서 제대로 복지와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도움을 주어야겠지만 같은 동포 먼저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일에 일조를 한다고 봄
대한민국의 영유아보육법은 정말 영유아의 중심으로 잘 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영아들이 정권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재능을 키워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는데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봄
북한 어린이 지원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은 통일한국의 구성원이기 때문
어느 사회든 소외 받고 열악한 계층이 영유아이며 한 사회의 미래준비는 영유아기 단계부터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영유아기에는 뇌 발달 및 모든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만큼 양질의 지원이 있어야만 통일 후 양질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북한 역시 저출산 사회이므로, 통일한국 대비 공동대처 필요
생애주기 중 결정적 시기의 영양, 교육결핍해소를 통해 남북한격차해소 및 통일비용절감이 가능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심신이 건강한 통일한국인, 저출산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강점이 있음
영유아기 지원은 시기의 중요성이 있는 사업임. 많은 연구에서도 보듯이 영유아기 적기에 맞춰 영양,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몇 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됨. 그리고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 의료 공급이 되지 않은 피해는 성장 후 신체, 지능저하의 문제로도 이어져 통시대 남북인력격차에까지 이를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 인도지원의 필요성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지원의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북한에 거주하는 통일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통일 대비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남북의 어린이들의 성장환경의 격차가 커질수록 통일은 요원할 것임
영유아지원은 가장 중요한 개발협력사업
넓은 의미의 우수한 한국인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 사업은 인도주의적 사업이며, 북한이 부분적이지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는 절대적 취약계층으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해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임.
인도적 사업이며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국가장기발전전략과 관련 통일국가시대를 대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영유아는 통일한국의 중요구성원이므로 북한영유아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은 대단히 중요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통일에 도움이 되므로
통일 이후 남북한유아교육 및 보육의 형평성과 화합을 위해
진정한 복지와 미래 통일 세대육성을 위해서
영유아사업을 통해 북한의 상황이나 인식에 대해 전환점이 되기 바라며, 민족은 서로 도와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미래 한국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이념에 관계없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찬성

북한의 영유아는 미래의 인재이기 때문에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낮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유아 교육의 인프라가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 남한의 지원이 필요함

영유아지원은 개발협력의 범주라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봄. 따라서 찬성.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협력으로 보는 것은 영유아지원의 본질을 다소 왜곡하는 것으로 느껴짐.

북한 영유아, 산모,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층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인도적 당위성과 아울러 민족의 공동 자산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1. 통일세대인 영유아들을 지원해야 하므로
2. 북한 영유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해서(북한 어린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음)

기본 인권 사항이기 때문

영유아의 안정적 성장과 발육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통일된 남북 간의 영양상태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함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임. 북한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

인류보편적 가치이기 때문

통일비용감소를 위하여

영유아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보존하기 위해

대북 안보적인 고려와는 달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와 같은 지원과 교류는 필요하기 때문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영양섭취와 발육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은 인류공영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특히 북한은 한민족으로 더더욱이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민을 돕는 것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찬성하지만 우리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그것은 개발지원사업의 본래 취지가 잘못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의료지원의 형태로 북한주민전체에 대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봄. 영유아에 국한하거나 영유아만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통일 이후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함.

대북지원(영유아지원)을 하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및 통일 후 남북 사회통합에 중요

〈표 3〉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이유

내용
남과 북의 아이들이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이해증진과 통일준비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
비군사적 비정치적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신뢰조성에 적절한 협력 의제
통일 전 및 북한지역 체제전환 시기 등 혼란기에 북한 지역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이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과 유지
남북의 육아는 향후 한반도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주요 동력이므로
남북이 대치상황이라도 문화교류를 통한 화해와 공동연구는 상호이해와 공동의 노력으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군사적인 합의와 노력보다는 쉬운 통일의 길이라 생각됨.
북한어린이 지원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 복원은 남북통합의 첫 단계
현재 남북한은 분단 60년을 넘으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이질감이 심화되어 가는데, 아동기부터 교류를 통해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남북이 함께 공동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사는 다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동질성 회복 및 사회통합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는 기본적인 신체적, 지적 성장의 조건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분야의 교류협력 및 지원 필요
북한 영유아의 심신 안정 및 건강 관리를 통해 남북한 영유아사업교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음.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전제하고, 상호교류는 이러한 점에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문화의 동질성은 민족국가의 기본 전제이며 이러한 것에 대한 남북한의 이질성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서도 어차피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 찬성한다.
모든 형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함. 육아지원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한반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함
매우 필요하며, 실현가능성이 높다는데 장점이 있음.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남과 북은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며 먼 미래일지 모르지만 통일주역으로 자라나야 할 당사자인 북의 영유아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함.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사업의 실행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격차 해소는 통일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임.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사업진행이 필요함.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국가 시대를 대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북한의 육아지원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은 대단히 중요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 및 보육의 일원화를 위해
복지적 차원과 미래 통일 세대 육성을 위해서
남북 교류를 평화를 증진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협력은 현재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필요한 방법이므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본래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었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동질성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
남북한에는 다 영유아가 있고, 양쪽 다 나름대로의 고유한 성공과 실패와 교훈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여 서로의 영유아보육실천에 적용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남과 공동 작업을 통한 상호이해는 모든 남북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통일세대인 영유아들을 통한 교류 협력으로 남북 간의 지속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면 함. 또한 북한의 봉쇄정책으로 세계적으로 보는 시야를 넓혀줘야 함.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이 가능한 통일을 위해 중요함
한반도 미래를 위해 남북이 협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 4〉 육아지원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필요한 소극적인 이유

내용
교류를 통한 남북 간 이해 증대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민족 통합을 위해서
통일비용 감소를 위해서
육아관련 사업은 남북협력 사업 중 비교적 정치성이 낮기 때문에 초기 사업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영유아 관련 협력은 북측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북한에서도 한류열풍이 불면서 영화 드라마 음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경을 가지고 개방이 안 된 개혁적인 개인 삶을 꾸려가고 있음.
한국이 이와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호응과 협조가 없다면 한국의 지원은 무의미해지기 때문.
통합, 교류는 머리로 이해하고 움직이기 보다는 몸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입견, 편견 등이 형성되기 전에 친구로서 만남의 과정을 갖는 것이 교류의 근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대상별 교류의 필요성, 시기 등에 남북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해당 분야의 남북한 격차를 통일 이전에 좁히고 통일 미래 세대를 위한.
민족의 동질성 확보
통일의 대상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대북지원을 하면 누군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 5〉 남북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행방안

전문가 의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건과 방법을 사전에 규정하고 추진하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교류협력 방식을 참고로 하되, 유연하게 조직과 방법, 절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남북관계에 있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 간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당국 간 신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교류협력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정례화 되었을 때 육아 관련 단체의 교류도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남북 당국간 신뢰가 조성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다양한 수준의 접촉 시도를 해야 하겠다. 우선은 제3국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북쪽 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범위 안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협의체를 만들게 될 것임. 민간중심으로하되 정부(관)은 후방 지원하는 구조로 해야 할 것임. 북한과 공식, 비공식 사전 접촉을 해야 실제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임.
적십자사와 같이 현존하는 단체로 성격이 가장 맞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협의시작
어린이집과 탁아소를 운영하는 교사, 원장 등 책임자,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제안과 실무 협의를 어린이에게

급식 및 의료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상호교류의 정례화·지자체 혹은 관련단체 간 자매결연체결과 상호교차방문- 상호 협의체 구성(남한은 반관반민 형태의 가칭 남북한 영유아 교류 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탁아소·어린이 집 간 자매결연 등

관련 세미나 개최

단편적인 행사와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국민의 여론과 합일체가 되어 토론회와 실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남북관 대화가 필요함. 북한 영유아들의 현 실태를 직접 들어보고 그에 맞는 협력방안을 고안하여 민간단체와 상호교류하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임.

민화협과 협력하여 육아, 여성, 체육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남북적십자가 중심이 되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의체 구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이전에 남북협력행사를 진행해 왔던 방식, 예를 들면 6.15공동행사 추진위원회 구성방법과 절차를 참고하는 방법

남북 민간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방법과 절차는 단계적으로 장기성을 띄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믿음과 투명성의 원칙하에 상호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협의체를 구성하는 행사보다 사람과 사람이 상호 방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협의체부터 구성한다면 자리 싸움이나 이념 싸움이 일어날 것임으로 먼저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임.

1. 남북교육·보육관련 부처 간 협의체구성 2. 남북교원단체상호교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NGO,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가능

남북의 민간단체는 영유아 지원사업단체 및 보육기관·유치원 종사자, 정부부처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협의체 구성은 위의 민간대표양측동수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체제 속에서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유초연계등 세부실무분과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청됨.

민관의 범위는 연령과 직업을 유목화하여 다양한 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연령층을 고려하되, 민관이 통합체계를 갖추고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임. 구성절차는 민관이 동등한 주관체제를 형성하여 틀을 잡고, 일원화 방향으로 국가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협의체의 역할 및 구성 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북한의 행태를 보아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 뻔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것으로 학술행사의 개최가 필요함.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볼 때 남북 민간상호교류까지는 무리일 듯하고 중국의 어린이교육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중간에 두고 남, 북, 중국의 어린이 보육정책, 어린이 관련하여 3국이 모두 자신들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제3국 학술회의의 정도를 일단 시작하고, 학술회의를 계기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공동과제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됨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 등 관련 단체와 간접접촉 또는 제3국에서의 직접접촉을 통한 만남을 통해 영유아 교육 관련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접점을 찾고, 그 이후에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가급적 많은 북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음

남북 유사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장기적인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적절한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에 집중

민민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반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의체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경우 순수한 민간단체가 없음으로 민민 교류도 민관 교류로 볼 수 있음

1.기본적으로 관은 후방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서 민관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민간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함 2.민간중심으로 할 때는 관련분야의 학계와 실무종사자 대북지원민간단체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되 10여명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3.북측도 이와 동등하게 구성하여 관계당사자들의 구성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공동세미나를 다양한 분야별로 실시하여 영유아지원의 효과적인 분야와 방법을 설정하여 실행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국책연구소 중심 육아정책연구소에 설치

현 남북관계 구도 하에서는 어떤 분야의 협력이든 당국 간 합의가 사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함. 일단 '육아 관련 남북의 단체들의 협력'을 남북 대화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민관의 범위: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구조로서 관은 실무책임자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 즉, 남북 민간기관 간에 안정적인 교류를, 정부차원에서는 법규의 준수 등 실무적 관리 및 자문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적합함. 따라서 관은 과장급 정도가 적당. 민간기관은 단체장이 참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민간주도로 함으로써 정치적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남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event: 현재 남한 내 통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Snowballing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소수 단체가 이끌어 가는 것은 전국민의 통일적 의지 형성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함. 2.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다른 나라들의 협의체 구성에 편입: 한국의 통일은 단순히 국내의 문제가 아님. 이것은 동북아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관련이 있는 아젠다임..

최대한 관의 입장을 줄이고 민간의 보수와 진보 세력들의 동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관은 지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남북공통의 주제를 선정하여 공동의 연구 진행 학자, 교원 등이 참여하는 남북유아교육보육협의체 설치

우선 순위가 높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많다. 한가지만부연한다면 남한에는 민간단체가 있지만 북한에는 민간단체가 존재하지않는다. 통전부의 단일문 앞에 마치 여러 개의 민간대화창구가 존재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북한에서 진정한 민간단체가 나올 때 까지 민간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하지만 남북한의 육아기관들은 단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서로 상호왕래를 자주 하여 경험을 교환하고 유대를 긴밀히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다. 남북간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북 양측의 파트너가 만나서 구성절차와 방법을 협의(남측의 대표적인 파트너는 북민협 / 북측은 민경련이나 민화협).

우선적으로 북측의 유아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교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등)들의 TF팀 구성이 되어야 하며, 현재 북의 유아교육을 명확히 확인하고 북측 전문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한국이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할 의지를 보일 때, 형성될 수 있음.

중요도는 높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사업이라고 판단한다.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기간에도 그러한 성격의 협의체가 구성된 사례는 없다.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우리 측에서 구성 목표에 대한 합의가 확실해야 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협력 등 구체성이 있으면서 북측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주도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음.

정부 주도보다 일반인의 왕래가 우선되어야 함.

남북한 유아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추진  
사회문화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수립

〈표 6〉 남북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시 실행가능한 주제

전문가 의견
남북 어린이의 <b>이질감을 줄이기</b> 위한 방법 연구, 남북 <b>놀이문화 교류</b> 를 통한 문화적 융합방안 마련
남북한 아동권리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남북한 분야별 여성 전문가 양성 검토 방안
남북한 육아 지원 시스템 비교, 통일후 육아시스템 통합 방향
- 육아 건강과 한반도 미래 - 남북한 육아 연구의 방향과 과제
남북 아동환경 비교와 한반도미래, 남북 아동 교육 중점 사항 및 교육 방법 비교
교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보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남한의 경험 공유
북한의 현실과 아동실태 상황토론회, 미래의 통일한국 영아들의 교육학술 토론회
한국 북한 중국 협력하여 ① 보육전문가, ② 아동교육 관련 학술행사 개최 가능할 것으로 보임.
1.남북 어린이 교육/보육 목표 2.보육교사의 자질 육성 방안
교육, 보육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발표를 희망하지 않음.
1. 남북아동의 민속놀이 문화 2. 교육, 보육전문가 활동현장에서의 역할 3. 아동기 통일교육방안 교재 연구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사부터 해야 한다.
1.남북한 교육보육 통합방안 2. 남한과 북한의 유아교육·보육현황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와 교육정보화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방법
<b>1)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 위한 남북한 유아교육 및 보육발전방안 2) 미래 통일한국의 발전기반으로서의 보육, 유아교육의 구축 전략</b>
1. 영유아의 문화이해를 돕는 언어교육 2. 영유아의 문화이해를 위한 교사와 부모교육
정책의 상당 부분이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b>우선은 남북한 영유아에 대한 통계 및 조사를 위한 학술행사가 필요할 것</b> 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유아에 대한 교육에 있어 <b>용어 통일 등에 대한 학술행사가 필요할 것</b> 으로 생각된다.
1. 통일 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 부문의 역할과 과제 2. 남북한 영유아 인성 분야 관련 학술대회
남북한 아동의 지능지수 비교
- <b>영유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b>
- <b>남북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b>
남북 보육정책과 보육기관 비교연구 유아발달과 보육교육 및 유치원교육 등
1. 통일시대를 대비한 아동교육의 모델 2.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교육
남북한 간 교육,보육 제도 통합방안 모색
남북 육아정책 상호 비교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남북의 보육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교육적 태도 비교 분석, 남북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태도 비교 분석
민족공동체증진방안 유아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주제
통일 이후를 위한 남북한 유아교육 교류
남북 아동 놀이문화 탐색, 전통과 현재 -- 남북 어린이 예술교육...관련 학회
남북한 영유아 문제에 대한 대책 남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상호이해 학술대회
1. 교육,보육 분야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2. 남북한 교육, 보육제도와 정책 비교 학술대회
교사양성체계. 보육, 교육과정
-유-초(유-소)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방안 -유아의 창의성 개발
- "사회발전을 위한 아동의 재능발달에 관한 학술대회"

북측 무상교육의 이해 및 남측의 교육정책이 현재에 이르는 과정 이해, 통일을 위한 공동 아동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한 유아교육, 아동교육 비교

1. 교육, 보육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 2. 아동교육과 ICT의 결합 방안

- 남북한 어린이들의 지속적 발전 과제 - 모성보호와 어린이 교육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학술대회" "영유아 인지발달을 위한 산업협력 학술대회"

〈표 7〉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실행방안

전문가 의견

이 분야는 참 어려운 부분임.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측면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건 현 상황에서 쉽지 않음. 다만 유엔 FPA에서 북한에서 인구 센서스를 진행하고 통계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부분 우리 정부에서 함), 정부 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도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유엔인구기금을 통한 북한 내 통계 전문가 배출 및 양성 교육

북한의 통계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대외비로 취급한다. 얼마간의 데이터라도 구하려면 국제기구를 통해 하는 수 밖에 없다.

남북한 관련 정보의 교환 사업 공동 통계 작성을 위한 실무자 워크샵

통계자료에 대한 상호교류는 직접 접촉의 범위와 폭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은 높지만 북한이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허용하려는지 의지가 중요하다

관련 예산 확보, 남북한 관련 주제(단체 혹은 기구) 선정, 상호 사전 방문 및 협의체 구성

국제기구 통계 조사 및 자료 축적

상호방문을 통한 실사를 통하여 통계자료를 공유하고 조건없는 정무이 지원이 필요

일단 북한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영아들의 보육시스템이나 교육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통일한국을 대비한 준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교육개발원/육아정책연구원 협력하여 통계 구축

남북 당국의 진실한 자료 교환

남북의 용어정의, 교·보육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함

교육, 보육 공동 통계자료 산출은 북한의 시스템 상 어떤 노력보다도 공동적으로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 것은 정부와 정부간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니 남북 고위층 회담에서 의논하면 빠를 것으로 본다.

북한 영유아 인구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서 유치원과 탁아소 취원 원아수 조사 시도?

국제기구를 통한 실태조사(지원사업 병행) 및 분석에 참여하는 방법

우선 북한의 통계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전략을 실천함으로써 교육 및 보육 공동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 이후 매년 남북합동연구팀이 공동으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널리 보급 활용한다.

북한에 대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공지하여 교육 및 보육 통계자료 수집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통계 자료 작성은 물론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공동 운영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사후적검증이라든.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치를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최근 북한학자들도 sci등재 등에 관심이 높다고 하니 통계자료를 산출한다할 때 남, 북, 중 공동연구를 통한 학술지 등재라는 접근으로 통계치를 끌어낼 수도 있을 듯함

로동신문이나 우리민족끼리 등에 나온 북한 매체를 통한 보육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축적한다.

소규모 조직 단위로 통계자료를 산출토록 하여 전체적인 경향(trend)를 파악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전국단위 조사는 북한정부의 조작 가능성이 많으니까.

현재 북한의 통계자료를 공식적으로 입수하기는 어려운 것임. 실행 가능성이 낮음.

북측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협력

북한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함

남북 보육정책과 보육기관 비교연구 유아발달과 보육교육 및 유치원교육 등

1. 남쪽의 통계는 각종 통계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2. 북측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분야를 선정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각종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인 통계자료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됨

통계 관련 남북협력은 가능성이 없음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인구조사 등에 관련 통계조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천됨

공동 연구 사업 및 전문가 육성 사업 추진

남북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들을 바탕으로 기능적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체계 비교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산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

연령별 유아교육기관 취원현황 교사양성 및 재교육 현황

남한의 조사기관 일원화 및 남북한 조사기관의 협력

유엔 차원의 전수조사 필요성

일단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 개최에 대한 열의가 중요하다. 우리 먼저 손을 내밀고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곤란하다. 북한 정부가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교류와 행사 진행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일단 남한의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통계 담당자들 대상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하여, 공통 통계의 필요성 설득
남북통계산출 TF구성 통계지표의 공동 개발 통계자료 산출 공동자료의 DB화
북한은 통계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또 내놓는다 하여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기본적으로 북으로부터 어떤 자료, 통계 등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움. 경제적 차이가 있고, 대북 적대세력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북에서 본인들이 준 자료가 곡해되어 활용되는 것에 피해의식이 있음.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한 통계의 공유
북측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항 중 하나가 통계의 공개이고 통계조사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분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에 관한 통계는 UNICEF 등 UN 기구를 통하여 영양, 보건, 의료 분야에 제한되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어떤 사항의 통계를 산출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할 것이며, 우리 측 자료도 북측과 공유할 것인가 등 사전 검토가 면밀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어린이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춘 후에나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남북한 정부 차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협력 방식으로 추진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학술대회 형태로 진행함

〈표 8〉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 개발·실시를 위한 실행방안

의견
남측 기준의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북측이 수용가능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함. <b>북측과 남측의 통일교육 관련 공통부분을 검토</b> 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남북 당국간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인 비교교육 기회확대 분단 시점의 남북한 사회문화 분석 및 향후 사회문화 통합 방향 논의 교육은 이념적 요소가 들어간다. 다른 체제로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체제유지 목적의 통일과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남북한 통일교육 비교 공동 학술회의 개최 통일대비 평화교육 교재 개발
이 분야는 실행가능성에 두 단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서 어렵다고 판단된다. <b>통일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에 남북한이 동의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것보다는 전 단계로 독도에 대한 주권문제와 같이 남북한의 이견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b>
남북공동의 통일교육 개발 실시는 <b>현 단계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 모두 낮다고 봄</b> . 통일교육은 일단 우리 아동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한 후 북한 아동에 대한 이해 등으로 확대해가면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구축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내용 및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중국을 통한 남북한 교류확대 및 DMZ에 평화교류센터 설치
남북 당국의 이념적 화해
우선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평화통일의 시급성, 당위성 교육이 시급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실행해야 함.
남북간의 신뢰회복 및 동질성 회복프로그램 가동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b>정치적인 발언이나 체제비호를 줄이고 어린이 심리에 맞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남북의 만화영화나 언어, 음식,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b>
<b>남북공동의 평화통일교육개발은 경쟁과 싸움을 격화시킬 수 있음으로 남북이 서로 자국의 현황을 알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함.</b> 각자가 자국의 자랑거리를 발표하다 보면 비교 분석 가능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개선 및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임.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존의 교재, 교구 사용하지 않기
<b>이 과제는 남북 간의 협력 및 통합이 일정 정도 진행된 이후에나 가능한 과제라고</b> 판단됨. 남북 간에 관계개선의 진정성을 보이고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해볼 수 있는 문제임
평화통일교육은 민주주의로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평화는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인류의 평화통일교육차원에서 먼저 접근하고 차차 민주주의 이념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됨
통일이라는 주제가 북한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일 듯. <b>평화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민족의 화합이라는 등 보다 순화된 용어를 통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b>
현재는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다 <b>안보교육중심의 남측평화통일교육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한다.</b> 성인의 경우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유아의 경우 북한을, 북한 친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첫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b>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시각에 대한 평가부터 할 필요가 있겠다.</b>
통일교육은 정부차원에서 기본 방침을 확립하고 있으므로 정부(통일교육원)와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b>"한민족 통일"을, 북한은 "김일성 민족 통일"을 추구하고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b> 따라서 유아, 아동들에게 그냥 "통일"을 주제로 한 동요나 노래를 만들어 함께 부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음.
<b>남북 영유아 통일교육 교안 공동작성 사업</b>
1.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남북 의견 차이 극복을 위한 회의, 학술회의 등 개최 2. 평화통일교육안 마련 및 보완

<p>학계의 공동연구가 필요함. <b>3국을 통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b> (한국, 중국, 북한 연계, 또는 3국가의 대학간 교류 등 방식 다양화)</p> <p>1. 가장 손쉬운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됨 2. 남북어린이들이 직 간접으로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함으로써 모델이 개발 되면 그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됨 3. <b>비무장지대에 어린이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어린이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b></p> <p><b>남북 간 '평화'에 대한 인식과 개념 비교</b></p> <p>통일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기 전에는 실행되기 어려울 것임. <b>통일을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을 것임.</b></p> <p>국제기구를 통해 제3국에서 교육 훈련 사업 실시</p> <p>공동의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b>상호 이질감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상호 이해는 공통의 주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며</b> 따라서 “도별 지방 문화의 특색의 과거와 현재” 등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보는 방식도 하나의 방안. 여기서 도별 지방문화로 접근하길 원하는 이유는 남북간 공통과 차이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반도의 지역별 문화의 공통과 차이로 접근함으로써 이분법을 넘어선 한반도 문화 이해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상호 유아교육 내용 및 방법 상호존중</p> <p>평화통일교육에 관해 교육부가 자료를 배포하고 전 교육기관에서 교사 연수 및 위의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실행</p> <p>1. 평화통일교육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이 공동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p> <p><b>평화통일이란 단어를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b>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 중지되고,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의 의지가 사라졌을 때 논의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평화통일을 자신들의 전략에 도용한다.</p> <p>이 주제는 남북간이 논의하기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p> <p><b>남과 북은 체제와 운영방식이 완전히 다름. 평화, 통일, 교육 자체의 개념도 다를 것임.</b> 남과 북이 공히 합의할 수 있는 개념 도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함.</p> <p>가장 어려운 주제라 생각함. 교류협력 최종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p> <p>지극히 정치적 주제로서 남북이 공감하는 평화통일방안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b>양측 교사들이 어떤 방향의 통일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겠는지 기대하기 어렵다.</b>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교재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덜 정치적인 주제, 예를 들면 <b>한민족의 전통, 남북한 지리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b></p> <p>이념의 차이가 있어서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p> <p>실행 가능성은 낮지만 북측에 도서를 많이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p> <p>모성 및 어린이 발전 지원을 매개로 하여 진행</p> <p>"남북협력기금"집행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예산지출을 의무화함. 국제적 연대를 통한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함.</p>
--

〈표 9〉 남북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낮게 나온 이유

<p>전문가 의견</p>
<p>유아들의 방문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b>인지능력과 사고판단 능력이 부족한 유아 대상으로 상호방문을 통한 평화통일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b></p> <p>이 항목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이 모두 낮게 나온 것도 결국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북측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p> <p>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p> <p>북한이 위험 지역으로 인식되고, 과연 유아들이 무엇을 보고 느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결과로 사료됨</p> <p>상대체제에 대한 불신, 유아들의 건강 포함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p> <p>북측에서 꺼려할 것으로 예상</p> <p>이 부분도 북한 당국자들이 주민통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다만 소수의 인솔책임자가 정치적 인식이 낮은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당기 교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p> <p>-유아들의 인지수준의 미발달로 인하여 효과미흡. <b>부모들의 교류 협력이 우선</b></p> <p>남북 성년간의 상호방문이 어려운 단계에서 보호와 안전이 가장 제일 먼저 요구되는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어려운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봄</p> <p>유아들의 특성상 상호방문을 통한 상호이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보호자 동반 등의 다양한 요구 충족이 실행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판단</p> <p>흔히들 머리가 커지면 이해와 교육이 어렵고 북한의 사회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직 덜된 유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적이라 생각됨</p> <p>유아들의 상호방문 문제도 지금 북한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북한입니다.</p> <p>어려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임.</p> <p>불가능한 제안</p> <p>이념 및 정치체제와 교육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남북이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p> <p>북한교육의 특성상 남한의 어린이들이 방문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를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p> <p>유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면이 있을 것이고 각국의 이념이 다르므로 어린아이들의정신무장해제 같은 부분을 걱정했을 수도</p>

있음. 영유아들을 여행시키려면 반드시 어른이 동행해야 하므로 많은 번거로움이 있음.

이런 유형의 협력이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인적 교류는 현 상황과의 괴리가 너무 큼

유아는 아직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부수 조건이 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성숙하지 못한 심신 조건에서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어릴적 교육이 성인기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과 상호간에 협의점에 도달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정책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유는 유아들의 방문으로 얻을 실익도 없지만 실행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반기 힘든 주제, 대상이란 점이 가장 큰 이유일 듯 하고 우리측도 유아들과의 상호방문의 현실적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사실인 듯함

실현이 된 다 해도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일회성 방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불가능함. 북한이 잘 사는 남한 사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음.**

유아들보다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이 적합함.

성인들의 방문도 쉽지 않은데 사회적 충격이 훨씬 강한 유아들의 상호 방문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유아들의 방문 목적이 불명확하고 성과없는 단순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유독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유아들이 현실적인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실효성 담보가 불가능

**남북간 교류를 성인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더욱 중요한 것은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유아들의 상호방문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염두해 둔 결과일 수도 있음. 유아들의 상호방문 보다는 학령기 아동 간 상호방문이 현실적으로 보임.

이산가족상봉도 어려운 마당에 유아들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회의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다.

북한에 대한 인식자체가 어려운 유아에게 이 과정은 그다지 의미 없다고 생각함.

필요성 자체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임

유아들이 상호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박 이상의 투숙이 필요하므로 지원인력이 필요함. 어린 유아들이 상호 방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름

유아의 상호방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유아를 가진 부모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유아의 방문을 통하여 북한을 들여다 보는 계기로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유아들의 상호방문이라는 것은 어머니들의 상호 방문이 전제할 수 있음. 남과 북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큼.

가장 어려운 주제라 생각합니다. 교류협력 최종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북을 방문하여 교류한 사례가 있다. 일본 민간단체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방문은 2000년대 초기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고, 교류의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남북 양측의 어른들이 아동의 만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념이나 사상의 차이로 북측 관리자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고 이념과 사상이 남한과 달라서 상호방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

유아들이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낮기 때문

평화통일 교육에 부적절한 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 유아들의 상호 방문은 정책결정이나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10〉 10개 추진과제 외의 추진 가능 과제 제안

의견
영유아 의약품 지원 관련 정례 협의체 구성, 영유아 용품 및 식품 등 지원을 위한 관리 운영 체계 구축
<b>육아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북쪽 육아 관계자 초청 방안</b>
<b>유아교육 교재 및 기자재 지원</b>
유아들을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편지보내기
유아들의 먹거리, 약품 지원을 위한 방문
관련 기관(유아원 혹은 지자체)간 <b>자매결연 체결</b>
육아지원기관별 남북 자매결연맺기, 자매결연 맺은 남북 육아지원 기관간의 학부모 공동행사 개최 등
상호 실현 가능한 <b>경연대회, 글짓기 등</b>
남북한 어린이 장기 노래자랑 대회, 남북교사들 통일 준비 교구 만들기 개최
남북 어린이 음악/미술 및 체육대회 등 예술문화행사 개최
전통 놀이문화 복원(예:명절의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고무줄 놀이 등)
우리나라의 꽃, 우리나라의 명절, 우리나라의 강과 산, 우리나라의 동물, 우리가 먹는 음식 종류 와 같이 생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을 영유아들의 그림이나 글로 받아 서로 전시할 것을 제안
남북 유아교육 및 보육전문가 간의 공동교원연수 및 공동연구 추진
남북공동의 유아역사교육 개발 및 실시
교류와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사업영역 개발
영유아 예체능 관련 교류
유아 통일 노래(동요) 공모, 상대방이 만든 노래의 보급. <b>공동행사는 거의 불가능함</b>
모든 남북교류는 낮은단계의 상호교류부터 시작해야하며, 남북의 차이가 큰경우는 실질적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큼. 10가지 추진과제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b>미술대회와 같이 남북 격차와 무관하게 남북이 부담이 없이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b>
민간협력 사업이 순수 지원사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우유 지원사업, 의약품 지원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 계기를 만들어 순수하게 지원)
<b>금강산에서 남북어린이 가을 운동회 하기</b>
공동 환경보호 활동
남북 유아 부모 한마음 대회: 모든 유아들의 부모는 유사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육아관련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함. 이는 남북 부모간 마음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유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남북한 명승지 함께 여행하기
위의 과제들이 잘 실행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음
유아를 둔 부모들의 상호교류
<b>개성공단 내 육아시설 설치 노력</b> 남북한 유아 담당 교사 교환 행사
개성공단 보육시설의 협력체 구성
유치원-탁아소(북)연계와 유-보(남) 연계의 경험 공유
남북한 어린이 합동 공연
국제기구나 국제ngo를 매개로 한 협력사업
1. 보건의료, 영양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 2. 지역별 결연 및 지원과 함께 진행되는 방문, 교류
영유아 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 및 개발 방안 마련 등
어린이 교육, 보육 기자재 협력

〈표 11〉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탁아소 제안이 타당한 이유

<b>의견</b>
(탁아소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약품, 용품 등)이 가능하므로 영유아의 발육상태가 좋음.
현재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 중 여성이 더 많음. 이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탁아소가 필요함.
기혼여성의 공단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북한이 수용할 지는 의문이지만 남북 통합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의의가 있고, <b>경험의 부대시설로서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b>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있으며, <b>향후 육아 관련 교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b>
탁아소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일부에 해당되고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요하므로 여성 인력 활용에 필수이자 일 가정 양립에 필수
근로와 육아의 문제를 해소해준다는 기능적 복지 외에 남한 육아시설과 보호, 양육 방침의 절대적 우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b>아이 양육을 통한 부모들의 대남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매개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임</b>
탁아소 설립은 북측 근로자의 노동효율을 향상시켜 남북 양자 간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이념을 떠나 북한 현실을 감안할 때 탁아소 설치를 남한과 동등하게 추진한다면 <b>주민인식 변화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봄.</b>
공단 내 탁아소의 설치는 북측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 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육아문제 해결은 지원해야 하므로
어른들의 근로자 시설과 다르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적게 반영됨. 설치 된다 해도 북한에서 체제선동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순조롭게 설치되리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이 성공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영유아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면 자랄 수 있게 필요함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시도
북한의 공단 근로자들의 육아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 그리고 북한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보급 등에 유용하기 때문임.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은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의 공영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은 엄마의 건강, 위생상태와 무관하지않음. <b>개성공단의 경우 여성근로자들의 다른 지역대상에 비해 건강, 위생 상태가 양호한 편</b> 이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원효과의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육시설은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하므로.
북한 근로자의 복지향상, 통일 준비
개성공단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필요함.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탁아 시설이 필요함  
 남북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개발협력사업이 경제적 이득이 화폐로 나타나는 것만을 한정지을 수 없음  
 여성근로자들의 근로를 위한 탁아소이므로 경제협력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사료되며 운영에 관련 비용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하게 하여 사내 탁아소처럼 운영케 하면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탁아의 질적인 조건도 향상할 수 있을 것임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 노동생산성이 증가  
 개성공단 근로자 복지 혜택 부여  
 개성공단 등은 여성노동자가 많은 만큼 공단내 탁아소는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  
**탁아소에서 경험에 대한 작은 시작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한민족 구성원 양성에 필요하고, 동족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북한 개성공단 여성분들이 매우 좋아할 것임. 북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육아시스템, 유아교육을 자연스럽게 북한에 보여줄 수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국민에게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대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경제협력은 물론 사회문화협력에도 유용한 사업임.  
 탁아소는 정상적 근무를 위한 필수시설임.  
 공단 안에 근로자를 배려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때문에  
**북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아동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고 실현성도 높은 편**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직장과 숙소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표 12〉 남북 공동 공업지구 내에 탁아소 공동 설치·운영에 대한 찬성 이유

전문가 의견
남북 간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b>육아 기법 등을 공유하며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b> 또한, 영양상태 등의 차이로 인해서 통일 이후의 북측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요.
<b>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접촉 기회 증대</b>
<b>향후 통합육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및 경험 축적</b>
북한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개원 및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인력 활용에 필수 일 가정 양립에 필수
시설과 양육의 문제를 첫 단계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 나갈 뿐만 아니라 북한 영유아에 대한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
탁아소 건설의 필요성에는 100% 찬성하며, 특히 운영에 있어 기업측의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측 노동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탁아소 공동운영을 하다보면 북한주민들도 호기심과 선진국의 문명을 접하게 되어 동조 속에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의 소유권/운영권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보육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물리적인 환경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남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남북의 통일준비 차원에서의 교육내용 마련도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함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운영과 통합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봄.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동설립 되어야 그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고 봄.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간 이념과 체제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공동 계획, 설치,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 통합의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크다고 봄.
북한의 유치원 및 보육소 아동들의 영양보급 및 심신안정 등에 기여함으로써 남북한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재정적으로 부족하여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는 북한은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우리 측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됨.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비록 교육은 못시킨다 해도 영양상태라도 좋게 해 줄 수 있다면 적극 찬성. 이는 결국 영유아의 부모들이 영양 상태의 비교를 통하여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임.
지원을 통한 통합 준비라는 측면에서 <b>개성공단 내 탁아소는 남북 공동 육아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b> 남북한 보육 부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공동운영이 당연하기 때문임. 그러나 공동운영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됨.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맞다고 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북이 각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탁아문제의 장단점이 개성공단을 통하여 어떤 해결책들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임. 현재 남북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우리의 희망사항,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근로자 복지 부여
비이념적 영역에서 선진 교육시스템 등 상호 협조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을 시도
어느 정도 남한의 선진적인 내용과 방법을 비정치적인 부분에서라도 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는 어떤 형태든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통일의 시작임  
 남북의 정상적인 육아와 근로자 복지가 가장 편리하게 가야 하므로  
 그런 과정 자체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므로  
 서로 간 이해의 시작  
 큰 단체가 속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  
 그때는 아마도 남한의 여성관리인들도 적극편입될 것 같은데, 남한 여성도 유아들도 함께 쓰는 시설이니 당연히 남북한의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함께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봄  
 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안임.  
 공업지구 내에 근로자들이 찬성할 것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면 남북간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업지구 내에 근로자를 위하는 좋은 정책이라서  
 영유아 통합 정책에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고, 남북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

〈표 13〉 남북 합작 만화 ‘뽀로로’가 성공한 이유

전문가 의견

뽀로로는 남북측의 공동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성공의 요인은 캐릭터와 구성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임.  
 뽀로로 제작에 북쪽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남북 공동의 성공적인 합작품이라고 하는 데 대해 우선 의문이 듦. 어쨌든 남북이 힘을 합쳐 만든 만화가 인기를 끌었다는 점만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제작에서 북쪽은 단순 작업에 그쳤을 가능성이 큼.  
 아동에게 친근한 캐릭터이기 때문임  
 위탁가공 업무의 성과가 성공적일뿐, 경제적인 성공은 마케팅이 우수했고 그게 남북합작이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게 된 것임.  
 영상이 탁월했기 때문임  
 남북한의 이해가 일치.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북한과 교류사업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남한의 입장  
 아이들 취향에 맞는 듯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술과 남한의 자본을 통한 합작과 상호협력을 통한 수준높은 아이디어 산출  
 체제 경쟁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만화 작품에만 집중했기 때문임  
 성공적인 홍보, 시장 선점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는 감시와 억압속에서 일상이 되어있기에 성공보다는 북한주민이 원하고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하여 확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공여부는 잘 모르겠음  
 뽀로로는 제가 일하던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하였음. 북한에도 아동영화 "소년장수"가 유명하였는데 애니메이션 기술이 정말 높았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음악 북한의 높은 기술이 더해져 성공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음.  
 색감이 예쁘고 애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뽀로로 자체의 이미지  
 정치, 경제 등 이념적인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기 수월하지 않았나 사료됨  
 뽀로로가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치적인 색채가 없이 캐릭터가 신선하면서 아이들의 동심을 잘 반영하여 나온 작품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념이 없이 아이들의 흥미에 적합했기 때문  
 경제협력으로 보아야 할 듯. 어떤 다른 함의를 찾으려 하는 것은 무리 아닐지?  
 남한의 기술력,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와 북한의 기술인력의 결합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기술을 활용하고, 남한 측이 기획 아이디어와 자본을 투자한 측면에서 성공한 것으로 봄.  
 지속적인 방영의 효과라고 생각함.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작한 만화일지라도 상영하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성공의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절대 남북의 공동 작업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음. 결국 우리의 남다른 마케팅 능력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함.  
 뽀로로의 성공여부와 현재 질문 카테고리인 남북공동개발협력은 깊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함.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받아들여짐. 공동개발의 시기가 짧았고, 그 의미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음  
 캐릭터의 순수함. 겨울이라는 아이들이 꿈꾸는 (항상 눈이 쌓여 있는)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질문이 모호함. 뽀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콘텐츠가 좋기 때문이고, 남북공동제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은 노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임. 의류, 시계 등과 같은 이유일 뿐임.  
 남북한 자원의 성공적인 결합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  
 북측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하여 제작함으로써 제작비가 절감되었을 것이며 북측 근로자들이 그림을 표현 할 때 우리와 비슷

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정서가 녹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우리문화가 바탕이 되어서
실현 가능한 역할분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됨
체제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 방송
콘텐츠의 우수성
정치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임
캐릭터가 귀엽고 내용이 유아에게 적합하며 도덕적이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했음
그림의 단순성, 내용은 발달 적합성
정치적 입장보다는 아동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접근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캐릭터이므로
캐릭터의 성공
북한의 능숙한 애니메이션 기술자들과 남한의 뽀로로 아이템 개발자들과의 환상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을 방영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음. 그러나 남북한이 모두 뽀로로를 통해서 돈을 번 것은 맞으므로 환영할 만한 경제협력사례라고 봄.
캐릭터가 깔끔하고 예쁘다. 스토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쪽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개발과 북측의 높은 질의 저렴한 노동력의 만남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함.
정치적 문제가 아닌 정서적으로 어린이에게 친화적인 캐릭터 발굴
남측의 기획력과 캐릭터 개발 능력

〈표 14〉 남북 합작 만화 ‘뽀로로’ 성공을 통한 시사점

전문가 의견
남북 교류협력은 남측 뿐 아니라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임.
남북간 경험에서 북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음. 남측에서는 북의 수준과 상황을 면밀히 타산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해당분야에서 남북한 양쪽 전문가의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로 의미가 있음
제품기획을 잘해서 북한의 인력을 통해 주어진 스펙범위에서 우수한 품질이 나오도록하는게 관건임.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병행한다면 효과가 증대될 것임.
남북한이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교류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유사 사례 개발이 가능할 것임.
남북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역지로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사업자체가 성과가 있는 것을 교류협력사업에 적용하는 접근을 취해야 함.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야지 정치적 목적에 경제성을 맞추려해서는 안 됨.
상호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 극대화할 수 있음
뽀로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뽀로로 이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한 것도 아님.
남북 협력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서의 어필이 아닌, 실제 시장성을 갖춘 생산품을 만들어낼 필요함
"뽀로로"의 성공적인 작품을 통하여 남북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충분히 우리영유아들의 보육과교육이 함께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손잡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됨.
향후에도 북한이 잘하는 분야에 지속적인 경제적 협력이 필요함
뽀로로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남북경협 사업은 철저하게 정정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이념, 정치체제와 무관하거나 영향을 덜 받는 영역부터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해서 점차 그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뽀로로는 남북공동합작품이지만 북한사람들은 북한에서 창작한 아동영화로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미디어 교육시스템의 특징으로 남북이 함께 공동작품으로 창작을 하여도그런 방식으로 출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업에 대한 입장과 목적을 계약서에 올바르게 명시하여 신뢰성을 지키면 좋을 것 같다.
이념을 배제한 영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주제를 생각해 낸다면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구축이 수반되어야 성공가능할 것임.
남북한의 장점을 결합하여 서로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함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북한의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인재를 활용한 성과라고 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제작한 문화콘텐츠나 교육용 작품 등은 그 대상자에게 빈번하게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또한 이러한점을고려해야 할 것임.
시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함. 단순히 북한의 노동력과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전문가와 한 공동 작업과 같은 경우로 파악해야만 함.
남과 북이 서로 잘하는 분야로 역할을 나눠 공동의 결과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동결과물을 얻기까지 남과 북이 함께 협업하는 실제의 과정 그자체가 의미있다.
남북한 이념과 관계없는 내용을 기반으로 남북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캐릭터나 스토리(전래 동화 등)가 많아야 통일이 된 후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특별한 시사점은 없음. 남한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하고, 북한은 노임을 쟁길 수 있을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 뿐임. 뽀로로가 영유아용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시사점이 있는 것은 아님.

잘 모르겠음. 남북 공동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어봄.

남북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 전래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남과 북이 동시에 방영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만 함.

우리문화에 바탕을 둔 협력사업추진 강화할 수있음

다양한 형태의 입가공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향후 개선 또는 추진 가능사업이 다양하게 존재함

공통의 소재를 찾아 공동 제작, 동시 방송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비정치적이고 아이들이 편견없이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

필자도 몰랐음. 이 성공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성공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함을 홍보하는 게 좋겠음.

이러한 사례에 대한 내용 공유가 필요함

이념이나 쟁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남북이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이뤄내려면 일방이 퍼주기만 하거나 북한은 가난하니 대가없이 받아도 된다는 편견은 금물이다. 북한이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상호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말뿐이 아닌, 그리고 무늬가 아닌, 실제적인 경제개발협력을 이뤄내야 한다.

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기술 및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공히 외화벌이가 중요함. 뽀로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과 북 어린이들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음.

비정치적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였다고 생각함.

북은 단순 하청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분업도 의의가 있다.

정치적 문제를 배제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캐릭터에 집중하였기에 가능한 사업임

남북이 공유하는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북한이 장점을 갖고 있는 아동영화 분야의 협력이 가능함.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15> 누리과정에 북한/통일교육 편성·운영 확대에 대한 찬성 이유

전문가 의견

북한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어릴 때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음.

결국 통일은 모든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도 일찍 형성되는 것이 필요함.

유아들도 통일에 대해 매체 등을 통해서 접목하게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려서부터 관련 내용 인지해야 함.

조기 교육의 중요성 및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일 나이임

유아교육은 향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북한에서는 유치원서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고사리같은 손을 들고 통일이라고 대답을 함.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통일을 왜하냐는 반응이어서 안타까움.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어렸을때부터 일깨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어릴 때부터 북한의 현실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성인이 되어서도 건전한 통일관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임.

어렸을 때부터 통일교육은 시작해야 함.

우리나라 지리교재나 음악교재를 보면 북한사회나 북한식의 전통음악이나 민족개량악기들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가 적게 편성되어 있음. 학생들이 북한의 특별시나 지방도시등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적게 알고 있으며 북한의 민족개량악기들인 해금이나 옥류금과 같은 악기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과에 담아서 교육과정에 (북한)문화교과로 편성되면 좋을거 같음.

공동선 내지 공동체의식 형성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임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 단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함.

평화통일교육을 이해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필요함.

다가오는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자주들을수록친숙하게다가갈수있어서필요함

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될 경우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통일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음.

언젠가는 남북이 함께해야 할 것이므로 일찍 배우는 것이 바람직함

누리과정이 미래 투자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우리의 아이들은 언젠가는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상호 실체에 대해서 편견 없이 빠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 됨.

통일은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임

민족동질성 확보하기 위함임

유아기부터 정서적, 인지적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크게 증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우리 아이들이라도 먼저 북한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북한을 바로 알아야 통일이나 대북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통일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관련자, 종사자들의 북한 유아교육을 이해해야 함.

적대감을 최소화. 통일의 기초를 다져야 하기 때문임

유아기부터 북한이 원래 우리나라임을 강조함

유아기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북이나 통일에 대해 녹여내는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임. 유아 시기의 인식이 오래가기 때문임.

남북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임.

통일이라는 '사건'보다는 삶의 상황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5세, 6세 아동에게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북측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이다. 통일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행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을 해야 통일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아이들이 북한의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임.

자아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임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한 대비 차원에서 필요함

연구보고 2015-08

---

---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승림디앤씨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33-2 93330